

충청남도 경관심의 개선 및 운영방안



충남공공디자인센터
Chungnam public design center

Contents

01

서론

001

- 1. 연구 배경 및 목적 001
- 2. 연구의 범위 002
 - 1) 연구 내용 및 방법 002
 - 2) 연구 구성 및 체계 003

02

경관법 및 심의제도 분석

004

- 1. 개정 경관법 분석 004
 - 1) 경관법 구성 004
 - 2) 주요 개정 내용 006
 - 3) 지자체 대응 필요 사항 008
- 2. 경관심의 대상과 시기 010
 - 1) 경관심의 대상과 주체 010
 - 2) 경관심의 시기 013
- 3. 경관심의 운영지침 분석 016
 - 1) 경관심의기준과 심의도서의 구성 016
 - 2) 사회기반시설사업 심의기준과 도서 018
 - 3) 개발사업 심의기준과 도서 023
 - 4) 건축물 심의기준과 도서 026
- 4. 심의도서와 심의기준 상관성 분석 029
 - 1) 도서와 체크리스트 상관성 검토 029
 - 2) 개발사업 사전경관계획 매뉴얼 검토 040

03

경관심의 선진사례 분석

044

1. 광역지자체 경관심의 운영 분석	044
1) 광역지자체 경관조례 비교, 분석	044
2) 전라남도 경관심의	048
3) 인천 경제자유구역청 경관심의	050
4) 세종특별자치시 경관심의	054
5) 시사점	055
2. 해외 경관심의 운영 분석	057
1) 영국 CABE(Design council)의 디자인 리뷰	057
2) 일본 사전경관협의제도	063
3. 유사 심의 개선방안 분석	074
1)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	074
2)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076
3) 개발사업 등에 대한 자연경관 심의지침 분석	078

04

충남 경관심의 현황 분석

087

1. 충남 경관관리 행정 현황	087
1) 도·시·군 경관 관련 조례 현황	087
2) 시·군 경관심의 및 자문 대상 분석	088
3) 도 및 시·군 경관관련 위원회 운영 현황	093
2. 경관심의 참여관찰	095
1) A시 경관위원회	095
2) B시 경관위원회	097
3) C시 건축·경관 공동위원회	099
3. 경관심의 담당자 인터뷰	101
1) 인터뷰 개요	101
2) 심의 개선을 위한 실무자 의견	101
4. 충남 경관심의의 문제점	107
1) 경관심의 운영상의 문제점	108
2) 경관 행정상의 문제점	110

05

충남 경관심의 운영 방안

112

1. 충남 경관심의 운영 방향

112

1) 계획과 조례에 의한 경관관리체계 구축

113

2) 지자체 특성이 반영된 자율적인 심의체계 확립

113

3) 공동심의 운영체계 확립 및 활성화

117

2. 충남 경관심의 참고기준 활용

118

1) 충남 경관계획 관련 지침

119

2) 경관심의 관련 중앙부처 지침

120

3) 충남 경관심의 참고기준

132

3. 경관심의 프로세스 체계화

144

1) 심의 절차별 주요 업무

144

2) 심의 도서 작성 지침

147

06

충남 경관관리 단계별 대책

153

07

결론

157

■ 참고 문헌

160

■ 부록

165

부록 1. 자문회의 의견

165

부록 2. 지자체 심의 개발사업 경관심의 절차

168

부록 3. 충남 경관심의 참고지침의 주요 내용

175

부록 4. 2015년 충남 경관심의 개최현황 및 심의결과

188

표목차 · Contents

[표 2-1] 경관법 연혁	004
[표 2-2] 개정 경관법의 구성과 내용	005
[표 2-3] 경관법 개정 전·후 비교	007
[표 2-4] 경관법 시행령 개정 전·후 비교	008
[표 2-5] 중앙 및 지자체 경관위원회 역할	010
[표 2-6] 충청남도 경관심의 및 자문 대상	011
[표 2-7] 개발사업의 심의 시기 및 심의 주체	012
[표 2-8] 사회기반시설사업과 건축물의 심의시기	013
[표 2-9] 경관체크리스트의 구성	016
[표 2-10] 도로의 경관체크리스트 재구성	019
[표 2-11] 철도시설의 경관체크리스트 재구성	020
[표 2-12] 하천시설의 경관체크리스트 재구성	021
[표 2-13] 사회기반시설사업의 경관심의도서 작성방법	022
[표 2-14] 개발사업의 경관체크리스트 재구성	024
[표 2-15] 개발사업의 경관심의도서 작성방법	025
[표 2-16] 건축물 경관체크리스트	027
[표 2-17] 건축물 경관심의도서 작성방법	028
[표 2-18] 도로 심의도서별 검토 항목	031
[표 2-19] 철도 심의도서별 검토 항목	033
[표 2-20] 하천 심의도서별 검토 항목	035
[표 2-21] 개발사업 심의도서별 검토 항목	037
[표 2-22] 건축물 심의도서별 검토 항목	039
[표 2-23] 개발사업 사전경관계획 매뉴얼의 주요 내용	040
[표 2-24] 경관심의도서 작성지침으로 활용 가능한 사전경관계획 매뉴얼 내용	041

[표 3-1] 광역지자체 경관조례 특성 분석	044
[표 3-2] 전라남도 경관위원회 경관심의 절차	049
[표 3-3] IFEZ 경관위원회 심의, 자문대상	052
[표 3-4]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경관위원회 심의 절차	053
[표 3-5] 세종특별자치시의 경관심의, 자문, 협의	054
[표 3-6] 광역지자체 경관심의 운영특성과 시사점	056

[표 3-7] CABE 디자인 리뷰 특성	057
[표 3-8] CABE 디자인 리뷰의 대상 선정 기준	059
[표 3-9] 디자인 리뷰의 유형	059
[표 3-10] 디자인 리뷰 절차	060
[표 3-11] 일본 경관법의 경관 조례 위임 내용	064
[표 3-12] 일본 경관협회의 운용 형태	065
[표 3-13] 일본 사전경관협의의 일반적 프로세스	066
[표 3-14] 동경도 치요다구의 경관사전협의를 위한 도면의 종류와 내용	068
[표 3-15]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의 시사점	075
[표 3-16] 건축위원회 심의 절차	077
[표 3-17] 건축위원회 심의도서의 표시사항 예시	078
[표 3-18] 자연경관영향 심의대상	080
[표 3-19] 지방자치단체의 자연경관 영향 검토 대상	080
[표 3-20]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경관유형별 검토사항	081
[표 3-21]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점검토사항	082
[표 3-22] 자연경관 영향 심의기준	083
[표 3-23] 자연경관심의 지침상의 조망점 선정기준	084
[표 3-24] 개발사업 유형 및 대상 사업	084
[표 3-25] 자연경관영향 저감방안 세부 검토기준	086

[표 4-1] 충남 지자체 경관, 건축, 도시 분야 조례 제정 현황 (2015. 12)	087
[표 4-2] 충남 지자체 경관행정기반 현황	088
[표 4-3] 충남 시·군 경관조례 특성 분석	089
[표 4-4] 충남 시·군 경관심의 대상	090
[표 4-5] 충남 경관심의 개최 현황 종합분석	093
[표 4-6] 충남 경관심의 개선을 위한 실무자 주요 의견	101
[표 4-7] 충남 경관심의의 문제점	107

[표 5-1] 충남 경관심의 개선대책 및 실행방안	118
[표 5-2] 충남 경관심의 참고기준 도출 및 활용 절차	119
[표 5-3] 충남 경관관련 계획 및 가이드라인	119
[표 5-4] 경관심의대상 사업 관련 중앙정부 지침의 유형	121

[표 5-5] 도로 관련 중앙정부 지침	122
[표 5-6] 하천 및 철도 관련 중앙정부 지침	123
[표 5-7] 도시계획·개발 관련 중앙정부 지침	124
[표 5-8] 농촌·해안·항만사업 관련 중앙정부 지침	125
[표 5-9] 건축물 및 가로경관 관련 중앙정부 지침	126
[표 5-10] 산림·공원·녹지·조경 관련 중앙정부 지침	128
[표 5-11] 중앙부처 경관심의대상사업 관련지침의 유형과 특성	129
[표 5-12] 경관심의 관련 중앙부처 지침 종합	130
[표 5-13] 충남 경관심의 참고지침	133
[표 5-14] 도로 관련 경관심의 참고지침	134
[표 5-15] 도로 관련 경관심의 참고기준	134
[표 5-16] 철도 관련 경관심의 참고지침	136
[표 5-17] 철도 관련 경관심의 참고기준	137
[표 5-18] 하천 관련 경관심의 참고지침	138
[표 5-19] 하천 관련 경관심의 참고기준	138
[표 5-20] 개발사업 관련 경관심의 참고지침	139
[표 5-21] 개발사업 관련 경관심의 참고기준	139
[표 5-22] 건축물 관련 경관심의 참고지침	141
[표 5-23] 건축물 관련 경관심의 참고기준	141
[표 5-24] 경관심의 사전검토절차 (임의절차)	144
[표 5-25] 경관심의절차	146
[표 5-26] 충남 경관심의도서 작성기준 도출 및 활용 절차	147
[표 5-27] 사업유형별 심의기준과 도서 작성방법	148
[표 5-28] 충남 사회기반시설사업 심의도서 목록 및 작성내용	149
[표 5-29] 충남 개발사업 심의도서 목록 및 작성 내용(안)	150
[표 5-30] 충남 건축물 경관심의도서 목록 및 작성 내용(안)	152

그림목차 · Contents

[그림 2-1] 연구구성도	003
[그림 2-2] 경관법 구성도	005
[그림 2-3] 정비사업 경관심의절차	014
[그림 2-4] 정비촉진사업 경관심의 절차	014
[그림 2-5] 단지조성사업 경관심의 절차	015
[그림 2-6] 생활환경정비사업 경관심의 절차	015
[그림 2-7] 관광단지조성사업 경관심의 절차	015
[그림 2-8] 온천개발사업 경관심의 절차	015
[그림 2-9] 건축물 경관체크리스트 구성	017
[그림 2-10] 사회기반시설 심의도서 구성	021
[그림 2-11] 개발사업 심의도서 구성	024
[그림 2-12] 건축물 심의도서 구성	027
[그림 2-13] 도로 경관체크리스트와 심의도서의 상관성 검토	030
[그림 2-14] 철도 경관체크리스트와 심의도서의 상관성 검토	032
[그림 2-15] 하천 경관체크리스트와 심의도서의 상관성 검토	034
[그림 2-16] 개발사업 경관체크리스트와 심의도서의 상관성 검토	036
[그림 2-17] 건축물 경관체크리스트와 심의도서의 상관성 검토	038
[그림 3-1] 전라남도 사전경관협의 절차	048
[그림 3-2] 세종특별자치시 경관위원회 구성 현황	055
[그림 3-3] 디자인 리뷰(Design Review)의 10원칙	061
[그림 3-4] CABE 디자인 리뷰	062
[그림 3-5] 경관계획과 경관조례의 일체적 운용	063
[그림 3-6] 동경도 신주쿠구 경관사전협의 및 신고 절차	067
[그림 3-7] 치요다구 경관협의도서(경관계획서) 작성 예	070
[그림 3-8] 치요다구 경관협의도서(평면도) 작성 예시	070
[그림 3-9] 치요다구 경관협의도서(입면도) 작성 예	071
[그림 3-10] 치요다구 경관협의도서(투시도) 작성 예	071
[그림 3-11] 일본 경관어드바이저 운영 방식	072
[그림 3-12] 자연경관 심의지침 구성도	079

[그림 3-13] 개발사업 유형별 조망점 선정 예시	084
------------------------------	-----

[그림 3-14] 절·성토에 따른 경관변화 예시	085
----------------------------	-----

[그림 5-1] 충청남도 경관심의 운영방향	112
-------------------------	-----

[그림 5-2] 충청남도 및 시, 군 경관심의 참고기준의 구성	132
------------------------------------	-----

[그림 6-1] 충남 경관관리 단계별 대책	153
-------------------------	-----

I.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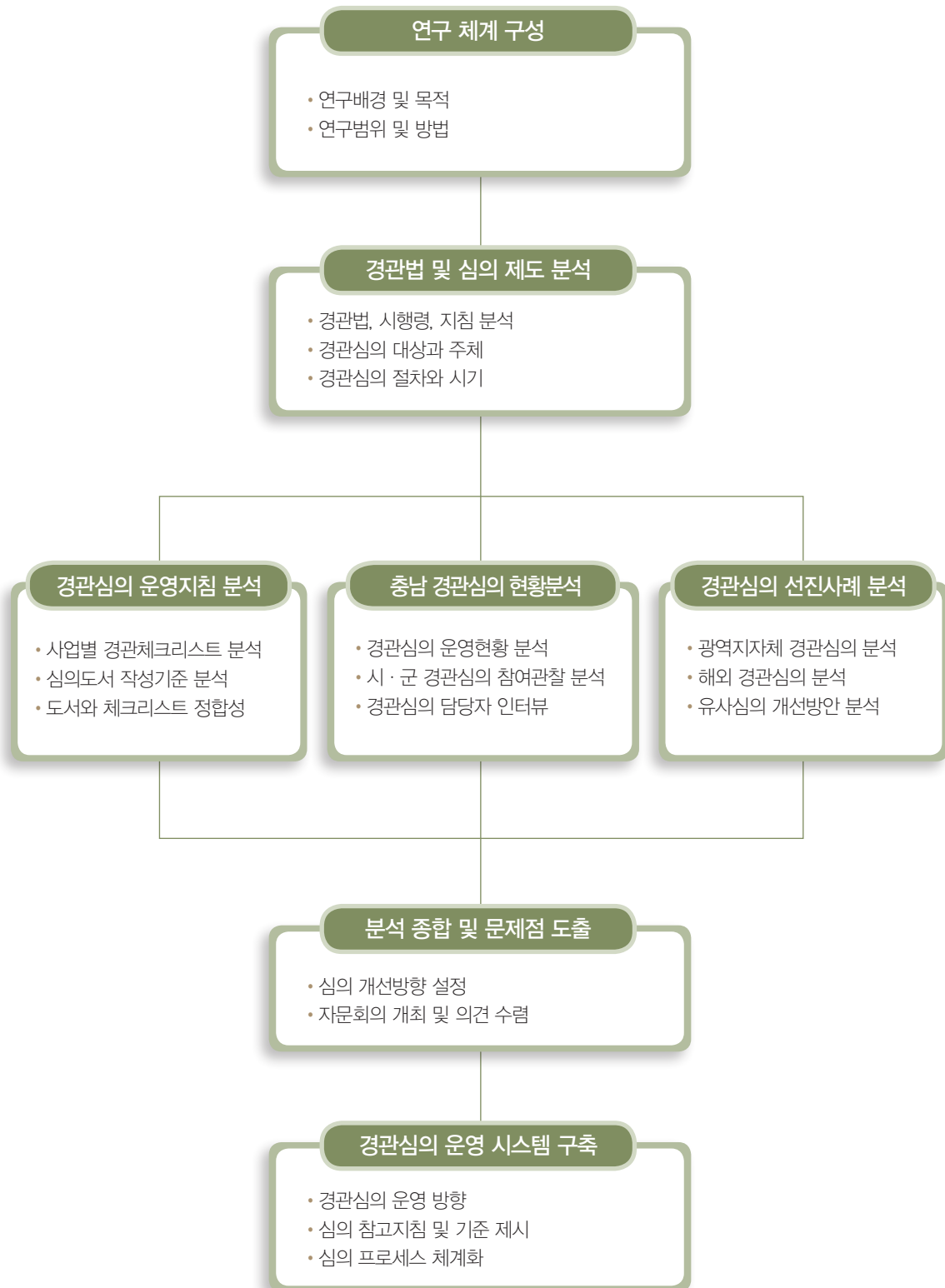
- 국토경관의 관리체계 수립을 위해 2007년 제정된 경관법이 그 동안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2013년 8월에 개정되었고, 시행령은 2014년 11월에 개정되었음
- 경관법 개정의 목적은 크게 경관관리를 위한 중앙정부의 역할 강화 및 규정, 지방자치단체 경관관리의 실행력 확보, 경관심의 기능 강화로 볼 수 있음
-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경관계획, 경관사업, 경관협정에 국한되어 있던 경관심의를 사회기반시설사업, 개발사업, 건축물로 확대하고 대상과 규모를 명기하였으며 지자체 조례에서 심의 대상을 구체화하도록 하였음
- 지자체의 체계적인 심의를 위해 경관심의운영지침이 수립되었으나 시·군 심의 실무자들의 활용이 쉽지 않으며 심의 운영에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대책이 필요함
- 개정된 시행령이 반영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과도기적 현상으로 볼 수 있으나 심의운영방식과 절차의 미정립, 참여주체의 역할 규정, 심의기준의 객관성 부족 등으로 인해 심의의 효율성 저하가 나타나고 있음
- 2015년 12월 현재, 충남 15개 시·군 중 11개 지자체가 경관조례를 제정하였으며 9개 지자체가 개정 시행령이 반영된 경관조례를 운영 중임
- 2015년 9월 이후 9개 시·군이 경관조례를 개정하거나 제정하여 충청남도의 경우 심의 운영의 기본적인 기반이 마련되고 있음
- 경관심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운영체계 정립 및 심의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도 차원의 구체적인 심의운영방안 제시가 필요한 상황임
- 경관심의가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는 11개 시·군의 경관심의 운영을 위한 기본방향과 대책을 제시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며, 이를 통해 현재 심의를 운영 중인 도 및 4개시의 경관심의 개선방안을 제시함
- 또한, 경관심의를 통한 경관관리 실행력 강화를 위해 단계별 주요 대책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충남 경관행정의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함

2. 연구의 범위

1) 연구 내용 및 방법

- 충남 경관관리의 실행력 확보를 위해서는 종합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하나, 본 연구에서는 충남 경관심의 운영시스템 구축을 위한 심의절차와 심의기준의 개선으로 연구범위를 한정하여 진행 함.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개정 경관법 및 심의운영지침 분석
 - 경관법 및 시행령 내용 분석을 통해 지자체의 대응사항을 도출
 - 경관심의 대상과 절차 분석
 - 사업유형별 경관심의기준과 도서 작성 방식 분석
 - 도서와 체크리스트 정합성 검토
 - 사전경관계획 내용의 반영 방안 검토
 - 경관심의 선진사례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광역지자체 경관심의 운영 분석
 - 영국 CABE의 디자인 리뷰 및 일본 경관심의 운영 방식 분석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자연경관 심의 지침등 유사심의 개선방안 분석
 - 충남 경관심의 현황분석 및 문제점 도출
 - 충남 경관관리 행정 현황 분석
 - 충남 시·군 경관심의 실태 분석을 위한 참여관찰
 - 경관심의 담당자 인터뷰 및 문제점 도출
 - 충남 경관심의 운영 시스템 구축방안 제시
 - 충남 경관심의 운영 방향 제시
 - 충남 경관계획 및 중앙정부의 경관심의대상 사업관련 지침 분석
 - 경관심의 참고기준 정립 및 활용방안 제시
 - 심의절차별 주요 업무 정립 및 연구내용 활용한 업무 매뉴얼 개발
 - 연구방법
 - 경관심의 관련 법제에 대한 문헌분석 및 해외 사례분석
 - 충남 경관심의 운영현황 관련 자료 검토, 심의회의 참석을 통한 참여관찰, 심의 실무자 인터뷰 등을 통해 현황분석 및 문제점 도출
 - 분석 결과와 자문회의 등을 통해 경관심의 운영 개선방안을 제시함

2) 연구 구성 및 체계



▲ [그림 2-1] 연구구성도

II. 경관법 및 심의제도 분석

1. 개정 경관법 분석

1) 경관법 구성

- 경관법 개정의 추진 배경은 다음과 같음¹⁾
 - 국토환경의 품격 향상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국토경관 관리체계를 마련함
 - 지자체의 경관계획 수립을 활성화하고, 인구 10만 초과 지자체의 경관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여 계획의 실행력을 제고함
 - 경관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회기반시설·개발사업 등에 대하여 경관심의 제도를 도입하여 경관관리를 강화함
 - 우수경관 창출을 위한 전문인력양성, 특별건축구역과의 연계, 경관관리정보체계 구축 등 지원 시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개정 경관법은 경관계획, 경관사업, 경관협정, 경관심의, 경관위원회 관련 규정이 주요 항목이며 이 외에도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경관관리정보체계의 구축,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 [표 2-1] 경관법 연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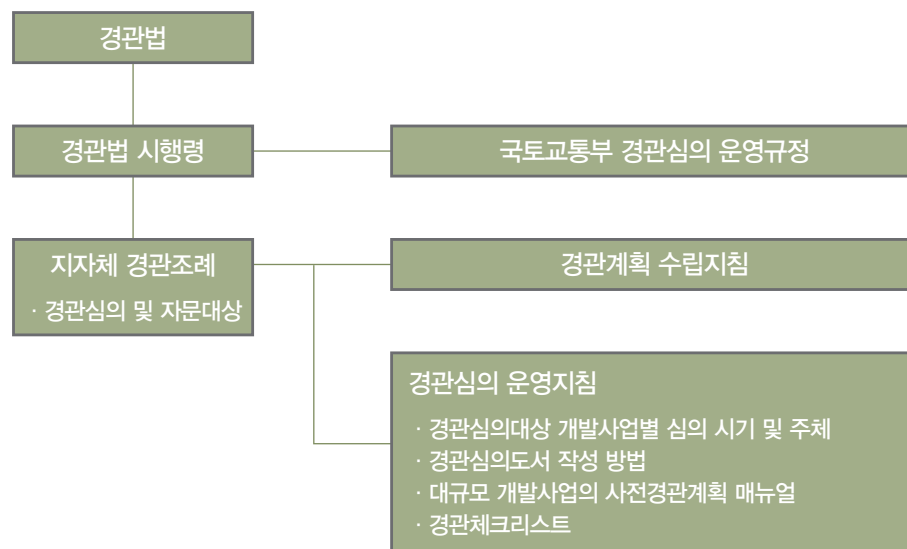
시 기	제정 및 개정
2007. 05	· 경관법 제정
2007. 11	· 경관법 시행령 제정
2007. 12	· 경관계획 수립지침 제정
2013. 08	· 경관법 전부 개정
2014. 02	· 개정 경관법 시행 · 경관심의 운영 지침 고시(국토교통부 고시 99호)
2014. 11	· 개정 경관법 시행령 시행
2015. 02	· 충청남도 경관조례 개정안 시행
2015. 03	· 경관계획 수립지침 시행 · 국토교통부 경관심의 운영규정 시행

1)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2014, p.3

▼ [표 2-2] 개정 경관법의 구성과 내용

구성		주요 내용
1장	총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정의, 기본원칙, 지자체 책무 - 다른 법률과의 관계
2장	경관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관정책기본계획 수립 - 경관계획의 수립(수립권자, 대상지역) - 경관계획의 내용, 승인
3장	경관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관사업의 대상, 경관사업추진협의체 - 경관사업 재정 지원 및 감독
4장	경관협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관협정의 체결, 경관협정운영회의 - 경관협정 인가, 변경, 폐지, 지원
5장	경관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기반시설, 개발사업,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6장	경관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관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운영
7장	보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력 양성 및 지원 - 경관관리정보체계의 구축, 운영

- 경관법 개정의 목적은 크게 3가지로 구분이 가능한데 첫째, 경관관리를 위한 중앙정부의 역할 규정, 지방자치단체 경관관리의 실행력 확보, 경관심의 기능 강화로 볼 수 있음
- 경관계획과 경관심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경관계획 수립지침, 국토교통부 경관심의 운영규정, 경관심의 운영지침을 고시하였음



▲ [그림 2-2] 경관법 구성도

2) 주요 개정 내용

- 국가 경관정책기본계획 수립 신설
 - 국토교통부장관이 경관정책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음
 - 국가 차원의 체계적 경관관리 및 유도·지원 역할을 강화하였음
- 국가 차원의 중앙경관위원회 설치
 - 중앙행정기관이 승인·지정하는 개발사업의 경관심의를 위해 해당 사업별 위원회를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로 추가하여 경관위원회 기능을 대신하도록 함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연구개발특구위원회, 경제자유구역위원회 등이 이에 해당됨
- 경관계획 수립 의무화 및 수립권자 확대
 - 시·도지사 및 인구 10만 초과 시장·군수의 경관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였음
 - 특·광역시외의 자치구·군, 경제자유구역청 등도 필요시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수립권자를 확대함
- 경관계획의 내용 보완
 - 경관계획의 내용을 보완하여 경관관리의 기본적인 틀을 제시하도록 함
 - 경관구조의 설정, 경관사업의 추진방안, 특정한 경관 유형 또는 요소의 관리계획이 포함됨
- 도의 시, 군 경관계획 승인절차 폐지
 - 시·군에서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직접 수립토록 변경함
 - 시·군 경관계획은 도의 경관계획에 부합되게 수립하고, 내용이 다를 경우 도의 경관계획이 우선하도록 규정하였음
- 일정규모 이상의 사회기반시설, 개발사업,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도입
 - 총 사업비 500억 이상의 도로, 철도, 도시철도 및 300억 이상의 하천시설 사업에 대한 경관심의를 실시함
 - 도시지역은 3만㎡ 이상, 비도시지역은 30만㎡ 이상의 개발사업이 해당됨
 -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은 용도지역과 관계없이 20만㎡ 이상이면 해당됨
 - 경관지구와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공공건축물 및 기타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심의대상임
- 사전경관계획 수립 및 건축기준 완화
 - 사전경관계획을 수립하여 경관심의를 받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우수경관을 위해 필요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 개발사업 면적이 30만㎡ 이상이거나, 건축물 연면적 합이 20만㎡ 이상인 경우 사전경관계획수립을 의무화하였음
 - 경관심의를 받는 건축물에 대해 필요시 건축기준 완화할 수 있음
- 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 완화
 - 공동위원회 구성 활성화를 위해 공동위원회 내 경관위원의 비율을 1/2에서 1/3로 완화하였음

- 의사정족수도 2/3이상 출석에서 1/2이상 출석으로 완화하였음
- 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 개선
 - 경관위원회를 인력풀제 (10~70명)으로 운영하고 소위원회 설치 (7인 이내) 근거를 마련함
 - 투명한 심의를 위해 회의결과를 회의 후 10일 내 인터넷으로 공개하도록 하였음

▼ [표 2-3] 경관법 개정 전, 후 비교

개정 전	개정 후
〈신설〉	· 경관정책기본계획 수립 - 국가차원의 중장기 경관정책 5년 단위 수립
· 경관계획 수립 - 특·광역시, 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은 경관계획 수립 가능(임의)	· 경관계획 수립 의무화 및 수립권자 확대 - 시·도지사, 인구 10만 명 초과 시·군은 경관계획 수립 의무화 - 인구 10만 명 이하 지자체는 경관계획 수립 가능(임의)
· 경관계획 수립절차 - 시·군 계획 수립 시 도지사의 승인	· 시·군 경관계획 수립절차 간소화 - 도지사 승인 폐지, 경관위원회 심의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직접 확정
· 경관사업 시행 - 지자체가 직접 사업 시행 또는 민간사업 지원	· 경관사업 시행 주체 확대 - 경관사업 시행, 지원 주체에 지자체 외에 중앙정부 추가
· 경관협정 - 지역주민간 경관협정 체결·운영 - 지자체가 경관협정에 대해 기술·재정상 지원 가능	〈현행과 같음〉
· 경관심의 - 경관계획 수립·변경 승인 - 경관사업의 승인 - 경관협정의 인가 등	· 경관심의 대상 확대 - 도로, 철도, 하천 등의 사회기반시설 - 개발사업 - 건축물 등으로 경관심의 확대
· 경관위원회 운영 - 지자체가 심의·자문을 위해 운영	· 경관위원회 운영 주체 확대 - 국토교통부장관과 승인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장 소속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를 추가
〈신설〉	· 국가 및 지자체의 경관관리 강화 - 전문인력 양성, 경관관리정보체계 구축·운영, 경관의 보전·창출 계획 또는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 우선 지원 근거 마련

▼ [표 2-4] 경관법 시행령 개정 전, 후 비교

개정 전	개정 후
· 경관계획 수립권자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시행	· 경관계획 수립권자 확대 – 시·도지사, 시장·군수 및 구청장, 행정시장, 경제자유구역청장 추가
〈신설〉	· 사회기반시설 사업 경관심의 – 총 사업비 500억 이상의 도로, 철도, 도시철도 및 300억 이상의 하천시설 사업
〈신설〉	· 개발사업 경관심의 – 도시지역은 3만㎡ 이상, 비도시지역은 30만㎡ 이상 사업
〈신설〉	· 사전경관계획 수립 – 개발사업 대상면적이 30만㎡ 이상이거나, 건축물 연면적 합이 20만㎡ 이상인 경우 사전경관계획 수립 의무화
·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의 범위 – 지자체장 소속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등 규정	·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의 범위 – 중앙행정기관장 소속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연구개발특구위원회 등을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로 추가
· 경관사업추진협의체 – 추진협의체 운영 기준 부재	· 경관사업추진협의체 세부기준 마련 – 역주민, 이해관계인, 시민단체, 경관전문가 등 20인 이내로 구성 – 담당 업무 규정(교육, 홍보, 이해관계 조정 등)
· 공동위원회 – 공동위원회 위원장은 경관위원장이 하고, 경관위원 1/2 이상 참여	· 공동위원회 구성·운영 기준 완화 – 공동위원회 위원장은 부단체장이 하고, 경관위원 1/3 이상 참여
· 경관위원회 – 위원수는 10~20인으로 하고, 소위원회 운영, 인터넷	· 경관위원회 기준 개선 등 – 인력풀(10~70인제)제로 운영, 소위원회 설치 – 회의결과는 인터넷 공개 의무화

3) 지자체 대응 필요 사항

- 경관법 개정에 대응하여 광역, 기초 지자체의 대응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함
- 1차적으로 경관관리를 위한 법제, 조직, 인력 구성이 필수적임
- 경관계획 수립, 경관조례 제정, 경관관리 전문부서 신설, 인력 보강 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중앙정부 및 도 차원에서 시·군 행정 기반 구축을 위한 지원이 필요함
- 경관심의 운영 활성화 및 효율화가 필요함
- 경관심의 프로세스, 기준 마련 등을 통한 심의 개선 및 활성화가 필요함 ▶ 본 과제의 연구범위

- 조례로 위임된 경관심의 대상(사회기반시설, 건축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1차 경관정책기본계획과 향후 개정될 충남 경관계획과의 정합성 확보가 필요하며 충남경관계획 실행 사업 발굴 시 경관정책기본계획 사항 검토도 필요함
- 또한, 충남 경관계획과 15개 시·군 경관계획의 역할 분담이 필요함
- 인구 10만 이상 지자체의 경관계획 수립은 의무 사항이나 도 차원에서는 경관계획 임의 수립 지자체에 대한 계획 수립 유도 및 지원 방안 검토가 필요함
- 경관위원회 수립 의무화에 따라 신설하거나 기존 유사위원회의 재편이나 대체 방안 검토가 필요함
- 경관계획 혹은 관련계획을 통해 경관지구와 미관지구 관리 방안 수립이 필요하며 경관지구 내 건축물 등 조례로 위임된 경관심의 대상 설정이 시급함
- 경관관리정보시스템 구축 및 활용방안 수립 검토가 필요하며 중앙정부나 도 차원의 정보시스템 구축 후 시·군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함

2. 경관심의 대상과 시기

1) 경관심의 대상과 주체

- 경관계획, 경관사업, 경관협정에 국한되어 있던 경관심의를 사회기반시설사업, 개발사업, 건축물로 확대하고 대상과 규모를 명기함
- 중앙경관위원회와 지방경관위원회와의 역할을 표 2-5와 같이 분담하였음

▼ [표 2-5] 중앙 및 지자체 경관위원회 역할

구분	중앙경관위원회	지방경관위원회	
		시·도 경관위원회	시·군·구 경관위원회
경관계획	– 국토경관정책기본계획 심의	– 시·도 경관계획 심의 – 시·군·구 경관계획 자문	– 시·군·구 경관계획 심의
경관조례		– 경관조례 제정 및 개정	
경관사업	– 국가 추진 경관사업 승인(심의) – 국가 추진 경관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자문)	– 시·도 추진의 경관사업의 승인(심의) – 시·도 추진 경관사업의 계획에 관한 사항(자문)	– 시·군·구 경관사업의 승인(심의) – 시·군·구 경관사업의 계획에 관한 사항(자문)
경관협정		– 경관협정의 인가/비용 지원 받는 경관협정의 결정(심의) – 경관협정의 체결 및 운용에 관한 사항(자문)	
사회기반 시설	– 일정규모 또는 금액 이상의 공사(심의)	– 일정규모 또는 금액 이상의 공사(심의)	
개발사업	–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심의)	–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심의)	
건축물			– 경관지구 및 중점경관관리구역 내 건축물, 조례로 정한 건축물(심의)

자료출처: 김혜정, 2013

- 사회기반시설은 500억 이상의 도로, 철도시설, 도시철도시설 사업과 300억 이상의 하천시설사업, 조례로 정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이 심의대상임
- 개발사업은 용도지역과 규모에 따라 심의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대지면적이 30만㎡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20만㎡ 이상인 경우 사전경관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였음
- 개발사업 경관심의를 사회기반시설이나 건축물 경관심의와 달리 지자체 조례로 위임한 사항이 없음

- 건축물은 경관지구, 중점경관관리구역, 공공건축물, 조례 지정 건축물 등이 심의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지자체 조례를 통해 구체적인 심의대상과 규모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충청남도 경관위원회의 경관심의 및 자문 대상은 표 2-6과 같으며 시행령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표 2-6] 충청남도 경관심의 및 자문 대상

유형	심의 대상
경관계획, 사업, 협정 관련 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 경관계획의 승인 · 경관사업 시행의 승인 · 경관협정의 인가 · 비용 등을 지원받는 경관협정의 결정 (시행령 24조) · 다른 법령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시행령 24조) ·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시행령 24조)
사회기반 시설사업 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0억 이상의 도로, 철도시설, 도시철도시설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법에 따른 도로사업 – 철도건설법에 따른 철도건설사업 –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시설사업 · 300억 이상의 하천시설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법에 따른 하천시설사업 · 조례로 정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 (법 26조1항5호, 영 18조1항3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 시장, 군수가 추천한 경관시범 지역 등의 지정 – 경관보전, 관리,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써 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 ※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승인 및 시행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인 사업에 한정하여 심의대상은 조례로 규모를 달리 정할 수 있음
개발사업 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만㎡ 이상의 도시지역 개발사업 · 30만㎡ 이상의 도시지역 외 개발사업 · 20만㎡ 이상의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
건축물 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관지구의 건축물(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 ·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공공건축물(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이 건축하는 건물)로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그 밖에 경관관리를 위해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자문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 경관사업의 계획에 관한 사항 · 경관에 관한 조례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시, 도지사 등에만 해당) · 그 밖에 경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시, 도지사 등에만 해당)

- 경관심의 운영지침 [별표1]의 개발사업별 심의 시기 및 주체를 검토한 결과 심의대상 개발사업은 30개이나 8개 사업만 지자체 심의대상 사업으로 나타남. 22개 사업은 중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등)가 심의를 진행함

▼ [표 2-7] 개발사업의 심의 시기 및 심의 주체

	사업 유형	심의시기	심의주체
도시 개발	혁신도시개발사업	- 개발계획 승인 전	중앙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 공공주택지구계획의 승인 전	중앙
	도시개발사업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전	중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 정비계획의 수립 및 구역 지정 전	지자체
	도시재정비촉진사업	-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 전	지자체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	- 도청이전신도시 개발계획 승인 전	지자체
	물류단지 개발사업	- 개발계획 수립 및 단지의 지정 전	중앙
	역세권개발사업	- 개발구역의 지정 및 계획의 수립 전	중앙
	주택건설사업, 대지조성사업	- 사업계획의 승인 전	중앙
	택지개발사업	- 개발지구의 지정 및 계획 수립 전	중앙
산업 단지 조성	산업단지개발사업	- 개발계획 수립 및 단지 지정 전	중앙
	산업단지재생사업	- 재생계획 수립 및 사업지구 지정 전	중앙
	준산업단지 정비사업	- 정비계획 수립 및 단지 지정 전	중앙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개발사업	- 단지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 전	중앙
	연구개발특구 개발사업	- 특구개발계획의 수립 전	중앙
	중소기업진흥 단지조성사업	- 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 승인 전	지자체
특정 지역 개발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사업	- 개발계획 확정 및 구역 지정 전	중앙
	기업도시개발사업	- 기업도시개발계획이 승인 전	중앙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	- 마을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 지정 전	지자체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사업	-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 전	지자체
	해안권, 내륙권 개발사업	- 개발구역의 지정 전	중앙
	광역개발권역에서 시행하는 지역개발사업	- 광역개발사업계획 수립 전	중앙
	개발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지역개발사업	-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의 수립 전	중앙
	특정지역에서 시행되는 지역개발사업	- 특정지역개발계획의 수립 전	중앙
	지역종합개발지구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 종합개발지구 개발계획 수립 전	중앙
	친수구역조성사업	- 친수구역 지정 전	중앙
관광단지 개발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 전	지자체
	온천개발사업	- 온천개발계획의 승인 전	지자체
항만건설	항만재개발사업	- 항만재개발사업계획 수립 전	중앙
교통시설 개발	국가간복합환승센터 및 광역복합환승센터의 개발사업	- 개발계획 수립 및 환승센터 지정 전	중앙

2) 경관심의 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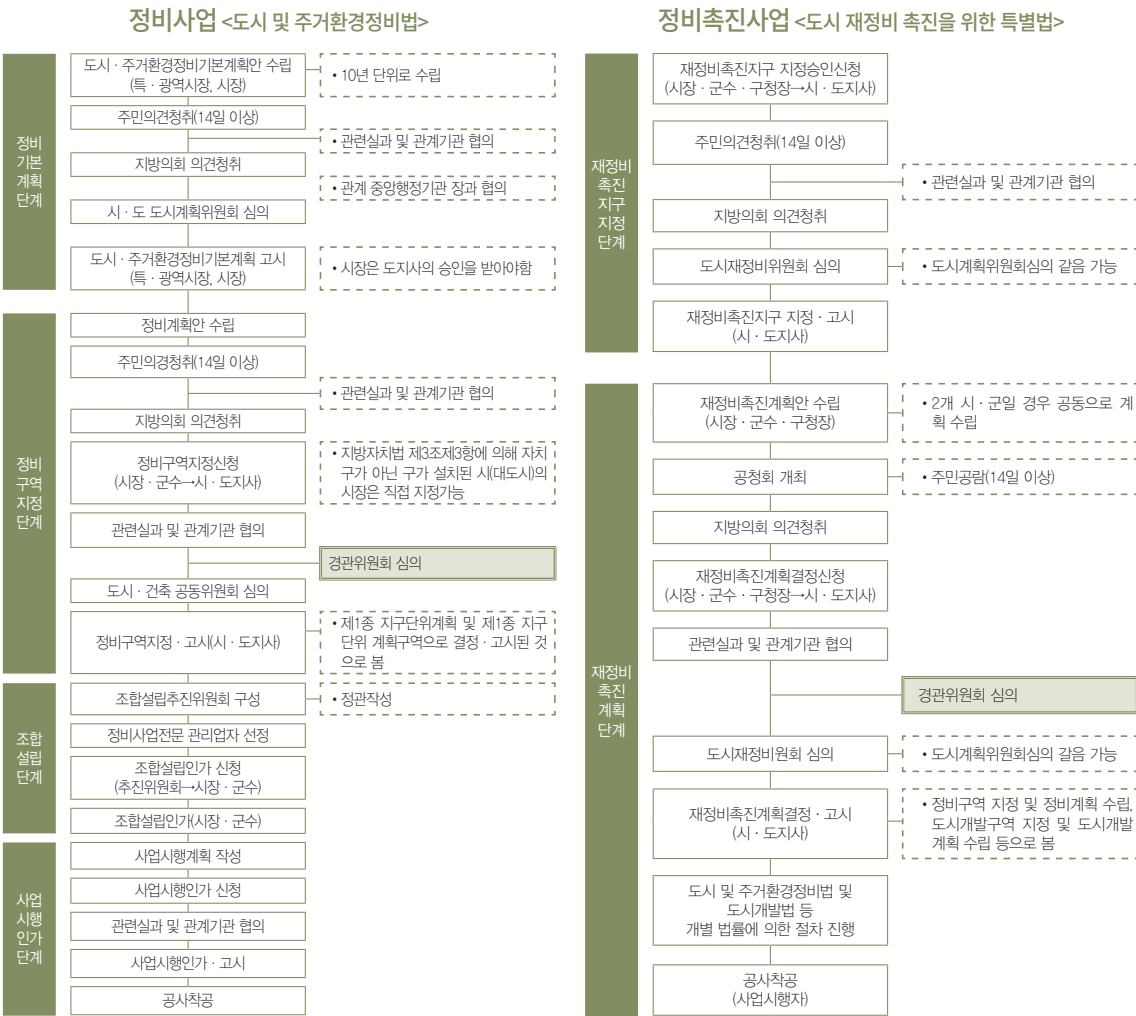
- 경관심의 운영지침에서는 심의 시기를 설계완료 전, 계획수립 전, 허가 전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 사회기반시설과 건축물은 전체 사업 프로세스에서 어느 시점에 심의 관련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음
- 개발사업의 경우는 심의 지침이 아닌 국토교통부 참고자료로 명시하고 있음
-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심의 시기는 기본적으로 기본설계 완료 전이며 하천시설의 경우 사업시행자에 따라 심의시기에서 차이가 있음
- 건축물의 경관심의 시기는 건축법 11조에 따라 건축 허가 전 해당 건축물의 허가권자 소속 경관위원회에서 심의함
-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도에 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건축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도지사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 [표 2-8] 사회기반시설사업과 건축물의 심의시기

유형	세부 사업 유형	심의시기
사회기반 시설사업	- 도로, 철도시설 및 도시철도시설	- 기본설계 완료 전(위원회 인정 시 실시설계 완료 전)
	- 하천시설(하천관리청 시행)	- 하천공사 시행계획 수립 전(실시설계도서 포함)
	- 하천시설(하천관리청 외 시행)	- 하천법에 따른 허가 전
건축물		- 건축 허가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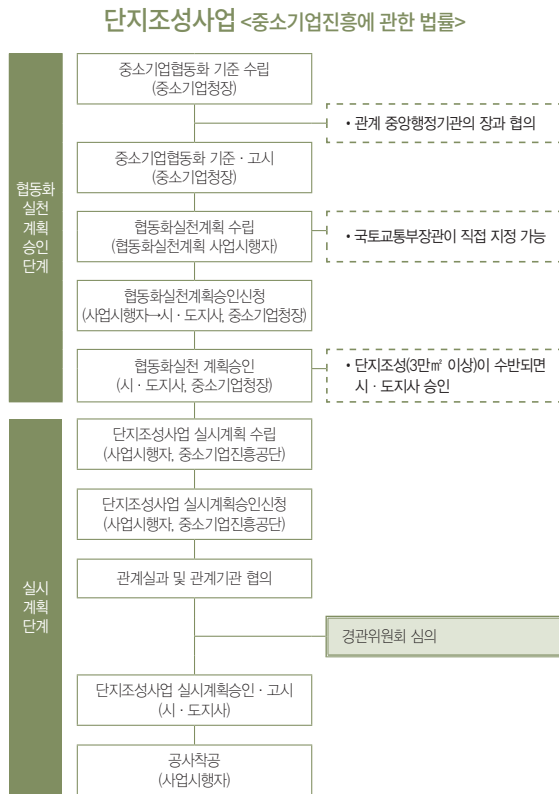
- 개발사업은 다양한 관련법에 의해 진행되고 있으며 도시의 개발, 산업단지의 조성, 특정지역의 개발, 관광단지의 개발, 항만의 건설, 교통시설의 개발사업 등 크게 6개의 사업유형으로 구분 됨
- 경관심의 시기는 각 사업의 승인, 수립, 결정, 확정 또는 각종 구역, 지구 등의 지정 전에 시행함
- 경관심의운영지침 [별표1]의 심의 시기 규정에서는 각종 개발계획의 승인, 수립, 결정, 확정 또는 각종 구역, 지구 등의 지정은 같은 절차를 거치는 변경승인, 변경수립, 변경결정, 변경 또는 변경 지정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음. 즉, 개발사업은 경관심의 이후 변경이 발생하면 재심의를 받아야 함
- 개발사업의 경관심의를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건축위원회 등 다른 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실시하거나 관련 위원회와 공동으로 심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2014)에서 개발사업의 경관심의시기를 제시하고 있음
- 지자체 경관심의 대상은 30개 사업 중 8개 사업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도시재정비촉진사업,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 중소기업진흥 단지조성사업,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사업,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온천개발사업이 해당됨 (부록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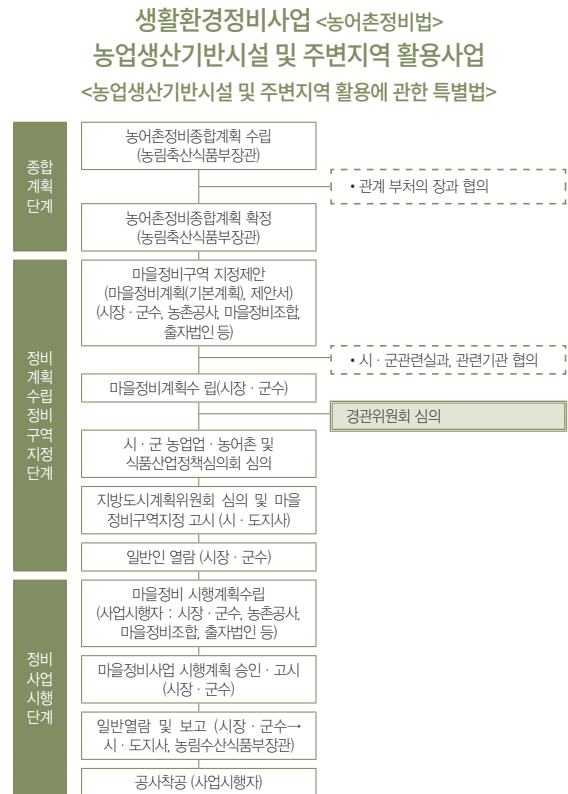


▲ [그림 2-3] 정비사업 경관심의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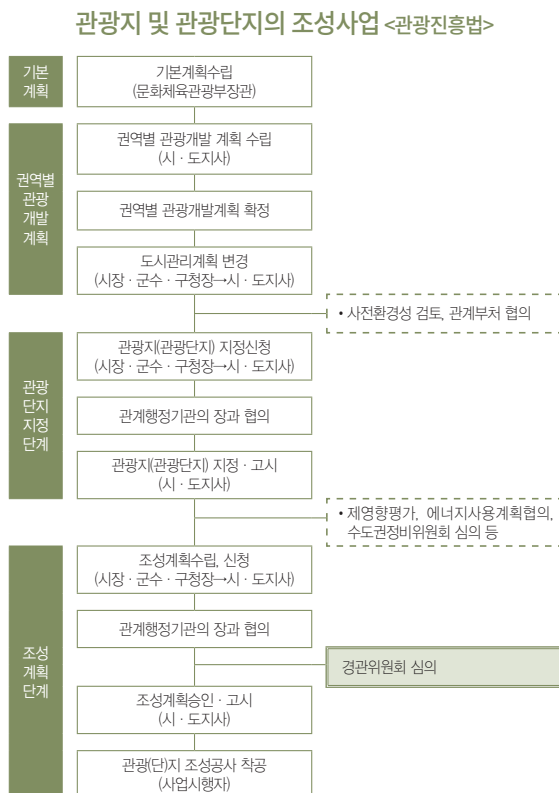
▲ [그림 2-4] 정비촉진사업 경관심의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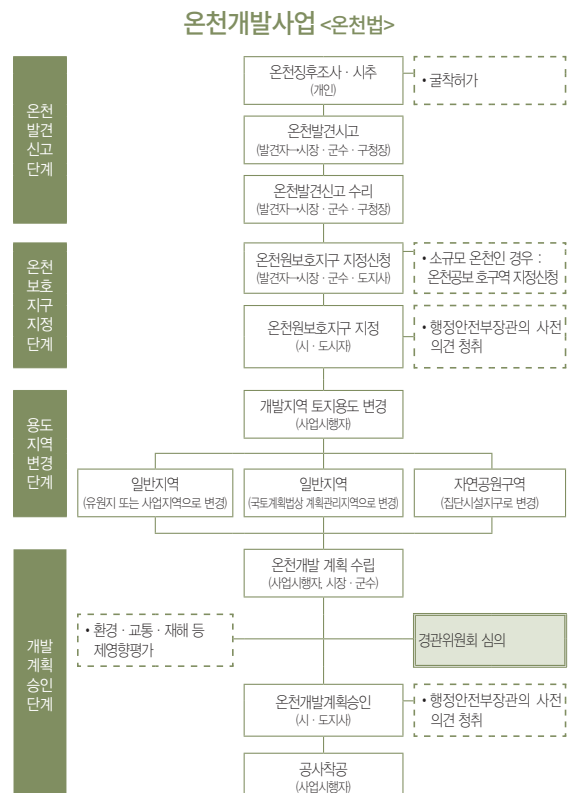
▲ [그림 2-5] 단지조성사업 경관심의 절차



▲ [그림 2-6] 생활환경정비사업 경관심의 절차



▲ [그림 2-7] 관광지조성사업 경관심의 절차



▲ [그림 2-8] 온천개발사업 경관심의 절차

3. 경관심의 운영지침 분석

1) 경관심의기준과 심의도서의 구성

(1) 경관체크리스트의 구성

- 경관심의운영지침에서 사회기반시설사업, 개발사업, 건축물의 경관심의기준, 경관체크리스트, 경관심의도서 작성방법 (별표 2, 별표 3, 별표 4)을 제시하고 있음
- 운영지침 내 심의 기준에서는 경관심의에서 다루어질 내용에 대한 방향과 범위만을 간략하게 규정하고 있음
- 사업의 특성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경관체크리스트는 3개 사업유형을 5개로 구분하여 구성하고 있는데 사회기반시설사업(도로, 철도시설, 하천시설), 개발사업, 건축물로 구분되며 체크리스트 구성 방식에서 차이가 나타남
- 사회기반시설사업과 개발사업 경관체크리스트 검토항목은 기본방향 → 기본구상 → 주요시설(경관부문별) 계획방향의 위계화된 방식으로 구성됨
- 건축물의 경관체크리스트 검토항목은 배치·규모·형태·입면계획, 외부공간계획, 옥외광고물계획, 야간경관계획 등의 분야로 구성됨

▼ [표 2-9] 경관체크리스트의 구성

사업 유형		경관체크리스트 항목 구분
사회기반 시설사업	도로	기본방향 / 기본구상 / 주요시설 설계방향 / 야간 경관계획(필요시)
	철도시설	기본방향 / 기본구상 / 주요시설 설계방향 / 야간 경관계획(필요시)
	하천시설	기본방향 / 기본구상 / 주요시설 설계방향
개발사업		기본방향 및 목표 / 경관기본구상 / 경관부문별 계획
건축물		배치·규모·형태·입면계획 / 외부공간계획 / 옥외광고물 계획 / 야간 경관계획(필요시)

- 경관체크리스트는 사업자용과 심의위원용으로 구분되어 있고 동일한 검토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 사업자용 경관체크리스트에는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체크 칸이 있으며 미반영 또는 해당없음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특별히 강조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한 부연 설명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음
- 심의위원용에는 경관체크리스트 검토항목을 기준으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음

[별지 제7호 서식]

건축물의 경관체크리스트(사업자용)

구분	검토항목	반영	미 반영	해당 없음
배치·규모·형태·입면 계획	지역의 장소성 및 인접 건축물과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등 주변과 조화로운 계획(건축선, 스카이라인, 형태, 입면 등)			
	구릉지의 경우 지나친 옹벽발생을 지양하고 주변 지형에 순응한 배치			
	건축물로 인해 기존 보행자들의 통행이 단절되지 않도록 주변 가로체계를 고려하여 배치하고, 필요시 공공보행통로를 계획			
	대규모 건축물의 경우 기반부를 설치하거나 전면부를 분절하는 등 휴먼스케일의 보행환경 조성			
	확립적이거나 과장된 디자인, 자극적인 색채 등은 지양			
	옥상설비 및 부속설비가 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계획			
외부공간 계획	장애인, 노인 등 보행약자의 접근, 이용,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무장애설계(Barrier free) 적용			
	담장, 울타리 등은 주변 건축물 및 지역특성과 조화되는 색채, 재료, 디자인 등 사용			
	건축물의 진입부 및 저층부는 가능한 경우 이용자·보행자를 위해 공원(쌈지공원, 도심형 공원 등), 광장 등으로 계획			
	건축물 진입부에 이용자의 시각을 방해하는 과도한 시설물 설치 지양			
	보행환경을 저해하지 않도록 차량·주차·보행 동선을 계획하고, 가로와 인접한 부분이나 주 보행로와 인접한 부분에는 주차장 설치 지양			
	공개공지의 경우 인접한 건축물 공개공지의 특성과 입지를 고려하여 통합적 이용이 가능하도록 계획			
옥외광고물 계획 (필요시)	건축물의 입면과의 통합적 계획 및 해당 지역의 특성에 대한 배려			
	해당 지자체의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지침 등 준수			
아간경관계획 (필요시)	건축물의 용도 및 주변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조도·취도·색채 등을 계획하되, 과도한 연출은 지양			

[사업자 의견]

[별지 제12호 서식]

건축물의 경관체크리스트(심의위원회용)

구분	검토항목
배치·규모·형태·입면 계획	지역의 장소성 및 인접 건축물과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등 주변과 조화로운 계획(건축선, 스카이라인, 형태, 입면 등)
	구릉지의 경우 지나친 옹벽발생을 지양하고 주변 지형에 순응한 배치
	건축물로 인해 기존 보행자들의 통행이 단절되지 않도록 주변 가로체계를 고려하여 배치하고, 필요시 공공보행통로를 계획
	대규모 건축물의 경우 기반부를 설치하거나 전면부를 분절하는 등 휴먼스케일의 보행환경 조성
	확립적이거나 과장된 디자인, 자극적인 색채 등은 지양
	옥상설비 및 부속설비가 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계획
외부공간 계획	장애인, 노인 등 보행약자의 접근, 이용,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무장애설계(Barrier free) 적용
	담장, 울타리 등은 주변 건축물 및 지역특성과 조화되는 색채, 재료, 디자인 등 사용
	건축물의 진입부 및 저층부는 가능한 경우 이용자·보행자를 위해 공원(쌈지공원, 도심형 공원 등), 광장 등으로 계획
	건축물 진입부에 이용자의 시각을 방해하는 과도한 시설물 설치 지양
	보행환경을 저해하지 않도록 차량·주차·보행 동선을 계획하고, 가로와 인접한 부분이나 주 보행로와 인접한 부분에는 주차장 설치 지양
	공개공지의 경우 인접한 건축물 공개공지의 특성과 입지를 고려하여 통합적 이용이 가능하도록 계획
옥외광고물 계획 (필요시)	건축물의 입면과의 통합적 계획 및 해당 지역의 특성에 대한 배려
	해당 지자체의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지침 등 준수
아간경관계획 (필요시)	건축물의 용도 및 주변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조도·취도·색채 등을 계획하되, 과도한 연출은 지양

[심의위원*]

심의위원: (인)

* 미반영 또는 해당없음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특별히 강조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한 부연 설명을 작성

* 경관체크리스트 검토항목을 기준으로 의견 제시

▲ [그림 2-9] 건축물 경관체크리스트 구성

- 체크리스트의 내용은 계획과 설계의 방향을 설명하는 수준이며 심의위원이 체크리스트를 통해 심의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은 제시하고 있지 않음
- 체크리스트 대부분의 항목은 심의위원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개념 중심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음
- 경관심의의 특성상 정량적인 기준 적용이 어려우나 현재의 체크리스트는 사업자 및 심의위원 모두에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 또한, 개념 중심의 체크리스트는 심의 범위를 정확하게 규정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심의위원의 해석에 따라 심의범위가 확대, 왜곡될 수 있는 소지가 있음
- 사업자 역시 체크리스트를 적용하여 계획 및 설계를 진행하기 어려우며 반영과 미반영의 근거 확보가 어려움
- 따라서 현재의 경관체크리스트 구성에서는 지역경관과 심의대상사업 주변지역에 대한 분석과 이해, 심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선행되어야 함

- 또한 심의위원의 전문성과 심의위원들 간의 합의 즉 심의장소에서의 분위기가 심의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임
- 심의대상 사업유형별로 경관심의기준과 경관체크리스트 항목을 분석하여 심의 시 주요 검토 사항 도출이 필요함

(2) 경관심의도서 작성방법

- 현재 경관심의도서 작성방법에서는 명확한 도면명과 각 도면에 담을 내용에 대한 기술이 모호함
- 담당 실무자 및 사업자(설계자)의 해석 및 재량에 따라 심의도서의 내용, 수준이 달라질 수 있음
- 심의지침에서는 A4 30매 이내의 규정이 있으나 현실적이지 않음
- 심의도서 작성방법에서는 항목별로 기재내용을 기술하고 있으나 정확한 도서명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 도서 작성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경관체크리스트와 관련된 내용들을 포함하고 기재내용을 설명하면서 간혹 도면명을 제시하고 있음
- 심의도서 작성방법에서 각 사업별로 항목과 작성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작성방법에서 각 항목별로 분석항목 및 범위, 분석방법, 기재사항, 기재 방법을 기술하고 있음
- 경관심의도서 작성방법을 분석하여 심의도서 목록을 5장에서 도출하였음

2) 사회기반시설사업 심의기준과 도서

- 사회기반시설사업의 경관심의 기준은 현황조사 및 분석, 기본구상, 주요시설의 설계방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관체크리스트는 도로, 철도시설, 하천시설로 구분됨

(1) 현황조사 및 분석

- 대상지와 주변 경관자원 및 경관특성에 대한 분석

(2) 기본구상

- 규모, 노선, 선형 및 구조계획
- 구간 또는 영역별 설계방향
- 경관상 중요한 장소에 대한 설계방향

(3) 주요시설의 설계 방향

- 경관상 중요한 시설의 규모, 배치, 형태 등의 설계 방향

(1) 도로의 경관심의 항목

- 경관체크리스트는 기본방향, 기본구상, 주요시설 설계방향, 야간경관계획(필요시) 로 구분되어 있으며 기본방향 3개, 기본구상 5개, 주요시설 설계방향 7개, 야간경관계획 2개 등 총 17개의 검토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 기본방향, 기본구상, 주요시설 설계방향 검토항목의 위계 및 상관성을 고려하여 표 2-10으로 재구성함

▼ [표 2-10] 도로의 경관체크리스트 재구성

기본방향	기본구상	주요시설 설계방향
주변경관과 조화	주변의 도시구조 및 경관요소와 조화를 이룬 도로선형	도로가 교차되는 곳, 주요 진입부 등은 방향성이 쉽게 인지되도록 설계
		시설물의 규모와 비례, 재료, 색채 등은 도로 주변의 자연환경, 건축물, 인공물 등의 규모를 고려하여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
	주변 자연환경, 건축물, 인공물 등의 규모를 고려하여 지역주민에게 위화감을 주지 않는 적절한 규모 계획	가로등, 신호등, 전신주, 도로표지판, 시설안내판 등 가로시설물은 보행환경 및 경관을 고려하여 통합지주로 계획
		가로시설물 및 주변시설물이 전체적으로 통일감을 가지도록 설계
자연환경을 고려한 지속가능성 확보	공원 및 녹지 등 지역의 공공공간과 기존 도로망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계획	
	지형적 특성(산지, 구릉, 수변)을 고려한 도로선형과 도로구조	
시각적 연속성과 조망 확보		주행자의 안전한 운행을 위한 시각적 연계성 및 조망을 고려하여 도로에서 외부로의 시각적 개방감을 확보
	변화감 있는 연속경관(주행 및 보행행태 고려)	이동경로에 따른 경관의 연속성 및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설계
		이동속도에 따라 도로의 연속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시설물의 배치, 규모 계획
야간경관계획	야간조명은 도로 이용자의 안전과 기능을 고려하고 도시의 전체적인 야간경관을 고려하여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계획	
	해당 시설 및 공간의 특성을 고려하여 디자인하되, 과도한 연출은 지양	

(2) 철도시설의 경관심의 항목

- 철도시설도 기본방향, 기본구상, 주요시설 설계방향, 야간경관계획(필요시)로 구분되어 있으며 기본방향 3개, 기본구상 5개, 주요시설 설계방향 4개, 야간경관계획 2개 등 총 14개의 검토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 기본방향, 기본구상, 주요시설 설계방향 검토항목의 위계 및 상관성을 고려하여 표 2-11로 재구성함

▼ [표 2-11] 철도시설의 경관체크리스트 재구성

기본방향	기본구상	주요시설 설계방향
주변경관과 조화	주변의 도시구조 및 경관요소와 조화를 이룬 철도선형	
	지형적 특성(산지, 구릉, 수변)을 고려한 철도선형과 철도구조	
	주변 자연환경, 건축물, 인공물 등의 규모를 고려하여 지역주민에게 위화감을 주지 않는 적절한 규모 계획	시설물의 규모와 비례, 재료, 색채 등은 철도 주변의 자연환경, 건축물, 인공물 등의 규모를 고려하여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
	공원 및 녹지 등 지역의 공공공간과 기존 도로망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계획	
시각적 연속성과 조망 확보	변화감 있는 연속경관(주행 및 보행행태 고려)	역사 및 교량, 터널 등 인공구조물은 시각적 개방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주변으로의 조망을 고려하여 디자인
인지가 쉽고 이용이 편리한 철도역사 조성		지역의 고유한 자연 및 역사, 문화적 자원 등과 연계하여 지역의 특색이 나타나도록 계획
		역사 외부공간은 편의를 고려하여 문화교류, 만남, 모임, 휴식 등의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디자인
야간경관계획	야간조명은 이용자의 안전과 다양한 활동을 고려하여 디자인하되, 과도한 연출은 지양	
	역사와 주변 건축물 및 각종시설물의 조명은 주변 경관을 저해하지 않고 상호 조화를 이루도록 디자인	

(3) 하천시설의 경관심의 항목

- 하천시설은 기본방향, 기본구상, 주요시설 설계방향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기본방향 3개, 기본구상 5개, 주요시설 설계방향 5개 등 총 13개의 검토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 기본방향, 기본구상, 주요시설 설계방향 검토항목의 위계 및 상관성을 고려하여 표 2-12로 재구성함

▼ [표 2-12] 하천시설의 경관체크리스트 재구성

기본방향	기본구상	주요시설 설계방향
주변경관과 조화	하천의 미지형을 최대한 살리고 주변 경관과 시각적 연속성을 갖도록 계획	하천 내 인공시설물 설치를 지양하되, 불가피하게 인공구조물을 설치할 경우 과도한 디자인을 지양하고, 자연경관 변화를 최소화
		공공시설물 등 하천 관련 시설물을 일관성 있게 디자인
		댐 공간 및 부속시설은 경관 및 기능,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디자인
친수공간은 접근성과 쾌적성을 고려하여 조성	계절적 변화와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다양한 하천경관을 연출	
	기존 오픈스페이스 및 공원 녹지와 연계하여 계획	
시각적 연속성과 조망 확보	하천구역과 주변의 토지이용, 도로, 건축물 등을 연계하여 일체적으로 계획	친수공간을 조성하거나, 조망점, 하천 트레일을 정비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설치
	주요 조망지점에서부터 하천으로의 조망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각적인 조망축을 설정하여 하천으로의 개방감을 확보	인공구조물은 시각적 개방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망을 고려

(4) 사회기반시설사업 경관심의도서(안)

- 사회기반시설사업 경관심의도서 작성방법을 분석하여 작성도서 목록(안)을 도출하였으며 심의도서의 전체적인 구성은 그림 2-10과 같음



▲ [그림 2-10] 사회기반시설 심의도서 구성

- 심의도서 작성에서는 대상지 및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경관관련계획, 경관자원, 경관특성 등에 대한 분석이 필수이며 표 2-13에서 작성방법의 주요 내용을 요약 정리함

▼ [표 2-13] 사회기반시설사업의 경관심의도서 작성방법

항목	작성방법
표지	– 사업명, 재심 여부, 제출일자
목차	– 심의도서의 순서
사업개요	– 사업명, 사업의 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 사업추진사항과 계획, 타 위원회 심의 여부 및 결과 등 사업추진 경위 기술
경관 관련 계획	· 대상지에 영향을 미치는 경관관련계획 분석 – 경관계획, 경관설계지침, 디자인 가이드라인 –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 경관계획시 구축된 각종자료 – 국가 및 지자체에서 운영되는 관련 계획 – 문헌조사를 통해 간략히 정리 및 기술
현황조사 및 분석	· 대상지 및 주변지역의 경관자원 및 특성 분석 – 지형적 특성 – 주요 건축물, 시설물, 공공공간, 도시구조 – 주요 경관자원 및 경관특성 – 현황분석종합도 2차원 지형도 및 항공사진 위에 해당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사항과 공간적 범위 표기 – 사진 –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로 현황분석도 작성
기분방향	· 경관형성 및 관리 기분방향 제시
기본구상	· 사회기반시설의 전체적인 선형 및 구조, 구간 또는 영역별 설계 방향, 경관상 주요한 장소에 대한 설계방향 제시 (도면 또는 스케치 첨부) – 전체적인 선형 및 구조 (주변지역 포함), (평면도, 횡단면도) – 경관변화 예측이 가능한 도면 (지형도, 항공사진 이용 전후 비교) – 사업지역의 주변 현황 및 이동 속도 등 특성에 따라 영역별 설계방향 – 경관상 중요 장소에 대한 단면도와 스케치(경사지, 경관자원 및 인접공간, 이용이 많은 곳) – 이용자가 바라보는 연속경관 이미지, 주변지역에서 시설 볼 때의 조망 –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축적 사용
주요 시설의 설계 방향	· 사회기반시설(도로, 철도, 하천)과 관련된 주요시설의 규모, 배치, 형태 등 설계 방향 제시 – 경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요시설, 공작물 및 설치 장소 선정 – 주요시설 : 교량, 터널, 교차로, 휴게시설, 방음시설 – 주변지역을 포함한 배치도, 스케치, 이미지 등을 첨부 설명 – 필요한 경우 대안 제시하여 장단점 비교표 또는 도면 작성 –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축적 사용 · 야간경관계획 시 – 주요시설에 대한 조명의 위치, 종류, 조도, 휘도, 색상 등을 기재하고 예시도 작성
그 밖의 사항	· 사전검토 또는 경관심의 결과와 그에 대한 반영사항

• 심의지침 상에서는 A4 30매 이내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의 심의도서 작성 여건을 보았을 때 재검토가 필요하며 심의도서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지자체에서 조정이 필요함

• 사회기반시설사업 심의도서작성방법의 내용을 분석하여 5장에서 심의도서 목록과 내용을 정리하였음

3) 개발사업 심의기준과 도서

(1) 개발사업 경관심의 항목

- 개발사업의 경관심의 기준은 경관현황조사 및 분석,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 경관기본구상, 주요 경관요소의 계획방향, 그 밖의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 사회기반시설사업과 달리 기본구상 수립 전,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목표, 전략 등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함

(1) 경관현황조사 및 분석

- 대상지와 주변 경관자원 및 경관특성에 대한 분석

(2)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

- 경관의 보전, 관리, 형성에 관한 기본방향, 목표 및 전략

(3) 경관기본구상

- 토지이용 및 가로체계 등 공간의 골격 설정 및 각 공간별 계획방향

(4) 주요 경관요소의 계획방향

- 건축물, 가로, 공원 및 녹지, 스카이라인 등의 계획방향
- 야간경관, 색채, 공공시설물, 옥외광고물 등의 계획방향 (필요 시)

(5) 그 밖의 사항

- 관련 계획과의 연계 및 실현 가능성 등

- 경관체크리스트는 기본방향 및 목표, 경관기본구상, 경관부문별 계획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기본방향 및 목표 3개, 경관기본구상 5개, 주요시설 설계방향 7개 등 총 15개의 검토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 검토항목의 위계 및 상관성을 고려하여 표 2-14로 재구성 함. 기본 방향 및 목표, 경관기본구상이나 경관부문별 계획에서는 구체화된 검토항목이 없는 경우도 있음. 체크리스트의 성격보다는 경관계획 수립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 [표 2-14] 개발사업의 경관체크리스트 재구성

기본방향 및 목표	경관기본구상 (경관구조의 설정)	경관부문별계획 (도시공간구조의 입체적 기본구상)
지역현황 반영 및 우수한 경관자원 보존 활용		
기본방향에 따라 실현 가능하고 일관된 목표 및 전략 수립		
대상지 포함 지역전체 경관 향상을 위한 계획 수립	경관을 고려하여 밀도, 용도배치 등 토지 이용계획과 교통처리계획 등을 설정	주변 지역의 가로체계, 토지이용 등의 현황 및 계획을 고려하여 인접한 건축물, 가로, 공원 및 녹지와 연계
	개발사업 규모, 장소의 특성 및 이용자를 고려한 경관구조(권역, 축, 거점) 설정	주변 여건, 규모, 위치 등에 따른 이용자 특성을 고려 한 공원 및 녹지 등 오픈스페이스 계획
	경관구조별 장소성, 조화성 확보 및 특 성화	건축물, 가로, 공원 및 녹지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통합적·입체적으로 계획
	토지이용, 지형·지세, 주변 지역의 스카 이라인 등을 고려한 조화로운 스카이라 인 형성	토지이용, 지형·지세, 주변 지역의 스카이라인, 대상 지의 정체성 등을 고려한 건축물의 배치, 형태, 규모 계획
	주변 맥락과 상징성을 고려한 주요 진입 부, 경관거점 및 결절부 계획	가로등, 신호등, 전신주, 도로표지판, 시설안내판 등 가로시설물은 보행환경 및 경관을 고려하여 통합지 주로 계획

(2) 개발사업 경관심의도서(안)

- 개발사업 경관심의도서 작성방법을 분석하여 작성도서 목록(안) 도출
- 심의도서의 전체적인 구성은 그림 2-11과 같음. 심의도서 작성에서는 대상지 및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경관관련계획, 경관자원, 경관특성 등에 대한 분석을 요구하고 있음



▲ [그림 2-11] 개발사업 심의도서 구성

- 표 2-15에서 작성방법의 주요 내용을 요약 정리하였으며 개발사업 경관심의도서 작성방법을 분석하여 필요 작성도서 목록을 도출하였음
- 개발사업 경관심의도서 작성방법을 분석하여 작성도서 목록과 내용을 5장에서 정리하였음

▼ [표 2-15] 개발사업의 경관심의도서 작성방법

항목	작성방법
표지	– 사업명, 재심 여부, 제출일자
목차	– 심의도서의 순서
사업개요	– 사업명, 사업의 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 사업추진사항과 계획, 타 위원회 심의 여부 및 결과 등 사업추진 경위 기술
경관관련 계획	· 대상지에 영향을 미치는 경관관련계획 분석 – 경관계획, 경관설계지침, 디자인 가이드라인 –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 경관계획 시 구축된 각종자료 – 국가 및 지자체에서 운영되는 관련 계획 – 문헌조사를 통해 간략히 정리 및 기술
현황조사 및 분석	· 대상지 및 주변지역의 경관자원 및 특성 분석 – 지형적 특성 – 주요 건축물, 시설물, 공공공간, 도시구조 – 주요 경관자원 및 경관특성 – 현황분석종합도 : 2차원 지형도 및 항공사진 위에 해당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사항과 공간적 범위 표기 – 사진 –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로 현황분석도 작성
기본방향 및 목표	· 경관형성 및 관리 기본방향 제시 · 기본방향 실현을 위한 목표 및 전략 기술
경관기본구상	· 대상지의 토지이용 및 가로체계 등을 고려하여 면, 선, 점 등 주요한 공간의 골격을 설정하고 각 공간별로 계획방향 설정 – 가로체계 설정, 공간 특성에 따른 영역의 설정, 주요 시설 및 프로그램 배치 또는 결절점 등 경관상 중요한 지점을 점, 선, 면의 다이어그램으로 표현 –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축적 사용
경관 부문별 계획	· 건축물, 가로, 공원 및 녹지 등 주요 경관요소에 대한 기본방향 및 경관상 고려할 사항을 제시 – 주변 지역의 건축물 높이, 지형·지세 등 현황을 감안하여 전체적인 지역경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건축물의 규모와 형태 – 가로체계 설정에 따른 각 가로 위계별 특성 및 계획 방향 – 공원 및 녹지의 위치 및 이용특성에 따른 계획방향 등 – 배치도에는 건축물, 가로, 공원 및 녹지 등 주요 경관요소를 간략한 선으로 표현하고, 대지 및 도로 주요 지점의 표고 값 기재 – 스카이라인 계획도는 2개 이상의 주요 횡단면의 윤곽을 간략히 표현 – 공원 및 녹지계획도는 각 장소의 규모, 위치, 여건 등을 파악하여 종류 및 위계를 구분 토지이용계획도에 채색하여 표현하고 조성방향을 글과 예시도로 설명
그 밖의 사항	· 사전검토 또는 경관심의의 결과와 그에 대한 반영사항

4) 건축물 심의기준과 도서

(1) 건축물 경관심의 항목

- 건축물 경관심의 기준은 현황분석, 배치·규모·형태 계획, 외부공간 계획, 옥외광고물 계획(필요 시), 외부조명계획(필요 시)으로 구성되어 있음
- 기본방향-기본구상-계획의 위계를 갖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이나 개발사업의 체크리스트와 달리 건축물, 배치, 규모, 형태, 외부공간, 옥외광고물, 외부조명 등 좀 더 구체적으로 구분되어 있음

(1) 현황분석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의 검토
- 주변의 건축물 및 경관자원의 특성에 대한 조사

(2) 배치·규모·형태 계획

- 주변 경관 및 인접 건축물을 고려한 건축물 배치, 규모, 형태, 입면 등 계획
- 구릉지 등 지형에 따른 배치 계획

(3) 외부공간 계획

- 인접가로 특성에 적합한 외부공간 계획
- 가로, 외부공간 및 건축물의 통합적 계획

(4) 옥외광고물 계획 (해당되는 경우에 한정함)

- 건축물과의 조화 및 주변 지역 특성을 감안한 계획

(5) 외부조명 계획 (해당되는 경우에 한정함)

- 건축물과의 조화 및 주변 지역 특성을 감안한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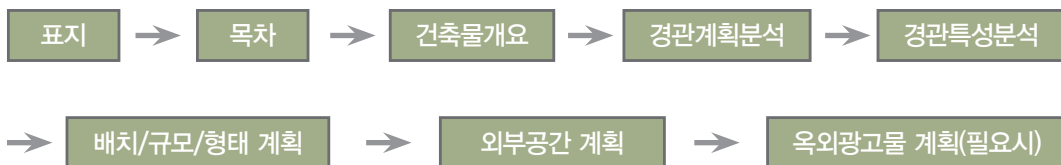
- 위계화된 체크리스트 구성을 보이는 사회기반시설이나 개발사업과 달리 부문별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차이점이며 배치·규모·형태·입면 6개, 외부공간계획 7개, 옥외광고물 계획 2개, 야간경관계획 1개 등 총 16개의 검토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 건축물의 경우 표 2-16과 같이 경관체크리스트에서 검토 항목을 직접 도출하였음

▼ [표 2-16] 건축물 경관체크리스트

구분	검토항목
배치, 규모, 형태, 입면 계획	지역의 장소성 및 인접 건축물과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등 주변과 조화로운 계획(건축선, 스카이라인, 형태, 입면 등)
	구릉지의 경우 지나친 옹벽발생을 지양하고 주변 지형에 순응한 배치
	건축물로 인해 기존 보행자들의 통행이 단절되지 않도록 주변 가로체계를 고려하여 배치하고, 필요시 공공보행통로를 계획
	대규모 건축물의 경우 기반부를 설치하거나 전면부를 분절하는 등 휴먼스케일의 보행환경 조성
	획일적이거나 과장된 디자인, 자극적인 색채 등은 지양
외부공간계획	옥상설비 및 부속설비가 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계획
	장애인, 노인 등 보행약자의 접근, 이용,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무장애설계 적용
	담장, 울타리 등은 주변 건축물 및 지역특성과 조화되는 색채, 재료, 디자인 등 사용
	건축물의 진입부 및 저층부는 가능한 경우 이용자·보행자를 위해 공원(쌈지공원, 도시형 공원 등), 광장 등으로 계획
	건축물 진입부에 이용자의 시각을 방해하는 과도한 시설물 설치 지양
옥외광고물 계획 (필요시)	보행환경을 저해하지 않도록 차량, 주차, 보행 동선을 계획하고 가로와 인접한 부분이나 주 보행로와 인접한 부분에는 주차장 설치 지양
	공개공지의 경우 인접한 건축물 공개공지의 특성과 입지를 고려하여 통합적 이용이 가능하도록 계획
	공개공간은 보행로와의 연계 등 다양한 계획기법을 통한 공공성 확보
야간경관계획(필요시)	건축물의 입면과의 통합적 계획 및 해당 지역의 특성에 대한 배려
	해당 지자체의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지침 등 준수
아간경관계획(필요시)	건축물의 용도 및 주변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조도, 휘도, 색채 등을 계획하되, 과도한 연출은 지양

(2) 건축물 경관심의도서 (안)

- 건축물 경관심의도서 작성방법을 분석하여 필요 작성도서 목록(안)을 도출하였으며 심의도서의 전체적인 구성은 그림 2-12와 같음



▲ [그림 2-12] 건축물 심의도서 구성

- 표 2-17에서 작성방법의 주요 내용을 요약 정리함

- 건축물 경관심의도서 작성방법을 분석하여 5장에서 도서목록과 내용을 제시하였음

▼ [표 2-17] 건축물 경관심의도서 작성방법

항목	작성방법
표지	– 사업명, 재심 여부, 제출일자
목차	– 심의도서의 순서
건축물개요	– 건축물 위치, 규모, 용도 – 추진일정, 타 위원회 심의 여부 및 결과 등 추진 경위 기술
경관관련 계획	· 대상지에 영향을 미치는 경관관련계획 분석 – 경관계획, 경관·미관지구 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경관중점관리구역의 관리계획 등 – 경관설계지침 또는 디자인 가이드라인 – 해당 지자체 도시, 경관, 건축 관련계획 등 – 문헌조사를 통해 간략히 정리 및 기술
현황분석	· 건축물 설계 시 고려해야 할 경관자원 및 특성 조사, 분석 – 건축물, 지형, 가로 및 외부공간 – 주요 경관자원 및 경관특성 – 현황분석도 : 2차원 지형도 및 현황사진 위에 해당 건축물의 설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사항 기재 – 사진 –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로 현황분석도 작성
배치, 규모, 형태계획	· 배치, 규모, 형태 계획에 있어서의 경관을 위한 고려사항을 제시 – 주변의 경관 및 인접 건축물 등의 경관특성과의 조화(건축선, 높이, 형태, 재료 등) – 구릉지 옹벽 지양, 주변 지형에 순응하여 배치 – 대규모 건축물의 경우 저층, 중층, 고층부로 구분한 건축계획 통해 다양한 도시경관 창출 및 휴먼스케일의 보행환경 조성 – 연속적 가로경관 형성을 위한 건축물의 입면 디자인 계획 – 획일적이거나 과장된 디자인, 자극적 색채 지양 – 보행환경을 저해하지 않도록 동선계획(차량, 주차, 보행) – 옥상설비 및 부속설비가 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계획 – 배치도, 입면도, 스케치 등으로 설명하며, 대상지를 포함한 주변지역 포함 표현 –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도면 축적 사용
외부공간계획	· 외부공간계획에 있어서 경관을 위한 고려사항 제시 – 보행가로 및 인접한 외부공간과의 연속성, 접근성 – 가로에서의 개방성 등 가로경관 고려 – 배치도 등으로 설명하며, 대상지를 포함한 주변지역 포함 표현 –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도면 축적 사용
옥외광고물계획 (해당 시)	· 옥외광고물 계획에 있어서의 경관을 위한 고려사항 제시 – 건축물 입면과 옥외광고물의 통합적 계획을 통한 조화 –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계획(크기, 위치, 소재, 색채 등) – 해당 지자체의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등 준수 –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도면 축적 사용

4. 심의도서와 심의기준 상관성 분석

- 현행 경관심의 체크리스트는 포괄적 판단 기준과 심의위원의 개인적 주관에 의존하는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 객관적인 판단 기준이 없어 위원들의 주관적인 견해로 심의가 진행될 소지가 많음
- 심의내용 - 심의기준 - 심의자료간의 정합성이 확보될 때 신청자(설계자)와 담당실무자, 심의위원간의 효율적인 심의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경관체크리스트와 도서간의 상관성을 검토하여 심의도서별로 작성할 내용을 경관체크리스트 내용 중심으로 규정하고자 함
- 심의도서별로 기재내용과 기재방법이 보완될 사항을 정리
- 이를 토대로 충남 경관심이 작성기준(표준안)을 제시하고 15개 시·군 배포 후 시·군 경관심의 담당자들이 보완 후 활용

1) 도서와 체크리스트 상관성 검토

- 현행 경관심의도서 작성방법에는 심의도서의 종류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음. 심의도서의 작성 방법과 내용을 구분 없이 제시하고 있어 담당 실무자 및 심의도서 작성 주체의 업무 진행이 어려움
- 심의도서 작성방법과 내용 분석을 토대로 심의도서 목록 도출. 도출 된 심의도서와 경관 체크리스트 정합성 검토를 통해 심의도서의 작성 내용을 추가함

(1) 도로 경관체크리스트와 심의도서의 상관성

- 경관심의도서 작성방법 분석을 통해 도출 된 도로 심의도서 목록과 경관 체크리스트간의 상관성을 검토함
- 심의도서 작성방법에서 언급이 없는 검토항목은 관련 도면에 기재하도록 함
 - 가로시설물 통합지주 계획 검토는 주요시설 계획도에 기재
- 심의도서와 체크리스트 상관성 검토를 통해 심의도서별로 심의 시 검토항목을 표 2-18과 같이 규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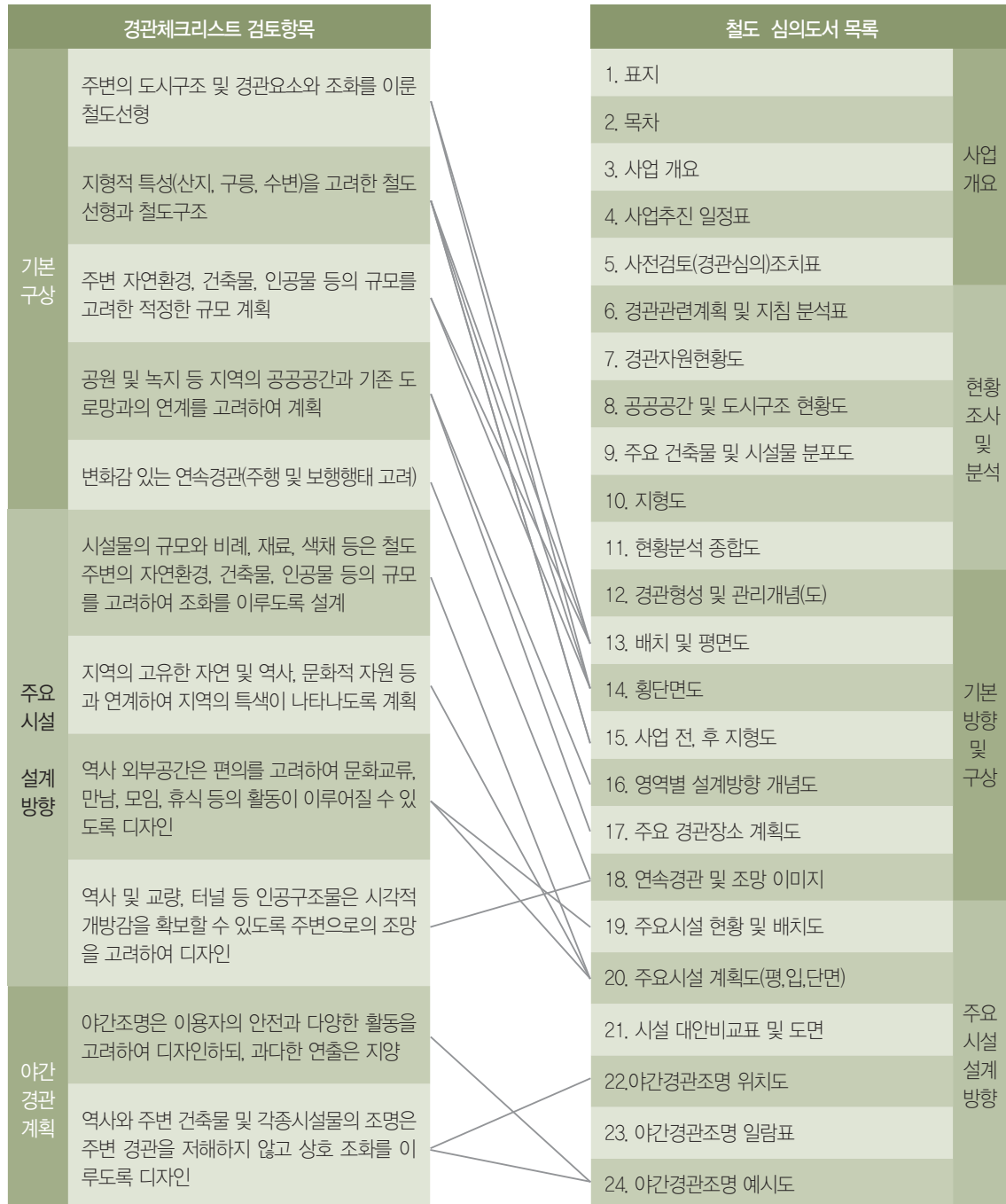
▲ [그림 2-13] 도로 경관체크리스트와 심의도서의 상관성 검토

▼ [표 2-18] 도로 심의도서별 검토 항목

작성도서 목록 (안)	경관체크리스트 상의 검토 항목
1. 표지 ~ 12. 경관형성 및 관리 개념도)	· 사업개요 및 현황분석 도면에서는 검토 항목 보다는 심의 시 검토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
13. 배치 및 평면도	· 주변의 도시구조 및 경관요소와 조화를 이룬 도로선형 · 주변 자연환경, 건축물, 인공물 등의 규모를 고려한 적절한 규모 계획 · 지형적 특성(산지, 구릉, 수변)을 고려한 도로선형과 도로구조
14. 횡단면도	· 주변의 도시구조 및 경관요소와 조화를 이룬 도로선형 · 주변 자연환경, 건축물, 인공물 등의 규모를 고려한 적절한 규모 계획 · 지형적 특성(산지, 구릉, 수변)을 고려한 도로선형과 도로구조
15. 사업 전, 후 지형도	· 지형적 특성(산지, 구릉, 수변)을 고려한 도로선형과 도로구조
16. 영역별 설계방향 개념도	· 공원 및 녹지 등 지역의 공공공간과 기존 도로망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계획
17. 주요 경관장소 계획도	· 공원 및 녹지 등 지역의 공공공간과 기존 도로망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계획 · 도로가 교차되는 곳, 주요 진입부 등은 방향성이 쉽게 인지되도록 설계
18. 연속경관 및 주요 지점 조망 이미지	· 변화감 있는 연속경관(주행 및 보행행태 고려) · 주행자의 안전한 운행을 위한 시각적 연계성 및 조망을 고려하여 도로에서 외부로의 시각적 개방감을 확보 · 이동경로에 따른 경관의 연속성 및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설계
19. 주요시설 현황 및 배치도	· 이동속도에 따라 도로의 연속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시설물의 배치, 규모 계획
20. 주요시설 계획도 (평면, 입면, 단면 등)	· 도로가 교차되는 곳, 주요 진입부 등은 방향성이 쉽게 인지되도록 설계 · 시설물의 규모와 비례, 재료, 색채 등은 도로 주변의 자연환경, 건축물, 인공물 등의 규모를 고려하여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 · 가로등, 신호등, 전신주, 도로표지판, 시설안내판 등 가로시설물은 보행환경 및 경관을 고려하여 통합지주로 계획 · 가로시설물 및 주변시설물이 전체적으로 통일감을 가지도록 설계 · 이동경로에 따른 경관의 연속성 및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설계
21. 주요시설 대안 비교표 및 도면	
22. 야간경관조명 위치도	· 야간조명은 도로 이용자의 안전과 기능을 고려하고 도시의 전체적인 야간경관을 고려하여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계획
23. 야간경관조명 일람표	
24. 야간경관조명 예시도	· 야간조명은 도로 이용자의 안전과 기능을 고려하고 도시의 전체적인 야간경관을 고려하여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계획 · 해당 시설 및 공간의 특성을 고려하여 디자인하되, 과도한 연출은 지양

(2) 철도 경관체크리스트와 심의도서의 상관성

- 경관심의도서 작성방법 분석을 통해 도출 된 철도 심의도서 목록과 경관 체크리스트간의 상관성을 검토하였음
- 심의도서와 체크리스트 상관성 검토를 통해 심의도서별로 심의 시 검토항목을 표 2-19와 같이 규정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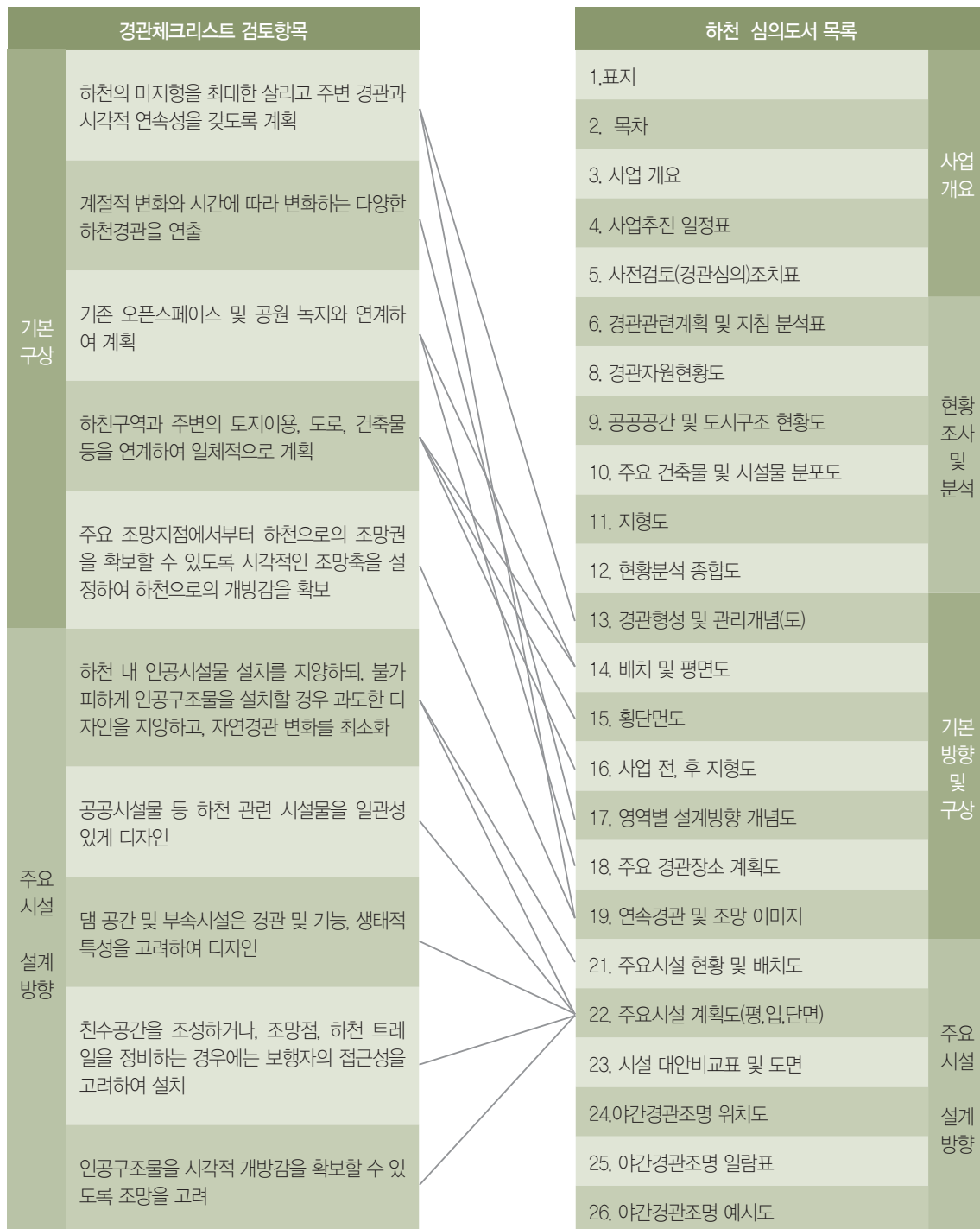
▲ [그림 2-14] 철도 경관체크리스트와 심의도서의 상관성 검토

▼ [표 2-19] 철도 심의도서별 검토 항목

작성도서 목록 (안)	경관체크리스트 상의 검토 항목
1. 표지	· 사업개요 및 현황분석 도면에서는 검토 항목 보다는 심의 시 검토를 위한 기초 자료 제공
2. 목차	
3. 사업개요	
4. 사업추진일정표	
5. 사전 검토(경관심의) 조치표	
6. 경관관련계획 및 지침 분석표	
7. 경관자원현황도	
8. 공공공간 및 도시구조 현황도	
9. 주요 건축물 및 시설물 분포도	
10. 지형도	
11. 현황분석종합도	
12. 경관형성 및 관리 개념(도)	· 주변의 도시구조 및 경관요소와 조화를 이룬 철도선형 · 지형적 특성(산지, 구릉, 수변)을 고려한 철도선형과 철도구조 · 주변 자연환경, 건축물, 인공물 등의 규모를 고려한 적절한 규모 계획
13. 배치 및 평면도	
14. 횡단면도	
15. 사업 전, 후 지형도	
16. 영역별 설계방향 개념도	
17. 주요 경관장소 계획도	
18. 연속경관 및 주요 지점 조망 이미지	
19. 주요시설 현황 및 배치도	
20. 주요시설 계획도 (평면, 입면, 단면 등)	
21. 주요시설 대안 비교표 및 도면	
22. 야간경관조명 위치도	· 시설물의 규모와 비례, 재료, 색채 등은 철도 주변의 자연환경, 건축물, 인공물 등의 규모를 고려하여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 · 지역의 고유한 자연 및 역사, 문화적 자원 등과 연계하여 지역의 특색이 나타나도록 계획 · 역사 외부공간은 편의를 고려하여 문화교류, 만남, 모임, 휴식 등의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디자인
23. 야간경관조명 일람표	
24. 야간경관조명 예시도	

(3) 하천 경관체크리스트와 심의도서의 상관성

- 경관심의도서 작성방법 분석을 통해 도출 된 하천 심의도서 목록과 경관 체크리스트간의 상관성을 검토함
- 심의도서와 체크리스트 상관성 검토를 통해 심의도서별로 심의 시 검토항목을 표 2-20과 같이 규정하였음



▲ [그림 2-15] 하천 경관체크리스트와 심의도서의 상관성 검토

▼ [표 2-20] 하천 심의도서별 검토 항목

작성도서 목록 (안)	경관체크리스트 상의 검토 항목
1. 표지	
2. 목차	
3. 사업개요	
4. 사업추진일정표	
5. 사전 검토(경관심의) 조치표	
6. 경관관련계획 및 지침 분석표	· 사업개요 및 현황분석 도면에서는 검토 항목 보다는 심의 시 검토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
7. 경관자원현황도	
8. 공공공간 및 도시구조 현황도	
9. 주요 건축물 및 시설물 분포도	
10. 지형도	
11. 현황분석종합도	
12. 경관형성 및 관리 개념(도)	· 하천의 미지형을 최대한 살리고 주변 경관과 시각적 연속성을 갖도록 계획
13. 배치 및 평면도	· 기존 오픈스페이스 및 공원 녹지와 연계하여 계획
14. 횡단면도	· 하천구역과 주변의 토지이용, 도로, 건축물 등을 연계하여 일체적으로 계획
15. 사업 전, 후 지형도	· 하천구역과 주변의 토지이용, 도로, 건축물 등을 연계하여 일체적으로 계획
16. 영역별 설계방향 개념도	· 계절적 변화와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다양한 하천경관을 연출
17. 주요 경관장소 계획도	· 기존 오픈스페이스 및 공원 녹지와 연계하여 계획
18. 연속경관 및 주요 지점 조망 이미지	· 하천의 미지형을 최대한 살리고 주변 경관과 시각적 연속성을 갖도록 계획 · 주요 조망지점에서부터 하천으로의 조망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각적인 조망축을 설정하여 하천으로의 개방감을 확보
19. 주요시설 현황 및 배치도	· 하천 내 인공시설물 설치를 지양하되, 불가피하게 인공구조물을 설치할 경우 과도한 디자인을 지양하고, 자연경관 변화를 최소화
20. 주요시설 계획도 (평면, 입면, 단면 등)	· 하천 내 인공시설물 설치를 지양하되, 불가피하게 인공구조물을 설치할 경우 과도한 디자인을 지양하고, 자연경관 변화를 최소화 · 공공시설물 등 하천 관련 시설물을 일관성 있게 디자인 · 댐 공간 및 부속시설은 경관 및 기능,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디자인 · 친수공간을 조성하거나, 조망점, 하천 트레일을 정비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설치 · 인공구조물을 시각적 개방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망을 고려
21. 주요시설 대안 비교표 및 도면	
22. 야간경관조명 위치도	
23. 야간경관조명 일람표	* 하천 경관심의도서 작성방법과 경관체크리스트상에는 야간경관에 관한 내용이 없으나, 필요시 추가
24. 야간경관조명 예시도	

(4) 개발사업 경관체크리스트와 심의도서의 상관성

- 개발사업 심의도서 목록과 경관 체크리스트간의 상관성을 검토하였음
- 체크리스트의 검토 항목은 기본방향 및 구상, 경관부문별 계획 관련 심의도서에 포함됨
- 심의도서와 체크리스트 상관성 검토를 통해 심의도서별로 심의 시 검토항목을 표 2-21과 같이 규정하였음

경관체크리스트 검토항목		개발사업 심의도서 목록	
기본 구상	경관을 고려하여 밀도, 용도배치 등 토지이용계획과 교통처리계획 등을 설정	1. 표지	사업 개요
	개발사업 규모, 장소의 특성 및 이용자를 고려한 경관구조(권역, 축, 거점) 설정	2. 목차	
	경관구조별장소성, 조화성 확보 및 특성화	3. 사업 개요	
	토지이용, 지형·지세, 주변 지역의 스카이라인 등을 고려한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형성	4. 사업추진 일정표	
	주변 맥락과 상징성을 고려한 주요 진입부, 경관거점 및 결절부 계획	5. 사전검토(경관심의)조치표	
경관 부문 별 계획	주변 지역의 가로체계, 토지이용 등의 현황 및 계획을 고려하여 인접한 건축물, 가로, 공원 및 녹지와 연계	6. 경관관련계획 및 지침 분석표	현황 조사 및 분석
	주변 여건, 규모, 위치 등에 따른 이용자 특성을 고려한 공원 및 녹지 등 오픈스페이스 계획	7. 경관자원현황도	
	건축물, 가로, 공원 및 녹지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통합적·입체적으로 계획	8. 공공공간 및 도시구조 현황도	
	경관구조의 위계 및 특성을 고려한 건축물, 가로, 공원, 녹지 등의 계획	9. 주요 건축물 및 시설물 분포도	
	토지이용, 지형·지세, 주변 지역의 스카이라인, 대상지의 정체성 등을 고려한 건축물의 배치, 형태, 규모 계획	10. 지형도	
	가로등, 신호등, 전신주, 도로표지판, 시설안 내판 등 가로시설물은 보행환경 및 경관을 고려하여 통합지주로 계획	11. 현황분석 종합도	방향 및 구상
		12. 경관형성 및 관리개념(도)	
		13. 경관기본구상도	경관 부문 별 계획
		14. 토지이용계획도	
		15. 스카이라인 계획도	
		16. 공원 및 녹지계획도	
		17. 주요 가로 단면도	

▲ [그림 2-16] 개발사업 경관체크리스트와 심의도서의 상관성 검토

▼ [표 2-21] 개발사업 심의도서별 검토 항목

작성도서 목록(안)	경관체크리스트 상의 검토 항목
1. 표지	
2. 목차	
3. 사업 개요	
4. 사업추진 일정표	
5. 사전 검토(경관심의) 조치표	
6. 경관관련계획 및 지침 분석표	· 사업개요 및 현황분석 도면에서는 검토 항목 보다는 심의 시 검토를 위한 기초 자료 제공
7. 경관자원현황도	
8. 공공공간 및 도시구조 현황도	
9. 주요 건축물 및 시설물 분포도	
10. 지형도	
11. 현황분석종합도	
12. 경관형성 및 관리 개념(도)	· 개발사업 규모, 장소의 특성 및 이용자를 고려한 경관구조(권역, 축, 거점) 설정 · 경관구조별 장소성, 조화성 확보 및 특성화
13. 경관기본구상도	· 경관을 고려하여 밀도, 용도배치 등 토지이용계획과 교통처리계획 등을 설정 · 개발사업 규모, 장소의 특성 및 이용자를 고려한 경관구조(권역, 축, 거점) 설정 · 경관구조별 장소성, 조화성 확보 및 특성화 · 주변 맥락과 상징성을 고려한 주요 진입부, 경관거점 및 결절부 계획 · 경관구조의 위계 및 특성을 고려한 건축물, 가로, 공원, 녹지 등의 계획
14. 토지이용계획도	· 경관을 고려하여 밀도, 용도배치 등 토지이용계획과 교통처리계획 등을 설정 · 주변 지역의 가로체계, 토지이용 등의 현황 및 계획을 고려하여 인접한 건축물, 가로, 공원 및 녹지와 연계 · 토지이용, 지형·지세, 주변 지역의 스카이라인, 대상지의 정체성 등을 고려한 건축물의 배치, 형태, 규모 계획
15. 스카이라인 계획도	· 토지이용, 지형·지세, 주변 지역의 스카이라인 등을 고려한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형성 · 토지이용, 지형·지세, 주변 지역의 스카이라인, 대상지의 정체성 등을 고려한 건축물의 배치, 형태, 규모 계획
16. 공원 및 녹지계획도 (오픈스페이스 계획도)	· 주변 여건, 규모, 위치 등에 따른 이용자 특성을 고려한 공원 및 녹지 등 오픈스페이스 계획 · 건축물, 가로, 공원 및 녹지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통합적·입체적으로 계획 · 경관구조의 위계 및 특성을 고려한 건축물, 가로, 공원, 녹지 등의 계획
17. 주요 가로 단면도	· 건축물, 가로, 공원 및 녹지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통합적·입체적으로 계획 · 경관구조의 위계 및 특성을 고려한 건축물, 가로, 공원, 녹지 등의 계획 · 토지이용, 지형·지세, 주변 지역의 스카이라인, 대상지의 정체성 등을 고려한 건축물의 배치, 형태, 규모 계획 · 가로등, 신호등, 전신주, 도로표지판, 시설안내판 등 가로시설물은 보행환경 및 경관을 고려하여 통합지주로 계획

(5) 건축물 경관체크리스트와 심의도서의 상관성

- 건축물 심의도서 목록과 경관 체크리스트간의 상관성을 검토하였음
- 심의도서와 체크리스트 상관성 검토를 통해 심의도서별로 심의 시 검토항목을 표 2-22와 같이 규정함

경관체크리스트 검토항목		건축물 심의도서 목록	
배치 규모 형태 계획	지역의 장소성 및 인접 건축물과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등 주변과 조화로운 계획(건축선, 스카이라인, 형태, 입면 등)	1.표지	건 축 물 개 요
	구릉지의 경우 지나친 옹벽발생을 지양하고 주변 지형에 순응한 배치	2. 목차	
	건축물로 인해 기존 보행자들의 통행이 단절되지 않도록 주변 가로체계를 고려하여 배치하고, 필요시 공공보행통로를 계획	3. 건축물 개요	
	대규모 건축물의 경우 기반부를 설치하거나 전면부를 분절하는 등 휴먼스케일의 보행환경 조성	4. 건축일정표	
	확일적이거나 과장된 디자인, 자극적인 색채 등은 지양	5. 사전검토(경관심의)조치표	현 황 분 석
	옥상설비 및 부속설비가 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계획	6. 경관관련계획 및 분석표	
	장애인, 노인 등 보행약자의 접근, 이용,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무장애설계 적용	7. 경관자원현황도	
	담장, 울타리 등은 주변 건축물 및 지역특성과 조화되는 색채, 재료, 디자인 등 사용	8. 가로 및 외부공간 현황도	
외부 공간 계획	건축물의 진입부 및 저층부는 가능한 경우 이용자·보행자를 위해 공원(쌔치공원, 도시형 공원 등), 광장 등으로 계획	9. 지형도	배치 규모 형태 계획
	건축물 진입부에 이용자의 시각을 방해하는 과도한 시설물 설치 지양	10. 현황분석종합도	
	보행환경을 저해하지 않도록 차량, 주차, 보행동선을 계획하고 가로와 인접한 부분이나 주보행로와 인접한 부분에는 주차장 설치 지양	11. 경관형성계획도	
	공개공지의 경우 인접한 건축물 공개공지의 특성과 입지를 고려하여 통합적 이용이 가능하도록 계획	12. 대지 종횡단면도	
	공개공간은 보행로와의 연계 등 다양한 계획기법을 통한 공공성 확보	13. 배치도	옥외 광고 물 계획
	건축물의 입면과의 통합적 계획 및 해당 지역의 특성에 대한 배려	14. 입면도	
	해당 지자체의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지침 등 준수	15. 외부공간계획도	
	건축물의 용도 및 주변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조도, 회도, 색채 등을 계획하되, 과도한 연출은 지양	16.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분석표	
광고 물 계획 (필요시)		17. 옥외광고물 설치 계획도	
야간 경관 (필요시)		18. 옥외광고물 설치 입면도	
		* 야간경관계획 검토 도면	

▲ [그림 2-17] 건축물 경관체크리스트와 심의도서의 상관성 검토

▼ [표 2-22] 건축물 심의도서별 검토 항목

작성도서 목록	작성내용 (방법)
1. 표지 ~11. 현황분석종합도	· 건축물개요 및 현황분석 도면에서는 검토 항목 보다는 심의 시 검토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
12. 경관형성계획도	· 지역의 장소성 및 인접 건축물과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등 주변과 조화로운 계획(건축선, 스카이라인, 형태, 입면 등)
13. 대지 종횡단면도	· 구릉지의 경우 지나친 옹벽발생을 지양하고 주변 지형에 순응한 배치
14. 배치도	· 건축물로 인해 기존 보행자들의 통행이 단절되지 않도록 주변 가로체계를 고려하여 배치하고, 필요시 공공보행통로를 계획 · 장애인, 노인 등 보행약자의 접근, 이용,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무장애설계 적용 · 보행환경을 저해하지 않도록 차량, 주차, 보행 동선을 계획하고 가로와 인접한 부분이나 주 보행로와 인접한 부분에는 주차장 설치 지양
15. 입면도	· 지역의 장소성 및 인접 건축물과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등 주변과 조화로운 계획(건축선, 스카이라인, 형태, 입면 등) · 획일적이거나 과장된 디자인, 자극적인 색채 등은 지양 · 옥상설비 및 부속설비가 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계획 · 담장, 울타리 등은 주변 건축물 및 지역특성과 조화되는 색채, 재료, 디자인 등 사용 · 건축물 진입부에 이용자의 시각을 방해하는 과도한 시설물 설치 지양
16. 외부공간계획도	· 건축물로 인해 기존 보행자들의 통행이 단절되지 않도록 주변 가로체계를 고려하여 배치하고, 필요시 공공보행통로를 계획 · 대규모 건축물의 경우 기반부를 설치하거나 전면부를 분절하는 등 휴먼스케일의 보행환경 조성 · 장애인, 노인 등 보행약자의 접근, 이용,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무장애설계 적용 · 건축물의 진입부 및 저층부는 가능한 경우 이용자·보행자를 위해 공원(쌈지공원, 도시형 공원 등), 광장 등으로 계획 · 건축물 진입부에 이용자의 시각을 방해하는 과도한 시설물 설치 지양 · 보행환경을 저해하지 않도록 차량, 주차, 보행 동선을 계획하고 가로와 인접한 부분이나 주 보행로와 인접한 부분에는 주차장 설치 지양 · 공개공지의 경우 인접한 건축물 공개공지의 특성과 입지를 고려하여 통합적 이용이 가능하도록 계획 · 공개공간은 보행로와의 연계 등 다양한 계획기법을 통한 공공성 확보
17.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분석표	· 해당 지자체의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지침 등 준수
18. 옥외광고물 설치 계획도	· 건축물의 입면과의 통합적 계획 및 해당 지역의 특성에 대한 배려
19. 옥외광고물 설치 입면도	· 건축물의 입면과의 통합적 계획 및 해당 지역의 특성에 대한 배려
* 야간경관계획관련 도면	· 건축물의 용도 및 주변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조도, 휘도, 색채 등을 계획하되, 과도한 연출은 지양

2) 개발사업 사전경관계획 매뉴얼 검토

- 경관체크리스트와 심의도서와의 상관성 검토 결과 심의도서 작성 내용 방법에 대한 보완 필요성이 나타남
- 심의도서목록 중 현황분석 관련 도면의 경우 작성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도서작성방법에는 나타나지 않음
- 현황분석, 경관구조 설정 등의 내용은 대규모 개발사업 사전경관계획 매뉴얼 내용 검토를 통해 보완함
- 대규모 개발사업은 사전경관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심의도서로 갈음할 수 있음
- 사전경관계획 매뉴얼 중 관련 내용을 심의도서 작성지침으로 활용함

▼ [표 2-23] 개발사업 사전경관계획 매뉴얼의 주요 내용

항목	주요 내용	비고
1. 총칙	가. 목적 나. 적용 범위 다. 사전경관계획의 의의 라. 사전경관계획과 다른 계획과의 관계	
2. 사전경관계획의 내용의 작성 원칙	가. 사전경관계획의 내용 나. 사전경관계획의 기본원칙	
3. 사전경관계획 세부 작성방법	가. 경관계획의 개요 나. 경관현황조사 및 분석 다.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 라. 경관구조의 설정 마. 주요 경관요소를 고려한 입체적 도시공간구조 기본구상 바. 종합계획도 사. 조감도 아. 경관통합지침도 자. 실행계획	- 경관심의도서작성지침으로 활용
4. 그 밖의 사항	가. 개발사업 유형별 고려사항 나. 도서의 규격 및 작성기준	

▼ [표 2-24] 경관심의도서 작성지침으로 활용 가능한 사전경관계획 매뉴얼 내용

항목	작성방법
현황조사 및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 및 생활권의 성격·역할, 도로 등 입지 여건, 주요 경관자원 등 대상지역의 경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중심으로 조사 - 긍정적, 기회적인 자원뿐만 아니라 경관에 부정적, 제약적인 자원을 함께 조사 - 지역이미지, 지명유래, 역사문화자원, 축제·행사 등 무형의 경관자원도 포함하여 조사 - 필요시 해당 사업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국내·외 사례의 경관계획, 경관기법, 관련규정 등을 조사하여 적용 가능성을 검토 - 개발사업 지역 경관에 영향을 주거나 사업으로 인해 경관상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생활권 등을 포함하여 조사 - 가장 최근의 자료를 인용하고 출처 표기 - 도시기본계획, 경관계획 등 상위계획에서 다루고 있는 대상지의 계획방향을 정리하고 키워드와 계획의 주안점을 작성 - 현황분석을 위한 도면은 대상지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주요 지점에서 촬영한 사진이나 3차원적인 지형도 위에 지형·지세, 도로, 공원·녹지, 학교, 공공시설, 관련계획 등 사전경관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가필하고 관련된 정보를 간략한 도식과 글로 표기하여 작성 - 계획대상과 범위를 명확하게 표시하고 범례를 통하여 쉽게 작성 - 현황을 종합한 결과에 따른 경관계획 측면의 긍정적, 부정적, 기회적, 제약적 요인을 분석하고, 도출된 전략은 기본방향 및 목표 설정 시 반영
경관 구조의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관구조의 설정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지 전체를 면, 선, 점적인 부분 또는 요소로 나누어 주요 골격과 각 장소별 특성 및 위계 등 계획방향 설정 - 지형·지세 및 도로, 공원·녹지 등 주변 지역의 현황 및 대상지의 공간특성을 반영하고 기본 방향 및 목표에 부합하도록 설정 - 개발계획의 주요 지표, 인구수용계획, 토지이용계획, 교통처리계획과 연계하여 합리적으로 수립 -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권역, 축, 거점 등 큰 규모의 경관구조를 설정한 후 블록별, 장소별로 세부구조를 다시 설정 · 권역, 축, 거점의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권, 토지이용, 경관자원의 분포 등에 따라 동질적인 특성을 지닌 공간을 권역으로 설정하고 각 권역별 계획방향 및 개념 설정 - 동질한 경관이 선의 형태로 연속하여 형성되거나 형성될 잠재력이 있는 산림, 녹지, 수계, 시가지, 도로, 가로 등을 축으로 설정하고 각 축에 따른 계획방향 및 개념 설정 - 우세한 경관이 점적으로 위치하여 경관적 특성을 부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거나 잠재성이 있는 장소를 거점으로 설정하고 각 거점에 대한 계획방향 및 개념 설정 - 권역 또는 영역, 축 또는 가로, 거점 또는 주요 결절점을 2차원적인 지형도 위에 도식화 된 개념 다이어그램으로 표현 · 블록별, 장소별 세부구조의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블록별·장소별로 공간의 이용특성, 시설물의 용도, 예상되는 이용자 특성을 파악하여 개념을 설정하고 개념도 및 사례사진을 이용하여 이미지 제시 - 블록별·장소별 계획방향에 따라 가로의 형태, 구조, 체계와 필지 규모, 형태, 특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도입 등을 계획

항목	작성방법
입체적 도시공간 구조 기본구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관구조의 설정에 따른 위계 및 성격을 고려하여 건축물, 가로, 공원 및 녹지 등 주요 경관요소의 계획방향을 수립 - 경관구조의 설정, 건축물, 가로, 공원 및 녹지를 통합적, 입체적으로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경관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 지역의 건축물 높이, 지형·지세 등 현황을 감안하여 전체적인 지역경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건축물의 규모와 형태를 설정 - 주변 지역의 필지 및 건축물 규모가 대상지의 계획과 현격하게 차이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보행자의 가로경관을 감안하여 건축물을 분절하는 등 적정 형태 및 규모를 제시 - 대상지 주변부에 기존 시가지가 인접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연환경 및 경관 형성에 초점을 맞추어 스카이라인을 계획 - 3차원적인 조감도 위에 개략적인 지붕선과 주요 건축물의 계획 높이를 기재한 스카이라인 개념도와 장변 및 단변의 단면도를 작성 - 건축물 형태는 주요 블록의 용도, 장소의 특성, 가로의 위계, 오픈스페이스의 성격 등 경관 구조별 위계 및 특성에 대응하도록 계획 · 주요 진입부 또는 거점 및 결절부의 건축물, 랜드마크, 공공건축물 등 다수의 이용이 예상되고 경관적으로 중요한 건축물은 전체 스카이라인 계획의 맥락과 상징성을 고려하여 계획 · 가로와의 유기성 및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 및 연속성을 고려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건축물 저층부, 지붕형태의 방향을 설정하고 개념도 또는 예시도를 작성하며, 이 경우 스케치, 사례사진 등을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로 경관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관구조의 설정에 따른 가로 위계별 차별화된 계획을 수립 - 가로별로 개념을 정하고 사례사진 또는 스케치를 기재 - 주요 위치에서는 횡단면도를 작성, 횡단면도에서는 전체 가로의 폭, 공개공지, 보도, 장애물구역, 식재 공간, 차로 등 공간의 특성이 드러나도록 표현하고 사람, 자동차 등으로 스케일 파악이 가능하게 작성
종합 계획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원 및 녹지 경관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관구조를 감안하여 공원 및 녹지에 대한 세부적인 위치 및 형태를 계획하고 이를 구조 체계와 효율적으로 연계하여 공공의 이용이 원활하도록 계획 - 위계가 높은 가로변의 경우 공원 및 녹지를 통합 배치하여 보행자 공간을 확장 - 공원 및 녹지는 기능 및 주제에 따라 다양한 목적에 의해 구분될 수 있으며, 경관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 경관계획의 개념을 정하고 스케치, 사례사진 등 예시도를 작성 - 색체계획, 공공시설물계획, 옥외광고물계획 등 해당 개발사업의 사전경관계획 특성 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계획방향을 수립하고 스케치, 사례사진 등 예시도를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계획도란 경관구조의 설정, 건축물, 가로, 공원 및 녹지를 표현한 평면적인 계획안(마스터플랜)으로, 선과 몇 가지의 패턴 및 색채를 사용하여 간략히 표현 - 가로의 경우 경계선을 그린 후 필지 또는 가로 부분을 채색하거나 가로수로 경계부를 표현 - 건축물의 경우 외곽선을 강조하고 그림자를 표현하여 배치 및 대강의 규모·형태·높이 등을 알 수 있게 하며 건축물 중 강조하여야 할 대상 또는 부분은 채색하거나 재질을 다르게 표현 - 공원 및 녹지에는 패턴을 넣거나 식재 및 보행로 등을 표현하여 보행동선 등 이용방향이 보일 수 있도록 함 - 개발사업의 규모가 큰 경우에는 건축물의 그림자, 공원 및 녹지의 패턴, 보행동선 등 구체적인 사항은 생략하고 간단히 표현

항목	작성방법
조감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감도 또는 모형은 개발사업으로 인한 지형, 건축물, 가로, 공원 및 녹지 등 경관의 변화를 예측하기 위한 것으로 주변지역까지 포함하여 작성 - 조감도 작성 시에는 전체적인 경관 구조의 설정 및 주요 경관요소의 입체적 구상이 잘 읽히는 전망을 잡아 3차원 컴퓨터 모델링 또는 스케치 - 과도한 그래픽은 지양하고 가로, 공원 및 녹지, 건축물, 주변 자연환경이 구분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색채 또는 재질만 사용하여 표현 - 조감도는 필요시 모형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종합계획도를 바탕으로 배치, 형태 및 크기, 지형이 읽힐 수 있도록 하고 건축물의 형태는 단순하게 제작
경관통합 지침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시계획 또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필요한 계획 및 설계방향에 대해 기존에 주로 글로만 작성되었던 것을 3차원 도면에 위치 및 범위를 함께 표기하여 계획 내용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 - 주요한 장소 또는 유형을 선정하고, 필요한 건축물, 가로, 공원 및 녹지 등 주요 경관 요소에 대한 계획 및 설계방향을 3차원 계획도(조감도 또는 투시도)에 작성 - 3차원 계획도는 색채 및 패턴 사용을 최소화하여 간략한 선으로 표현 - 지침이 적용되는 부분을 다른 색채 또는 패턴을 사용하여 표기하고 지시선을 사용하여 계획방향 등 지침을 기술

Ⅲ. 경관심의 선진사례 분석

1. 광역지자체 경관심의 운영 분석

1) 광역지자체 경관조례 비교, 분석

- 경관법 및 시행령 개정 이후의 광역지자체 및 세종특별자치시 경관조례를 분석하였음. 2015년 12월 현재, 9개 광역지자체와 세종시는 시행령이 반영되도록 조례를 개정함
- 광역지자체 차원에서의 심의 및 자문대상 구체화(조례 위임사항) 및 경관관리를 위한 주요 특징을 표 3-1과 같이 정리하였음
- 지자체장의 요청사항, 다른 조례에서 심의·자문 요청사항, 경관계획 내 심의 사항 등 일반적인 심의·자문 대상을 규정한 항목은 제외하였음

▼ [표 3-1] 광역지자체 경관조례 특성 분석

광역지자체	조례 제정	경관심의대상 구체화			경관 자문 대상	주요 특징
		사회 기 반시설	건축물	위원회 심의		
경상북도	2009. 11. 05					
제주도	2010. 04. 21					
경관법 개정 2013. 8. 6						
충청북도	2014. 06. 27					
울산광역시	2014. 06. 30					
부산광역시	2014. 07. 09					
강원도	2014. 07. 11					
경상남도	2014. 10. 10					
경관법 시행령 개정 2014. 11. 19						
세종시	2014. 12. 22	●	●		●	– 주무부서 경관협의대상 규정 –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명시
광주광역시	2015. 01. 01		●	●		
충청남도	2015. 02. 23					
전라남도	2015. 02. 26	●	●	●		– 사전경관 협의대상 사업 규정
대구광역시	2015. 03. 02	●	●			
인천광역시	2015. 04. 13	●	●	●		– 경관사업 총괄계획가 – 야간경관조명 / 도시경관기록
전라북도	2015. 05. 01					
경기도	2015. 07. 17					
서울특별시	2015. 07. 30	●	●			
대전광역시	2015. 08. 14	●	●			– 야간경관증진

(1) 세종특별자치시

- 사회기반시설의 심의대상은 총사업비 10억 이상으로 강화하였으며 그 외에 여객자동차터미널, 노외주차장, 자전거이용시설, 도시공원, 광장, 경관조명공사를 경관심의 대상으로 추가하였음
- 건축물의 경우 중점경관관리구역, 공공건축물, 기타 지역 등으로 세분화하여 층수, 면적에 따라 심의대상을 규정하고 있음
- 사회기반시설 중 사업비 5억 이상 ~10억 미만은 자문대상으로 규정함
- 심의대상 사업보다 층수, 면적상 경관 영향이 적은 사업은 자문대상으로 규정하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으며 심의 및 자문대상 사업 외에 주무부서에서 경관협의대상 사업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식을 구체적으로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음

(2) 광주광역시

- 경관지구 건축물 중 2층 이하 건축물은 심의에서 제외하였음
- 건축위원회 건축심의대상 건축물은 경관심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 규정함

(3) 전라남도

- 사업비가 아닌 사회기반시설의 물리적 규모로 심의대상을 규정하고 있음
 - 50m 이상의 교량 / 5,000m 이상의 도로 / 1,000m 이상의 하천공사
 - 가로수 조성사업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
- 건축물 심의대상은 시행령보다 구체화하고 있음
 - 건축신고 대상 외 경관지구 건축물은 모두 경관심의 대상
 - 중점경관관리구역의 높이 21m 이상의 건축물 및 공작물
 - 연면적 1,000㎡ 이상의 공공건축물
 -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은 경관심의 대상
- 도내 경관사업은 경관심의 대상이며 경관심의 및 자문대상 사업 외 사전경관 협의 대상을 규정하고 있음

(4) 대구광역시

- 사회기반시설의 심의대상은 시행령 기준보다 강화하고 있음
 - 100억 이상의 도로 사업
 - 도시철도시설 중 출입구, 환기구, 엘리베이터 설치 사업
 - 50억 이상의 하천 사업과 3억 이상의 경관조명시설
- 건축물 심의대상도 시행령보다 구체화하고 있음
 - 건축신고 대상 외 경관지구 건축물은 모두 경관심의 대상
 - 중점경관관리구역 안의 건축물로서 경관계획에서 경관심의 대상으로 정한 건축물
 - 중점경관관리구역의 높이 21m 이상의 건축물 및 공작물
 - 연면적 1,000㎡ 이상의 공공건축물 (설계공모 건축물은 제외)

(5) 인천광역시

- 사회기반시설의 심의대상은 시행령 기준보다 강화하고 있음
 - 100억 이상의 도로 사업, 50억 이상의 하천 사업
- 건축물 심의대상은 시행령보다 구체화하고 있음
 - 건축신고 대상 외 경관지구 건축물은 모두 경관심의 대상
 - 중점경관관리구역 안의 건축물로서 경관계획에서 경관심의 대상으로 정한 건축물
 - 연면적 1,000㎡ 이상의 공공건축물과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은 경관심의 대상
- 1억 이상의 야간경관 형성 정비사업은 경관위원회 심의 대상임

(6) 서울특별시

- 사회기반시설의 심의대상은 시행령 기준보다 강화하고 있음
 - 100억 이상의 도로 사업과 도시철도시설
 - 50억 이상의 하천 사업
 - 야간경관시설
 - 5억 이상의 전원설비(송전탑, 변압탑 등), 자전거이용시설, 생활체육시설
- 건축물 심의대상도 시행령보다 구체화하고 있음
 - 경관지구 건축물로 3층 또는 12m 초과, 건폐율 30% 초과 건축물
 - 중점경관관리구역 안의 건축물로서 경관계획에서 경관심의 대상으로 정한 건축물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이 건축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

(7) 대전광역시

- 공공기관 시행공사는 심의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조명공사, 건축공사, 교량·도로·육교·하천 등 토목공사, 공원 및 조경공사를 사업비에 따라 시 및 구 경관 위원회에서 심의
- 경관지구 내 건축신고 대상 및 2층 이하 건축물은 심의에서 제외하였음
- 중점경관관리구역내 건축물 심의대상을 구체화하였음
 - 연면적 5,000㎡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 16층 이상 건축물
 - 미관지구 내의 건축물로서 3층 이상 또는 1,000㎡ 이상의 건축물
 -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 시 및 구 경관위원회 심의대상 구분

(8) 광역지자체 조례의 주요 특성

- 조례로 위임된 사회기반시설, 건축물의 심의대상을 강화하고 있음
- 심의대상 강화 방식은 사업비, 물리적 규모, 지역특성 시설 (도시철도 등)과 연동 되고 있음
- 경관지구와 중점경관관리구역 내의 건축물, 공공건축물 심의를 강화하고 구체적으로 대상을 명기하고 있음
- 광역지자체로 개별적인 특성도 나타나고 있음
 - 심의 대상 이하는 자문대상화 (세종시)
 - 심의, 자문 이외로 경관협의 방식 도입 (세종시, 전라남도)
 - 시, 구 경관위원회의 역할 분담 (대전광역시)
- 광역지자체 조례 분석 및 문헌 분석을 통해 전라남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세종시 3개 지자체 심의 운영 현황을 구체적으로 분석함

2) 전라남도 경관심의²⁾

(1) 사전경관협의제의 적극적 활용

- 전라남도는 2013년 경관법 및 시행령 개정 전부터 전국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사전경관협의제를 도입하여 시행 중임
- 도와 시,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절기 전에 경관계획에 대해 전문가의 사전자문 및 협의를 거치도록 함
- 사전경관협의제 도입 초기에는 경관협의의 중요성 인식 및 마인드 부족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행중임. 이에 따라 개발사업 시행부서들의 사전협의건수 및 행정수요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경관협의제가 정착되고 있음



※ 자료출처 : 전라남도 경관디자인과, 2015, p.17

▲ [그림 3-1] 전라남도 사전경관협의 절차

2) 전라남도 경관디자인과 홈페이지 자료, 경관조례 및 경관디자인과 (2014) 참조

- 경관조례 27조에 사전경관 협의대상 사업을 규정하고 있음
 - 농산어촌 경관개선사업 : 전원마을, 농어촌뉴타운, 녹색농촌체험마을 정비사업 등
 - 행복마을 조성사업
 - 도로개설(자전거도로, 보행자도로 등 포함) 및 하천정비·해양항만사업
 - 각종 개발사업 : 도시개발, 산업단지 및 특정지역개발, 관광지 개발 등
 - 국·도비 지원사업 중 도지사가 사전경관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사전경관협의 및 경관심의 절차를 경관디자인과 홈페이지에서 안내하고 있으며 경관심의 절차 및 참여 주체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
- 사전경관협의를 위한 대상사업, 경관검토사항, 심의 진행절차 등을 공시하여 사전경관협의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있음

▼ [표 3-2] 전라남도 경관위원회 경관심의 절차

연번	항 목	주요내용	제출기한(매월)	비고
1	안건제출 (14일전)	· 심의안건 및 검토의견(시군), · 심의요약서(용역업체) – A4용지1장, 위원배포용요약서	둘째주 수요일	담당자검토
2	현장점검 (12일전)	· 부지주변현황 · 건축물, 공작물 설치 후 경관변화 · 경관저해 저감대책 등	둘째주 목~금요일	도·시군 담당자 용역업체(4명)
3	소위원회구성 (10일전)	· 10명 이내(분야별 전문가 각3~4명) ※국장님 전결	셋째주 월요일	담당자(2명)
4	심의안 사전협의 (9일전)	· 장 소 : 국 소회의실 · 참 석 : 시군담당자,용역업체 · 자 료 : 심의안(PPT), 설계도서 · 심의안 시연, 보완사항협의 등	셋째주 화요일	담당 및 담당자 시군 및 용역업체
5	위원회 개최계획통보 (7일전)	· 개최계획 및 안건, 심의자료(안) – 소위원회위원 E-mail 발송	셋째주 수요일	담당자
6	도 검토의견서 작성 (5일전)	· 심의안 검토의견 작성 ※과장님 결재	셋째주 금요일	담당자
7	최종점검 (2일전)	· 최종 심의안(PPT) 확인 – 추가자료, 보고자 시나리오	넷째주 월~화요일	담당자
8	심의개최 (당일)	· PPT출력물 15부내외(칼라) · 설계도서, 보충 설명자료 · 기타	넷째주 수요일	서재필실 (정약용실) 14:00

자료출처 : 전라남도 경관디자인과 홈페이지

3) 인천 경제자유구역청 경관심의³⁾

(1) 사전검토제도 및 위원회 운영 구분

- 인천광역시 경관조례에 근거하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경관위원회 운영사항과 위원회 심의대상 등을 IFEZ의 특성에 맞도록 운영하고 있음. 경관위원회를 세분화하여 경관심의 및 자문대상에 따라 본위원회, 소위원회로 구분하여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음
- 본위원회에서는 정책적, 종합적 관점에서 거시적인 경관기준 및 디자인 컨셉에 대해 심의를 진행함
- 소위원회에서는 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특정분야 안건에 대해 심의를 진행함
 - 경관협정의 인가
 - 건축물 경관심의 중 연면적 300㎡ 이상 1,000㎡ 미만의 공공건축물
 - 건축심의 대상 제외 건축물 중 연면적 5,000㎡ 이상 10,000㎡ 미만의 건축물
- 국토교통부의 경관심의 운영지침에 따라 사전검토제도를 도입하여 단계별 심의체계를 구축하였음. 사회 기반시설사업과 건축물 경관심의 대상에 사전검토 절차를 권장하고 있음

(2) 본 위원회 운영 및 절차

- 경관심의 신청은 관련제출서류(경관심의 신청서, 경관심의도서, 경관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사전검토를 거친 경우 사전검토결과 및 조치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함
- 위원회 개최는 심의 요청일로부터 20일 이내 실시
- 사전검토를 실시한 경우 사전검토위원 2인 이상 참석하도록 함
- 심의 결과 처리는 심의 개최 후 10일 이내에 심의결과 및 회의에 참석한 명단 공개
- 사전검토를 거친 경우 본 위원회에서는 재검토(재상정) 없이 원안가결 혹은 조건부 가결로 결정하여 심 의기간을 단축
- 단, 사전검토 절차를 거치지 않는 본위원회 안건은 일반적인 절차를 따르도록 함

3)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 및 인천경제자유구역청(2014) 참조

- 사전 검토를 거치지 않는 안건에 대해 결과가 재검토로 결정된 경우 재심의시 가급적 당초 심의위원의 2/3 이상을 포함하여 경관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종전 심의 결과와 일관성을 유지함
- 본위원회 심의 의견 정리 시 위원들은 지나치게 포괄적인 의견 또는 과도하게 엄격한 의견 개진을 지양하도록 함

(3) 소위원회 운영 및 절차

- 소위원회의 운영절차는 본위원회 운영절차와 동일하게 운영되나 소위원회에서는 사전검토를 거치지 않음
- 소위원회의 절차를 거치게 되는 안건들 중 건축물에 관한 안건은 경관위원회 소위원회 의견을 반영한 후 건축심의를 진행하도록 함

(4) 경관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의견 중복 방지를 위한 심의기준 마련

- 경관위원회 위원과 건축위원회 위원의 중점검토 항목을 구분하여 제시함으로써 심의 시 중복 및 대립 의견을 조절하도록 함
- 예를 들어 경관위원회는 건축물 입면 등의 디자인에 관련된 사항, 주변 건축물과의 관계, 주변에 미치는 경관적 영향을 중점으로 검토하고 건축위원회는 건축을 위한 기술적인 부문, 건축물 자체의 디자인 등을 검토하도록 함
- 경관위원회에서 중점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은 국토교통부의 경관심의 운영지침의 경관체크리스트를 준용하도록 함

(5) 경관위원회 심의, 자문대상

- 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자문대상, 사전검토 대상, 소위원회 심의 대상 등 심의와 자문대상을 경관조례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음

- 심의 대상을 사안에 따라 소위원회 심의와 사전검토 대상으로 구분함
-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은 경관법보다 강화하고 있음
- 건축물의 경우 IFEZ의 개발 특성을 반영하여 표 3-3과 같이 심의 대상을 세분화함. 특히 중점경관관리 구역에 포함되지 않는 건축물은 건축심의 대상 건축물과 건축심의 제외 대상 건축물로 구분하며, 건축심의 제외 대상 건축물도 규모별로 세분화하여 정하고 있음

▼ [표 3-3] IFEZ 경관위원회 심의, 자문대상

구분		심의	자문	사전검토 (권장)	소위원회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		
경관사업 시행의 승인		●			
경관사업의 계획에 관한 사항			●		
경관협정의 인가		●			●
경관조례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사회기반 시설 사업	〈도로법〉에 따른 도로로 총 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인 사업	●		●	
	〈하천법〉에 따른 하천시설로 총 사업비가 50억원 이상인 사업	●		●	
건축물	경관지구의 건축물	지구 지정시 추후 검토	●	●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	구역 내 모든 건축물	●	●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 기업이 건축하는 건축물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	●	●	
		연면적 300㎡ 이상 1,000㎡ 미만 건축물			●
	중점경관관리구역에 포함되지 않는 건축물	건축심의 대상 건축물	●	●	
		건축심의대상 제외건축물 : 연면적 10,000㎡ 이상	●	●	
		건축심의대상 제외건축물 : 연면적 5,000㎡ 이상 10,000㎡ 미만			●
야간경관	총 사업비 1억원 이상의 야간경관 형성 및 정비를 위한 사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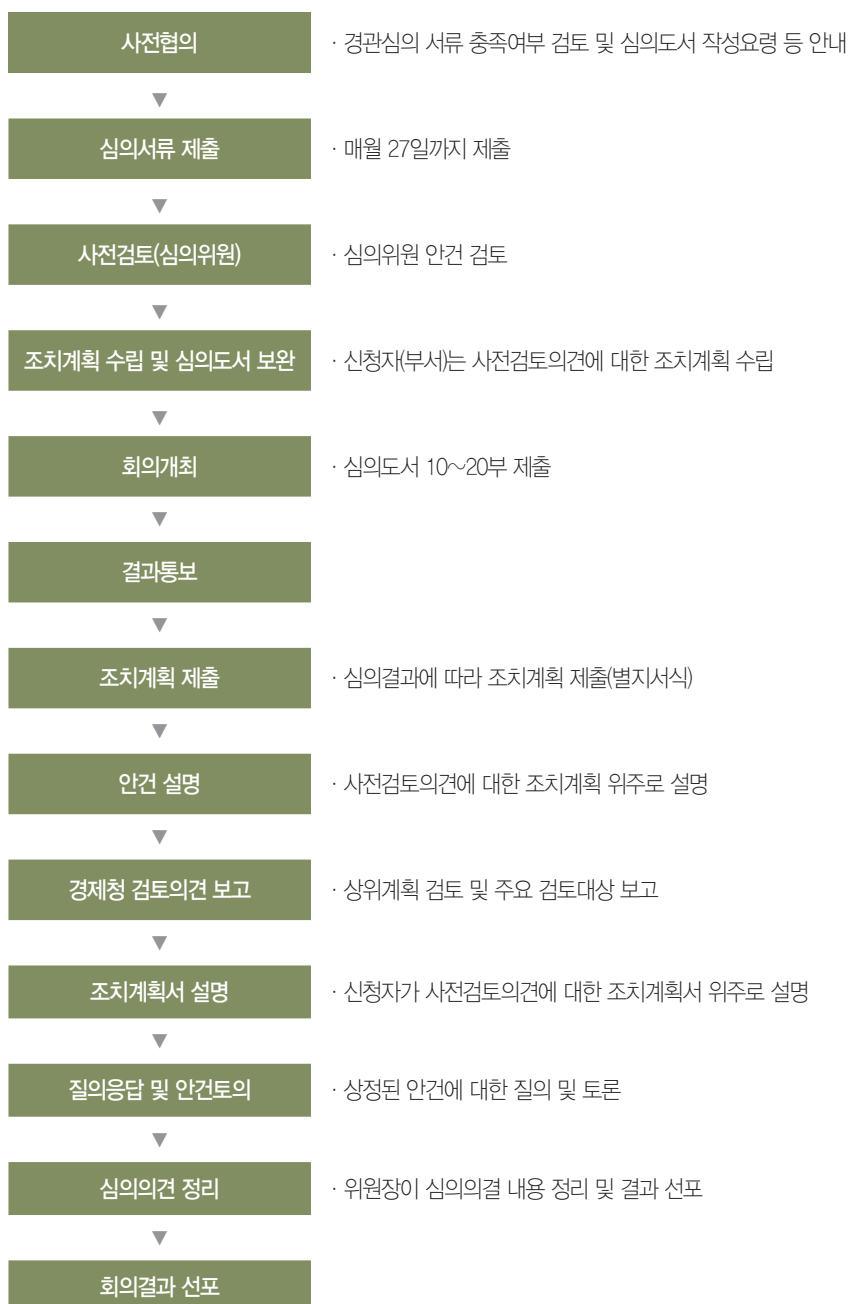
- ※ 기존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 증축 부분이 위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 대상 등에 포함
 ※ 건축허가사항을 변경하여 위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 대상 등에 포함
 ※ 경미한 변경사항
 - 건축물 입면적의 10% 미만의 변경 (건축물 외장재료 도는 색채 변경의 경우에는 30% 미만의 변경)
 - 건축물 연면적 10% 미만의 증감
 - 건축물 높이의 10% 미만의 증감

자료출처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

(6) 경관위원회 심의 절차

- 경관위원회 심의 과정을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공지하여 신청자들에게 경관심의 절차를 안내하고 있음
- 심의위원이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고, 심의 시에는 사전검토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중심으로 안건 설명, 토론

▼ [표 3-4]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경관위원회 심의 절차



4) 세종특별자치시 경관심의⁴⁾

(1) 경관심의-자문-협의의 역할 분담

- 경관관련 자문 및 심의는 경관심의, 경관자문, 경관협의로 구분하여 운영함
- 경관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을 수행하고 경관협의를 경관조례에 근거하여 주무부서에서 경관가이드 라인을 기준으로 심의하는 것을 의미함
- 심의와 자문 외에 주무부서에서 건축물 계획을 검토하는 경관협의를 도입, 주무부서에서 경관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심의하고 위원회에서 심의, 자문한 것을 봄
- 경관협의를 이의가 있을 경우, 경관심의 또는 경관자문으로 안건 상정 가능함

▼ [표 3-5] 세종특별자치시의 경관심의, 자문, 협의

구분	심의 / 자문기관	대상	근거
경관심의	세종시 경관위원회	사회기반시설, 개발사업, 건축물	경관법 및 조례
경관자문	세종시 경관위원회	사회기반시설, 개발사업, 건축물	경관법 및 조례
경관협의	주무부서	건축물	조례

〈 경관협의 대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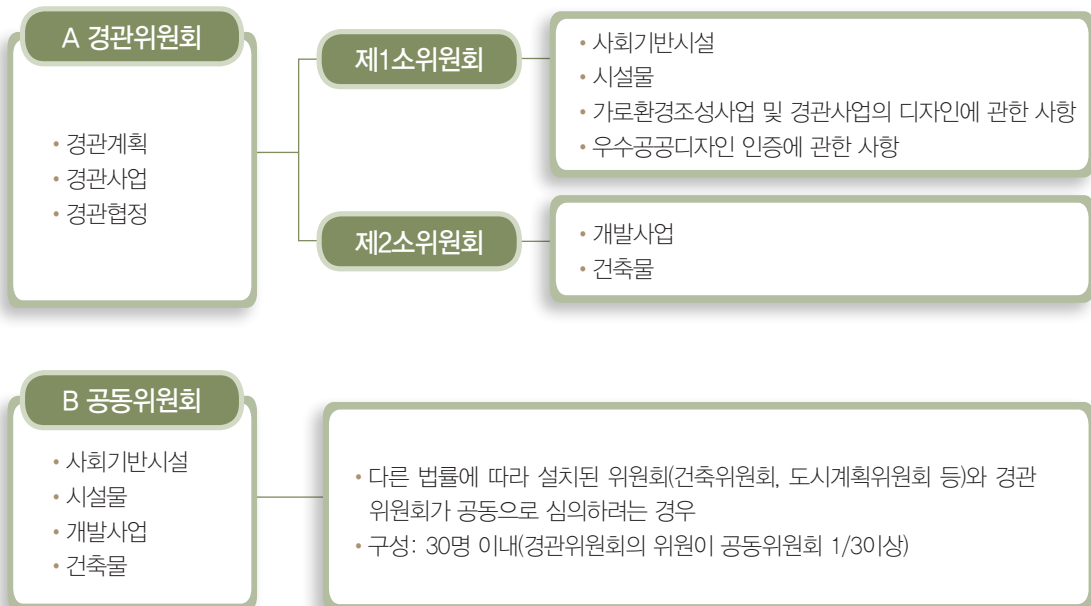
1. 중점관리구역의 건축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
 - 가. 조치원읍 시가지 3층 미만 건축 중 건축허가 대상
 - 나. 국도1호선 조치원읍구간 3층 미만 건축 중 건축허가대상
 - 다. 금강주변 2층 미만 건축 (2층 이상 건축신고 포함)
2. 연면적 660㎡ 미만 공공건축물
3. 자연환경보전지역 안 3층 미만 건축
4. 경관심의, 자문 대상 외의 3층 이상 5층 미만 건축
5. 경관협의를 이의가 있을 경우, 경관심의 또는 경관자문으로 안건상정할 수 있다
6. 그 밖에 경관 및 공공디자인이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자료출처: 세종특별자치시 경관조례

4) 세종특별자치시 홈페이지 참조

(2) 경관심의대상별 소위원회 구성

- 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경관심의대상 사업별로 소위원회 구성하여 운영
- 소위원회의 심의·의결은 경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것으로 봄
- 1분과 소위원회 : 사회기반시설, 개발사업 경관심의
- 2분과 소위원회 : 건축물 경관심의



※ 자료출처 : 세종특별자치시 홈페이지

▲ [그림 3-2] 세종특별자치시 경관위원회 구성 현황

5) 시사점

- 광역지자체 경관심의 분석을 통해 주요 시사점을 도출함
- 경관법 및 시행령 개정 이후 조례 개정한 10개 광역지자체의 경관조례 검토 결과 7개 지자체가 법 및 시행령 취지를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였음
- 광역시가 도보다 조례를 통해 심의를 강화하는 경향이 뚜렷함
- 도의 경우 시·군 조례에서 자율적으로 심의를 운영할 수 있어 조례 내용을 강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시·군 경관행정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도 차원의 선제적 대책이 필요함
- 전라남도의 경우 적극적으로 경관심의를 활용하고 있으며 다른 도와 차별화됨
- 10개 광역지자체의 경관심의 운영 특성과 시사점을 심의 및 자문대상, 심의 및 자문 방식, 위원회 운영, 운영 방식의 관점에서 표 3-6과 같이 정리하였음

▼ [표 3-6] 광역지자체 경관심의 운영특성과 시사점

특성	시사점
① 심의·자문대상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의대상, 자문대상을 조례에서 명확히 규정 - 조례로 위임된 사회기반시설, 건축물의 심의 대상 강화 - 심의 대상 강화 방식은 다양 - 사업비, 물리적 규모, 지역특성 반영 - 심의대상 작은 규모는 자문대상으로 처리하여 강화
② 심의·자문방식 다양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의 및 자문 이외에 사전경관협의 도입 - 경관협의 대상 사업을 별도로 규정 - 심의-자문-사전경관협의의 역할 분담 - 사전검토제도의 도입
③ 위원회 운영 다각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위원회와 소위원회 분리·운영 활성화 및 역할 명확화 - 광역과 기초지자체 경관위원회의 역할 분담 - 일부 지자체는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경관심의 대상화 - 경관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중복 심의 방지
④ 명확한 심의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의 절차 및 참여주체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 - 경관심의 운영지침대로 홈페이지 공개
⑤ 지역특성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시 야간경관관리 강화 (인천, 대전) - 경관사업 총괄계획가 도입 (인천)

2. 해외 경관심의 운영 분석

1) 영국 CABA(Design council)의 디자인 리뷰⁵⁾

- CABA (Commission for Architecture and the Built Environment)는 건축, 도시설계 및 공공공간의 디자인에 관한 정부 자문기관으로 1999년에 설립되었으며 2011년 Design Council과 통합됨
- 디자인 초기 단계부터 전문적이며 실용적인 조언을 통해 공간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 CABA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디자인 리뷰(Design Review)와 디자인 조언(Design Enabling)이며 이를 통해 공공 및 민간의 프로젝트 디자인을 개선하는 것임
- 공공부문 프로젝트의 초기 단계에서는 조언(Enabling)을 통해, 계획단계에서는 리뷰(Review)를 통해 개발계획 전체에 관여하고 있으며 민간프로젝트는 신청한 프로젝트에 한하여 디자인 리뷰에만 참여하고 있음

▼ [표 3-7] CABA 디자인 리뷰 특성

유형	특성
디자인 조언 (Design Enabl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 프로젝트의 초기 단계에서 자문 - 디자인절차와 방법론 등에 대해 컨설팅 - 오픈스페이스 기본구상, 지역개발계획과의 적합성 검토 - 상위계획과의 적합성, 지역 공헌도 검토
디자인 리뷰 (Design Review)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의 초기단계 또는 허가 직전에 신청 - 디자이너가 파악하지 못한 전문적 경험과 지식을 제공하여 잘 된 디자인을 지원, 격려하며 잘못된 디자인은 개선될 수 있도록 유도 -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각 지자체에 디자인 검토를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음 - 이에 지자체는 개발행위허가과정에서 개발업자에게 디자인 검토를 의무적으로 받아 오도록 요청하고 있음

5) Design Council(2013),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외 (2008), 국토해양부(2012), 경기개발연구원(2010) 자료 토대로 작성

(1) 디자인 조언 (Design Enabling)

- 공공사업을 기획하고 발주하는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디자인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조언(Enabling)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Enabler는 분야별로 공공건축(Public Buildings), 도시설계와 주택(Urban Design and Homes), 공공 공간팀(CABE Space Enabling)으로 구분
- Enabling은 CABE 직원이나 전문가에 의해 무상으로 제공되며 프로젝트 발주 초기단계 즉, 디자인팀이나 개발업자가 선정되기 전 디자인개발 초기 단계에 참여하여 프로젝트 진행을 위한 실질적인 사항을 조언함
- 발주자의 요구, 프로젝트의 실현가능성과 효과를 검토하여 설득력 있는 보고서 작성을 지원하고 있음
- 적절한 발주 방식과 가장 적절한 디자인팀을 선정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디자인의 질을 담보할 수 있도록 디자인 기준과 장기적인 사업 효과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평가 기준 등을 제시함

(2) 디자인 리뷰(Design Review)

- 디자인 리뷰는 계획의 초기 단계 또는 건축허가 직전에 신청할 수 있으며 각 지자체, 건축가, 건축주가 신청하면 필요성을 판단하여 이루어짐
- CABE에 신청한 모든 프로젝트가 리뷰의 대상이지만 사업의 규모, 위치, 중요도에 따라 선별하여 디자인 리뷰를 제공하고 있음
- 사업 예산이나 규모 중심으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소규모, 적은 예산의 사업이더라도 도시환경의 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은 리뷰 대상으로 선정함
- 디자인리뷰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역위원회 패널에 의해 진행되며 패널은 5명 내외로, 기본 3년을 임기로 선임되고 역량에 따라 2년 연임이 가능함
- 일반적으로 10~20여 명의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풀은 프로젝트마다 4~6명 정도 참여하고 있음
- 패널은 해당 프로젝트와 이해관계가 있어서는 안 되며, 멤버가 순차적으로 의장을 맡고, 통상 1년 전에 디자인 리뷰 날짜를 확정짓고 패널을 섭외함
- 디자인 리뷰를 위해 도면 · 모델 · 프리젠테이션 패널 등이 필요하며 이를 준비하기 위한 전문적인 스텝이 지원함

▼ [표 3-8] CABE 디자인 리뷰의 대상 선정 기준

유형	특성
규모 (Siz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모가 커서 주변 환경 변화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시설 - 사회기반시설 (역사, 공항, 교량, 발전소, 소각장 등) - 공공공간, 공원, 오픈스페이스의 변경 - 대규모 마스터플랜, 도시계획정책, 디자인코드, 지침 등
위치 (Sit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각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개발되는 프로젝트 - 각 지역의 특별한 장소에 개발되는 프로젝트 - 공공투자(Public investment)로 개발되는 프로젝트
중요도 (CABE Space Enable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도시계획 및 건축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프로젝트 - 대중의 생활의 질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프로젝트 - 규모, 형태, 재료 등이 주변 환경과 특별히 다르거나 일반적이지 않고 실험적인 디자인으로 도시계획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프로젝트

- 디자인리뷰는 발표(Presentation), 내부평가, 데스크탑 리뷰(Desk-top Review) 3가지 방식으로 진행됨
- 패널들간의 합의 형성과정을 통해 디자인리뷰 결과를 결정함으로써 의견대립이 심각하지는 않음

▼ [표 3-9] 디자인 리뷰의 유형

유형	특성
발표 (Present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가 또는 관련자가 패널에게 계획에 관해서 발표
내부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가, 관련자 참석 없이 디자인 패널들이 리뷰
데스크탑 리뷰 (Desktop Review)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패널들의 모여서 리뷰를 진행하지 않고 각 패널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신청자에게 통보

- 합의된 사항은 지자체에 통보되며 이를 바탕으로 지자체가 지역의 개발행위를 조정하고, 또한 CABE 웹 사이트에 게재하여 다른 프로젝트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디자인리뷰를 받은 프로젝트 중 70% 정도가 리뷰 결과를 반영하고 있음

▼ [표 3-10] 디자인 리뷰 절차



(3) 디자인 리뷰(Design Review)의 10 원칙

- 디자인리뷰 결과가 반영되기 위해서는 충분히 신뢰할만한 프로세스로 진행되어야 하고 높은 수준의 디자인 의견이 제시되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다음의 10 원칙이 지켜져야 함
- 독립성(Independent) : 사업 발주처, 결정권자 등 사업과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 리뷰에 참여
- 전문성(Expert) : 디자인 경험이 많고 생산적인 비평을 할 수 있는 사람
- 다학제적(Multidisciplinary) : 건축, 도시설계, 조경, 엔지니어 등 다양한 관점의 종합
- 책임감(Accountable) : 패널과 자문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여야 함
- 투명성(Transparent) : 위원회 운영은 공개적이어야 함
- 적절성(Proportionate) : 사업의 중요성, 공간적 스케일, 예산 등 프로젝트에 적용 가능하여야 함

- 사업초기(Timely) : 디자인 초기에 진행되어야 시간과 예산을 줄일 수 있음
- 권고(Advisory) : 디자인 결정이 아닌 디자이너에게 주는 부분적인 권고
- 객관성(Objective) : 주관적 선호가 아닌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한 계획에 대한 평가
- 명료성(Accessible) : 의견과 자문은 디자이너, 결정권자 등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함



※ 자료출처 : Design Council, 2013, p.7

▲ [그림 3-3] 디자인 리뷰(Design Review)의 10원칙

(4) 시사점

- 경관자문 성격의 디자인 조언(Design Enabling)은 프로젝트 초기 단계에 활용하고, 경관심의 성격의 디자인 리뷰(Design Review)는 계획단계에서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음
 - 경관자문과 심의를 통해 중요 사업계획 전체에 관여할 수 있는 구조임
- 디자인 조언(Design Enabling)은 분야별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특성이며 이는 공공디자인센터의 컨설팅과 유사함
 - 충남의 경우 공공디자인센터의 컨설팅, 경관자문, 경관심의의 역할 분담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리뷰 대상, 즉 심의 대상 선정에 사업예산이나 규모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경관에 영향을 주는 사업 중심으로 선정하고 있음
 - 조례에서 경관심의 대상 선정 시 유연한 접근 필요
- 리뷰 방식도 한 가지 방식이 아닌 선택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함
 - 유연하고 탄력적인 경관심의 진행 방식 도입 검토 필요
- 리뷰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다른 프로젝트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음
 - 현재 경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로 경관심의 결과를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개
- 리뷰 개최 전 리뷰의 목적과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음
 - 경관심의 개최 전 안건의 이슈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
- 디자인 리뷰의 투명성 확보, 교육적 목적, 관련 프로젝트 참고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해 리뷰 과정에 참관인(Observer) 참석 허용하고 있는 것이 특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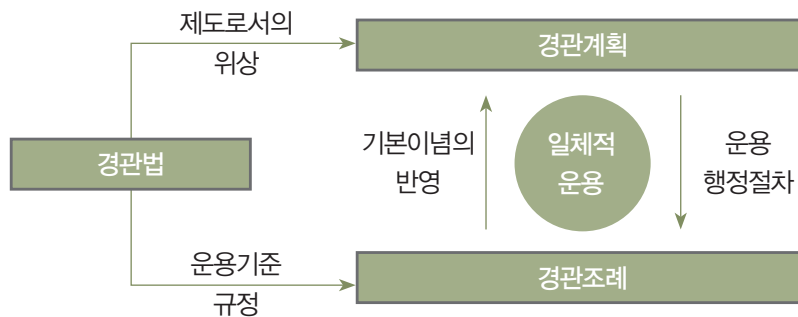
※ 자료출처: Design Council, 2013, p.26

▲ [그림 3-4] CABE 디자인 리뷰 : 관련 전문가, 학생, 일반인 등이 참석하여 진행과정을 참관할 수 있음

2) 일본 사전경관협의제도

(1) 경관법, 경관계획, 경관조례의 특성

- 일본에서는 2004년 경관법이 제정되기 전부터 우리나라의 시, 군, 구에 해당하는 시정촌 별로 경관조례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2003년 기준으로 524개의 경관관련 조례가 제정 운용중임⁶⁾
- 우리나라의 경우 경관법이 제정 된 후 지자체별로 경관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나, 일본은 각 지자체별로 경관조례가 제정, 활성화 된 후 이를 지원하기 위해 경관법이 제정되는 과정을 거침
- 따라서 일본 경관법은 지자체의 경관조례에 많은 권한을 위임하고 있는 법 구성을 보이고 있음. 일례로 경관법에서 우리나라와 달리 경관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지 않음
- 이는 경관의 지역적 특성과 다양성을 중요시 하고 있는 일본 경관관리의 특징이며 일본의 경관계획은 우리나라와 같이 경관법에 기초하여 수립되나, 경관계획의 운용은 각 지자체의 경관관련 조례에서 상세히 규정되고 있음
- 즉, 경관계획의 내용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경관조례를 운영 중인 것이 가장 큰 특징임



※ 자료출처 : 김봉경 외, 2009, p.11

▲ [그림 3-5] 경관계획과 경관조례의 일체적 운용

6) 김봉경 외(2009)의 연구에 의하면 일본 시정촌의 경관관련조례 제정 추이를 보면 1970년대 이전 9개, 1970년대 44개, 1980년대 71개, 1990년대 279개, 2003년 이전에 121개 등 총 524개의 시정촌이 경관관련 조례를 경관법 제정 전에 운용중이었다.

▼ [표 3-11] 일본 경관법의 경관 조례 위임 내용

위임 주체	위임 내용
경관행정단체로의 위임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 경관계획의 책정(수립)절차 - 경관계획의 책정, 변경 제안 단체 - 행위신고 적용 제외사항 - 특정신고 대상 행위 - 경관중요건조물의 표식설치 - 경관중요건조물의 관리방법기준 - 경관중요수목의 표식설치 - 경관중요수목의 관리방법기준
시정촌으로의 위임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형태의장제한 적합심사절차 - 건축물 등의 형태의장제한 적용제외 건축물 경관지구 내 - 위반공작물에 대한 조치 등 - 공작물제한의 인정심사절차 - 개발행위 등의 제한사항 - 준경관지구 내 건축물 등의 규제, 개발행위 규제 - 지구계획 등의 구역 내 건축물 등의 형태의장제한사항 - 지구계획 등의 구역 내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 벌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관행정단체란 도도부현(都道府縣), 정령시(政令市), 중핵시(中核市) 등의 지방자치단체를 의미 - 시정촌(市町村)은 도도부현의 동의하에 경관행정단체가 될 수 있음 	

자료출처 : 김봉경 외, 2009, p.11 편집

- 일본 경관법에서는 지자체, 경관관련단체, 주민들의 협의에 의한 경관관리를 위해 '경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을 권장함
- 경관협의회, 경관심의회 등의 구성은 지자체별로 다양하게 구성되고 있어 우리나라의 경관위원회와는 다른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음
- 경관협의회에서는 우리나라의 경관심의회와 유사한 방식으로 경관사전협의를 운영하고 있음. 경관심의회는 경관계획, 가이드라인과 같은 내용을 검토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경관심의회와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사전경관협의제도 중심으로 검토하였음

(2) 경관협의회와 사전경관협의제도

- 경관협의회는 경관행정단체(지자체), 주민, 경관관련단체 등 경관형성에 관계를 가진 다양한 주체의 협의 조직임
- 경관협의회의 구성 방법, 협의 대상 등 운영 방식은 각 지자체의 조례를 통해 규정하고 있으며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음
- 일본 경관법 운용지침에서는 경관협의회의 취지와 기본개념, 고려사항 등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지자체 자체적으로 협의회를 구성, 운영해 하고 있음
- 경관협의회의 운영 방식에 관한 연구(岩田 暁 외, 2013)에 의하면 협의회의 유형은 크게 5가지로 구분됨

▼ [표 3-12] 일본 경관협의회의 운용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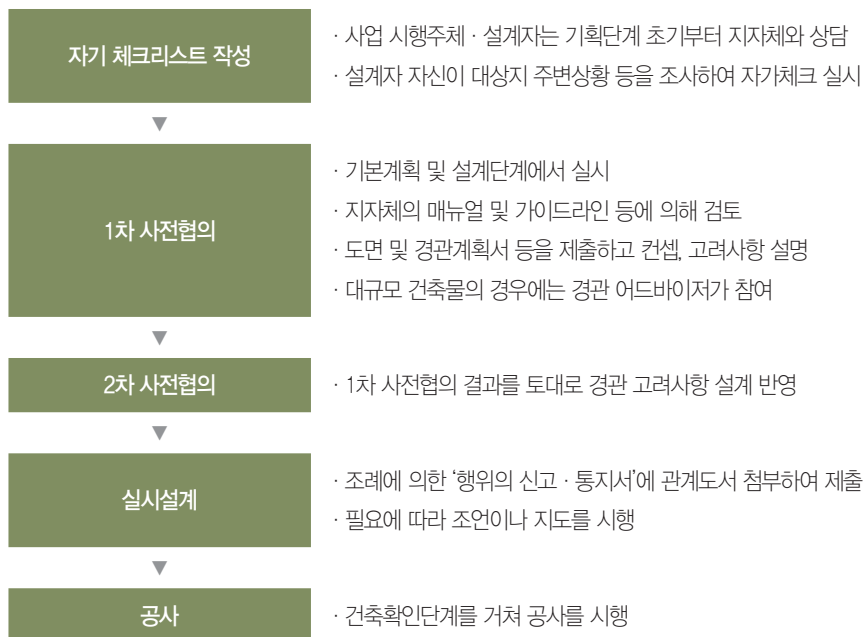
경관협의회의 유형	운용 형태
지구경관유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관관련 계획의 수립, 변경 시 협의 형성 - 주민, 관계자 등이 참여하여 지역주민의견 반영
공공물유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시설물의 설치 시 협의를 통한 경관 유도 - 지자체 담당자(시설 담당자)가 협의회에 참여
자문기관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관형성에 관한 전반적인 조사 및 협의를 진행 - 경관조례 제정 시부터 협의회 설치를 규정 - 경관심의회의 역할과 유사한 기능 수행
계획검토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계획 초안에 대한 다양한 주체의 의견 수렴 및 협의 -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여 다각적인 계획 검토 - 결정여부는 별도의 경관심의회의가 수행
광역경관유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수의 경관행정단체(지자체)가 광역경관형성을 위해 협의 - 협의회 결정사항은 참여 지자체의 경관계획에 반영

자료출처 : 岩田 暁 외,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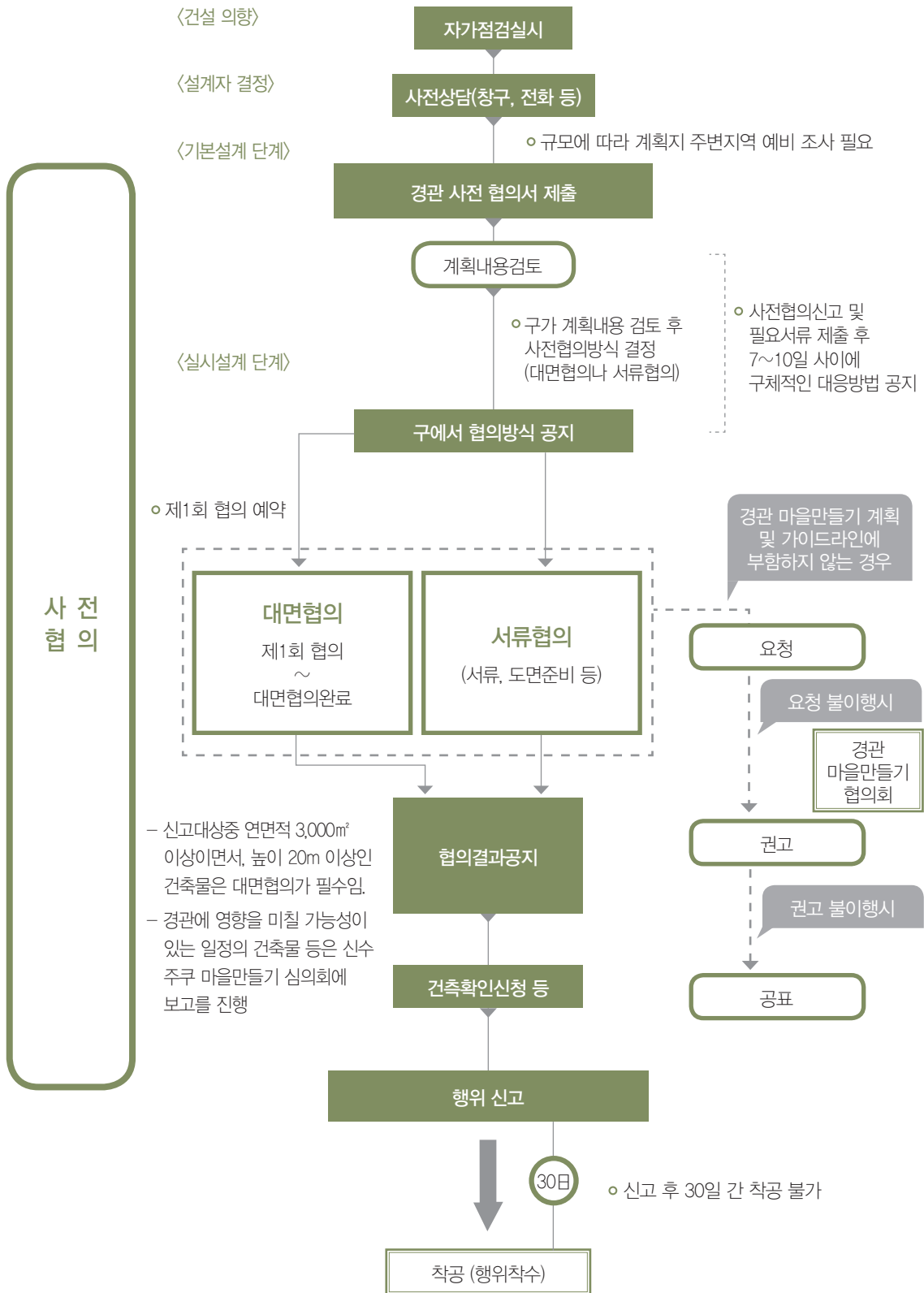
- 경관협의회를 통한 사전협의는 개발계획 수립 전에 기본구상 단계에서 사업자, 설계자, 지자체가 협의를 통해 지역 경관 형성의 방향에 대해 공통인식을 갖도록 함
- 사전협의제도는 사전협의 및 도서 제출 전에 경관에 관한 '자기체크의 실시'를 요구하고 있음. 이는 프로젝트의 조사, 기획단계가 설계자 스스로가 시가지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제도화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함

- 기본계획, 설계단계에서 매뉴얼 및 가이드라인 검토,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경관에 대한 고려사항을 설계에 반영하도록 함
- 실시설계단계에서는 조례에 의한 '행위의 신고·통지서'에 경관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하며, 건축계획을 설명할 때에는 경관에 관한 사항도 설명하도록 함
- 경관상 중요한 지구에서의 행위와 대규모 건축물 등에 대한 도시경관심의회와 도시경관 어드바이저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음
- 경관법 16조에 기초하여 개개의 건축물을 계획할 시에 자기 체크리스트를 제출하게 되어 있고, 이를 사전경관협의 시에 의견 교환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있음. 사전경관협의의 프로세스는 지자체별로 조례로 규정하고 있어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음. 일반적인 사전경관협의의 프로세스는 표 3-13과 같음

▼ [표 3-13] 일본 사전경관협의의 일반적 프로세스



- 경관법에 따른 건축행위에 대한 신고 전에 신속한 절차를 위해 사전협의를 실시하고 있으며 일본 동경도 신주쿠구 사전경관협의의 신고 절차는 그림 3-6과 같음



자료출처 : 新宿区 都市計画部 景観と地区計画課, 2015, p.5

▲ [그림 3-6] 동경도 신주꾸구 경관사전협의 및 신고 절차

(3) 사전경관협의를 위한 자료 및 도서작성방법 규정

- 지자체별로 경관협의를 위한 도면과 그 안에 포함될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 특징임
- 지자체별로 경관협의를 위한 도면 작성방법은 경관계획, 경관형성기준(가이드라인)의 내용과 연계하여 규정하고 있음. 치요다구 경관도서 작성 예를 보면, 지자체의 경관계획과 경관가이드라인에 기초하여 명확하게 예시를 통해 설명하고 있음

▼ [표 3-14] 동경도 치요다구의 경관사전협의를 위한 도면의 종류와 내용

행위의 종류	도면의 종류	도면의 내용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이전	부근 현황도	방위 및 행위지를 알 수 있는 것
	배치도 · 평면도	대지경계선 및 건축물의 위치를 나타내고 녹화계획(착색), 공지계획을 기재
	경관계획서 (대규모건축물 만)	용도, 디자인, 주변환경에의 경관형성상의 배려를 기입한 것 (키워드표 및 척도 1/500 이상에서의 주변지구가 들어간 지도상의 평면계획을 표시한 것)
	외관 착색한 입면도, 단면도	직면도로에 접한 면을 포함해 2면 이상 입면도에서 마감방법(재질) 및 색채를 명시한 것
	옥상 또는 지붕의 평면도 (완성예상도)	노출하는 건축설비의 배치와 그 마감을 기재한 것
	몽타주 사진(완성예상도)	해당 건축물 및 그 주변상황 알 수 있는 것(원칙)
	2방향 이상의 현황사진	칼라, 주변환경과 해당건축물(건설예정지)을 알 수 있는 사진
건축물 외관의 과반에 걸친 색채의 변경 또는 수선, 변경	부근 현황도	방위 및 행위지를 알 수 있는 것
	배치도	부지의 경계선 및 건축물의 위치를 나타내는 것으로 녹화 및 공지부분을 변경하는 경우는 이를 기재
	외관 착색한 입면도, 단면도	변경하는 부분을 명시한 입면도에서 마감방법(재질) 및 색채를 명시한 것
	2방향 이상의 현황사진	칼라, 주변 환경과 해당 건축물을 알 수 있는 사진
공작물의 신설, 증설, 개조, 이전 설치 또는 외관의 과반 이상에 걸친 색채의 변경	부근 현황도	방위 및 행위지를 알 수 있는 것
	배치도	부지의 경계선 및 공작물의 위치를 나타내는 것
	외관 착색한 입면도, 단면도	각면의 입면도에서 마감방법(재질) 및 색채를 나타내는 것
	몽타주 사진(완성예상도)	공작물 및 그 주변현황을 알 수 있는 것
	현황 사진	칼라, 주변환경과 당해 공작물(또는 공작예정지)을 알 수 있는 사진

행위의 종류	도면의 종류	도면의 내용
광고물의 표시, 설치, 증설, 개조, 이전설치 또는 외관의 과반이 상에 걸치는 색채의 변경 또는 표시방법의 변경	부근 현황도	방위 및 행위지를 알 수 있는 것
	배치도	광고물을 표시하고, 또는 설치하는 장소의 현황을 알 수 있는 것
	착색한 완성예상도	디자인도(착색)
	입면도, 평면도	건축물 입면도, 옥상평면도 등
	현황사진	칼라, 주변 환경과 해당 광고물(또는 설치예상장소)를 알 수 있는 사진
토지형질변경	위치도	방위 및 주변 환경과 해당 광고물(또는 설치예상장소)를 알 수 있는 것
	현황도	해당지 및 근접지에 대해서 도로, 기타 공공시설, 기존 건설지, 수목 등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것
	착색한 토지이용계획도	해당 토지의 경계, 공공시설의 위치 및 형상, 예정건축물의 배치, 식재 등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것
	단면도	행위 전후의 토지의 상황을 대비가능한 횡단면 및 단면도
	예정건축물의 개요	예정건축물의 용도, 구조, 층수, 규모 등
	현황사진	주변 상황을 파악가능한 칼라사진
토지구획정리사업		사업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도면
시가지재개발사업		사업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도면

자료출처 : 한국도시설계학회 외, 2012, p.2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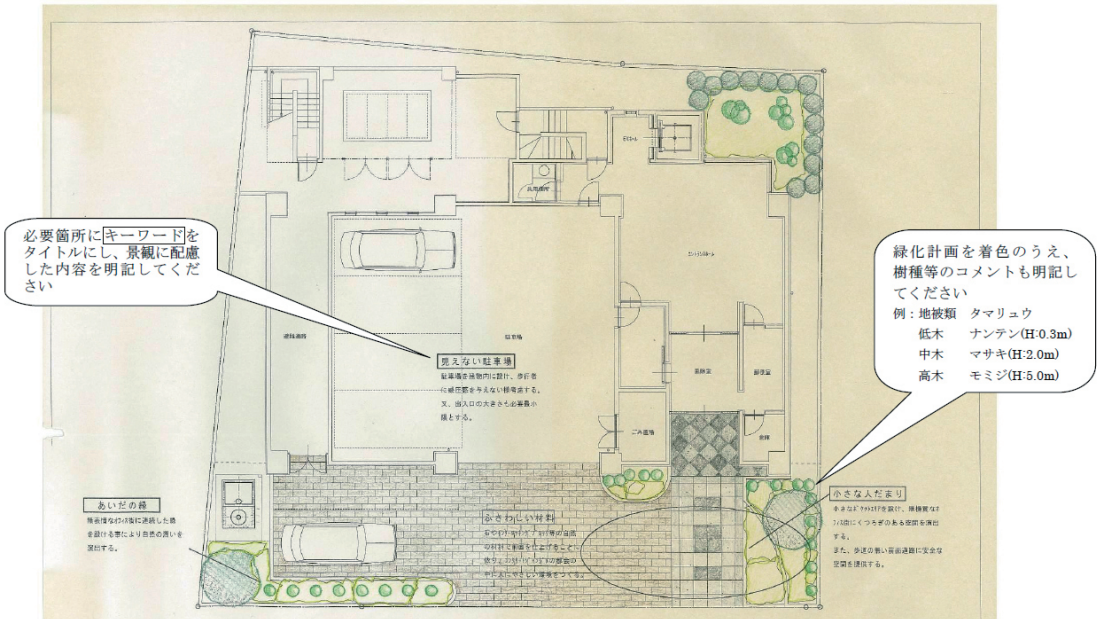
● 景観の届出図面の作成例 (景観計画書)



자료출처 : 千代田区環境まちづくり部景観・都市計画課, 2015, p.11

▲ [그림 3-7] 치요다구 경관협의도서(경관계획서) 작성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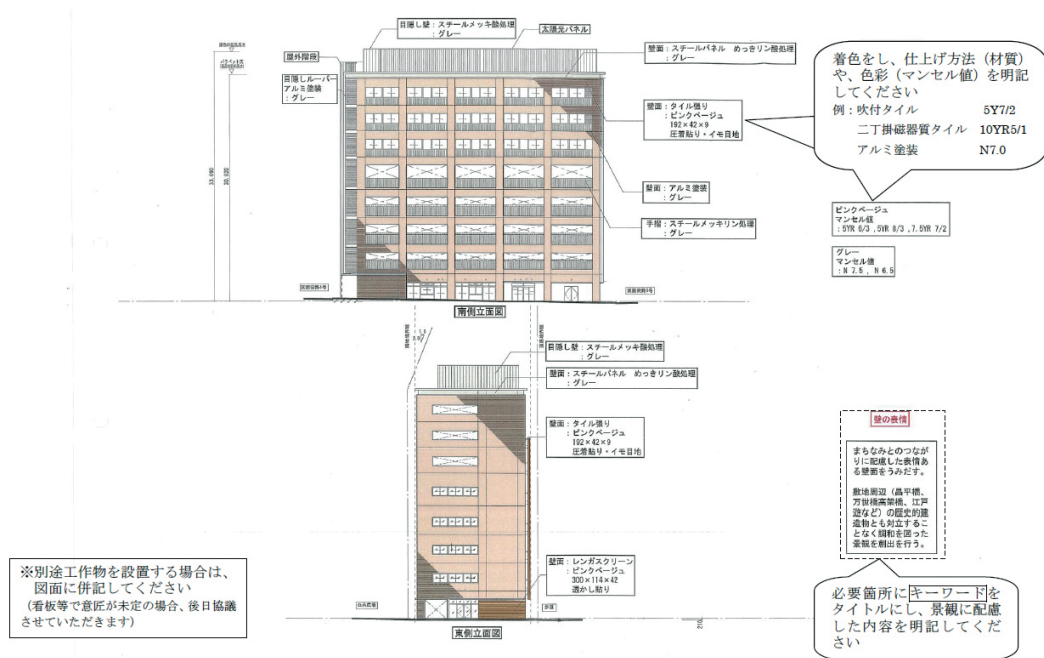
● 景観の届出図面の作成例 (平面図)



자료출처 : 千代田区環境まちづくり部景観・都市計画課, 2015, p.9

▲ [그림 3-8] 치요다구 경관협의도서(평면도) 작성 예시

景觀의届出図面の作成例 (立面図)



자료출처: 千代田区環境まちづくり部景觀・都市計画課, 2015, p.10

▲ [그림 3-9] 치요다구 경관협의회서(입면도) 작성 예

景觀의届出図面の作成例 (モンタージュ写真 (完成予想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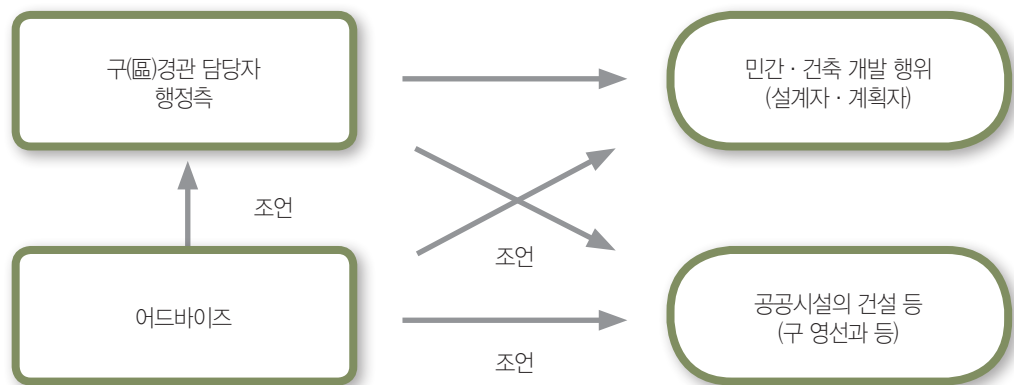


자료출처: 千代田区環境まちづくり部景觀・都市計画課, 2015, p.12

▲ [그림 3-10] 치요다구 경관협의회서(투시도) 작성 예

(4) 경관어드바이즈제도

- 2명의 어드바이저가 건축부문과 도시계획 부문으로 나누어 매월 2~4회 출장형식으로 협의가 이루어짐
- 이때 행정, 설계자, 어드바이저가 하나가 되어 같이 협의를 진행함
- 중고층 건물의 경우 행정담당자가 직접 가이드라인에 따라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어드바이저는 대규모 건축물 및 공공건축물의 협의에만 참가함
- 지자체 필요에 따라 경관어드바이즈 제도를 운용하고 있음



자료출처: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외, 2008, p.120

▲ [그림 3-11] 일본 경관어드바이저 운영 방식

(5) 시사점

- 일본 경관관리의 가장 큰 특징은 지자체의 자율적인 경관관리가 가능하도록 경관행정단체(우리나라의 지자체에 해당)에 위임하는 내용과 범위가 넓은
 - 우리나라와 달리, 지자체의 경관관련 조례의 제정과 운용이 활성화 된 이후 이를 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경관법이 제정된 일본 경관행정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지자체의 경관계획과 경관조례의 일체적 운용이 일반화 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지자체는 경관계획, 경관형성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운용하기 위한 행정절차로서 경관조례를 활용하고 있음
 - 경관계획, 경관조례의 수립이 우선되어야 경관관리가 가능한 방식 지향
 - 충남 15개 시, 군 모두 경관조례 제정, 경관계획의 수립이 급선무
- 다양한 유형의 경관협의회를 지자체의 특성에 맞게 운영하고 있으며 협의회의 구성 멤버도 주민, 단체 등을 포함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관심의와 유사한 경관사전협의를 지자체의 특성에 맞게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음
 - 대면협의, 서면협의 등 대상에 따른 유연한 협의 방식 활용
- 설계자가 스스로 지역경관을 이해하여 계획을 수립하도록 절차를 유도하고 있음
 - 자기 체크리스트 작성, 1, 2차로 나눈 사전협의
- 사전경관협의를 위한 도면의 종류, 작성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
 - 지자체별로 협의 내용과 관련된 도면 종류, 작성예시 등을 명확히 제시
- 경관협의 대상에 따라 별도의 경관어드바이즈 제도 운영함
 - 디자인 개선을 위한 다양한 리뷰 방식 도입

3. 유사 심의 개선방안 분석

1)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

(1) 가이드라인 목적 및 활용

-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합리적인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위원회 심의 및 자문을 받도록 규정된 사항에 적용하도록 함. 지역별 특성에 따라 별도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위원회 심의가 지연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처리하며 신청자에게 관련 법·지침과 무관한 과도한 서류요구 및 불필요한 행정 절차 이행요구를 지양해야 함
- 2013년 6월 수립 후 3차 개정되었으며 2015년 6월 최종 개정됨

(2) 구성

- 1장 총칙, 2장 위원회 운영, 3장 개발행위허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대한 추가 기준, 4장 기타 사항으로 구성됨
- 1장은 가이드라인의 목적, 기본방향, 적용대상 및 법적 근거, 운영 원칙을 기술하고 있으며, 2장은 위원회 개최·운영·구성, 심의 결과 처리방법 및 회의록, 심의 대상, 안건 상정 등 처리절차,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또는 심의 사항, 부문별 심의기준, 심의서류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3장은 개발행위허가 관련 심의 추가 기준, 4장에서는 위원회의 역할 및 범위, 구속력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별표 및 참고 서식에서는 개발행위허가, 지구단위계획, 도시·군계획시설 세부 심의 내용과 기준 관련 서식 및 안건, 계획설명서, 회의록 작성 기준 등을 규정하였음

(3) 시사점

- 경관심의 운영지침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위원회 구성과 운영방식이 구체화 되어 있음
- 개발행위허가, 지구단위계획, 도시·군계획시설 등 부문별 심의기준을 별도로 제시하고 있으며 경관체크리스트에 해당되는 신청 검토내용, 제안 검토내용, 심의 내용 등이 구체화 되어 있음
- 심의 절차 및 진행에 필요한 서류와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
- 시사점 및 주요 내용은 표 3-15와 같음

UNIT	TO WHO
------	--------

시사점

주요 내용

· 심의 운영 원칙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의는 신속하게 처리 - 신청자에게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요구 지양 - 심의내용과 무관한 내용으로 피해 주는 것 지양 																									
· 위원회 운영방식 구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의 전문가 비율 규정 -위원의 자격 요건 규정 																									
· 심의 회의록 작성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의 회의록의 내용과 서식 규정 - 심의 절차를 세부적으로 규정 - 각 절차별 주체 및 시기를 규정 																									
· 심의 절차 구체화	<table> <tr> <th>구분</th><th>세부절차</th><th>비고</th></tr> <tr> <td>① 안건 요청</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 · 과 → 위원회 주관부서 • 심의요청시 제출서류 - 심의안건(계획설명서 포함)1부 - 심의 요약서, 파워포인트 자료 등 </td><td>개최 20일전</td></tr> <tr> <td rowspan="9">② 안건 검토</td><td>↓</td><td></td></tr>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의 대상 여부 및 관련법 적정성 검토 </td><td>개최 18일전</td></tr> <tr> <td>↓</td><td></td></tr>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 조사 - 조사자 : 소관업무담당 및 위원회 주관부서 - 내용 : 현지여건 및 결정 등의 당위성 조사 </td><td></td></tr> <tr> <td>↓</td><td></td></tr>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무협의회 개최 - 협의회 : 위원회운영팀장(회의주관), 도시계획담당 및 담당자, 소관업무 담당(자) * 필요시 : 시 · 군 담당자 및 안건 당사자 참석 요청 - 내용 : 규정검토 및 현지조사결과에 의한 실무적 검토 및 협의 * 위원회 상정일자 협의 및 종합의견서 작성 방향 검토 </td><td>개최 15일전</td></tr> <tr> <td>↓</td><td></td></tr>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 상정일자 확정(위원사전 확인) </td><td>개최 14일전</td></tr> <tr> <td>↓</td><td></td></tr> </table>	구분	세부절차	비고	① 안건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 · 과 → 위원회 주관부서 • 심의요청시 제출서류 - 심의안건(계획설명서 포함)1부 - 심의 요약서, 파워포인트 자료 등 	개최 20일전	② 안건 검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의 대상 여부 및 관련법 적정성 검토 	개최 18일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 조사 - 조사자 : 소관업무담당 및 위원회 주관부서 - 내용 : 현지여건 및 결정 등의 당위성 조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무협의회 개최 - 협의회 : 위원회운영팀장(회의주관), 도시계획담당 및 담당자, 소관업무 담당(자) * 필요시 : 시 · 군 담당자 및 안건 당사자 참석 요청 - 내용 : 규정검토 및 현지조사결과에 의한 실무적 검토 및 협의 * 위원회 상정일자 협의 및 종합의견서 작성 방향 검토 	개최 15일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 상정일자 확정(위원사전 확인) 	개최 14일전	↓	
구분	세부절차	비고																								
① 안건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 · 과 → 위원회 주관부서 • 심의요청시 제출서류 - 심의안건(계획설명서 포함)1부 - 심의 요약서, 파워포인트 자료 등 	개최 20일전																								
② 안건 검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의 대상 여부 및 관련법 적정성 검토 	개최 18일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 조사 - 조사자 : 소관업무담당 및 위원회 주관부서 - 내용 : 현지여건 및 결정 등의 당위성 조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무협의회 개최 - 협의회 : 위원회운영팀장(회의주관), 도시계획담당 및 담당자, 소관업무 담당(자) * 필요시 : 시 · 군 담당자 및 안건 당사자 참석 요청 - 내용 : 규정검토 및 현지조사결과에 의한 실무적 검토 및 협의 * 위원회 상정일자 협의 및 종합의견서 작성 방향 검토 	개최 15일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 상정일자 확정(위원사전 확인) 	개최 14일전																								
	↓																									
· 심의 안건 작성 규정	- 심의의 주요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함																									
· 심의 기준 구체화	- 부문별 심의 기준, 개발행위허가 신청 검토내용, 지구단위계획 제안 검토내용에서 검토항목, 검토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심의 진행																									
	<table> <tr> <th>구분</th><th>검토사항</th><th>검토내용</th><th>적합성 여 부</th><th>비고</th></tr> <tr> <td rowspan="5">토지 이용 계획</td><td>경 계</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역지정 대상지역의 토지 및 건축물 이용현황(층수 및 용도 등) • 입안기준 면적 적정 여부 -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건설계획 포함 여부(포함시 10만㎡이상, 미포함시 3만㎡이상) </td><td></td><td></td></tr> <tr> <td>용도지역 변경</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지역의 세분 및 변경에 따른 사유 및 취지 • 관련규정(법, 조례, 지침)상 적합한 용도지역의 세분 및 변경여부 </td><td></td><td></td></tr> <tr> <td>가구 및 획지</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토구역내 토지이용계획현황 • 계획구역 토지이용계획현황의 기본방향 • 토지용도별 면적 및 구성비율 현황 • 토지이용계획도(도시계획 및 공원녹지시설 포함) • 가구(街區)구분 계획도 및 가구별 밀도배분계획 • 토지이용 효율 높이고 장애 고려 등 가구계획의 적정성 여부 • 적정규모 산정 등 획지계획의 적정성 여부 • 지반 고저차가 있을 경우 계단식 배치로 조망 · 경관 · 일조권 확보 등의 적정성 여부 </td><td></td><td></td></tr> <tr> <td>기반 시설</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위 및 관계계획과의 정합성 • 시설 설치기준규칙과의 부합성 • 입지 및 규모의 적절성, 장래확장 가능성, 주변 주거환경 폐해 여부, 주민재산권 제약사항 </td><td></td><td></td></tr> <tr> <td>설치 계획</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확보계획 수반 여부 • 시설설치 시기 및 집행계획(조성주제, 조성방법) 여부 </td><td></td><td></td></tr> </table>	구분	검토사항	검토내용	적합성 여 부	비고	토지 이용 계획	경 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역지정 대상지역의 토지 및 건축물 이용현황(층수 및 용도 등) • 입안기준 면적 적정 여부 -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건설계획 포함 여부(포함시 10만㎡이상, 미포함시 3만㎡이상) 			용도지역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지역의 세분 및 변경에 따른 사유 및 취지 • 관련규정(법, 조례, 지침)상 적합한 용도지역의 세분 및 변경여부 			가구 및 획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토구역내 토지이용계획현황 • 계획구역 토지이용계획현황의 기본방향 • 토지용도별 면적 및 구성비율 현황 • 토지이용계획도(도시계획 및 공원녹지시설 포함) • 가구(街區)구분 계획도 및 가구별 밀도배분계획 • 토지이용 효율 높이고 장애 고려 등 가구계획의 적정성 여부 • 적정규모 산정 등 획지계획의 적정성 여부 • 지반 고저차가 있을 경우 계단식 배치로 조망 · 경관 · 일조권 확보 등의 적정성 여부 			기반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위 및 관계계획과의 정합성 • 시설 설치기준규칙과의 부합성 • 입지 및 규모의 적절성, 장래확장 가능성, 주변 주거환경 폐해 여부, 주민재산권 제약사항 			설치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확보계획 수반 여부 • 시설설치 시기 및 집행계획(조성주제, 조성방법) 여부 	
구분	검토사항	검토내용	적합성 여 부	비고																						
토지 이용 계획	경 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역지정 대상지역의 토지 및 건축물 이용현황(층수 및 용도 등) • 입안기준 면적 적정 여부 -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건설계획 포함 여부(포함시 10만㎡이상, 미포함시 3만㎡이상) 																								
	용도지역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지역의 세분 및 변경에 따른 사유 및 취지 • 관련규정(법, 조례, 지침)상 적합한 용도지역의 세분 및 변경여부 																								
	가구 및 획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토구역내 토지이용계획현황 • 계획구역 토지이용계획현황의 기본방향 • 토지용도별 면적 및 구성비율 현황 • 토지이용계획도(도시계획 및 공원녹지시설 포함) • 가구(街區)구분 계획도 및 가구별 밀도배분계획 • 토지이용 효율 높이고 장애 고려 등 가구계획의 적정성 여부 • 적정규모 산정 등 획지계획의 적정성 여부 • 지반 고저차가 있을 경우 계단식 배치로 조망 · 경관 · 일조권 확보 등의 적정성 여부 																								
	기반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위 및 관계계획과의 정합성 • 시설 설치기준규칙과의 부합성 • 입지 및 규모의 적절성, 장래확장 가능성, 주변 주거환경 폐해 여부, 주민재산권 제약사항 																								
	설치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확보계획 수반 여부 • 시설설치 시기 및 집행계획(조성주제, 조성방법) 여부 																								
· 심의 도서 규정	- 심의도서의 종류와 작성 방법 구체적으로 규정																									

2)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1) 심의 기준 목적 및 구성

- 지방건축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심의의 객관성과 투명성 도모를 위해 2015년 5월 수립 제정되었으며 건축물의 구조안전·기능·환경 및 미관·공공적 가치 증대가 심의의 주요 목적임
- 심의 기준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음

1. 목적
2. 운영원칙
3. 심의기준 제·개정 등
4.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5. 위원회 개최 및 회의 공개
6. 위원회 심의 대상
7. 심의 신청 및 제출도서
8. 안건 상정 등 심의절차
9. 심의 의결 방법 등
10. 재검토 기한 등

(2) 시사점

- 건축위원회의 심의 운영 원칙을 제시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별 심의 기준에서 건축법령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기준보다 과도한 기준을 명시하는 것을 지양하도록 하고 있음
- 특정한 심의 기준을 제시하지는 않으며 심의절차와 심의제출도서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음
- 심의 절차, 재심의 대상에 대해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심의 도서별로 표시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 경관심의운영지침과의 차이임

▼ [표 3-16] 건축위원회 심의 절차

구분	절차 등	비고
<div>① 심의 신청</div> <div>→</div> <div>신청인→허가권자</div>	<div>• 심의 신청서 및 첨부 서류</div>	개최 25일전
<div>② 심의 건 검토</div> <div>→</div> <div>허가권자</div>	<div>• 관련부서, 기관 협의</div> <div>– 관계·규정 검토</div> <div>– 협의결과 민원인 통보</div> <div>– 보완사항 보완</div>	개최 25~15일전
<div>③ 심의 상정</div> <div>→</div> <div>허가권자→위원회</div>	<div>• 상정 안건 작성</div> <div>• 내부 결재 (회의안건 및 위원 선정등)</div> <div>• 개최 계획 알림</div> <div>– 위원 및 신청인 등</div> <div>• 위원에게 안건배부</div> <div>– 안건은 개최 7일 전 송부하여 검토</div>	<div>개최 12일전</div> <div>개최 12일전</div> <div>개최 10일전</div> <div>개최 7일전</div>
<div>④ 위원회 개최</div> <div>→</div> <div>허가권자, 위원회</div>	<div>• 안건설명 – 당해업무 담당</div> <div>• 위원회 개최</div> <div>– 위원, 건축주 및 설계자 등</div> <div>• 위원회 회의록 작성</div>	개최당일
<div>⑤ 개최 결과 정리</div> <div>→</div> <div>허가권자</div>	<div>• 개최결과 정리 및 보고(내부보고)</div> <div>• 심의결과 통보(문서시행)</div> <div>• 심의결과 공개(홈페이지)</div>	<div>개최후 3일내</div> <div>개최후 7일내</div>

▼ [표 3-17] 건축위원회 심의도서의 표시사항 예시

분야	도서종류	표시하여야 할 사항
건축	배치도	1. 축적 및 방위, 대지에 접한 도로의 길이 및 너비 2. 대지의 종횡단면도 3. 건축선 및 대지경계선까지의 이격거리 4. 주차장 배치 계획 5. 공개공지 및 조경배치 계획 등
	평면도	1. 1층 및 기준층 평면도 2. 기둥·벽·창문 등의 위치 3. 방화구획 및 방화문의 위치 4. 복도 및 계단 위치 5. 승강기 위치 등
	입면도	1. 2면이상 입면계획 2. 외부의 마감재료 계획 등
	단면도	1. 종·횡단면도 2. 건축물 전체높이, 각층의 높이 및 반자높이 등
	조경계획도	1. 공개공지 및 조경시설 계획 등
구조	구조도	1. 구조내력상 주요부분 평면 및 단면 2. 내진설계(지진에 대한 안전여부 확인 대상)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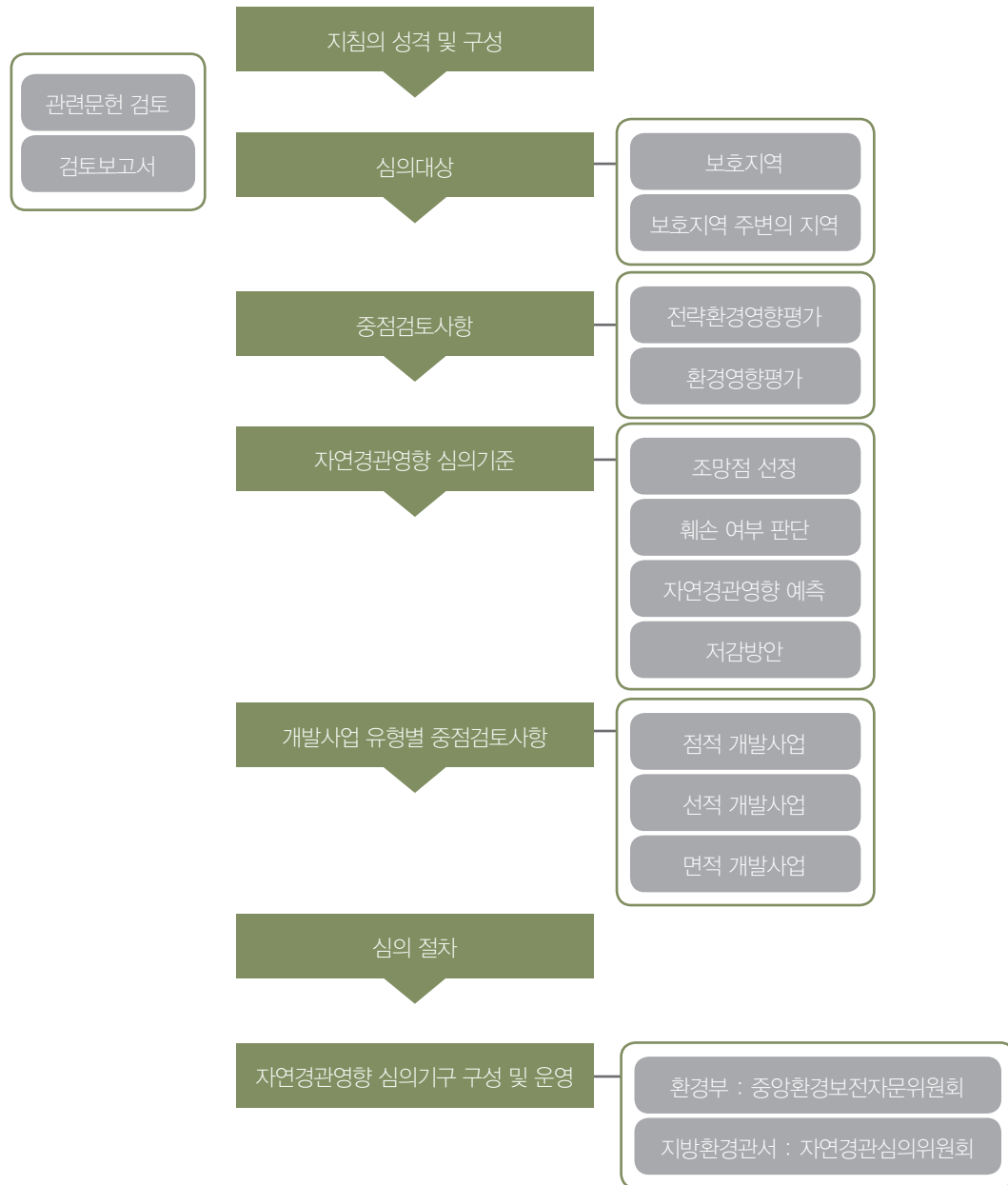
3) 개발사업 등에 대한 자연경관 심의지침 분석

(1) 지침 목적

- 개발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환경부 중앙환경 정책위원회 또는 지방환경관서 자연경관심의위원회에서 자연경관 심의 시 활용하도록 함
- 자연경관영향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수 있도록 검토사항, 심의기준,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을 제시하고 있음
- 자연환경보전법 28조(자연경관영향의 협의 등), 29조(자연경관 심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및 시행령 20조 ~22조에 근거함

(2) 구성

- 지침은 그림 3-12와 같이 구성되어 있음



▲ [그림 3-12] 자연경관 심의지침 구성도

(3) 자연경관영향 심의대상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기본계획, 환경영향평가협의 대상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협의 대상사업 포함)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 보호지역(자연공원, 습지보호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부터 일정거리 이내의 개발사업 등
-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표 3-18] 자연경관영향 심의대상

구분	자연경관영향 심의대상		
보호지역 주변 (자연공원, 습지보호지역, 생태 경관보전지역)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기본계획 - 환경영향평가협의 대상 개발사업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 - 자연공원, 습지보호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의 경계로부터 아래 표에 규정된 거리 이내의 지역		
	구분		경계로부터의 거리
	자연공원	최고봉 1,200m 이상	2,000m
		최고봉 700m 이상	1,500m
		최고봉 700m 미만 또는 해상형	1,000m
	습지보호지역		
	생태경관 보전지역	최고봉 700m 이상	1,000m
		최고봉 700m 미만 및 해상형	500m
보호지역 주변 외 지역	-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 개발사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 - 시행령에서 개발사업의 종류, 요건, 면적 등에 따라 심의 대상 규정		

▼ [표 3-19] 지방자치단체의 자연경관영향 검토 대상

구분	자연경관영향 심의대상
보호지역 주변 (자연공원, 습지보호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이 아닌 개발 사업
보호지역 주변 외 지역	-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이 아닌 개발 사업 중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 관계 법률에 의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또는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제외	

(4) 지침의 특성 및 시사점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과 관련된 경관유형별로 검토 사항을 제시하고 있음

▼ [표 3-20]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경관유형별 검토사항

구분	해당 경관	검토사항
스카이라인	산지 및 구릉지의 스카이라인	주요 조망점(내부/주변)에서의 조망 확보
	건축물, 구조물의 스카이라인	외부 스카이라인과의 조화
산림녹지경관	산지 및 구릉지의 능선 및 주변부	산림의 훼손 여부(절대 보존)
	자연형 랜드마크(암벽, 폭포, 고목 등)	경관 보전 가치 판단 및 보전 대책
	도시 지역 내의 녹지	경관 보전 가치 판단 및 보전 대책
하천경관	하천 및 하천 주변 경관	주변 토지 이용 및 개발 밀도의 적절성, 곡률도 유지
	하구경관	해수 소통 대책, 기수 구간 및 퇴전 지형 보전, 개발 밀도의 적절성
습지경관	호수 및 습지	습지의 유형 및 기능별 보전 대책
해안경관	사빈 해안경관(사빈, 사구, 사주섬 등)	사빈-사구의 상호 작용 확보, 해안 사구 보전 대책
	간석지 해안경관(갯벌, 염습지)	갯벌 보전 대책, 조석영향의 유지
	자갈 해안경관(자갈 해변 등)	자갈 해변의 보전 가치 및 보전 대책
	암석 해안경관(해안 절벽, 파식대 등)	해안 절벽의 안전성 및 보전 대책, 해안 단구의 스카이라인 보전 대책
	바다 및 도서 경관	주변 해안경관과의 조화, 물질(퇴적물, 해수 등) 이동 보호
농촌경관	농경지, 농촌 마을 등	경관 보전 가치 판단 및 보전 대책
역사문화경관	문화재 및 지역 향토 문화 유적 등	역사문화 경관 주변 자연경관의 보전 및 주변 자연경관과의 조화
생태경관	철새 도래지, 야생 동물 서식처 등	경관 보전 가치 판단 및 보전 대책
조망축	주요 조망점→주요 경관 자원	조망축 설정 의의, 조망대상의 가치 판단, 조망점 설정의 적절성 등

- 대상사업별로 현황분석-조망점 선정-경관영향분석 및 영향 예측-저감방안 등 각 단계별로 검토사항을 제시하고 있음

▼ [표 3-21]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점검토사항

단계	중점검토사항
현황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안 특성 분석(개발 사업의 위치, 개발 가능 높이 등) • 사업 대상지 부근의 경관 자원 현황 파악(경관 사업 유형별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 시 자연 경관 심의 결과 분석 및 반영 여부 비교표 제시함 – 분석된 경관 자원을 확인하고 추가·변경되는 경관 자원을 명시하는 등 기존 자료를 최대한 이용하도록 함
↓	
주요 조망점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경, 중경, 원경 포함 • 각 방향 포함 • 주 진입부, 경관 자원 고려 • 이용객 수 고려, 가시권 분석 • 조망점 선정 과정 및 이유 제시
↓	
경관 영향 분석 (시뮬레이션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합한 시뮬레이션 방법 선정 • 시뮬레이션 작성 과정 제시 (시뮬레이션 수치 자료, 적성 과정, 컬러 사진, 표준 렌즈, 적합한 해상도)
↓	
경관 영향 예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전 경관 훼손 여부 및 기존 경관과의 조화
↓	
저감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감 방안 작성(건축물 규모, 고도 규제 등) • 보존 대책 제시(통경축 확보, 차폐 계획 등) • 경관 영향 분석 feedback

• 자연경관 영향 심의기준에서는 항목과 세부내용을 제시하고 있으며 심의항목은 조망점 선정, 훼손 여부, 자연경관영향예측, 저감방안으로 크게 구분되고 있음

• 경관심의에 비해 검토 항목과 세부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 [표 3-22] 자연경관 영향 심의기준

구분	검토항목	세부내용	비고
조망점	이용 특성	조망점 위치도에 이용 특성 표시	-
		검토 보고서에 설명 제시	-
	조망점	조망점 위치도	-
		조망점 선정 기준 준수 여부	-
	가시권 분석	가시권 분석의 정확성	-
		조망점 위치도에 가시권 표시	-
		가시권 분석 사진 장비 제시	-
	경관 특성	경관 자원 분류표 및 경관 현황도 제시	-
		선정 사유 제시	-
	경관 변화	주요 경관 자원의 현황 사진 및 설명 제시	-
		배후 녹지의 스카이라인 표시	• 선형 사업의 경우 절·성토고는 중요 고려 항목
		스카이라인의 변화가 예상될 경우 시설물 위치 및 높이 제시	• 선형 사업의 경우 스카이라인 고려는 필요치 않음
	위치도	총괄표 제시	• 점·선·면 사업 유형별로 위치도의 모양이 달라질 필요 있음
		Z값과 지반고 명시	
		대상지와 조망점간의 최단 거리 제시	
		어둡지 않은 도면 사용 여부	
		A4 절반 이상 사이즈	
	스카이라인	내부, 외부 조망점 구별	• 선형 사업의 경우 스카이라인 고려는 필요치 않음
		7부 능선 산정 정확도 여부	
		7부 능선 산정을 위한 객관적인 판단 자료 제시	
훼손 여부	절·성토 규모 수치 제시		-
	위압감 형성 여부		-
자연 경관 영향 예측	경관 유형별 훼손 여부	조망점별 경관 유형 구분하여 세부 경관에 대한 훼손 여부 제시	-
	시뮬레이션의 정확도	Z값과 지반고 명시	-
		와이어 프레임 제시	-
		프로그램 명시	-
	작성 과정 명시	지형 모델링 권장	-
		지형 모델링	-
		시설물 모델링	-
		조망점별 경관 모델링	-
	절·성토에 의한 경관 변화	절·성토 발생 지역 명시	-
		발생고 제시	-
		경관 변화 자료 제시	-
저감 방안	영향 저감 공법 자료 제시		-
	효과 및 환경 영향 분석	단계별 과정 고려	-
		지역적 경관 특성 고려	-
		통경축 확보	-
		이질감 완화	-
	저감 방안 제시	기존 경관 자원의 훼손 여부	-
		기존 경관 자원과의 조화 여부	-

- 조망점 선정의 적정성을 경관심의의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예비조망점 선정 - 가시권 분석- 최종조망점 선정- 조망점에서 실제조망 확인'의 과정을 거치도록 함
- 경관심의의 조망점 선정과 연계하여 활용 검토하는 것이 필요함

▼ [표 3-23] 자연경관심의 지침상의 조망점 선정기준

구분	조망점 선정 거리	점, 면적 개발 사업 예시	선적 개발 사업 예시
근경	점 · 면적 개발사업		
	선적 개발사업		
중경	점 · 면적 개발사업		
	선적 개발사업		
원경	점 · 면적 개발사업		
	선적 개발사업		

※ 규모가 큰 면적 개발 사업의 경우 조망점 선정 거리는 사업 규모를 고려하여 결정함

- 개발사업을 점적 개발사업, 선적 개발사업, 면적 개발사업으로 구분하고 각 사업유형별로 조망점 선정 예시, 경관변화 예시 등 검토사항의 작성절차와 방법을 제시하고 있음

▼ [표 3-24] 개발사업 유형 및 대상사업

유형	대상사업
점적 개발사업	개별 건축물
	대규모 공공구조물(유통 단지, 터미널, 발전소, 하수종말처리장 등)
	송전탑, 기지국, 전신주
	토지구획사업 / 택지개발사업 / 사업단지
면적 개발사업	골프장
	스키장 / 눈썰매장
	위락시설(체육시설, 수련시설 포함)
	항만시설 / 여항
	공항
	토취장 / 채석장
	댐(대체 도로는 도로와 동일)
도로 등 선적 개발사업	도로 / 철도
	교량
	하천 정비사업 / 골재 채취
	삭도 시설(케이블카, 리프트 등)

점적 개발사업

- 사업대상지 주변 교각에서 원경의 자연경관이 조망되는 지역을 조망점으로 선정



선적 개발사업

- 지역 자연경관의 특성(수경관)이 조망되는 지역을 조망점으로 선정



▲ [그림 3-13] 개발사업 유형별 조망점 선정 예시

사업시행 전



사업시행 후



▲ [그림 3-14] 철·성토에 따른 경관변화 예시

- 사업 시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자연경관 영향을 최소화하는 저감방안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으며 저감을 위한 구체적 자료 및 프로그램을 명시하게 하고, 효과분석, 검토 및 조치사항을 검토하고 있음
- 심의대상별로 중점검토사항, 심의사항, 심의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 심의 절차에 따라 필요한 내용 및 도면 작성 예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 [표 3-25] 자연경관영향 저감방안 세부 검토기준

저감을 위한 구체적 자료 및 프로그램 명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에 따른 경관영향을 저감할 수 있는 공법을 설명하고 이해자료 첨가 • 식재에 의한 차폐를 통해서 경관영향을 저감하는 경우에는 수목의 성장에 따른 변화를 고려하여 저감 방안을 마련 • 사업주체는 저감방안의 실행을 위한 프로그램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
효과분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감방안 효과 분석 시 제시된 저감방안으로 인한 효과분석 및 그에 따른 2차적 환경영향 분석 • 단계별 과정 고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지선정 및 계획단계에서부터 저감방안을 검토 - 해당 사업이 자연경관에 장기적인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저감방안은 개발사업과 관련된 부정적인 자연경관 영향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저감방안을 작성하되, 공사단계, 준공 후 단계 복원 단계의 전과정을 고려 • 지역적 경관특성 고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감방안 작성시 지역적 경관 특성 및 사업의 특성을 고려 • 통경축 확보 및 이질감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 자연경관을 고려하여 통경축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물 배치 및 녹지축 조성 - 시설물의 위압감, 이질감 완화를 위한 저감방안 제시
저감방안에 대한 검토 및 조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출된 저감방안에 대해서는 기존 경관지원과의 훼손 및 조화여부를 검토해야 함 • 경관훼손, 경관조화성 등 기본 평가원칙에 따라 경관부조화현상이 극심할 경우 “사업제고, 규모축소 및 조성, 단순부조화일 경우” 규모 축소 및 조정과 시설물 배치계획 조정으로 조치함

Ⅳ. 충남 경관심의 현황 분석

1. 충남 경관관리 행정 현황

1) 도·시·군 경관 관련 조례 현황

- 15개 시·군의 경관, 건축, 도시 분야 조례 제정 현황을 검토하였음
- 건축조례와 옥외광고물 관리조례는 15개 시·군이, 도시계획 조례는 부여군과 청양군을 제외한 모든 시·군이 제정하였음
- 택지개발이 활발한 천안, 서산, 당진의 경우 도시개발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는 천안시만 제정됨
- 서산시와 금산군은 자연경관보전조례를 제정 운용하고 있는 특징임
- 천안시는 안전도시 조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범죄예방 디자인 조례,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 조례 등을 제정하여 운용중이며 다른 지자체에 비해 법적 기반이 우수함
- 주차장 조례,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등은 대부분의 시·군이 제정하였음

▼ [표 4-1] 충남 지자체 경관, 건축, 도시 분야 조례 제정 현황 (2015. 12)

	경관 조례	공공디자인 조례	도시계획 조례	건축 조례	옥외광고물 관리조례	도시개발 조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자연경관 보전조례
천안시	●	●	●	●	●	●	●	
공주시		●	●	●	●			
보령시	●	●	●	●	●			
아산시	●		●	●	●			
서산시	●		●	●	●	●		●
논산시	●	●	●	●	●			
계룡시			●	●	●			
당진시	●		●	●	●	●		
금산군			●	●	●			●
부여군	●			●	●			
서천군	●		●	●	●			
청양군				●	●			
홍성군	●		●	●	●			
예산군	●	●	●	●	●			
태안군	●		●	●	●			

- 2015년 12월 현재 11개 시·군이 경관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시행령 개정(2014.11) 이후 조례가 개정된 시·군은 9개 지자체임
- 5개 시·군이 공공디자인조례를 운영 중이며 논산, 보령, 천안 3개시는 경관조례와 공공디자인조례를 모두 운용하고 있음
- 2015년 하반기에 조례가 제정된 지자체의 경우 현재 경관계획을 수립 중이거나 계획 중인 것으로 나타남
- 공공디자인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대부분 공공디자인 계획과 가이드라인을 수립한 것으로 나타남

▼ [표 4-2] 충남 지자체 경관행정기반 현황

	경관조례	경관계획	경관관련 위원회	공공디자인 조례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디자인 가이드라인
충청남도	●	●	●	●	●	●
천안시	●	●	●	●	●	●
공주시		●	●	●	●	●
보령시	●	●	●	●	●	●
아산시	●	●	●			
서산시	●					
논산시	●	●	●	●	●	●
계룡시						
당진시	●	●	●			
금산군						
부여군	●					
서천군	●	●				
청양군						
홍성군	●					
예산군	●		●	●		
태안군	●	●	●			

2) 시·군 경관심의 및 자문 대상 분석

- 11개 시·군 경관조례에서 규정하는 심의 및 자문대상을 검토하였음
- 시행령 개정 이후 2015년에 8개 시·군이 경관조례를 개정 혹은 제정하였음

- 지자체장의 요청사항, 다른 조례에서의 심의·자문 요청사항 등 일반적인 심의·자문 대상을 규정한 항목을 제외하고 조례에서 심의, 자문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항목을 분석함
- 지자체에 따라 경관심의대상 규정방식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
- 사회기반시설과 건축물 심의 대상은 추가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위원회 심의는 별도로 추가하지 않고 있음
- 사전검토대상, 경관협의대상을 규정하는 시·군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아산시에는 경관자문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타 지자체와 달리 도시경관향상 규정을 추가적으로 조례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 특징임
- 홍성군은 경관계획을 통해 심의 대상을 규정하고 있음. 이 부분에서 다른 시·군과 차별화 되어 있음
- 논산시, 예산군, 아산시는 경관계획과 조례를 모두 활용해 심의대상을 규정하고 있음
- 논산시는 경관계획안에서 중점경관관리구역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심의 대상 건축물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도면을 활용하고 있음

▼ [표 4-3] 충남 시·군 경관조례 특성 분석

지자체	조례 시행	경관심의대상 구체화			경관자문 대상	주요 특징
		사회기반시설	건축물	위원회심의		
태안군	2012. 04. 04					
경관법 개정 2013. 8. 6						
천안시	2014. 10. 13	●	●			
경관법 시행령 개정 2014. 11. 19						
논산시	2014. 12. 30	●	●			- 경관계획에서 심의 대상 규정
보령시	2015. 01. 01					
당진시	2015. 04. 20	●	●			- 경관심의 의제 대상 규정
서천군	2015. 09. 25	●	●			- 경관심의 의제 대상 규정
예산군	2015. 10. 28		●			- 경관계획에서 심의 대상 규정 - 경관심의 의제대상 규정
서산시	2015. 10. 30	●	●			- 경관심의 의제 대상 규정
부여군	2015. 10. 30					- 경관심의 의제 대상 규정
홍성군	2015. 11. 16	●	●			- 경관계획에서 심의 대상 규정
아산시	2015. 12. 26	●	●		●	- 경관심의 및 자문 의제 대상 규정 - 도시경관향상 규정 추가

- 논산시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심의 대상을 10억 이상 공원, 조경공사 및 50억 이상 하천, 교량, 도로, 육교로 대폭 확대하였고 여객자동차터미널도 포함하고 있음
- 또한, 경관지구 및 중점경관구역의 건축물 심의 대상은 경관계획을 통해 규정하고 있으며 5억 이상 공공건축물 및 일정저수량 이상의 저수지 경계 500m 이내의 건축물로 건축물 심의 대상을 확대하였음
- 당진시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심의 대상을 300억 이상으로 확대하였으며, 건축물은 용도 및 면적에 따라 심의 대상을 구체화하였음
- 천안시도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심의 대상을 300억 이상으로 확대하였으며 건축물의 경우 경관지구, 중점경관관리구역 내의 특정건물 및 공공건축물을 심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서천시는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대상시설을 사회기반시설 심의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경관지구, 중점경관관리구역, 공공건축물 중심으로 건축물 심의 대상을 강화하였음
- 예산군은 경관계획 상의 중점경관관리구역 건축물, 공공건축물, 도청이전 지역 건축물 등을 심의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계획심의 대상 건축물은 심의에서 제외하였음
- 서산시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심의 대상을 사업비 규모를 통해 강화하였고 건축물은 공공건축물 중심으로 강화하였음
- 홍성군은 조례에서 별도로 심의 대상을 규정하지 않고 경관계획에서 심의 대상을 규정하고 있음
- 아산시 조례를 통해 심의, 자문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도로의 경우 시행령보다 심의 대상을 강화하였으며 건축물도 도로에서의 이격거리, 면적, 중점경관관리구역, 공공건축물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심의 대상을 강화하고 있음. 다른 지자체와 달리 자문대상까지 규정하고 있는 것이 특징임

▼ [표 4-4] 충남 시·군 경관심의 대상

시, 군	대상	조례에 의한 심의 사항
논산	사회기반 시설	〈조례 25조〉 1. 별표 1의 시설물 중 총 사업비가 10억 이상인 공원, 조경공사 2. 별표 1의 시설물 중 총 사업비가 50억 이상인 하천·교량·도로·육교 등 토목공사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4. 그 밖에 경관 및 공공디자인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회기반 시설 사업
	건축물	〈조례 26조〉 1. 경관지구의 건축물 : 해당 경관계획에서 경관심의를 받도록 정하는 건축물 2. 중점관리구역의 건축물 : 해당 경관계획에서 경관심의를 받도록 정하는 건축물 3. 법 제28조제1항제3호의 공공건축물로 총 사업비가 5억 이상인 건축물 4. 유효저수량 30만 ㎥ 이상인 저수지 경계선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에 건축 하는 건축물

시, 군	대상	조례에 의한 심의 사항
당진	사회기반 시설	<p>〈조례 23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총사업비가 300억원 이상인 도로·항만시설·하천시설·철도시설사업 2.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회기반시설
	건축물	<p>〈조례 24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경관지구, 미관지구,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내 2층 이상의 건축물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건축하는 건축물로 2층 이상 또는 연면적이 500㎡ 이상인 건축물 3. 8층 이상 또는 연면적이 5,000㎡ 이상인 건축물(공장 및 창고 건축물은 제외한다) 4. 도시계획구역 내 중로 20미터 이상 도로변에 건축하는 건축물로 연면적이 200㎡ 이상인 건축물 5. 연면적이 15,000㎡ 이상인 공장 및 창고 건축물 6.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내 연면적이 1,000㎡ 이상인 공장 건축물
	경관심의 의제대상	<p>※ 경관심의 의제(擬制) 대상</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당진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건축물(구조 및 피난분과위원회 심의를 제외한다) 2. 현상공모에 의한 건축설계 작품으로서 별도의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국가, 지방자치단체장이 건축하는 건축물 3. 기존 건축물과 형태 및 색채가 동일하면서 기존 연면적 미만으로 증축하는 건축물
천안	사회기반 시설	<p>〈조례 28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총사업비가 300억원 이상인 도로·철도시설·도시철도시설·하천시설 사업 2.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
	건축물	<p>〈조례 29조 관련 별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경관지구(쌍용, 안서, 매봉, 광덕지구) 내 2층 이하를 제외한 신축 건축물 2. 중점경관관리구역(두정동, 아라리오광장)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 이상의 신축 건축물 3. 공공건축물(행정 및 공공기관, 문화 및 커뮤니티, 교육 및 연구, 환경 및 위생, 의료 및 복지, 교통) 천안시 공공디자인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른 공공건축물 심의대상의 신축 건축물 4. 기타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제118조제1항의 공작물 중 같은 항 제8호에 해당하는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 조립식 주차장
서천	사회기반 시설	<p>〈조례 25조〉</p> <p>–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대상시설</p>
	건축물	<p>〈조례 26조 관련 별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경관지구의 건축물로 3층 이상 건축물 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 별표 1에 해당하는 건축물 3. 법 제2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공공건축물로 별표 2에 해당하는 건축물 4.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 별표 3에 해당하는 건축물 <p>*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p>
예산	건축물	<p>〈조례 25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경관지구의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건축법」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시행령 제72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 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서 해당 경관계획에서 경관심의를 받도록 정하는 건축물 3. 법 제28조제1항 제3호에 따른 공공건축물로서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4.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3호의 “도청이전신도시” 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시, 군	대상	조례에 의한 심의 사항
서산	사회기반 시설	<p>〈조례 20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로법」에 따른 도로로 총 사업비가 50억원 이상인 사업 2. 「하천법」에 따른 하천시설로 총 사업비가 50억원 이상인 사업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으로 총 사업비가 30억 이상인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요청하는 사업
	건축물	<p>〈조례 21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이 건축하는 건축물 중 별표 1에 해당하는 공공건축물 2. 제안서 공모, 설계경기 등에 의하여 선정된 공공건축물 등을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단, 공모조건에 경관위원회의 심의·자문을 이행하도록 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부여	심의, 자문 의제 대상	<p>〈조례 23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부여군 군계획 조례」에 의한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사항 2. 「부여군 건축 조례」에 의한 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 3. 「부여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 의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회의 심의사항 4. 「자연재해대책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또는 응급조치를 행하는 경우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의제 처리되거나 경관 심의를 받은 사항
홍성	심의대상	<p>〈조례 27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6조에 따라 수립하는 경관계획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아산	사회기반 시설, 건축물	<p>〈조례 26조 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의 경계선에서부터 대지경계선까지 최단거리가 20m 이내인 허가대상 건축물. 다만, 해당도로변에서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9조제2호에 따른 대로3류 이상 도시계획(예정)도로 나. 「도로법」제10조제2호에 따른 일반국도 2. 연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5층 이상인 건축물(「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공장, 창고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경우에는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 중 허가대상인 건축물 4. 법 제28조제1항 제3호의 공공건축물로 연면적이 5백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3층 이상인 건축물
	자문대상	<p>〈조례 26조 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시시설물 개선사업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 2. 광고탑·홍보탑 등 공공사업에 관한 사항 3. 충청남도의 경관심의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 4. 건축물의 경관향상을 위하여 자문을 요청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경관형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심의, 자문 의제 대상	<p>〈조례 26조 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법」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인 건축물(단, 구조안전심의와 적용의 완화 심의는 제외한다) 2.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른 설계공모로 설계공모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건축물 3.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또는 응급조치를 행하는 경우 4. 경관심의대상 건축물 중 연면적 1/10 이내 증축인 경우

3) 도 및 시·군 경관관련 위원회 운영 현황

- 2015년에 경관위원회를 개최한 지자체는 충청남도 건축도시과 및 천안시, 아산시, 논산시, 당진시임. 개별 지자체의 비교 분석이 아닌 종합적인 관점에서 분석하였음
- 충남 북부권인 천안, 아산, 당진 3개시 경관위원회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음. 다른 지자체에 비해 경관행정 기반이 우수하고, 산업시설 유치 및 인구증가, 개발사업 활성화 등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경관위원회는 보통 월 단위로 개최되나 심의 신청이 많은 경우 월 2회까지 개최 됨. 대상이 많은 경우, 1회 개최 시에 최대 11개 사업을 심의한 것으로 나타남
- 충청남도 5회 (8월까지 개최 현황), 천안시 14회, 아산시 11회, 논산시 4회, 당진시 15회 등 총 49회의 경관 관련 위원회가 개최되었음. 천안시는 공공디자인 조례에 의한 공공디자인위원회와 도시경관공동위원회로 개최 됨
- 경관위원회 개최의 대상 건은 총 172건으로 경관자문이 6건, 경관심의가 157건, 디자인심의가 9건임. 디자인 심의는 천안시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 건임. 경관자문은 172건 중 6건에 그치고 있어 활성화되지 않고 있음
- 지자체별 사업수를 보면 당진시가 107건으로 전체 심의 대상 사업건수의 62%를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아산시 29건, 천안시 21건, 논산시 6건 순으로 나타남
- 157건의 경관심의 중 위원회 심의는 1건, 개발사업 23건, 건축물 133건으로 나타남. 사회기반시설 심의는 개최되지 않았으며 건축물 중심으로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 도의 경우 개발사업 관련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공동주택 등이 주요 심의 대상으로 나타남

▼ [표 4-5] 충남 경관심의 개최 현황 종합분석

지자체	경관심의 회의	사업수	자문 및 심의 유형						심의결과			
			경관 자문	경관심의				디자인 심의	원안 의결	조건부 의결	재심의	부결
				위원회 심의	사회기반 시설	개발 사업	건축물					
충청남도	5	9				9			8		1	
천안시	14	21	1			8	4	8	3	12	5	
아산시	11	29	3			5	21		1	20	5	
논산시	4	6		1			5			5	1	
당진시	15	107	2			1	103	1	59	44	4	
합 계	49	172	6	1		23	133	9	71	81	16	

- 심의결과가 확인된 168건 중 원안의결은 71건(43%), 조건부의결은 81건(48%), 재심의는 16건(10%)으로 나타남
- 90% 정도가 원안의결과 조건부의결로 통과되었으며 10% 정도가 재심의를 거친 것으로 나타남
- 개발사업은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사업, 공동주택 개발사업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공동주택(아파트) 개발사업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 공동주택(아파트)의 경우 규모에 따라 개발사업으로 심의를 거치거나 조례에 따라 건축물로 심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건축물은 시·군에서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조례에 따라 다양한 유형과 규모의 건축물 심의가 진행되고 있음

2. 경관심의 참여관찰

1) A시 경관위원회

(1) 심의 개요

- 경관심의 대상 사업 : 공동주택 (3만㎡ 이상 도시지역 개발사업)
- 도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사업(21층 이상)으로 도 디자인사전자문을 받은 사업이며 도 디자인사전자문 → 시 경관위원회 심의 → 도 건축위원회 심의의 과정을 받는 사업임
- 회의진행순서는 다음과 같음
 - 심의안건상정 → 사업설명 → 안건심의 (질의답변 및 토론) → 심의의결
- 경관심의위원 10인이 참석하였으며 부지자체장이 위원장으로 참석함

(2) 심의과정 분석

- 설계사의 계획안 설명 후, 위원들의 질의·응답으로 심의가 진행 됨
- 경관심의 내용 및 체크리스트에 대한 언급 없이 바로 계획안을 설명함
- 도시의 구성은 현황조사 및 분석, 건축계획, 외부공간계획, 야간경관계획, 경관시뮬레이션 순으로 구성 되어 있음
- 심의항목(체크리스트)을 확인할 수 없는 도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설계자는 심의항목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내용을 설명함. 경관심의 전에 진행 된 디자인 자문 의견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함
- 설계자는 경관체크리스트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며 경관위원들도 경관심의 범위, 심의기준(체크리스트)에 대해 지적하지 않음
- 개인적으로 궁금하거나, 개인적인 판단과 관련된 질문이 많으며 명확한 의견이 아닌 선호나 느낌을 이야기 하는 위원들이 많음
 - “색깔이 너무 진하다. 너무 좀 어두우면서 탁한 것 같다”
 - “소재를 좀 다른 걸로 바꾸면 좋겠다”
 - “단지 게이트 디자인이 좀 성의 없이 된 거 같다”

- 일부 위원은 지자체 디자인 가이드라인과 부합되지 않는 의견을 개진하였으며, 전문분야와 상관없는 타 분야에 대한 질문도 나타남
 - 경관심의 범위가 아닌 교통영향평가와 관련된 질문
 - 옥외광고물 전문 위원이 교통계획, 건물배치에 대해 지적하기도 함
- 일부 경관위원들은 상위계획, 사업내용에 대한 검토 없이 심의에 참석함
 -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결정된 내용의 검토를 제기하는 위원도 있음
- 경관시뮬레이션과 실재와의 차이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음
- 심의 최종 결과를 결정하는 기준과 방법이 모호함
 - 간사(담당 공무원)가 정리한 주요 내용을 위원장이 설명하고 이를 토대로 최종 심의 결과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 됨
 - 위원장이 최종 결과를 정하고 가, 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 됨
 - 경관심의위원들은 경관체크리스트를 확인하거나 작성하지 않음
- 경관심의운영지침상의 체크리스트는 심의에서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 개발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색채중심으로 심의가 진행되었으며 색채 조정을 전제로 조건부결로 결정됨

(3) 심의개선의 주안점

- 경관심의 대상 내용, 범위를 명확하게 심의위원에게 공지해야 함
- 경관심의 내용과 부합하는 심의 도서 작성이 필요하며 신청자는 심의내용과 관련된 내용만 설명하여야 함
- 심의위원들이 심의 검토항목 중심으로 질의 하고 전문분야에 한정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심의 간사나 위원장의 유도가 필요함
- 최종 심의결과를 합리적으로 도출하는 방법과 절차가 모호함
 - 심의위원들의 경관체크리스트 검토와 작성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위원장의 판단이 큰 영향을 주고 있음
-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중복 및 유사 심의 방지가 필요함
- 심의대상사업 설계사 인터뷰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함
 - 심의를 받는 설계사 발표자는 디자인자문-경관심의-건축심의로 이어지는 과정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음
 - 경관심의와 건축심의를 동시에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 또한 도에서 디자인자문을 하고 시에서 경관심의, 도에서 건축심의로 이어지는 심의 행정주체의 변경도 문제로 생각하고 있음

- 경관심의, 건축심의, 디자인 자문의 심의 범위, 기준에 대한 설명이 부재하여 관련 지침을 확인 후 자의적으로 도서를 작성하고 있음
- 지침에도 명확한 규정이 없으며 경관체크리스트에서도 구체적인 항목이 없어 도서 작성이 어려움

2) B시 경관위원회

(1) 심의 개요

- 지자체 조례에서 규정한 심의대상사업으로 3개 사업을 심의함
 - 심의건축물 A (공공건축물)
 - 심의건축물 B (하수도 정비사업 내 건축물)
 - 심의건축물 C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 회의진행순서는 다음과 같음
 - 심의안건상정 → 사업설명 → 안건심의 (질의답변 및 토론) → 심의의결
- 경관심의위원 5인이 참석한 소위원회로 진행되었으며 지자체 공무원이 아닌 심의위원이 부위원장 자격으로 회의를 진행함

(2) 심의과정 분석

- 심의 전 경관위원회 위원들과 심의 담당자간의 사전 토의가 진행되어 심의 범위와 심의의 목적에 대해 명확하게 인지한 상태로 심의가 진행됨
- 법적 문제는 없지만 경관 저해가 심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처리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됨
 - 심의 전 현장답사를 통해 도면검토도 구체적으로 진행됨
 - 담당자와 심의위원이 현장에서 심의 내용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심의의 주안점이 명확해진 상태로 진행됨
- 본심의 전 사전검토를 거쳐 심의위원들의 심의대상에 대한 이해가 비교적 충분하였음
- 신청자(설계자)는 심의위원들에게 사전검토의견 조치계획 설명 후 진행
- 심의건축물 A (공공건축물)
 - 경관심의 내용 및 기준, 체크리스트에 대한 설명 없이 바로 건축설계안을 설명하였으며 배치, 평면, 조경, 주차, 내부마감계획을 설명함
 - 내부마감계획은 경관심의범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긴 설명이 소요 되었으며 이로 인해 내부마감계획에

대한 질의, 응답이 진행됨

- 경관조명 유무 질문, 경관조명 설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조경면적 부족에 대한 지적이 있었으나 이는 법적 기준 이상의 요구사항이었음
- 화장실 평면계획에 대해 지적이 있었으나 이는 건축물 경관심의항목이 아님
- 관공서 건물은 실시설계 납품 후 인허가 절차를 하는 특성으로 인해 설계변경이 어려운 상태임이며, 공공 건축물 발주처(○○공단)의 자체 건축심의와 중복되어 수정이 어려움을 피력함
- 부위원장이 심의 내용 정리 후 조건부 통과로 처리함

• 심의건축물 B (하수도 정비사업 내 건축물)

- 경관심의 내용 및 기준, 체크리스트에 대한 설명 없이 바로 건축설계안 설명하였으며 사전자문의견 설명, 평면, 입면 중심으로 설명함
- 마감, 색채, 펜스 설치 계획을 중점적으로 설명하였으며 심의위원들은 펜스 높이, 식재 등에 대해 지적함
- 건축물이 위치한 우수지 활용 방안 지적을 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건축물 경관심의항목이 아님. 또한 건물 필로티 필요성, 재료 색채를 지적함
- 부위원장이 심의 내용 정리 후 원안 의결로 처리됨

• 심의건축물 C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 지자체에서 경관조례를 통해 특정지역 내 경관심의 대상으로 규정한 건축물임
- 설계사가 주변현황 및 건축계획 설명 후 평면계획, 건물높이, 용도에 대한 지적이 주로 이루어짐
- 관련 경관계획 및 가이드라인 검토를 요구하였으며 주변 경관과의 관계 검토 가능한 자료를 요구함. 심 의도서가 부족한 상황이었음
- 대지횡단면, 경관 시뮬레이션이 필요함을 지적하였으며 부위원장이 심의 내용 정리 후 재심의로 처리됨

(3) 심의개선의 주안점

- 소위원회를 활용한 건축심의의 진행으로 효율적으로 심의가 진행되었으며 지자체 공무원이 아닌 심의위원 (부위원장)이 회의를 주도하여 심의가 비교적 깊이 있게 진행 됨
- 비교적 경관심의항목과 부합되는 설명과 질의, 응답으로 진행되었으나 명확하게 체크리스트와 부합되지 않음
- 심의 기준, 체크리스트와 상관없는 개인적인 의견 피력으로 시간이 지체되었으며 경관심의 내용과 부합하는 심의 도서 작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심의의견을 토대로 설계변경이 가능하도록 적절한 심의시기 선정이 중요함
 - 관공서 건물인 경우 심의 전 납품이 완료되므로 심의를 통해 설계 변경이 어려운 상황. 관공서 건물의 경우 심의 시기 조정이 필요함
 - 설계 변경이 어려운 상황을 용인하며 심의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됨

- 최종 심의결과는 부위원장이 제안하고 위원들이 동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결과 도출의 방법과 절차가 모호함
- 법적 기준을 충족한 경우 심의를 통한 제어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경관심의 내용이 반영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이 필요함

3) C시 건축·경관 공동위원회

(1) 심의 개요

- 공동주택 2건에 대한 심의로 1건의 재심의와 1건의 신규 심의로 진행됨
- 건축심의 대상 공동주택에 대해 경관분야 공동심의로 진행됨
 - 공식적인 공동위원회는 아니나 경관분야 심의를 위해 경관위원회 위원 1인이 참석하는 형식으로 진행됨
- 회의진행순서
 - 심의안건상정 → 사업설명 → 안건심의 (질의답변 및 토론) → 심의의결
- 건축심의 소위원회로 위원 8인이 참석하였으며, 주무부서 국장이 위원장으로 회의를 주관함

(2) 심의과정 분석

- 공동주택 A 재심의
 - 1차 심의 시 지적되었던 내용에 대한 보완조치 사항을 설명하고 수정사항을 설명함
 - 그러나 재심의 과정에서 추가 변경 사항 요구됨. 여성전용주차면수 증가 요구, 색채계획 재검토 요구됨.
 - 구조부문에서는 1차 심의와 반대되는 내용으로 재검토가 요구됨. 1, 2차 심의위원이 다를 경우 이에 대한 보완자료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위원장의 조건부 통과 결정에 대해 이의 없이 의결됨
- 공동주택 B 심의
 - 간사가 제안 설명 및 건축개요 설명하였으나 심의 중점사항에 대한 별도의 설명 없이 진행됨
 - 설계변경에 대한 내용 지적 시 원론적인 수준으로 지적이 되고 있었으며 설계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상태에서 질문이 나오기도 함
 - 외부공간계획(쓰레기 처리장, 파고라 및 벤치, 조경계획), 건물배치, 지하주차장 출입구 재검토가 요구됨
 - 단지 주출입구 위치 변경이 요구되었으나 이는 지구단위계획과 배치되는 요구사항임

- 교통영향평가의 내용과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가 추가적으로 요구됨
- 자전거보관대, 여성주차장면수 증대 등에 대한 추가 설치가 요구됨
- 색채 심의위원은 지자체 가이드라인에 대한 검토 필요성을 요구함
- 위원장이 심의 내용 정리 후 재심의로 의견 개진, 이의 없이 재심의로 결정됨. 주변 지역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개선사항 정리 및 재심의 필요성이 설명됨

(3) 심의개선의 주안점

- 재심의시 가급적 동일 위원이 참석하고 1차 심의에 대한 자료 검토가 필요함
- 주요 심의 내용에 대한 사전설명 및 협의가 필요함
- 건축심의의 경우 디자인심의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음. 분야별 계획은 배포자료로 대체하고 있으며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계획안 및 관련계획(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심의위원들의 이해 부족으로 불필요한 질의, 응답 발생. 심의위원들의 내용 숙지 및 전문성 개선이 필요함
- 계획변경, 관련 자료 요구 등 신청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구는 지양되어야 함. 또한 최종 심의결과를 도출하는 방법과 절차가 모호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3. 경관심의 담당자 인터뷰

1) 인터뷰 개요

- 2015년에 심의가 운영 된 논산시, 아산시, 당진시, 천안시, 도 건축도시과 담당자와 인터뷰를 진행함
- 심의 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 대책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개선 방향을 유형화하고 각 항목별로 정리함
- 실무자 주요 의견은 표 4-6과 같이 요약되며, 경관심의와 경관행정 개선을 위해 중앙정부의 체계적 지원이 강조되고 있음
- 또한 지자체 자체의 경관행정 강화, 관련 부서 간 협조체계 수립, 경관심의 방식의 개선 및 인식 전환 등이 중요한 이슈라 할 수 있음

▼ [표 4-6] 충남 경관심의 개선을 위한 실무자 주요 의견

1	중앙정부 및 도에서 경관행정 활성화를 위한 환경 및 분위기 조성 필요
2	도·시·군 심의의 역할 분담
3	공동심의 운영을 위한 법제 개정 및 부서 협력 강화
4	경관심의의 효용성 강화
5	경관업무 수행이 가능한 조직(인력) 구성
6	경관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지원 강화
7	경관심의에 대한 타 부서의 이해 및 협조 강화
8	사전협의 및 소위원회 심의 강화
9	심의도서의 수준 및 심의기준(체크리스트) 개선

2) 심의 개선을 위한 실무자 의견

(1) 중앙정부 및 도에서 경관행정 활성화를 위한 환경 및 분위기 조성

- 중앙정부, 도 차원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도 필요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지자체의 경관행정이 강화 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시급함
- 지자체장의 관심 여부에 따라 경관행정의 차이가 발생되고 있으므로, 지자체장이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여야 함

- 매년 실시되는 전국 시·군 통합 평가항목이나 도 차원에서 실시하는 시·군 평가항목에 경관분야 도입 검토가 필요함
- 경관계획, 경관조례, 경관관리 부서 운영, 심의 횟수 등을 평가항목으로 활용할 수 있으나 지자체간의 차이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함
- 경관심의 업무 분야 표창, 경관사업비 인센티브 도입도 검토가 필요함
- 도 건축도시과는 2016년부터 도 경관상 표창을 추진할 계획임
- 지자체에서 경관사업, 경관협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국비 구성이 필요함
 - 경관협정의 경우 주민단체 구성(이권단체 개입의 문제), 사업진행을 위한 인력 및 지원 부족, 주민참여의 효율성 부족(주민의식 수준 개선 필요) 등 현재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대책 없이는 도입이 어려움. 일부 대도시권에서나 가능한 방식으로 판단하고 있음
- 중앙정부 차원의 경관심의 업무를 위한 전산망 구축 검토가 필요
 - 아산시외의 경우 경관심의도서 업로드 및 확인을 위한 전산망 구축 예정임
- 중앙정부나 도 차원에서 설계사, 개발사 등에게 경관심의, 건축심의, 도시계획심의, 공동심의 등 심의와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 도입이 필요함
- 경관심의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충원이 시급함

(2) 도·시·군 심의의 역할 분담

- 시 경관심의 후 도 건축심의를 받는 경우, 심의 주체 이원화에 따른 심의 의견 조정의 어려움, 심의 횟수 증가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도에서 건축심의를 하는 사업은 경관심의도 도에서 진행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함
- 도 경관조례와 공공디자인조례, 시 경관조례와 공공디자인조례 상의 심의, 자문 대상 등의 중복문제 해결이 필요함
 - 도 및 시, 군의 조례 개정이 예정되어 있어 이 문제점은 해결될 것으로 보이나 중장기적으로 도 심의와 시, 군 심의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해야 함
 - 조례 개정을 통해 도 건축심의 대상은 경관심의도 도에서 진행할 계획임
- 또한 시, 군 입장에서는 도의 경관심의를 활성화, 강화하여 시의 경관심의 업무량을 줄여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 있음. 사업비, 사업규모, 중요도 등에 따라 도와 시·군의 심의 대상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2016년 조례 개정을 통해 대규모는 도에서 심의하고 중, 소규모는 시·군 자체 심의로 진행할 계획임

(3) 공동심의 운영을 위한 법제 개정 및 부서 협력 강화

- 건축심의, 도시계획심의 등 공동심의를 보는 시각은 지자체의 조직 구성, 인력 등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음
- 기본적으로 공동심의 취지에 동감하고 있으며, 중장기적 활성화하는 것에 대해 찬성
- 그러나 심의 운영 인력, 업무량 등을 고려하면 아직은 공동심의보다는 개별심의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공동심의가 담당자들에게 업무량을 오히려 더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음
- 각 심의의 근거법 및 주관 부서가 다른 것을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음. 또한 심의 간 명확한 역할 분담(심의 범위)이 없는 것도 큰 원인임. 역할분담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동심의 개최는 오히려 혼선을 야기하고 있음
 - 위원 간 심의범위에 대한 이견과 충돌, 이로 인한 심의 시간 지연도 발생
 - 공동심의를 진행하는 경우 심의 주관부서의 결정도 어려운 문제임. 업무량 증가를 해결할 수 있는 인력 부족의 문제가 가장 큼
 - 도시경관공동위원회의 경우 경관법에서는 공동위원회 규정이 있으나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규정이 없는 것도 원인임
 - 일부 시는 공동위원회 규정이 있는 경관심의 관련 부서에서 공동심의를 주관하고 있음
 - 중앙정부 차원에서 공동심의를 권장만 할 것이 아니라 실행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 주체, 여건을 마련해야 함
- 공동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심의 운영 주체를 명확하게 하고 업무 증가에 대응할 수 있는 인력 증원 필요
- 심의를 주관하는 부서가 동일한 경우 공동심의를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음
 - 건축심의와 경관심의를 동일 팀에서 주관하는 아산시와 경우 건축심의와 경관심의의 역할 조정이 가능
- 중장기적으로 경관, 건축, 도시 분야 통합심의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심의 주관부서의 역할 조정, 관련 법률 개정 등이 필요함
- 공동위원회 형식으로 진행하되 규모에 따라 건축, 경관, 도시 분과위원회 도입 방식도 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각 심의를 주관하는 부서간의 소통과 조정이 필요

(4) 경관심의의 효용성 강화 필요 (심의 결과 미반영의 문제)

- 경관심의 결과가 반영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함
 - 심의 내용 불이행 시 시정조치 권한이 없어 심의 목적이 훼손되고 있음
 - 심의 결과를 반영해야 하는 의무규정이 없어 조건부 의결의 경우 이행 불가 사유를 제시하고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빈번함
 -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당진시의 경우 사용승인을 위한 건축허가 특검사항 안에 건축, 경관심의사항을 검토

하도록 하였으나 사용승인에 영향을 주지는 못함

- 또한, 경관심의 후 진행되는 건축심의, 도시계획심의, 사업관련 위원회, 건축인·허가 과정에서 심의 결과가 변경되는 경우도 있음
- 경관심의의 취지는 긍정적으로 보나 타 심의에 의해 변경의 여지가 큰 점은 실효성을 약화 시키는 원인으로 인식하고 있음
- 경관심의만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사업의 질적 수준 강화를 위해서는 경관심의의 검토 항목 확대가 필요한 경우도 있음을 지적함

(5) 경관업무 수행이 가능한 조직(인력) 구성

- 담당자들은 현재의 조직 구성으로는 심의의 질적 수준 강화는 어려운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경관행정 강화를 위해서는 조직 및 인력 확대가 필요함. 심의업무만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이 보강되지 않는 한 심의 대상 확대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지자체의 경관심의 대상 사업 수에 따라 적절한 인력 배분과 총원 필요함
 - 옥외광고물과 경관업무 담당 인력의 분리도 시급함. 일부 지자체는 옥외광고물과 경관업무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음
 - 3만 m²이하의 개발사업의 경우 시행령,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심의 대상으로 확대하는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으나 현재 인력으로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담당자들은 경관사업, 경관협정과 같은 다른 업무를 수행할 여건이 미흡하므로 중앙정부나 도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음

(6) 경관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지원 강화

- 지자체에 따라 위원회 구성 여건이 다르므로 위원 확보를 위한 지원 대책이 필요함
- 지자체 소재대학이 있는 경우 위원 확보가 쉬우나 대학이 없는 지자체는 위원 확보가 어려움
- 지역에 대한 이해도, 전문성, 경험에 따라 심의 수준이나 결과에서 큰 차이가 나타남
- 최대 4년 밖에 경관위원회 활동을 할 수 없어 위원의 교체가 이루어지는 것도 위원회 구성의 어려운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음
- 경관심의위원의 전문성이 매우 필요하나 현재 이를 강화할 수 있는 뚜렷한 대책은 없음. 심의위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나 현실적으로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못하고 있음. 자문비 상향도 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7) 경관심의에 대한 타 부서의 이해 및 협조 강화

- 심의주관부서는 사업부서와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나 원활히 진행되지 않음
 - 지자체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도의 경우 큰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음
- 심의대상에 대한 이해와 인식 부족, 부서 간 협의체계 부족, 심의를 사업 지연 요인으로 보는 시각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타 부서 협조가 쉽지 않음
- 경관심의를 필요성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개선이 필요함
- 사업부서와 심의부서의 이원적 운영에서 오는 구조적 문제이나 업무량 증가에 대한 부담도 주요한 원인임
- 심의부서와 허가부서가 같은 과에 있는 경우 원활한 업무 협조가 이루어지나 다른 부서일 경우 업무 협조가 어려움

(8) 사전협의 및 소위원회 심의 강화

- 전반적으로 실무자들은 사전검토의 효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음
- 사전검토의 운영방식, 지자체 특성에 기인하나 긍정적인 평가가 적음
 - 현재의 사전검토제도는 검토를 위한 도서를 작성하므로 1차 심의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음
 - 사전검토에 따른 업무량 증가, 사전검토 단계임에도 사업주, 설계자들은 설계 변경을 가급적 피하려는 태도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설계자들은 사전검토를 실시하는 경우 재심의 의결이 줄어드는 점을 활용하는 측면이 강함
- 담당 실무자들은 사전협의를 사전검토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음
- 그러나 심의 대상 사업이 많은 지자체의 경우 사전협의를 업무증가에 대한 부담 때문에 오히려 사전검토를 선호하는 경우도 있음
- 본심의 전 사전협의를나 사전검토의 단계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나 운영방식은 지자체의 여건에 맞추어 조정해야 함
 - 대규모 사업은 사전검토가 사전협의를보다 본심의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 경관심의 후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재심의 개최 기준이 없는 것도 심의 운영의 어려움. 현재 부서차원에서 재심의 개최 여부를 판단하고 있음
- 경관자문은 조례에서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고 있으며 잘 활용되지 않음
- 위원회 개최의 편의 및 전문성 강화 측면에서 소위원회를 활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전문성 있는 위원들로 소위원회(건축물, 개발사업, 사회기반시설) 심의를 활성화하는 것이 현재 심의의 수준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임
- 2년 위촉, 2년 연임의 규정은 부작용을 고려한 합리적인 구성 방식이나 전문적인 심의위원 확보가 어려운 지자체에게는 위원회 구성의 제약 요인임. 심의위원들의 지속적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 필요함
- 일부 시는 서면심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나 운영의 어려움 및 업무량 증가 때문에 도입을 미루고 있음. 재심의의 경우 서면심의 도입은 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음

(9) 심의도서의 수준, 심의기준(체크리스트) 개선

- 심의 도서의 내용과 수준이 작성자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이 필요함
- 심의도서 작성을 위한 경관심의 운영지침과 도서 샘플이 제공되고 있으나 잘 지켜지지 않음. 따라서 도서 내용 확인 과정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업무량이 증가됨
- 정확한 심의 진행을 위해서는 심의 전 현장답사가 필수임
 - 현실적인 제약 상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진행하기가 어려움
 - 현장답사를 대체할 만한 수준의 심의도서 구성이 필요하나 현실적으로 어려움
- 지자체 경관기본계획, 가이드라인 등을 제공하고 있으나 심의도서에 관련 내용이 반영되고 있지 않으며 심의에 꼭 필요한 내용이 누락되는 경우가 있음
- 일부 지자체는 업무 매뉴얼을 수립하여 활용중임
 - 논산시는 2015년에 수립한 경관계획의 중점경관관리구역과 연계하여 업무 매뉴얼을 수립함
 - 당진시는 심의 담당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한 심의도서 샘플을 활용함
- 경관체크리스트는 현재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개선이 필요함
 - 위원들의 발언을 간사(실무자)가 작성하고 있어 별도 작성이 의미가 없음. 검토항목의 구체성이 떨어져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 사업별, 규모별로 경관체크리스트 항목에서 차별성이 있어야 함
 - 특히 개발사업의 체크리스트 검토항목은 산업단지, 공동주택단지, 도시개발사업 등 사업 내용에 따라 차이가 필요함
 - 건축물의 경우 용도별 차이가 필요함
- 본 연구에서 제시할 경관심의 참고기준에 대해서는 심의 시 활용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심의 위원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4. 충남 경관심의의 문제점

- 선진사례 검토, 도·시·군 경관 행정 분석, 경관심의 참여관찰, 경관심의 담당자 인터뷰 등을 토대로 문제점을 도출하였음
- 경관심의 운영 및 개선방향 도출을 위한 문제점 중심으로 논의를 압축하였으나, 전반적인 경관관리행정 개선을 위한 내용도 부분적으로 포함됨
- 도 및 4개시의 현황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기술하였으며 문제점의 원인과 해결방안의 주체는 시·군, 도, 중앙정부라 할 수 있음. 경관심의 운영상의 문제를 먼저 기술하고 다음으로 경관행정과 관련된 문제점을 기술하는 방식으로 정리하였음
- 본 연구에서 기술되는 문제점들은 중앙정부-도-시·군으로 이어지는 행정체계의 구조적 문제, 지자체 행정 시스템, 심의 운영 시스템, 실무자·심의위원 등 참여 주체의 관계, 참여 주체의 인식 수준 등 복합적인 요인들이 관련되어 있음
- 충남 경관심의의 문제점은 표 4-7과 같이 요약되나 이는 충남의 지역적인 문제이기 보다는 경관심의가 정착되지 않은 일선 지자체의 문제라고 판단됨

▼ [표 4-7] 충남 경관심의의 문제점

유형	문제점
경관심의 운영상의 문제점	(1) 심의운영 방식의 미정립
	(2) 심의기준의 객관성 부족
	(3) 심의도서의 작성수준 미흡
	(4) 참여 주체의 전문성 미흡
	(5) 경관심의의 실효성 부족
	(6) 도·시·군 심의 역할 분담 미흡
경관행정상의 문제점	(7) 경관관련 공동심의 운영체계 미정립
	(8) 실효성 있는 경관행정의 근거 부재
	(9) 경관행정 활성화를 위한 지원 미흡

1) 경관심의 운영상의 문제점

(1) 심의운영 방식의 미정립

- 경관법 및 시행령 개정 이후 심의대상이 강화되었으나 아직 지자체 특성에 맞는 경관심의 운영 체계는 정립되지 않음. 현재 도 및 4개시는 경관심의 운영 시스템 정착을 위한 과도기라 할 수 있음
- 경관심의 운영 지침이 정확히 반영된 업무 진행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지자체가 작성한 업무 매뉴얼 등은 적절히 활용되지 않음
- 심의 개최가 많아지고 담당자 숙련도에 따라 개선될 것으로 보이나 지자체의 특성이 반영된 경관심의 프로세스가 아직 정립되지 않아 심의 시기, 절차, 업무 규정이 명확하지 않음
- 지자체별로 차이는 있으나 심의부서와 사업부서의 원활한 협력 관계가 부족함
- 결과 중심의 심의가 이루어져 심의를 통한 수정이 어려운 경우가 많음
- 사전검토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사업부서의 이해 부족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활성화되고 있지 않음. 담당자들은 현재의 업무 여건 상 사전검토보다 사전협의가 심의 운영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2) 심의기준의 객관성 부족

- 경관심의 운영지침에 경관체크리스트가 도입되었으나 여전히 객관적인 기준 제시는 미흡함
- 현재의 도로, 하천, 철도, 개발사업, 건축물 5종으로 된 경관체크리스트는 사업규모, 내용, 용도 등 사업의 개별성을 반영할 수 없음. 세분화 된 경관체크리스트가 필요함
- 또한, 심의위원의 해석에 따라 주관적인 의견이 반영되는 항목과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 심의 시 검토항목 및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심의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회의가 운영되기도 함. 추가적인 자료를 요구하거나 법령 이상의 심의 기준이 적용되기도 함
- 최종심의 결과를 도출하는 방법과 절차에 대한 개선도 필요. 영향력이 큰 심의위원이나 위원장의 의도에 의해 심의 결과가 결정될 수 있는 구조임

(3) 심의도서의 작성수준 미흡

- 심의지침에는 경관심의도서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혼선을 야기하고 있음
- 심의도서목록과 내용을 명기하지 않아 실무자들의 도서 확인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 또한 경관심의 내용과 부합하는 심의 도서 작성이 필요함
- 객관적인 심의 기준 부재도 문제이나 현재 경관 체크리스트와 심의도서간의 정합성 부족도 문제임
- 심의도서별로 어떤 내용을 체크할 것인지, 심의도서에 기재할 내용과 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함

(4) 참여 주체의 전문성 미흡

- 경관심의운영지침에서는 참여 주체들의 전문적인 지식과 판단을 가정하고 운영되도록 하나 숙련도와 전문성이 부족한 상황
- 담당자의 보직 순환 및 심의위원의 연임 규정(최대 4년) 등 업무 지속성을 확보할 수 없는 구조도 원인임
- 경관분야 업무가 처음이거나 비전공 담당자들은 업무 숙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으며 심의 검토 항목, 범위 설정 등 심의 이슈 발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심의위원들이 심의도서를 검토할 충분한 여건 부족, 심의 대상에 대한 이해 부족, 전공분야가 아닌 대상에 대한 심의 참여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심의위원의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심의 현장에서의 도서 검토로 이루어짐
 - 심의위원들이 심의에 보다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함
- 경관위원회 구성인원의 다양성이 오히려 심도 깊은 심의를 방해하기도 함
- 사전협의, 소위원회 활성화를 통해 전공 분야만 심의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운영하고 전문성을 강화해야 함
- 위원회 구성과 운영방식을 현재의 수준보다 구체화해야 함

(5) 경관심의의 실효성 부족

- 현재 경관심의 결과를 반영하는 규정과 불이행 시 시정조치 권한이 없음. 실무자들은 심의의 취지는 동감 하나 결과가 반영되는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함

- 경관 심의 후 건축심의, 도시계획심의, 사업관련 위원회,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심의 결과가 변경되는 경우도 문제임
- 도 및 시 차원에서 심의 결과를 반영하려 다양한 대책을 활용하고 있으나 규정 미비로 실효성이 부족함
- 경관심의만으로 진행되는 사업의 경우 건축 평면계획 등 심의 항목이 아닌 내용에 대한 검토도 필요함

(6) 도·시·군 심의 역할 분담 미흡

- 도의 경관심의와 시·군의 경관심의 대상의 명확한 역할 분담이 부족함
- 도와 시·군의 경관행정 여건상 인식 차이가 있으나 시 담당자들은 대규모 사업은 도 경관심으로, 중소 규모 사업은 시·군 심의로 진행하는 것을 바람직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업무량 및 여건에 따라 지자 체별로 인식 차이는 있음
- 도는 허가권, 승인권을 가진 주체가 심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2016년 경관 조례 개정(예정)을 통해 심의 범위를 조정할 계획임. 도 경관조례와 시·군 경관조례의 정합성이 중요한 이슈임
- 충남의 경우 도 경관조례와 공공디자인 조례, 시·군 경관조례와 공공디자인 조례 등 조례 내용의 중복 문제도 이와 같은 역할 정립에 부정적 요인임. 도는 장기적으로 도 경관조례와 공공디자인 조례 통합을 추진할 계획임

2) 경관 행정상의 문제점

(1) 경관관련 공동심의 운영체계 미정립

- 공동심의를 권장하고 개최 요건을 완화하였으나 공동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해결해야할 요인이 많음
- 지자체의 노력으로 안 되는 구조적인 원인이 큼. 첫째, 각 개별심의의 근거법 및 주관 부서가 다른 점. 둘째, 공동심의 시 심의범위 등 명확한 역할 규정 부재 등 공동심의 진행을 위한 법제적 여건이 미비
- 중앙부처의 주무부서가 다른 상황은 도·시·군에서도 동일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음. 건축심의와 경관 심의를 동일한 부서에서 담당하는 아산시 심의 간 역할 분담이 효율적으로 되고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큼
- 심의 담당자들은 중장기적으로 공동심의 활성화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있으나 지자체의 업무 여건을 고려 하지 않은 공동심의 개최는 심의 수준을 저하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중앙부처 차원에서 공동심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 정비, 전담인력 배치 등 다양한 지원이 필요함

(2) 실효성 있는 경관행정의 근거 부재

- 경관심의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주요한 원인은 경관심의 운영, 더 나아가 경관관리 행정의 명확한 목표와 근거가 부족한 데 있음
- 경관조례, 경관계획에서 명확한 경관심의 대상, 경관위원회 운영 규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것도 경관심의 진행이 어려운 원인임
- 경관계획 내에서 다양한 경관행정 내용을 구체화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근거로 경관조례가 구성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원인임
- 내실 있는 경관계획의 부재와 형식적인 경관계획이 지배적인 상황임
- 현재 15개 시·군 중 4개시만 경관심의가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경관조례는 11개 시·군만 제정되어 있음
- 또한 경관계획이나 경관조례의 경우도 지자체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상황이며 시행령 개정 이후 조례 개정, 계획 수립 등 법제적 근거 확보가 시급한 상황임
- 담당자는 자문 및 심의대상 추가에 부담을 느끼고 있음. 지자체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심의·자문 대상 규정이 시급함
- 계획이나 조례에 의한 경관관리 시스템 구축이 우선되어야 함. 구체적인 경관계획을 운용하기 위한 행정 절차로서의 경관조례 구성과 계획과 조례의 일체적 운용이 미흡함
- 현재 경관법 및 시행령 개정 이후 경관심의 대상은 조례로 위임되어 있으나 심의 대상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에 심의 대상 설정이 중요함.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 등 경관 심의 대상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논의가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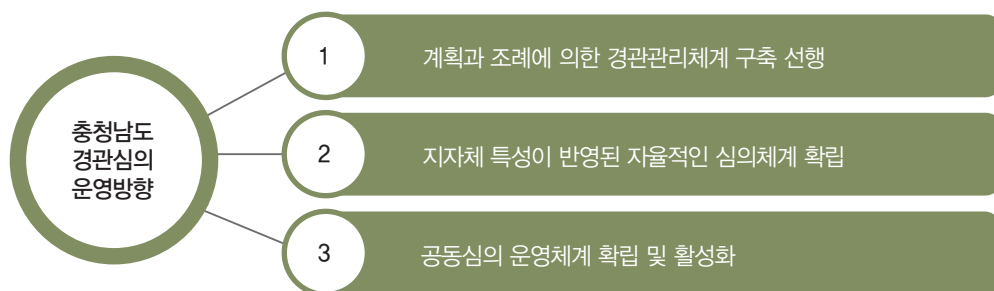
(3) 경관행정 활성화를 위한 지원 미흡

- 경관심이나 경관행정 강화를 위해서는 법제 개선, 인력, 조직, 예산 관련 지원이 필요함. 이와 함께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자체의 경관행정이 강화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시급함
- 중앙정부 차원의 경관행정 지원 전산망 구축, 지자체 평가 항목에 경관분야 도입, 인센티브 도입 등 다양한 지원책 발굴이 필요함
- 담당자들은 심의 대상 확대를 통한 경관관리에 동감하나 행정여건 개선과 대상 확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을 지적하고 있음
- 또한 경관심의 외에 경관사업, 경관협정의 필요성은 동감하고 있으나 지자체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진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음

V. 충남 경관심의 운영 방안

1. 충남 경관심의 운영 방향

- 충남 경관심의 운영 방향은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정리될 수 있음
- 첫째, 경관심의를 다양한 경관관리 대책의 일부로서 균형 잡힌 경관행정 체계가 수립되어야 가능함. 이를 위해서는 계획과 조례에 의한 경관관리체계 구축이 선행되어야 함
- 둘째, 경관심의는 지자체에서 시행되는 사회기반시설, 개발사업, 건축물에 대한 제도적 경관관리 대책이므로 궁극적으로 그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자율적인 경관심의 체계가 확립되어야 함
- 경관심의대상 사업의 규모, 양상, 빈도는 지자체의 특성과 여건이 반영되고 있으며, 심의대상도 지자체에서 구체적인 규정이 가능하기 때문임. 강화된 경관심의제도는 과도기적 양상을 나타내고 있음. 향후 점진적으로 정착될 것으로 판단되나 아직 경관심의를 본격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있는 시·군의 시행착오를 줄이는 관점에서 운영방향을 제시하였음
- 셋째, 경관심의를 장기적으로 건축심의, 도시계획심의와의 공동심의 운영체계를 확립하고 활성화 되어야 함
- 각 심의의 목표와 역할이 훼손되지 않으면서 중복심의 개선, 역할 분담 등 개별적인 심의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은 점진적으로 개선해야 함
- 장기적으로는 공동심의를 넘어서서 통합심의의 관점에서 정책적, 제도적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그림 5-1] 충청남도 경관심의 운영방향

1) 계획과 조례에 의한 경관관리체계 구축

- 경관심의회는 경관관리를 위한 다양한 대책 중의 일부로서, 심의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먼저 지자체의 경관 행정 체계가 정립되어야 함
- 경관관리는 단편적이고 일시적인 사업보다는 중장기적인 계획 하에 단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경관계획 및 조례에 의한 경관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 경관법 및 경관계획 수립지침에 부합하는 종합적인 관리대책이 계획안에 포함되어야 함
- 또한 지자체의 경관자원과 특성이 반영된 구체적인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의 내용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경관조례를 운영해야 함. 계획과 조례가 연계되지 않는 것이 큰 문제임
- 시·군의 경관계획은 2015년 수립된 1차 국가경관정책계획(5년 단위 수립), 도 경관계획과의 연계와 역할 분담을 고려해야 함. 이를 위해서는 향후 수립되는 도 경관계획에서 이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규정해야 함
- 충남은 도 및 일부 시·군만 경관행정기반이 구축되어 있는 상황으로 경관조례도 없는 시·군이 있는 상황임
- 경관조례를 운용할 수 있는 조직과 전문적인 인력구성이 시급하며 경관계획의 실행력을 확보할 수 있는 지자체 차원의 노력이 필요함
- 경관계획 수립 의무 지자체가 아니어도 경관계획 수립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유도가 필요함

2) 지자체 특성이 반영된 자율적인 심의체계 확립

(1) 도와 시·군 경관심의의 역할 분담

- 도 및 시·군 경관심의의 대상과 규모에 대한 체계적인 역할 분담이 필요함
- 사업의 규모, 지역, 영향 범위 등 다양한 요인을 분석하여 도·시·군 경관심의 대상 분리가 필요함
- 심의주체는 일원화하여 도 심의 후 시·군 심의를 받는 비효율적 요인 제거가 필요함
- 심의 주체 일원화를 위해서는 경관심의·건축심의·도시계획심의의 대상과 주체의 역할분담도 중요함
- 이를 위해서는 법제적인 정비가 필요하나, 단기적으로는 지자체 사업부서와 심의 부서간의 소통과 역할

분담을 통해 문제 해결이 필요함

- 장기적으로는 시·군의 자율적인 경관관리나 심의가 가능하도록 지원과 위임이 필요함

(2) 명확한 경관심의 프로세스 확립

- 경관심의방식에 따라 단계별로 명확한 업무 규정이 필요함
- 경관위원회 심의 절차를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공지하여 신청자들에게 경관심의 절차를 구체적으로 안내해야 함
- 경관심의 운영지침 상의 심의시기를 준수하되, 심의 의견을 토대로 설계변경이 가능하도록 적절한 심의 시기 설정이 중요함
- 심의가 형식적인 절차로 왜곡되지 않도록 심의시기를 결정하여야 함. 이를 위해서는 사업담당자, 심의 담당자, 설계자의 소통이 중요함
- 심의담당자, 사업담당자, 심의위원, 설계자 등 참여 주체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

(3) 합리적인 경관심의 대상의 설정

- 지자체의 경관특성 및 행정기반 등을 고려한 심의대상 설정이 중요함
- 먼저 잠정적인 경관심의 대상을 규정하고,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경관심의 대상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중점경관관리지역 설정 등 경관계획을 통한 심의 대상 설정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 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자문대상, 사전검토 대상, 사전협의대상, 소위원회 심의 대상 등 심의와 자문대상을 계획과 조례에서 명확하게 규정해야 함
- 소규모, 적은 예산의 사업이더라도 경관의 질에 큰 영향을 주는 사업은 심의대상으로 도입해야 함
- 심의대상을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발사업의 경우, 지자체 차원에서 심의 대상규모가 아닌 사업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책도 필요함
- 사회기반시설, 건축물 등 조례로 규정 가능한 심의 대상의 점진적인 확대가 필요함

- 사회기반시설은 사업비 규모, 물리적 규모 등을 토대로 심의대상을 규정할 수 있음
- 건축물의 경우 경관지구, 중점경관관리구역, 공공건축물, 조례 지정 건축물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심의 대상 확대를 고려해야 함

(4) 경관심의 전 검토 강화 및 심의·자문·협의의 역할 분담

- 현재 법 및 시행령에서는 경관심의, 경관자문, 사전검토를 활용할 수 있음
- 경관심의, 경관자문, 사전검토, 사전협의 등 사업유형, 규모, 성격 등에 부합하는 다양한 계획 개선 방식을 도입해야 함
- 심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심의 전 검토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심의 전 검토 방식은 사전검토, 사전협의, 자가체크리스트 등 지자체의 심의 업무 여건(인원, 심의 대상 등)을 고려하여 도입해야 함
- 심의의 궁극적인 목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사전협의 등 디자인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 충남공공디자인센터의 컨설팅을 활용하는 것도 바람직함
- 경관자문과 심의, 사전검토, 사전협의, 자가체크리스트, 공공디자인센터의 컨설팅 등을 활용하여 사업계획 전체에 관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함

(5) 지자체 경관계획을 반영하는 경관심의기준의 확립

- 지자체의 경관계획과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경관심의기준 도입이 시급함. 경관계획에서 경관심의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 함
- 경관심의운영지침에서는 사업의 특성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경관계획을 통해 종합적인 경관관리 대책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경관심의 체계와 기준을 수립해야 함
- 시·군 차원의 경관심의기준이 구체적으로 수립되기 전에는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충남 경관심의 참고 기준 활용을 권장함

- 사업유형별로 경관심의기준을 구체화하고, 장기적으로는 각 사업유형의 규모, 용도 등에 따라 세부적인 심의 기준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함

(6) 경관심의기준과 부합하는 심의도서 작성 유도

- 지자체의 경관심의기준이 반영된 경관심의도서 작성이 중요함
- 경관심의운영지침, 경관계획수립지침 등 경관심의도서 작성을 위한 기준들이 반영되는 심의도서 작성을 심의 담당자가 유도하여야 함
- 또한 경관심의기준과 심의도서 간 상관성을 높여 효율적인 심의 진행을 유도하여야 함
- 현재 경관심의도서 작성방법에서는 명확한 도면명과 각 도면에 담을 내용에 대한 기술이 모호함. 심의 담당자와 설계자의 해석 및 재량에 따라 심의도서의 내용, 수준이 달라질 수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 심의기준과 연동되는 심의도서 작성지침을 도·시·군 차원에서 작성하여 배포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필요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경관심의도서 작성지침을 활용할 것을 권장함
- 본 연구에서는 심의도서 목록과 주요 내용을 제시하고 있음

(7) 심의 수준을 개선할 수 있는 경관위원회 구성과 운영

- 경관위원회를 세분화하여 경관심의 및 자문대상에 따라 본위원회, 소위원회로 구분하여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심의의 질을 높일 수 있음
- 심의 대상, 심의 방식 등 지자체의 여건에 맞게 소위원회를 운영해야 함
- 경관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인력풀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함
- 조례에서 구체적인 경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을 마련해야 함
- 위원회는 심의 신청자에게 관련 법, 지침, 심의기준과 무관한 과도한 서류요구 및 추가적인 행정 절차 요구를 지양해야 함
- 위원회 간사와 위원장은 심의 위원이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의견보다는 심의 검토항목과 기준에 부합하는

내용을 질문하도록 유도하여야 함

- 경관위원들이 상위계획, 경관계획, 경관심의 운영지침, 사업내용에 대한 이해가 된 후 심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운영해야 함
- 심의 담당자는 경관심의 내용과 범위를 명확하게 심의위원에게 공지해야 함
- 심의 전 현장답사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어려울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관련 자료가 준비되어야 함

(8) 경관심의의 효용성 강화

- 지자체별로 경관심의 결과가 반영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함
-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경관관련법제의 개정을 통해 결과가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경관심의 후 진행되는 건축심의, 도시계획심의, 사업관련 위원회, 건축인·허가 과정에서 심의 결과가 변경되는 경우를 최소화해야 함

3) 공동심의 운영체계 확립 및 활성화

(1) 공동심의 운영 주체 및 체계 확립

- 공동심의의 운영 주체(부서)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하며 건축심의, 도시계획심의 등 관련 심의와의 공동심의 운영 규정을 마련해야 함
- 운영 규정을 통해 위원회 구성, 심의 절차 등 세부적인 내용을 명시해야 함

(2) 공동심의기준 구체화 및 역할 분담

- 각 심의위원회간의 중점검토 항목을 구분하여 제시해야 하며, 이를 통해 심의 시 중복 및 대립 의견을 조정하도록 해야 함
- 경관, 건축, 도시계획 심의 관련 지침과 가이드라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지자체의 공동심의 운영규정에 부합하는 기준을 마련해야 함

2. 충남 경관심의 참고기준 활용

- 충남 경관심의 운영방향에서 제시한 주요 대책 중 '지자체 특성이 반영된 자율적인 심의체계 확립'을 위해 8개의 세부 대책을 제시하였음
- 세부 대책은 지자체의 경관계획 및 조례를 통해 자체적으로 수립해야 함
- 본 연구에서는 명확한 경관심의 프로세스 확립, 지자체 경관계획을 반영하는 경관심의기준의 확립, 경관심의기준과 부합하는 심의도서 작성 유도를 위해 충남 경관심의 참고기준과 경관심의 프로세스 체계화의 주요 내용을 제시함

▼ [표 5-1] 충남 경관심의 개선대책 및 실행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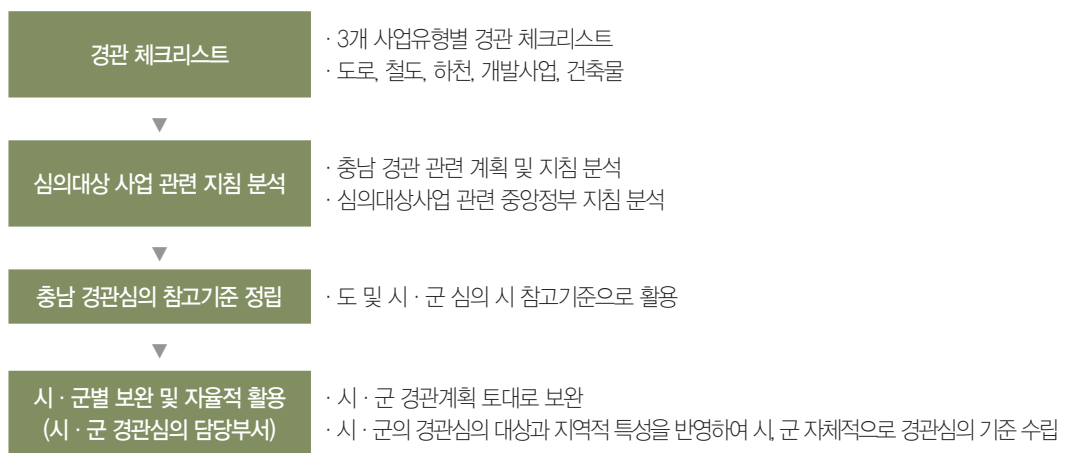
세부대책	실행방안
(1) 도와 시·군 경관심의 역할 분담	- 도 및 시·군 경관계획 및 조례에서 역할 분담 규정
(2) 명확한 경관심의 프로세스 확립	- 단기 : 충남 경관심의 프로세스 체계화 참고 - 중장기 : 시·군 자체적으로 심의절차 확립
(3) 합리적인 경관심의 대상의 설정	
(4) 경관심의 전 검토 강화 및 심의·자문·협의를 역할 분담	- 도 및 시·군 경관계획 및 조례에서 규정
(5) 지자체 경관계획을 반영하는 경관심의기준의 확립	- 단기 : 충남 경관심의 참고기준 활용 - 중장기 : 시·군 자체적으로 심의기준 수립
(6) 경관심의기준과 부합하는 심의도서 작성 유도	- 단기 : 충남 경관심의 프로세스 체계화 참고 - 중장기 : 시·군 자체적으로 심의절차 확립
(7) 심의 수준을 개선할 수 있는 경관위원회 구성과 운영	
(8) 경관심의의 효용성 강화	- 도 및 시·군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규정

- 현재 경관심의운영지침의 체크리스트는 기준을 제시하기 보다는 심의의 방향을 설정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음
- 지역의 다양한 경관특성을 하나의 기준으로 심의할 수 없는 상황을 반영한 것임. 심의지침에서도 사업의 특성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음
- 즉, 지자체 자체적으로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계획 실행 관점에서 별도의 경관심의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실효성 있는 경관계획 수립을 통해 경관심의 기준을 확보하기까지 한시적인 경관

심의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임

-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경관 심의 기준을 시·군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보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객관성 확보를 위해 충남 경관계획 및 관련지침, 중앙정부의 지침 분석을 통해 관련 기준을 제시함
- 지침 내용 중 현재 경관체크리스트와의 상관성 검토를 통해 추가 기준 형식으로 제시함

▼ [표 5-2] 충남 경관심의 참고기준 도출 및 활용 절차



1) 충남 경관계획 관련 지침

- 충청남도 차원에서 심의 참고 기준으로 활용이 가능한 지침은 표 5-3과 같음

▼ [표 5-3] 충남 경관관련 계획 및 가이드라인

구분	근거	비고
충청남도 경관기본계획	경관법 및 충남 경관 조례	2013. 01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옥외광고물 관리법	2015. 10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충남 공공디자인 조례	2009. 10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충남 공공디자인 조례	2009. 10
충청남도 건축물 색채 디자인 가이드라인	충남 공공디자인센터	2015. 5
충청남도 범죄예방 디자인 가이드라인	충남 공공디자인센터	2015. 5
충청남도 공사장 가림시설 디자인 가이드라인	충남 공공디자인센터	2015. 5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충남 공공디자인센터	2016년 발간 예정

- 경관심의 시 체크리스트의 참고기준은 지자체 경관계획의 설계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계획 및 가이드라인의 근거법, 심의대상 사업 및 경관체크리스트 검토항목과의 상관성 등을 고려할 때 경관기본계획,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건축물 색채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경관심의 시 1차적인 참고기준으로 활용 가능함
- 이 외의 자료는 심의 시 필요여부 등에 따라 활용 가능함

2) 경관심의 관련 중앙부처 지침

- 사회기반시설(도로, 하천, 철도), 개발사업, 건축물과 관련된 중앙부처 지침을 국가법령정보센터 및 중앙부처 법령정보 검색을 통해 수집, 분석하였음
- 지침들은 령(규칙), 훈령, 예규, 고시, 공고 등의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음. 법, 시행령, 시행규칙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음. 행정규칙 형식으로 공식화 되지 않은 보고서 형식의 가이드라인은 심의 참고기준에서 제외하였음⁷⁾
- 심의주체가 지자체인 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침 중심으로 분석하였음
- 국토교통부 지침이 대다수이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행정자치부, 환경부, 산림청에서도 관련 지침을 규정하고 있음
- 지침의 성격을 보면 경관계획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침, 설치·관리·계획·시공과 관련된 지침, 업무 규정과 관련된 지침, 이와 같은 지침들이 통합화 된 지침들로 구분할 수 있음
- 사회기반시설로 분류되는 도로, 하천, 철도 관련 지침, 개발사업, 건축물 및 가로경관, 산림·공원·녹지·조경 등 크게 4가지로 구분이 가능함

7) 행정안전부(2008), 간판디자인 표준 가이드라인 및 매뉴얼 개발 ; 국토해양부(2010), 미래지향적인 친수공간 형성을 위한 수변경관 가이드라인 ; 국토교통부(2011), 쾌적한 야간경관 형성을 위한 경관조명가이드라인 연구, 국토교통부(2013), 도시경관 개선을 위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 [표 5-4] 경관심의대상 사업 관련 중앙정부 지침의 유형

사업 유형	지침의 종류
사회기반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 관련 지침 16종 - 하천 관련 지침 4종 - 철도 관련 지침 8종
개발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계획 및 개발 관련 지침 17종 - 농촌경관계획 관련 지침 2종 - 해안, 항만 경관 관련 지침 3종
건축물 및 가로경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관련 지침 9종 - 가로경관 관련 지침 4종
산림·공원·녹지·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림경관 관련 지침 3종 - 공원·녹지 관련 지침 3종 - 조경 관련 지침 5종

(1) 사회기반시설 관련 지침

- 사회기반시설 지침은 도로, 하천, 철도로 구분되며 본 연구에서 분석한 지침은 도로 16종, 하천 4종, 철도 8종임
- 도로경관설계 안내서,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 지침은 도로경관계획과 설계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안전시설, 도로표지, 안내표지, 방재시설은 설치 및 관리 지침이 별도로 있으며 안전시설과 도로표지의 경우 도로시설물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고속도로공사와 도로공사, 도로교(교량)는 각각의 시방서가 있음
- 농어촌도로, 도로, 자전거도로는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 경관도로 정비사업 업무편람은 도로의 계획, 디자인, 분석, 평가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경관도로에만 한정됨
- 1차적인 충남 경관심의 참고 기준으로 활용 가능한 지침은 도로경관설계 안내서,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 지침,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도로표지 제작 설치 및 관리지침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 [표 5-5] 도로 관련 중앙정부 지침

관련 지침	주요 내용
도로경관설계 안내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교통부 간선도로과, 2012. 6 - 도로경관설계, 도로시설물 디자인, 도로경관 평가
경관도로 정비사업 업무편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해양부 도로정책관, 2011 - 경관도로 정비계획, 도로시설물 디자인, 자료수집 및 분석, 정비안 평가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 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627호, 2015.9.1, 일부개정 - 도로노선 선정, 항목별 도로설계 기법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교통부예규 제69호, 2014.2.14, 일부개정 - 도로조명 및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
도로표지 제작 설치 및 관리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교통부예규 제87호, 2014.10.11, 일부개정 - 도로표지 설계, 재료, 제작, 설치 기준
도로표지 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교통부령 제111호, 2014.7.15, - 도로표지의 종류, 규격 등 필요사항 규정
도로명 안내표지 제작 설치 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교통부예규 제84호, 2014.9.24, 일부개정 - 도로명 안내표지 설계, 재료, 제작, 설치 기준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교통부예규 제112호, 2015.8.20, 일부개정 - 도로터널 방재시설의 기술기준
농어촌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자치부령 제43호, 2015.11.16, - 농어촌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관한 일반적·기술적 기준을 규정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교통부령 제223호, 2015.7.22, - 도로법에 따라 도로를 신설 또는 개량하거나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적용되는 최소한의 기준을 규정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교통부령 제159호, 2014.12.29, -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는 경우 설치기준
도로의 유지·보수등에 관한 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교통부령 제141호, 2014.11.19, - 도로법 50조에 따른 유지·안전점검 사항 규정
자전거도로 시설기준 및 관리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해양부 도로정책관, 2009 - 자전거도로 시설기준 및 관리에 관한 일반적 기술 기준
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해양부공고 제2012-1318호, 2012.10.26 -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공사의 시공기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해양부공고 제2009-211호, 2009.3.23, 제정 - 도로법에서 정한 도로공사의 시공기준
도로교 표준시방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교통부고시 2013-72호 - 도로법에 의해 건설하는 교량의 시공기준

- 하천과 관련된 지침은 4종이 있으나 2009년에 발간된 '자연친화적 하천관리에 관한 통합지침'에서 관련 법, 규정, 지침을 통합하였음
- 이 통합 지침은 하천법 등 관련법과 규정, 하천기본계획 수립지침, 하천설계기준, 하천구역 내 나무심기 기준을 통합하고 있어 심의 참고기준으로 가장 적합함
- 철도와 관련된 지침 중에서는 환경친화적인 철도건설 지침이 심의 참고기준으로 활용 가능함. 그 외의 지침은 철도 건설과 관련된 업무 규정과 시공, 기술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 [표 5-6] 하천 및 철도 관련 중앙정부 지침

사업 유형	관련 지침	주요 내용
하천	자연친화적 하천관리에 관한 통합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해양부 하천계획과, 2009 - 하천환경조사 및 평가, 계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
	지방하천정비사업 세부집행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해양부 지침, 2012.1.1 제정 - 지방하천정비사업의 보조금 교부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
	하천설계기준·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해양부 수자원정책관, 2009 - 하천과 하천에 관련된 사업의 시공기준
	하천에서 나무심기 및 관리에 관한 기준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교통부 하천환경팀-1056(2007.5.29) - 하천법 및 시행령 규정에 의한 하천에서 나무심기 및 관리에 관한 기준
철도	환경친화적 철도건설 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161호, 2013.4.18 - 환경친화적 철도노선 선정, 철도건설, 환경관리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편의시설 설계 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764호, 2013.12.3 - 도시철도 정거장을 계획하고 설계하기 위한 지침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607호, 2014.10.15 - 철도건설규칙에 따라 철도건설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
	철도건설공사 전문시방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758호, 2013.12.5 - 고속철도 및 일반철도 공종의 시공 기준
	철도설계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757호, 2013.12.5 - 철도건설사업 시행에 따른 철도 설계 기준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교통부예규 제28호, 2013.4.22 - 도시철도 기본계획 내용 및 작성기준
	도시철도의 건설과 지원에 관한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교통부예규 제27호, 2013.4.22 - 도시철도법에 따른 철도 건설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127호, 2014.3.18 - 철도건설사업의 각 단계별 시행절차, 업무, 시행에 관한 필요 사항 규정

(2) 개발사업 관련 지침

- 개발사업 관련 지침은 도시계획 및 개발 지침이 17종, 농촌 경관계획 관련 지침이 2종, 해안·항만 경관 관련 지침이 3종임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은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심의 참고기준으로 활용도가 높음
- 도시계획 수립 관련 기준과 지침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이와 같은 지침들은 계획 수립 시 포함될 내용과 기준들을 제공하고 있어 심의기준으로 활용할 여지는 있으나 검토항목으로 활용하기에는 구체성이 부족함
- 산업단지, 물류단지, 도시개발 등의 업무 지침 등 개발사업 진행을 위한 지침들이 있으나 경관심의 참고기준으로 활용할 내용을 담고 있지 않음

▼ [표 5-7] 도시계획·개발 관련 중앙정부 지침

관련 지침	주요 내용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교통부령 제240호, 2015.10.20., 일부개정 - 교통, 공간, 유통 및 공급, 공공문화체육, 방재, 보건위생,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기준
지속가능한 신도시 계획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교통부지침 제호, 2007.1.1, - 택지개발사업촉진법에 의한 신도시 계획 시 사회문화, 경제, 환경적 지속성, 경관형성을 위한 계획기준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교통부훈령 제569호, 2015.8.13 - 지구단위계획 수립 원칙 및 기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교통부훈령 제569호, 2015.8.13 -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기준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교통부훈령 제569호, 2015.8.13 - 도시·군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방법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 수립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교통부훈령 제2013-224호, 2013.5.21 - 정비계획의 원칙, 기초조사 부문별 수립기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265호, 2013.5.22 - 촉진계획의 원칙, 기초조사, 부문별 수립 지침, 주민참여 등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군 계획수립 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교통부훈령 제569호, 2015.8.13 - 도시·군 기본계획, 관리계획 수립시 기후변화 대응한 공간계획 지침
혁신도시 계획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교통부훈령 제275호, 2013.8.20 - 혁신도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시 필요사항

관련 지침	주요 내용
기업도시 계획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512호, 2014.9.3 - 기업도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시 필요사항
유비쿼터스 도시계획 수립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388호, 2013.6.27 - 유비쿼터스 도시계획의 수립기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650호, 2015.9.8 - 공장설립을 위한 입지지정 및 개발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규정
도시개발업무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교통부훈령 제535호, 2015.6.2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상 필요한 세부사항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교통부훈령 제569호, 2015.8.13 - 개발행위허가 절차, 기준, 도서작성
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5-1073호, 2015.9.8 - 산업단지의 지정 및 승인에 적용하기 위한 기본적인 지침
총괄계획가 업무 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551호, 2012.8.27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총괄계획가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물류단지 개발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99호, 2013.4.15 - 물류단지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농촌, 해안, 항만 분야에는 지침의 종류는 많지 않으나 해당 지역 개발사업 심의 시 참고가 가능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음

▼ [표 5-8] 농촌·해안·항만사업 관련 중앙정부 지침

관련 지침	주요 내용
농어촌 경관계획 수립 요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수산식품부, 2009 - 농어업경관, 자연경관, 생활경관계획의 수립요령
농어촌 경관계획 수립 및 경관관리 업무편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수산식품부, 2008 - 농어촌 경관계획 수립 요령 및 관리, 활용 매뉴얼
해안경관 관리 가이드라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해양부훈령 제495호, 2011.5.6 - 해안권 개발사업의 경관 보전 및 조성에 필요한 사항 규정
항만친수시설 조성 및 관리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수산부예규 제16호, 2013.5.24 - 항만친수공간 유형별 설계 지침
항만재개발 및 마리나항만 경관 가이드라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수산부예규 제38호, 2014.10.7 - 항만 사업계획 또는 실시계획 수립시 경관 형성에 필요한 사항 규정

(3) 건축물 및 가로경관 관련 지침

- 건축물이나 가로경관(외부공간) 관련 지침들은 건축물 심의 시 참고 기준으로 활용이 가능함. 가로경관 관련 지침 4종, 건축물 관련 지침은 9종임
- 보행자 중심의 가로경관 가이드라인은 건축물, 외부공간, 가로 시설물 등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어 심의 참고 기준으로 활용도가 높음
- 보도, 가로수, 가로등 관련 지침들도 경관 체크리스트 검토항목과 관련된 부분을 제공하고 있어 참고 기준으로 활용이 가능함
- 건축물 관련 지침들은 녹화, 범죄예방, 에너지절약, 안전 등 다양한 설계기준들이 있으나 현재의 경관 체크리스트 검토항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필요시 심의업무 담당자나 심의위원의 판단 하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표 5-9] 건축물 및 가로경관 관련 중앙정부 지침

관련 지침	주요 내용
보행자 중심의 가로경관 가이드라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2014 - 가로경관 조성 계획 및 사업 시행시 지침으로 활용
보도설치 및 관리 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해양부 지침, 2011.7.26 - 보행자 통행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일반적 기술 기준
가로수 조성 및 관리규정 고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림청고시 제2013-87호, 2013.12.31 - 산림기본법에 의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규정
빛공해 방지를 위한 가로등 설치·관리 권고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부고시 제2014-211호, 2014.11.28 - 에너지 비효율과 시각적 불편함을 방지하는 가로등 설치 및 관리 기준
건축물 녹화 설계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해양부, 2012 - 건축물 녹화시스템 설계에 필요한 기술수준과 요구성능, 시공 및 유지관리 기준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553호, 2012.8.22 - 건축사가 건축물 설계시 필요한 설계도서 작성기준
건축물의 범죄예방설계 가이드라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해양부기타 제호, 2013.1.9 - 범죄예방을 위한 건축물 설계기준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198호, 2015.4.1 -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대한 범죄예방 기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596호, 2015.8.17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의한 열손실 방지 등 에너지절약 설계에 관한 기준

관련 지침	주요 내용
고령자 및 장애인을 위한 주택 안전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해양부공고 제2011-491호, 2011.5.27 - 고령자 및 장애인의 주거편의를 위한 주택의 안전기준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864호, 2012.12.28 - 건축기본법에 따라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기획, 설계 개선하는데 필요한 사항 규정
건축관련 통합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522호, 2013.9.4 -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용도변경 업무처리 과정에서 필요한 건축관련 기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345호, 2014.6.12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따라 설계공모에 대한 시행절차 및 방법

(4) 산림·공원·녹지·조경 관련 지침

- 산림, 공원, 녹지, 조경 분야 지침은 표 5-10과 같이 구분이 가능하며 산림청, 환경부, 국토교통부, 문화관광부 등 다양한 중앙부처에서 지침을 규정하고 있음
- 산림경관 계획관리 업무 편람은 사회기반시설인 도로, 하천, 철도 및 개발사업 시 참고 기준으로 활용성이 높음
-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도 개발사업 시 오픈스페이스 심의 참고 기준으로 활용성이 높음
- 조경설계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 또는 조경설계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시설물 및 외부공간 심의 시 참고기준으로 활용성이 높음
- 조경기준은 건축법에 의한 대지 내 조경에 관한 설계기준을 규정하고 있어 건축물 외부공간 심의 시 참고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음
- 등산로 및 문화재 주변 공공디자인 매뉴얼은 심의 시 필요할 경우 심의위원의 판단 하에 활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표 5-10] 산림·공원·녹지·조경 관련 중앙정부 지침

사업 유형	관련 지침	주요 내용
산림경관	산림경관 계획관리 업무편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림청 도시숲경관과, 2011 – 산림경관 유형별 경관계획 및 산림경관사업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등에 대한 자연경관 심의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부예규 제2012-468호, 2012.8.22 – 개발사업의 자연경관 영향 검토사항, 심의기준, 절차
	산림경관 관리기본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림청, 2009 – 산림경관 정책목표 및 전략, 전략별 세부계획
공원녹지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교통부훈령 제560호, 2015.8.4 –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기준 규정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교통부훈령 제504호, 2015.3.23 – 도시공원과 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규정
	공원시설의 설치 권고기준에 관한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부훈령 제870호, 2009.9.8 – 자연공원법 시행규칙에 따른 공원시설의 설치기준
조경	조경설계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해양부 도시정책관, 2013 – 건설기술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조경설계 및 공사 시 최소한의 기준
	조경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87호, 2015.11.5 –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조경기준
	조경관리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청훈령 제347호, 2014.12.30 –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전통조경에 대한 필요한 사항
	등산로 주변 공공디자인 개발 매뉴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림청 매뉴얼, 2007.1.1 – 등산로 안내사인시설물 디자인 기준
	문화재 주변 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청예규 제151호, 2015.9.1 – 문화재 주변에 설치하는 시설물의 공공디자인 원칙과 기준

(5) 중앙부처 지침 종합 분석

- 경관심의대상 사업 관련 중앙정부 지침을 분석한 결과 경관심의 참고기준으로 활용 가능한 지침들이 확인 됨
- 관련지침들을 내용에 따라 구분하면 크게 6개로 유형화 가능. 가이드라인형, 통합지침형, 설치·관리 지침형, 설계·시공 기준형, 계획수립 지침형, 사업 및 업무 규정으로 구분이 가능. 각 유형별 특성을 정리 하면 표 5-11과 같음

▼ [표 5-11] 중앙부처 경관심의대상사업 관련지침의 유형과 특성

유형	구성 및 형식
가이드라인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관보전, 관리, 형성과 관련된 권장사항 제시 - 경관계획, 심의기준 활용을 위해 구성됨 - 예) 보행자 중심의 가로경관 가이드라인
통합지침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사업의 분석, 조사, 계획, 설계, 시공, 평가와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으로 구성 - 관련 지침들의 통합 혹은 종합적인 특성 - 예) 자연친화적 하천관리에 관한 통합지침
설치·관리 지침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 기준 제시 - 특정시설 혹은 관련된 모든 시설의 구조, 설치, 관리 기준 제시 - 예)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설계·시공 기준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의 설계, 적용기술, 시공 기준 등을 제시 - 예) 조경설계기준
계획수립 지침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과 관련된 계획 수립 시 내용과 기준 제시 - 예)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업무·절차 규정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을 위한 업무, 절차 등에 관한 내용 규정 - 예) 도시개발업무지침

- 관련지침들은 표 5-12와 같이 구분이 가능하며 지침 내용의 검토를 통해 충남 경관심의 참고기준 활용 여부를 선정하였음
- 현재의 경관체크리스트 내 검토 항목을 포함한 지침을 중심으로 선정함
- 시공 및 설치를 위한 표준, 구조, 공법 등의 내용이나 사업 수행을 위한 검토사항, 규정, 업무절차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지침은 제외하였음
- 경관체크리스트의 참고기준으로 활용 가능하지 않은 지침들은 제외하였으나 심의 시 필요할 경우 담당 실무자와 심의위원의 판단 하에 활용하는 것을 권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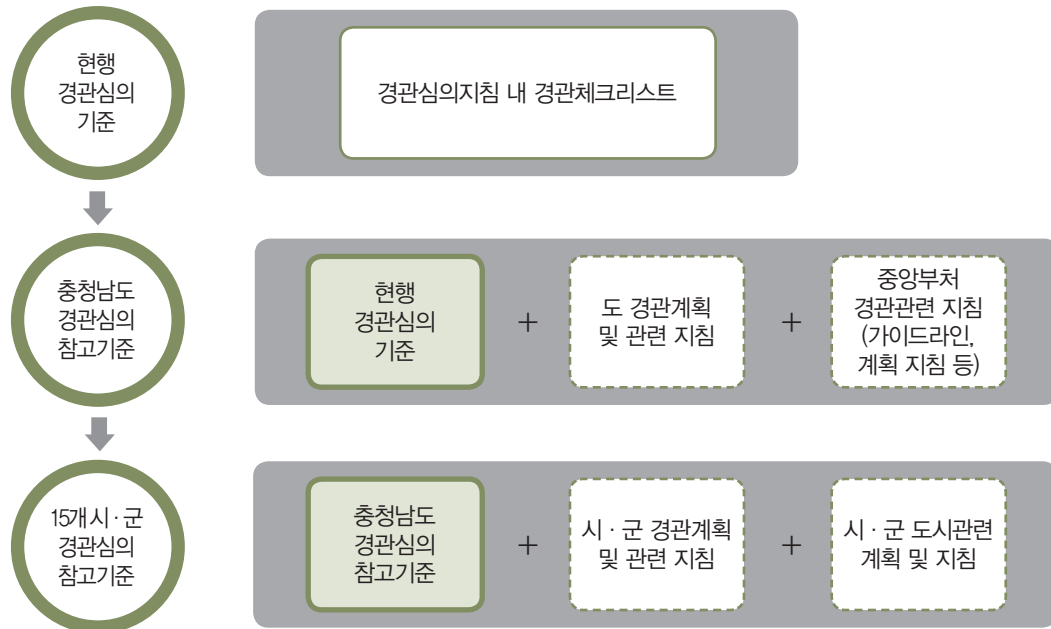
▼ [표 5-12] 경관심의 관련 중앙부처 지침 종합

유형	관련 지침	충남 경관심의 참고지침 활용	지침 유형
도로	도로경관설계 안내서	●	가이드라인형
	경관도로 정비사업 업무편람		통합지침형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 지침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	
	도로표지 제작 설치 및 관리지침	●	설치관리지침형
	도로표지 규칙		
	도로명 안내표지 제작 설치 지침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농어촌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도로의 유지·보수등에 관한 규칙		
	자전거도로 시설기준 및 관리지침		
	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		설계시공기준형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도로교 표준시방서		
하천	자연친화적 하천관리에 관한 통합지침	●	통합지침형
	하천설계기준·해설		설계시공기준형
	하천에서 나무심기 및 관리에 관한 기준		
	지방하천정비사업 세부집행지침		업무절차규정형
철도	환경친화적 철도건설 지침	●	통합지침형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편의시설 설계 지침		설계시공기준형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철도건설공사 전문시방서		
	철도설계기준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지침		계획수립지침형
	도시철도의 건설과 지원에 관한 기준		업무절차규정형
	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		

유형	관련 지침	충남 경관심의 참고지침 활용	지침 유형
도시 계획 및 개발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	설치관리지침형
	지속가능한 신도시 계획기준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 수립지침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지침		계획수립지침형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군계획수립 지침		
	혁신도시 계획기준		
	기업도시 계획기준		
	유비쿼터스도시계획수립지침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도시개발업무지침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		업무절차규정형
	총괄계획가 업무 지침		
	물류단지 개발지침		
농촌, 해안, 항만	농어촌 경관계획 수립 요령	●	
	농어촌경관계획 수립 및 경관관리 업무편람		가이드라인형
	해안경관 관리 가이드라인	●	
	항만친수시설 조성 및 관리지침	●	설치관리지침형
건축물, 가로경관	항만재개발 및 마리나항만 경관 가이드라인	●	
	보행자 중심의 가로경관 가이드라인	●	가이드라인형
	보도설치 및 관리 지침	●	
	가로수 조성 및 관리규정 고시	●	설치관리지침형
	빛공해 방지를 위한 가로등 설치·관리 권고기준	●	
	건축물 녹화 설계기준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건축물의 범죄예방설계 가이드라인		설계시공기준형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고령자 및 장애인을 위한 주택 안전기준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		
	건축관련 통합기준		업무절차규정형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산림, 녹지공원, 조경	산림경관 계획관리 업무편람	●	
	등산로 주변 공공디자인 개발 매뉴얼		가이드라인형
	문화재 주변 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지침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	●	설치관리지침형
	공원시설의 설치 권고기준에 관한 규정		
	조경설계기준	●	
	조경기준	●	설계시공기준형
	조경관리규정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지침		계획수립지침형

3) 충남 경관심의 참고기준

- 충남경관계획 및 중앙정부 지침 분석을 통해 경관심의 참고지침과 기준을 제시함
- 이 기준은 도 및 시·군 심의 시 경관체크리스트의 참고자료로 활용함
- 시·군의 경관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의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시·군에서 최종적으로 경관심의 참고기준을 작성하는 것을 권장함
- 사업유형, 규모,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시 기준 적용 방식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함



▲ [그림 5-2] 충청남도 및 시·군 경관심의 참고기준의 구성

(1) 충남 경관심의 참고지침

- 충남 및 중앙부처 경관심의 대상 사업 관련 지침 74개를 검토한 결과 표 5-13과 같이 22개의 지침이 충남 경관심의 참고지침으로 활용 가능함
- 지침의 적용범위를 살펴보면 도로, 하천, 철도 관련 지침처럼 단일 사업에만 적용되는 지침과 사회기반시설, 개발사업, 건축물에 모두 적용되는 지침들로 구분이 가능함

▼ [표 5-13] 충남 경관심의 참고지침

지침의 유형	관련 지침
충남 경관계획	충청남도 경관기본계획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충청남도 건축물 색채 디자인 가이드라인
도로	도로경관설계 안내서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 지침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도로표지 제작 설치 및 관리지침
하천	자연친화적 하천관리에 관한 통합지침
철도	환경친화적 철도건설 지침
도시계획 및 개발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농촌, 해안, 항만	농어촌 경관계획 수립 요령
	해안경관 관리 가이드라인
	항만친수시설 조성 및 관리지침
	항만재개발 및 마리나항만 경관 가이드라인
건축물 및 가로경관	보행자 중심의 가로경관 가이드라인
	보도설치 및 관리 지침
	가로수 조성 및 관리규정 고시
	빛공해 방지를 위한 가로등 설치·관리 권고기준
산림,공원,녹지, 조경	산림경관 계획관리 업무편람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
	조경설계기준
	조경기준

- 사회기반시설(도로, 하천, 철도), 개발사업, 건축물의 경관체크리스트 검토항목과 관련 지침 내용 상관성을 검토하여 경관체크리스트 별로 참고지침과 기준을 제시함
- 현재의 경관체크리스 검토항목을 토대로 충남 경관심의 참고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시·군의 경관계획 및 지침에 따라 선택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장함
- 본 연구에서는 참고기준의 주요내용만 검토항목별로 제시 함. 심의 담당자가 심의 시 심의위원들에게 제공 하여 활용하도록 함

(2) 도로사업 경관심의 참고 지침과 기준

- 도로 경관체크리스트 검토항목과 관련 지침 내용 분석을 통해 참고기준을 도출함. 도로 경관심의 시 참고 기준으로 활용 가능한 지침은 총 9개임

▼ [표 5-14] 도로 관련 경관심의 참고지침

구분	관련 지침
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청남도 경관기본계획 - 환경친화적 도로건설 지침 - 도로경관설계 안내서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 보행자 중심의 가로경관 가이드라인 - 조경설계기준 - 빗공해 방지를 위한 가로등 설치·관리 권고 기준

- 관련 지침 내용 분석을 통해 검토항목별로 참고 기준을 제시함

▼ [표 5-15] 도로 관련 경관심의 참고기준

검토항목	참고기준
도로 선형은 주변의 도시구조 및 경관요소와 조화를 고려하여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관을 고려한 도로노선선정 기법 (도로경관설계 안내서 pp.31-33)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노선선정 단계의 기본적 고려사항, 2) 경관자원 유형별 노선선정 고려사항 3) 지역특성을 고려한 노선선정 · 도로 노선 선정 시 경관체크리스트 (도로경관설계 안내서 p.85) · 도로노선 선정시 우회검토지역 (환경친화적 도로건설 지침 p.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원시적 자연환경을 유지하고 있는 지역 2) 고산대, 급경사지, 파괴되기 쉬운 지형·지질의 지역 등 녹화 복원이 어려운 지역 3) 뛰어난 경관을 유지하고 있는 지역 · 위락·경관 항목에서 도로노선 선정시 주요 검토 사항(환경친화적 도로건설 지침 p.7)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전할 가치가 있는 자연경관의 종류 2) 대규모 땅깍기·흙쌓기로 인한 경관적 영향 최소화 · 토지이용 항목에서 도로노선 선정시 주요 검토 사항(환경친화적 도로건설 지침 p.5)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위계획과의 연계성 유무, 2) 기존 주거지의 단절 여부 3) 지역특성 고려, 4) 기존도로의 활용여부 · 토지이용 고려 도로설계기법(환경친화적 도로건설 지침 p.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존 지형의 변화 최소화, 2)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 3) 장래계획과의 부합, 4) 주민 이동로 확보, 5) 폐도 활용방안 수립, 6) 자전거 도로

검토항목	참고기준
산지, 구릉, 수변 등 지형적 특성을 고려하여 도로선형과 도로구조를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선형 계획시 경관체크리스트 (도로경관설계 안내서 pp.85-86) · 도로선형설계 (도로경관설계 안내서 pp.34-38)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선형설계의 방향 (2) 경관유형별 선형설계 : 녹지경관, 수변경관, 역사 · 문화경관, 생활경관 (3) 경관을 고려한 선형설계 (4) 조망의 확보를 위한 선형설계 · 지형 · 지질 항목에서 도로노선 선정 시 주요 검토 사항(환경친화적 도로건설 지침 p.4)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전가치가 있는 지형 · 지질유산의 보전(조사필요) 2) 지역의 특이한 지형형상(습지, 해안선, 계곡 등)에 대한 보전 3) 지반안정성, 4) 대규모의 지형변화를 가져오는 땅깍기 · 흙쌓기의 최소화 · 지형훼손 저감 도로설계기법 (환경친화적 도로건설 지침 p.8)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터널화를 고려하여야 하는 지역 2) 장대비탈면 발생지역 저감방안 3) 지형훼손의 적정성 판단기준 4) 지형훼손이 불가피한 사유 · 도로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한 일반적 기준 (도시 · 군계획시설의 결정 ·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p.5)
도로 주변의 자연환경, 건축물, 인공물 등의 규모를 고려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위화감을 주지 않는 적절한 규모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관을 고려한 방음벽 설치 (환경친화적 도로건설 지침 pp.24-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방음벽 설치시 고려사항 2) 방음벽 식재방안 · 소음 · 진동 저감 도로설계기법 (환경친화적 도로건설 지침 pp.22-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방음벽 설치 : 장소, 높이, 형식 등 2) 방음터널 3) 방음독 및 방음림
도로가 교차되는 곳, 주요 진입부 등은 방향성이 쉽게 인지되도록 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의 평면교차 (조경설계기준 pp.97-9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차로의 차선과 보도 · 교차로 (도로경관설계 안내서 pp.42-43)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평면교차로 2) 회전교차로 3) 입체교차로
이동속도에 따라 도로의 연속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시설물의 배치, 규모 등을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표지의 설치 등 (도로표지 제작 · 설치 및 관리지침 p.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표지의 설치장소, 유의사항, 설치형식 등
주요 시설물의 규모와 비례, 재료, 색채 등은 도로 주변의 자연환경, 건축물, 인공물 등의 규모를 고려하여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청남도 공공시설물 경관설계지침 (충남경관기본계획, pp.363-36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시설물 경관설계지침 6대원칙 - 공공시설물 공통경관설계지침 · 도로시설물 디자인 기법 (도로경관설계 안내서 pp.64-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앙분리대, 2) 노측용 방호울타리, 3) 도로표지, 4) 방음벽 5) 옹벽, 6) 교량, 7) 횡단시설, 8) 터널, 9) 조명 · 도로시설물 경관체크리스트 (도로경관설계 안내서 pp.86-8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량, 터널, 중앙분리대, 노측용 방호울타리, 방음벽, 옹벽, 횡단시설, 조명시설
가로등, 신호등, 전신주, 도로표지판, 시설안내판 등 가로시설물은 보행환경 및 경관을 고려하여 통합지주로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시설물 가이드라인 (보행자중심의 가로경관 가이드라인 p.21, pp.74-7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대상 / 형태

검토항목	참고기준
가로시설물 및 주변시설물이 전체적으로 통일감을 가지도록 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청남도 공공시설물 경관설계지침 (충남경관기본계획, pp.363-36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시설물 경관설계지침 6대원칙 – 공공시설물 공통경관설계지침 · 가로시설물 영역 가이드라인(보행자중심의 가로경관 가이드라인 p.14, pp.37-4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로조경 / 가로조명 / 기타시설물
야간조명은 도로이용자의 안전과 기능을 고려하고 도시의 전체적인 야간경관을 고려하여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청남도 야간경관 설계지침 (충남경관기본계획, pp.374-38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지역 – 상업·업무지역 – 공업·기타지역 – 주거지역 및 상가 / 학교 / 창고 – 공공시설물 / 사인물 / 보행공간 · 경관조명 (조경설계기준 pp.230-24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관조명시설의 분류 – 설계 고려 및 검토사항
해당 시설 및 공간의 특성을 고려하여 디자인하되, 과도한 연출은 지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원칙 – 경관 조명시설의 일반적인 요구성능 ·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pp.12-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총칙 2) 기능 및 조명 요건 3) 설치장소 4) 연속조명 5) 국부조명 6) 터널조명 7) 유지관리 · 가로조명 가이드라인(보행자중심의 가로경관 가이드라인 p.14, pp.39-41) · 가로등 설치 기준(빛공해 방지를 위한 가로등 설치·관리 권고 기준 p.1)

(3) 철도사업 경관심의 참고 지침과 기준

- 철도 경관체크리스트 검토항목과 관련 지침 내용 분석을 통해 참고기준을 도출함. 철도 경관심의 시 참고 기준으로 활용 가능한 지침은 총 6개임

▼ [표 5-16] 철도 관련 경관심의 참고지침

구분	관련 지침
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청남도 경관기본계획 – 환경친화적 철도건설 지침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 보행자 중심의 가로경관 가이드라인 – 조경설계 기준 – 빛공해 방지를 위한 가로등 설치·관리 권고 기준

- 관련 지침 내용 분석을 통해 검토항목별로 참고 기준을 제시하였음

▼ [표 5-17] 철도 관련 경관심의 참고기준

검토항목	참고기준
철도선형은 주변의 도시구조 및 경관요소와의 조화를 고려하여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도노선 선정 시 고려사항(환경친화적 철도건설 지침 pp. 3-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적으로 중요한 지역·지구 - 정온지역의 분포 고려 - 경관 민감지역 고려 - 기존노선 및 정거장의 활용 - 타 교통시설과의 평행노선 고려 -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의 활용
산지, 구릉, 수변 등 지형적 특성을 고려하여 철도 선형과 구조를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도노선 선정 시 항목별 검토사항(환경친화적 철도건설 지침 pp. 4-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이용 / 지형·지질 / 위락·경관 · 노선 선정 시 경관지 확보기준 설정(환경친화적 철도건설 지침 pp. 36-3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관거점지역의 검토 - 경관관리지구 확보기준 설정
주요 시설물의 규모와 비례, 재료, 색채 등은 철도 주변의 자연환경, 건축물, 인공물 등의 규모를 고려하여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청남도 공공시설물 경관설계지침(충남경관기본계획, pp.363-36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시설물 경관설계지침 6대원칙 - 공공시설물 공통경관설계지침 · 시설 등이 주변과 조화되는 경관대책 수립(환경친화적 철도건설 지침 pp. 35-3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성토 사면 발생구간의 경관영향 최소화 계획 - 교량경관계획 - 방음벽에 대한 경관계획 - 옹벽에 대한 경관계획 - 통로박스에 대한 경관계획
역사 및 교량, 터널 등 인공구조물은 시각적 개방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주변으로의 조망을 고려하여 디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청남도 아간경관 설계지침 (충남경관기본계획, pp.374-38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지역 - 상업·업무지역 - 공업·기타지역 - 주거지역 및 상가 / 학교 / 창고 - 공공시설물 / 사인물 / 보행공간 · 경관조명 (조경설계기준 pp.230-24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관조명시설의 분류 - 설계 고려 및 검토사항 - 설계원칙 - 경관 조명시설의 일반적인 요구성능
야간조명은 이용자의 안전과 다양한 활동을 고려하여 디자인하되, 과도한 연출은 지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pp.12-21)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총칙 2) 기능 및 조명 요건 3) 설치장소 4) 연속조명 5) 국부조명 6) 터널조명 7) 유지관리 · 가로조명 가이드라인(보행자중심의 가로경관 가이드라인 p.14, pp.39-41) · 가로등 설치 기준(빛공해 방지를 위한 가로등 설치·관리 권고 기준 p.1)
역사와 주변 건축물 및 각종시설물의 조명은 주변 경관을 저해하지 않고 상호 조화를 이루도록 디자인	

(4) 하천사업 경관심의 참고 지침과 기준

- 하천 경관체크리스트 검토항목과 관련 지침 내용 분석을 통해 참고기준을 도출함. 하천 경관심의 시 참고 기준으로 활용 가능한 지침은 총 5개임

▼ [표 5-18] 하천 관련 경관심의 참고지침

구분	관련 지침
하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 경관기본계획 - 자연친화적 하천관리에 관한 통합 지침 - 농어촌 경관계획 수립 요령 -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 - 조경 설계기준

- 관련 지침 내용 분석을 통해 검토항목별로 참고 기준을 제시함

▼ [표 5-19] 하천 관련 경관심의 참고기준

검토항목	참고기준
기존 오픈스페이스 및 공원 녹지와 연계하여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변공원 세부기준(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 pp.8-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변공원의 설치 및 관리기준 · 하천 식재 설계(자연친화적 하천관리에 관한 통합 지침 pp.75-76)
하천구역과 주변의 토지이용, 도로, 건축물 등을 연계하여 일체적으로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지구에 따른 설계 방향(자연친화적 하천관리에 관한 통합 지침 pp.69-7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전지구, 복원지구, 친수지구 - 제방설계, 호안설계
계절적 변화와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다양한 하천경관을 연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경관(농어촌 경관계획 수립 요령 pp.60-7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경관 기본방향 - 하천경관 매뉴얼 - 부문별 계획 및 예시 · 하천조경(조경설계기준 pp.332-34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조경계획 - 하천조경 설계 - 하천조경 배식 설계
하천 내 인공시설물 설치를 지양 하되, 불가피하게 인공구조물을 설치할 경우 과도한 디자인을 지양하고, 자연경관 변화를 최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청남도 공공시설물 경관설계지침(충남경관기본계획, pp.363-36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시설물 경관설계지침 6대원칙 - 공공시설물 공통경관설계지침 · 하천 지구 도입시설(자연친화적 하천관리에 관한 통합 지침 p.5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전 및 복원지구 도입시설 - 친수지구 도입시설
공공시설물 등 하천 관련 시설물을 일관성 있게 디자인	
친수공간을 조성하거나, 조망점, 하천트레이일을 정비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수공간 계획(자연친화적 하천관리에 관한 통합 지침 pp.62-6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수공간 계획 시 일반적 고려사항

(5) 충남 개발사업 경관심의 참고 지침과 기준

- 개발사업 경관체크리스트 검토항목과 관련 지침 내용 분석을 통해 참고기준 도출함
- 개발사업 경관심의 시 참고 기준으로 활용 가능한 지침은 총 9개이나 개발사업의 지역, 유형, 규모 등에 따라 실무자와 심의위원의 선택적인 적용이 필요함

▼ [표 5-20] 개발사업 관련 경관심의 참고지침

구분	관련 지침
개발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 경관기본계획 - 해안경관 관리 가이드라인 - 항만친수시설 조성 및 관리 지침 - 항만재개발 및 마리나항만 경관 가이드라인 - 보행자 중심의 가로경관 가이드라인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 -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 - 조경설계기준

- 관련 지침 내용 분석을 통해 검토항목별로 참고 기준 제시를 하였으나 개발사업의 경우 검토항목 자체가 포괄성을 띠고 있어 심의위원과 실무자가 사업의 내용에 따라 적절한 참고기준 설정이 중요함

▼ [표 5-21] 개발사업 관련 경관심의 참고기준

검토항목	참고기준
경관을 고려하여 밀도, 용도 배치 등 토지이용계획과 교통처리계획 등을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안선 거리별 경관 가이드라인 (해안경관 관리 가이드라인 pp.6-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안경관 관리 기본방향 및 원칙 - 해안선 보호구역(40m) 가이드라인 - 해안 연접관리구역(500m) 가이드라인 - 해안선으로부터 거리별 가이드라인 - 해안 중점관리구역(100m) 가이드라인 - 서해안권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규모, 장소의 특성 및 이용자를 고려한 경관구조(권역, 축, 거점)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안경관유형 및 등급별 가이드라인 (해안경관 관리 가이드라인 p.13-5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개 경관유형별로 조망, 건축물, 오픈스페이스, 공공·기반시설물, 옥외광고물, 색채 가이드라인 제시 - 시가지경관 / 산업경관 가이드라인 - 역사문화경관 가이드라인 - 농어촌경관 / 관광휴양경관 가이드라인 - 자연경관 / 생태경관 가이드라인
경관구조별 장소성·조화성 확보 및 특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만친수공간 유형별 조성지침 (항만친수시설 조성 및 관리 지침 pp.5-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험형 / 조망형 / 생태형 친수공간 조성지침 - 레저형 / 교육형 / 휴게형 친수공간 조성지침
토지이용, 지형·지세, 주변 지역의 스카이라인 등을 고려한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만재개발 및 마리나항만 경관 조성 (항만재개발 및 마리나항만 경관 가이드라인 pp.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자인 원칙 - 주요 요소별 디자인 : 항만시설물, 항만구역 건축물, 가로경관, 옥외광고물, 색채, 야간조명
주변 맥락과 상징성을 고려한 주요 진입부, 경관거점 및 결절부 계획	

검토항목	참고기준
주변 지역의 가로체계, 토지 이용 등의 현황 및 계획을 고려하여 인접한 건축물, 가로, 공원 및 녹지와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공간 영역 가이드라인 (보행자중심의 가로경관 가이드라인 p.15, pp.47-4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행유효공간 / 보도포장 · 보행 영역 가이드라인 (보행자중심의 가로경관 가이드라인 p.15, pp.44-4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행유효공간 / 보도포장 · 가로시설물 영역 가이드라인(보행자중심의 가로경관 가이드라인 p.14, pp.37-4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로조경 / 가로조명 / 기타시설물
경관구조의 위계 및 특성 등을 고려한 건축물, 가로, 공원, 녹지 등의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도의 구조 및 설치 기준(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p.6) · 횡단보도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p.7) · 횡단시설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 pp.59-3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횡단보도, 자전거 횡단도 - 입체횡단보도(육교)
커뮤니티 활동을 활성화하고 휴먼 스케일을 고려한 보행환경 및 가로경관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행자 전용도로, 보행자 우선도로, 자전거 전용도로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pp.8-9) ·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 pp.55-3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치장소, 횡단구성
주변 여건, 규모, 위치 등에 따른 이용자 특성을 고려한 공원 및 녹지 등 오픈스페이스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청남도 오픈스페이스 경관설계지침 (충남경관기본계획, pp.343-35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픈스페이스 경관설계지침 10대원칙 - 공원 / 녹지 / 하천 - 보행자도로 / 자전거도로 및 자동차도로 - 공개공지 · 공간시설 (광장, 공원, 녹지 등)(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pp.14-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장 / 공원 / 녹지 / 유원지 / 공공공지 · 도시공원의 설치·관리(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 pp.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공원의 일반적 설치기준 - 도시공원 조성계획의 수립기준 - 도시공원시설의 안전기준 · 도시공원의 유형별 세부기준(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 pp.4-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권공원 :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 주제공원 : 역사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도시농업공원, 기타공원 · 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 pp.1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충녹지 및 경관녹지 - 연결녹지 - 생태통로 기능의 연결녹지조성 세부기준 - 녹도 기능의 연결녹지조성 세부기준 · 공원, 광장, 녹지 기본설계 (조경설계기준 pp.63-7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공원 및 광장 - 주제공원, 자연공원, 생태공원, 녹지
토지이용, 지형·지세, 주변 지역의 스카이라인, 대상지의 정체성 등을 고려한 건축물의 배치, 형태, 규모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청남도 건축물 경관설계지침(충남경관기본계획, pp.333-34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경관설계지침 6대원칙 - 공동주택, 단독, 다가구주택 건축물 - 상업, 업무, 공업 건축물 - 공공건축물 - 농산어촌주택, 축사건축물 · 건축물 영역 가이드라인 (보행자중심의 가로경관 가이드라인 p.15, pp.50-5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치 / 형태 / 저층부
건축물, 가로, 공원 및 녹지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통합적·입체적으로 계획	
가로등, 신호등, 전신주, 도로 표지판, 시설안내판 등 가로 시설물은 보행환경 및 경관을 고려하여 통합자주로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시설물 가이드라인 (보행자중심의 가로경관 가이드라인 p.21, pp.74-7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대상 / 형태

(6) 건축물 경관심의 참고 지침과 기준

- 건축물 경관체크리스트 검토항목과 관련 지침 내용 분석을 통해 참고기준을 도출함. 건축물 경관심의 시 참고 기준으로 활용 가능한 지침은 총 10개임

▼ [표 5-22] 건축물 관련 경관심의 참고지침

구분	관련 지침
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 경관기본계획 - 충남 건축물 색채 디자인 가이드라인 - 충남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 보행자 중심의 가로경관 가이드라인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 보도설치 및 관리 지침 - 가로수 조성 및 관리규정 고시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 조경기준 - 빗공해 방지를 위한 가로등 설치·관리 권고 기준

- 관련 지침 내용 분석을 통해 검토항목별로 참고 기준을 제시함. 가급적 검토항목별로 참고 지침과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나 검토항목의 중복 및 포괄성, 지침 및 기준의 다양성으로 인해 다수의 검토항목에 다수의 참고 기준을 제시하였음

▼ [표 5-23] 건축물 관련 경관심의 참고기준

검토항목	참고기준
지역의 장소성 및 인접 건축물과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등 주변과 조화로운 계획(건축선, 스카이라인, 형태, 입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청남도 건축물 경관설계지침 (충남경관기본계획, pp.333-34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경관설계지침 6대원칙
구릉지의 경우 지나친 옹벽발생을 지양하고 주변 지형에 순응한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주택, 단독, 다가구주택 건축물 - 상업, 업무, 공업 건축물
건축물로 인해 기존 보행자들의 통행이 단절되지 않도록 주변 가로체계를 고려하여 배치하고, 필요시 공공보행통로를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건축물 - 농산어촌주택, 축사건축물 · 건축물 영역 가이드라인 (보행자중심의 가로경관 가이드라인 p.15, pp.50-53)
대규모 건축물의 경우 기반부를 설치하거나 전면부를 분절하는 등 휴먼스케일의 보행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치 / 형태 / 저층부

검토항목	참고기준
획일적이거나 과장된 디자인, 자극적인 색채 등은 지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청남도 건축물 색채 디자인 가이드라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용도별 색채 가이드라인 – 단독주택, 공동주택 – 상업 및 업무건축물 – 공공건축물 – 산업 및 기타건축물 · 충청남도 색채 경관설계지침 (충남경관기본계획, pp.367-37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지역 – 상업·업무지역 – 공업·기타지역 – 주거지역 및 상가 / 학교 / 창고 – 공공시설물 / 사인물 / 보행공간
옥상설비 및 부속설비가 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안전시설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pp.42-5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에 설치되는 장애인 안전시설 종류 – 장애인을 위한 보도 설치 – 턱낮추기 및 연석경사로 설치 – 경사로, 점자블록 보도설치 · 보행 영역 가이드라인 (보행자중심의 가로경관 가이드라인 p.15, pp.44-4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행유효공간 / 보도포장 · 보도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 pp.12-3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치장소, 형식선정 – 횡단구성, 구조, 안전시설 설치 · 가로시설물 영역 가이드라인 (보행자중심의 가로경관 가이드라인 p.14, pp.37-4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로조경 / 가로조명 / 기타시설물 · 가로수 조성 (가로수 조성 및 관리규정 고시, pp.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로수 식재 위치 – 가로수 식재 기준 · 외부공간 영역 가이드라인 (보행자중심의 가로경관 가이드라인 p.15, pp.47-4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행유효공간 / 보도포장 · 가로유형별 가이드라인 (보행자중심의 가로경관 가이드라인 p.16-20, pp.54-7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심상업가로 / 복합용도가로 · 주차장 결정·구조·설치 기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p.11) · 대지안의 식재기준 (조경기준 pp.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경면적의 산정 및 배치 – 식재수량 및 규격, 식재수종 – 조경시설의 설치
장애인, 노인 등 보행약자의 접근, 이용,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무장애설계 (Barrier free) 적용	
담장, 울타리 등은 주변 건축물 및 지역특성과 조화되는 색채, 재료, 디자인 등 사용	
건축물의 진입부 및 저층부는 가능한 경우 이용자·보행자를 위해 공원(쌈지공원, 도심형 공원 등), 광장 등으로 계획	
건축물 진입부에 이용자의 시각을 방해하는 과도한 시설물 설치 지양	
보행환경을 저해하지 않도록 차량·주차·보행 동선을 계획하고, 가로와 인접한 부분이나 주 보행로와 인접한 부분에는 주차장 설치 지양	
공개공지의 경우 인접한 건축물 공개공지의 특성과 입지를 고려하여 통합적 이용이 가능하도록 계획	
공개공간은 보행로와의 연계 등 다양한 계획기법을 통한 공공성 확보	

검토항목	참고기준
건축물의 입면과의 통합적 계획 및 해당 지역의 특성에 대한 배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 옥외광고물 설치 규정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판의 총수량 - 일반적 표시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 - 가로형, 세로형, 돌출간판, 공연간판의 표시방법 - 옥상간판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 지주 이용 간판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 입간판 표시방법 -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 현수막, 애드벌룬의 표시방법 - 벽보, 전단, 선전탑 및 아치광고물 표시방법 - 창문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해당 지자체의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지침 등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경관설계지침 (충남경관기본계획, pp.352-36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외광고물 경관설계지침 7대원칙 - 옥외광고물 일반지침 - 공동주택 옥외광고물 - 상업·업무시설 옥외광고물 - 공공·공업건축물 옥외광고물 - 국도변 옥외광고물
건축물의 용도 및 주변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조도·휘도·색채 등을 계획하되, 과도한 연출은 지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청남도 야간경관 설계지침 (충남경관기본계획, pp.374-38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지역 - 상업·업무지역 - 공업·기타지역 - 주거지역 및 상가 / 학교 / 창고 - 공공시설물 / 사인물 / 보행공간 · 조명시설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pp.12-21)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총칙 2) 기능 및 조명 요건 3) 설치장소 4) 연속조명 5) 국부조명 6) 터널조명 7) 유지관리 · 가로조명 가이드라인 (보행자중심의 가로경관 가이드라인 p.14, pp.39-4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결한 형태로 디자인, 가로조명 유형 최소화 - 지주형 시설물과 통합설치 - 가로수 및 지주형 시설물과 적절한 간격 등 · 가로등 설치 기준 (빛공해 방지를 위한 가로등 설치·관리 권고 기준 p.1)

3. 경관심의 프로세스 체계화

1) 심의 절차별 주요 업무

(1) 사전검토 절차

- 경관심의운영지침에서 사전검토절차와 본심의 절차를 제시하고 있음
- 경관심의운영지침을 토대로 사전검토절차와 심의절차를 구성하였음
- 경관심의 이전에 해당 사업의 담당부서 또는 사업주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검토를 수행할 수 있음
- 본심의 이전에 해당 사업의 담당부서 또는 사업주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검토를 수행할 수 있음
- 사전검토 외에 지자체의 여건을 고려하여 사전협의, 자가점검 체크리스트 등 본심의 전에 심의 내용을 협의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함
- 심의 지침 상의 사전검토절차를 도식화하면 표 5-24와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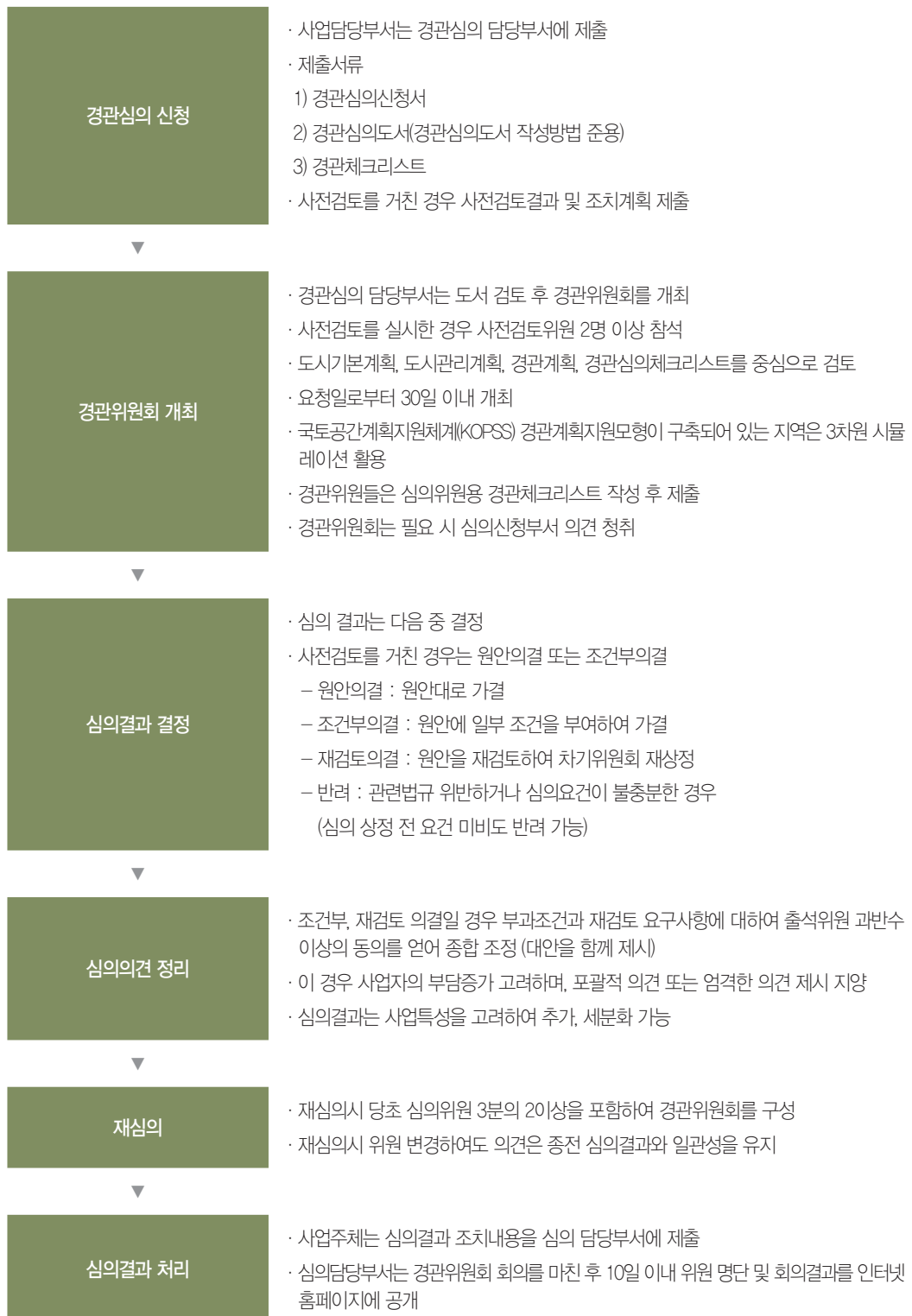
▼ [표 5-24] 경관심의 사전검토절차 (임의절차)



(2) 경관심의 절차

- 지자체 업무 협의 단계에서 심의부서는 사업부서에 심의대상을 통보하고 사업담당부서는 경관심의 담당 부서에 심의를 신청함
- 심의부서는 심의대상, 자문대상 등을 경관계획, 경관조례를 통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사업부서에 명확하게 심의대상을 사전에 공지하여야 함
- 경관법 시행령 및 경관조례에 의한 심의대상사업은 모두 심의가 진행되도록 업무 진행
- 지자체의 업무여건, 사업규모, 사업유형 등에 대해 사업부서와 심의부서 협의를 통해 사전검토, 사전협의, 자문, 심의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
- 전체 경관심의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기 보다는 사업유형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진행하는 것이 심의의 질이 높아짐
- 경관위원회 개최 전 심의부서는 설계자에게 심의도서 작성에 대해서 명확히 공지하여야 함
- 경관체크리스트 상의 검토항목과 부합하는 심의도서 작성이 중요하며 심의담당자는 심의 신청자에게 명확하게 공지하여야 함
- 심의부서는 심의의 주요 이슈에 대해 명확히 파악하고 이를 경관위원회에 공지하여야 함. 또한 신청자에게 심의 범위와 검토항목을 미리 공지하고 검토항목 중심으로 발표를 유도하여야 함
- 현장답사 후 경관심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불가능할 경우 이를 대체할만한 경관심의도서로 대체 하도록 함
- 심의위원들은 경관심의도서와 체크리스트 검토를 통해 심의의 주요 이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또한, 경관 심의 항목에 부합되는 심의 의견을 제시하고 개인적 선호와 주관적인 견해는 지양해야 함
- 심의 결과는 심의위원들의 의견을 종합 정리하여 이를 토대로 결정하여야 함
- 경관심의 지침에서는 재심의시 당초 심의위원 3분의 2 이상을 포함하여 경관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음. 또한 재심의시 위원 변경하여도 의견은 종전 심의결과와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함
- 재심의시 재검토 의견을 제시한 의원은 필히 참석하거나 서면심의를 통해 수정사항을 검토할 수 있게 하고 이를 재심의 결과에 반영하여야 함
- 심의 담당부서는 경관위원회 결과를 회의 후 10일 이내에 명단 및 회의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하여야 함

▼ [표 5-25] 경관심의절차



2) 심의 도서 작성 지침

- 경관체크리스트와 도서간의 상관성을 검토하여 심의도서별로 작성할 내용을 경관체크리스트 내용 중심으로 규정함
- 이를 토대로 충남 경관심의 도서 목록과 내용을 제시하였으며 시·군 경관심의 담당자들이 보완 후 활용함

▼ [표 5-26] 충남 경관심의도서 작성기준 도출 및 활용 절차



- 현재 경관심의도서 작성방법에서는 명확한 도면명과 각 도면에 담을 내용에 대한 기술이 모호함
- 담당 실무자 및 사업자(설계자)의 해석 및 재량에 따라 심의도서의 내용, 수준이 달라질 수 있음
- 심의지침에서는 A4 30매 이내의 규정이 있으나 현실적이지 않음
- 심의도서 작성방법에서는 항목별로 기재내용을 기술하고 있으나 정확한 도서명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 도서 작성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표 5-27] 사업유형별 심의기준과 도서 작성방법

항목	사회기반시설사업	개발사업	건축물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지 - 목차 - 사업개요 - 현황조사 및 분석 - 기본구상 - 주요시설 설계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지 - 목차 - 사업개요 - 경관 현황조사 및 분석 - 경관계획 기본방향, 목표 - 경관기본구상 - 경관부문별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지 - 목차 - 건축물 개요 - 현황분석 - 배치, 규모, 형태, 입면 - 외부공간계획 - 옥외광고물계획 - 야간경관계획
심의도서 작성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4 용지, 30면 이내 작성 - 도서는 간결하게 표현하고 도표와 그림을 활용하여 시각화하여 작성 - 기초자료 및 현황자료는 가능한 최신의 것을 사용 - 별도의 기초자료 활용 시 출처 명시 - 도면은 계획대상과 범위를 명확하게 구분 - 계획지역의 규모에 따라 축척은 통용되는 수준으로 작성 - 범례를 통하여 도면 이해 쉽게 작성 - 심의도서는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 -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여야 할 경우 부록으로 제출 - 건축물 도서 단위의 표시기준은 미터법을 사용 - 개발사업의 경우 사전경관계획 수립 시, 개발계획에 포함된 경관계획 또는 사전경관계획을 경관 심의 도서로 같음 - 내용은 대규모 개발사업의 사전경관계획 수립 매뉴얼 준수 		

- 경관심의도서 작성방법 상의 기재내용과 방법을 토대로 작성도서 목록을 도출하였으며 작성도서 목록은 최소화 함
- 심의지침 상에서는 A4 30매 이내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의 심의도서 작성 여건을 보았을 때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 함

(1) 사회기반시설사업 경관심의도서 목록과 내용

- 경관심의도서 작성방법 상의 기재내용과 기재방법을 토대로 작성도서 목록을 도출하였고 작성도서 최소화를 위해 관련 내용 중심으로 도서 목록을 축약하였음. 사회기반시설사업의 경우 총 24종의 도서로 구성됨

▼ [표 5-28] 충남 사회기반시설사업 심의도서 목록 및 작성내용

작성도서 목록	비고
1. 표지	· 사업명, 재심여부, 제출일
2. 목차	· 심의도서 순서
3. 사업개요	· 사업의 위치, 규모, 기간
4. 사업추진일정표	· 추진 경위 및 일정 · 타 위원회 심의 여부 및 결과
5. 사전 검토(경관심의) 조치표	· 사전 검토(경관심의) 시 조치 사항
6. 경관관련계획 및 지침 분석표	· 경관계획 내용 분석표 ·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분석표 · 기타 도시 관련계획 분석표 · 설계지침 또는 가이드라인 분석 표 ※ 관련계획 및 설계지침이 있는 경우
7. 경관자원현황도	· 대상지 주변 자연경관자원 현황 (산, 하천, 녹지 등)
8. 공공공간 및 도시구조 현황도	· 주요 공공공간, 도시구조의 현황 및 위치 사업대상지와의 관계
9. 주요 건축물 및 시설물 분포도	· 사업대상지 주변의 주요 건축물, 시설물 현황
10. 지형도	· 주변 지형을 파악할 수 있는 도면 · 대지 종횡단면도
11. 현황분석종합도	· 2차원 지형도 및 항공사진 위에 해당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사항과 공간적 범위 표기 · 자연경관자원현황, 주요 공공공간, 도시구조, 건축물, 시설물, 지형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도면 · 대상지 및 주변 현황사진 첨부
12. 경관형성 및 관리 개념(도)	· 경관형성 및 관리 기본방향 제시 · 기본방향 실현을 위한 목표 및 전략 기술
13. 배치 및 평면도	· 전체적인 선형 및 구조 설명 · 대상지 및 주변지역 포함하여 표현
14. 횡단면도	· 전체적인 선형 및 구조 설명 · 대상지 및 주변지역 포함하여 표현
15. 사업 전, 후 지형도	· 사업으로 인한 경관변화를 예측할 수도 있도록 지형도, 항공사진에 표현 · 현황과 비교
16. 영역별 설계방향 개념도	· 주변 현황 및 이동속도 등 특성에 따라 영역 구분 · 평면도에 영역별 설계방향 설정한 다이어그램 작성 · 사례사진 등 예시 첨부

작성도서 목록	비고
17. 주요 경관장소 계획도	· 주요 경관장소에 대한 계획 설명 – 경사지 및 중요한 경관자원과 인접한 공간 – 집중 이용이 예상되는 공간 · 단면도와 스케치 작성
18. 연속경관 및 조망 이미지	· 이동 속도에 따른 시설 이용자가 바라보는 연속경관 이미지 · 주변지역에서 해당 시설을 바라보았을 때의 조망 이미지
19. 주요시설 현황 및 배치도	· 경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요시설, 공작물 및 장소를 선정 – 장소 예 : 도시진입부 – 주요시설 : 교량, 터널, 교차로, 휴게시설, 방음시설 등
20. 주요시설 계획도	· 주요 시설의 규모, 배치, 형태 제시 · 주변지역 포함한 배치도, 스케치, 이미지 첨부 ·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 활용
21. 주요시설 대안 비교표 및 도면	· 대안 제시 후 장단점 비교
22. 야간경관조명 위치도	· 주요 시설의 조명 위치도
23. 야간경관조명 일람표	· 조명 사양 · 종류, 조도, 휘도, 색상
24. 야간경관조명 예시도	· 경관조명 예시도

(2) 개발사업 경관심의도서 목록과 내용

- 작성도서 최소화를 위해 관련 내용 중심으로 도서 목록을 축약하였으며 개발사업의 경우 총 17종의 도서로 구성됨. 심의도서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개발사업의 유형 등에 고려하여 지자체에서 조정하여야 함

▼ [표 5-29] 충남 개발사업 심의도서 목록 및 작성 내용(안)

작성도서 목록(안)	작성내용 및 방법
1. 표지	· 사업명, 재심여부, 제출일
2. 목차	· 심의도서 순서
3. 사업 개요	· 사업의 위치, 규모, 기간
4. 사업추진 일정표	· 추진 경위 및 일정 · 타 위원회 심의 여부 및 결과

작성도서 목록(안)	작성내용 및 방법
5. 사전 검토(경관심의) 조치표	· 사전 검토(경관심의) 시 조치 사항
6. 경관관련계획 및 지침 분석표	· 경관계획 내용 분석표 ·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분석표 · 기타 도시 관련계획 분석표 · 설계지침 또는 가이드라인 분석 표 ※ 관련계획 및 설계지침이 있는 경우
7. 경관자원현황도	· 대상지 주변 자연경관자원 현황 (산, 하천, 녹지 등)
8. 공공공간 및 도시구조 현황도	· 주요 공공공간, 도시구조의 현황 및 위치 사업대상지와의 관계
9. 주요 건축물 및 시설물 분포도	· 사업대상지 주변의 주요 건축물, 시설물 현황
10. 지형도	· 주변 지형을 파악할 수 있는 도면 · 대지 종횡단면도
11. 현황분석종합도	· 2차원 지형도 및 항공사진 위에 해당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사항과 공간적 범위 표기 · 자연경관자원현황, 주요 공공공간, 도시구조, 건축물, 시설물, 지형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도면 · 대상지 및 주변 현황사진 첨부
12. 경관형성 및 관리 개념(도)	· 경관형성 및 관리 기본방향 제시 · 기본방향 실현을 위한 목표 및 전략 기술
13. 경관기본구상도	· 대상지의 토지이용 및 가로체계 등을 고려하여 주요한 공간의 골격을 설정하고 각 공간별로 계획방향 설정 · 경관상 중요한 지점을 점, 선, 면의 다이어그램으로 표현 · 내용 이해 가능한 축적 사용
14. 토지이용계획도	· 건축물, 가로, 공원 및 녹지 등 주요 경관요소를 간략한 선으로 표현 · 가로체계 설정, 공간 특성에 따른 영역의 설정, 주요 시설 및 프로그램 배치 · 대지 및 도로 주요 지점의 표고 값 기재
15. 스카이라인 계획도	· 전체적인 지역경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건축물의 규모와 형태 · 2개 이상의 주요 횡단면의 윤곽을 간략히 표현
16. 공원 및 녹지계획도 (오픈스페이스 계획도)	· 각 장소의 규모, 위치, 여건 등을 파악하여 종류 및 위계를 구분하여 토지이용 계획도에 채색하여 표현 · 각 공원 및 녹지의 기본방향을 간략한 글과 예시도로 설명
17. 주요 가로 단면도	· 가로체계 설정에 따른 각 가로 위계별 특성 및 계획방향 표현

(3) 건축물 경관심의도서 목록과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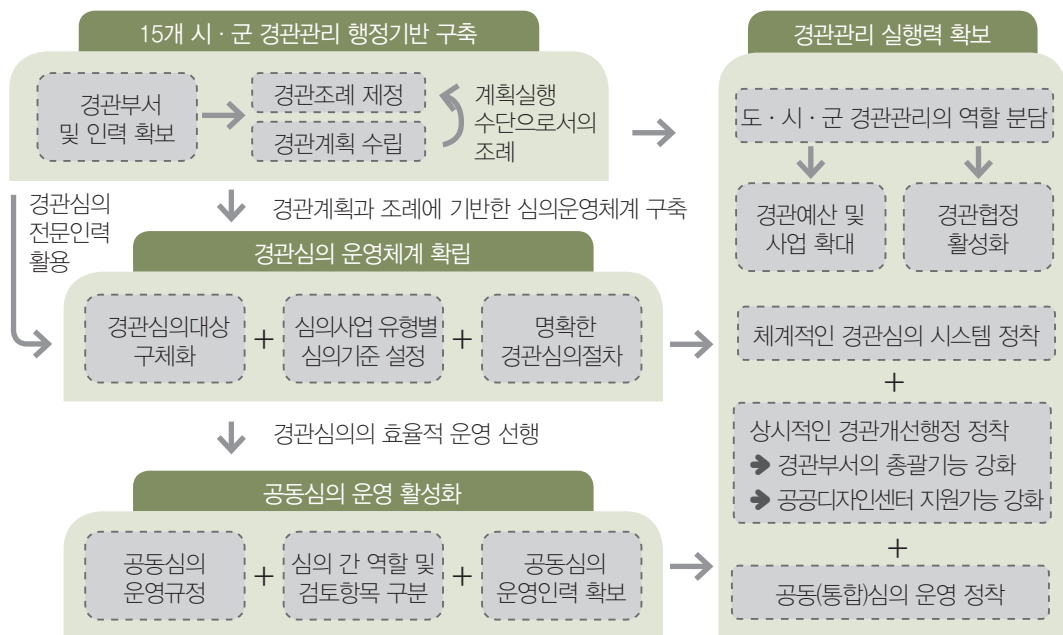
- 건축물의 경우 총 18종의 도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심의도서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지자체에서 조정하여야 함

▼ [표 5-30] 충남 건축물 경관심의도서 목록 및 작성 내용(안)

작성도서 목록	작성내용 (방법)
1. 표지	· 사업명, 재심여부, 제출일
2. 목차	· 심의도서 순서
3. 건축물 개요	· 건축물 위치, 규모, 용도
4. 건축일정표	· 추진 경위 및 일정 · 타 위원회 심의 여부 및 결과
5. 사전 검토 조치표	· 사전 검토(경관심의) 시 조치 사항
6. 경관관련계획 및 지침 분석표	· 경관계획 내용 분석 표 · 경관·미관지구 관리계획 내용 분석 표 · 지구단위계획 내용 분석 표 · 경관중점관리구역 관리계획 분석 표 · 기타 도시·건축 관련계획 분석표 · 설계지침 또는 가이드라인 분석 표 ※ 관련계획이 설계지침이 있는 경우
8. 경관자원현황도	· 대상지 주변 자연경관자원 현황 (산, 하천, 녹지 등) · 대상지 주변 주요 건축물 분포
9. 가로 및 외부공간 현황도	· 주변 가로 및 외부공간 현황 파악 가능
10. 지형도	· 주변 지형을 파악할 수 있는 도면 · 대지 종횡단면도
11. 현황분석종합도	· 2차원 지형도 및 현황사진 위에 해당 건축물의 설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사항 기재 · 자연경관자원현황, 주변 주요 건축물, 가로 및 외부공간 현황, 지형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도면 · 대상지 및 주변 현황사진 첨부
12. 경관형성계획도	· 주변 경관 및 인접 건축물과의 조화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도면 · 주변 건물 입면도와 같이 표현 · 건축선, 건축물 높이, 형태, 재료 파악이 가능하게 작성
13. 대지 종횡단면도	· 건물과 주변 지형과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도면 · 구릉지의 경우 지형변화, 옹벽설치 여부 등이 파악 가능한 도면
14. 배치도	· 대지 내 건물 배치도면 · 차량 진출입 동선 및 주차 계획 표기 · 보행자 동선 표기
15. 입면도	· 4방향 입면도 · 옥상 및 외벽설비가 포함되게 작성
16. 외부공간계획도	· 주변 보행가로 및 인접 외부공간과의 연계를 파악할 수 있는 도면 · 배치도 등으로 설명하되 대상지를 포함한 주변지역 포함 표현
17. 가이드라인 분석표	· 해당 지자체 (도 및 시, 군)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분석
18. 옥외광고물 설치 계획도	· 옥외광고물 설치 계획도 · 위치, 크기, 소재, 색채 표현
19. 옥외광고물 설치 입면도	· 옥외광고물이 포함된 건축물 입면도

VI. 충남 경관관리 단계별 대책

- 본 연구의 목적은 충남 경관심의의 운영체계 개선을 통한 경관관리의 실행력 강화임. 이를 위해 도 및 시·군의 단계별 대책을 제시함
- 단계별 대책은 그림 6-1과 같이 요약되며 시·군 경관관리의 행정기반 구축을 기반으로 경관심의 운영체계 확립이 가능함. 경관심의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때 건축심의, 도시계획심의와의 공동심의 운영 활성화가 가능함
- 도·시·군 경관관리의 역할 분담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며 경관심의·경관사업·경관협정 등이 활성화되어야 실행력이 확보될 것으로 판단됨
- 추가적으로 공공사업에 대한 경관 담당부서의 지원 및 조정 역할이 강화되고 공공디자인센터의 지원기능 등이 강화된다면 상시적인 경관개선행정 체계가 작동될 것으로 판단됨
- 제시된 대책들은 도 및 시·군 차원에서 후속 연구를 통해 구체화가 필요함



▲ [그림 6-1] 충남 경관관리 단계별 대책

(1) 경관부서 및 인력 확보

- 1차적으로 도 및 시·군의 경관관리 행정기반 구축이 시급함. 경관관리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경관업무만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인력이 배치되어야 함
- 도 및 일부 시·군을 제외하고는 조직, 인력, 계획, 조례 등 경관관리 행정을 위한 기본적인 실행수단이 미흡한 상황임
- 옥외광고물 등 기타 부수적인 업무는 배제하고 경관심의, 경관사업, 경관협정 등 경관법에 의한 경관관리 업무에 집중하도록 해야 함
- 건축, 도시, 조경 등 경관관련 분야 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전문인력이 경관조례 제정, 경관계획 수립 업무를 담당하도록 해야 함. 어려울 경우 전문가의 자원과 자문 하에 조례 및 계획 수립 업무를 해야 함
- 업무 지속성이 확보되도록 경관 및 디자인 분야는 순환보직 적용방식의 제외나 조정이 필요함

(2) 경관조례 및 계획 수립

- 시행령 개정 이후 2015년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경관조례가 제정되어 12월 현재 4개 시·군을 제외한 11개 시·군이 경관조례를 제정하였음
- 2015년에 조례를 제정한 시·군은 조속히 경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 수립된 경관계획은 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재수립되어야 함
- 경관조례가 계획의 내용을 실행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연계시켜야 하며 필요할 경우 계획 수립 후 조례의 재개정도 검토하여야 함
- 계획과 조례 내에 경관심의 운영과 관련 된 내용을 명확히 규정해야 함. 경관심의 대상, 심의기준, 심의절차, 위원회 구성 등 심의 운영 방안은 지자체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구성해야 함

(3) 경관심의 운영체계 수립 및 공동심의 활성화

- 행정기반 마련 후 계획과 조례에 의해 심의를 운영하고 동시에 공동심의 활성화를 도모해야함
- 시, 군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경관심의 대상 설정이 중요하며 중점경관관리구역 등을 활용한 심의 대상 설정이 바람직함

- 지자체의 자율적인 경관심의 운영체계 확립과 더불어 장기적으로 공동심의를 활성화해야 함. 이를 위해서는 공동심의 운영규정을 통해 운영 주체, 개별 심의 간 역할분담 등을 명확히 해야 함
- 장기적으로는 통합심의 방식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 경관심의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도서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함
- 시뮬레이션이나 조감도의 정확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2차원 도면에 의존한 심의보다는 3차원 공간정보시스템(KOPSS)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자원과 보완이 필요함
- 중앙정부나 도 차원에서 새움터와 유사한 형식의 경관심의행정시스템 도입 검토도 필요함

(4) 도·시·군 경관관리의 역할 분담

- 도·시·군 경관계획의 정합성 확보 및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이를 통해 체계적인 경관관리 행정이 이루어져야 함
- 10만 이하 지자체의 경관계획 수립을 활성화해야하며 이를 위한 중앙정부 및 도의 지원(유도) 방안 도입이 필요함
- 향후 수립되는 충남 경관계획과 15개 시·군 경관계획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해야 함. 이를 위해서는 도 경관 계획에서 도와 시·군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함

(5) 경관사업 및 경관협정 활성화

- 기본적인 경관관리 수단인 심의 체계를 확립한 후 경관사업, 경관협정 등 경관관리의 다양한 수단을 활성화 해야 함
- 경관담당부서의 인력, 예산, 사업을 확대하고 경관협정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간판개선, 가로경관개선 등 획일화 된 경관사업 방식을 지양하고 지자체 특성이 반영 된 사업추진 방식 검토 및 도입이 필요함
- 일회성 경관사업은 지양하고 경관계획에서 수립된 장기적인 경관사업과 현안에 대응하는 단기적인 경관 사업을 적절하게 활용해야 함

- 경관협정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주민참여 방안과 대책이 수립되어야 함. 지역정서와 인식수준에 맞게 경관협정 방식의 다양화와 프로세스 재설계가 필요함

(6) 상시적인 경관개선행정 정착

- 경관심의, 경관사업, 경관협정 등 경관법에서 제시하는 경관관리 수단 외에도 지자체의 특성에 맞는 상시적인 경관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활용해야 함
- 우선 지자체 경관부서의 디자인 총괄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임
- 공공사업의 디자인 관리를 위해 충남공공디자인센터의 컨설팅 기능과 지원기능 (정책연구, 기반강화사업)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여건이 허락되는 지자체는 경관상임기획단, 경관어드바이저 제도 등 전문가의 지원시스템 도입 검토도 필요함
- 1차 경관정책기본계획에서 추진 중인 지역경관센터 설립 · 지정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전문가 활용 영역과 기능을 확대해야 함

Ⅶ. 결론

- 2007년 제정 된 경관법이 2013년 8월에 전부 개정되었고, 시행령은 2014년 11월에 개정되었음. 개정 목적은 지속적으로 제기 된 경관법의 실행력 부족을 해결하는 것임
- 구체적으로 보면 5년 단위의 국가경관정책기본계획 수립, 국가 차원의 중앙경관위원회 설치, 경관계획 수립 의무화 및 수립권자 확대, 경관계획의 내용 강화, 도의 시·군 경관계획 승인절차 폐지, 일정규모 이상의 사회기반시설·개발사업·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도입, 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 완화 등으로 요약 됨
-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경관계획, 경관사업, 경관협정에 국한되어 있던 경관심의를 사회기반시설사업·개발사업·건축물로 확대하고 대상과 규모를 명기하였으며 지자체 조례에서 심의 대상을 구체화하도록 함
- 체계적 심의를 위해 지침이 수립되었으나 시·군 실무자들의 활용은 미흡하며 변화된 경관심의운영은 과도기적 양상을 띠고 있음. 심의 운영절차 정립 미흡, 경관심의 기준의 객관성 부족 등으로 인해 심의의 효율성 저하 문제는 여전히 제기되고 있음
- 본 연구는 사회기반시설·개발사업·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도입에 발맞춰 충남 경관심의 운영 시스템 구축을 위한 3가지 주요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충남 경관관리의 실행력 확보를 위한 단계별 대책을 추가적으로 제시하였음
- 개정법 및 시행령이 반영된 경관심의를 시행된 것은 2015년으로 심의운영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음. 2015년 12월 현재 15개 시·군 중 4개시와 도가 경관심의를 운영하고 있음
- 2015년에 9개 시·군이 경관조례를 개정하거나 제정하여 심의 운영의 기본적인 기반이 마련되고 있음. 그러나 개정 내용이 반영된 지자체의 경관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경관관리의 구체적인 방향 설정은 미흡함
- 경관계획과 경관조례의 빈약함, 계획-조례-심의의 유기적인 연계 미흡이 심의 운영의 정착을 지연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심의 정착을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시행착오가 예상됨
- 본 연구는 경관심의를 아직 시행되지 않는 11개 시·군의 심의운영을 위한 기본방향과 대책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맞추었으며, 이를 통해 현재 심의운영 중인 도 및 4개 시·군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음
- 이를 위해 개정된 경관심의운영지침 분석, 경관심의 선진사례 분석, 충남 경관심의 실태분석을 통해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였음
- 문헌분석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지자체 경관심의를 참여관찰 방식으로 분석하였으며, 실무자 인터뷰를 통해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문제점을 도출하였음

- 연구의 주요성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됨
- 첫째, 경관법 및 심의운영지침 분석을 통해 지자체 차원에서 경관관리를 위해 대응이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였고 경관심의절차의 구체화, 심의도서목록과 주요 내용을 도출하였음. 향후 지자체차원에서 경관계획과 경관조례 수립 시 검토 내용으로 활용이 가능함
- 둘째, 광역 지자체의 경관심의 운영 현황, 영국과 일본의 심의 제도 분석, 국내 유사 심의 분석을 통해 경관심의 개선의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 광역지자체 경관심의 운영 특성은 크게 다섯 가지로 요약되는데, 경관심의 및 자문대상을 시행령보다 강화하였고, 심의·자문 외에 사전경관협의·사전검토를 활용하고 있으며, 위원회 운영을 다각화하여 본 위원회와 소위원회를 적절하게 운용하고 있음. 또한 명확한 심의절차를 공식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지역적 특성이 강화된 경관관리 방안을 도입하고 있음
 - 영국 CABE의 디자인 리뷰는 형식적, 규제적 접근이 아닌 실용적인 조언을 통해 공간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임. 따라서 사업의 규모, 위치, 중요도 등 전문가들의 판단에 의해 가변적으로 심의 대상을 선정하는 것이 특징임. 우리나라와 달리 사업의 초기단계부터 리뷰가 진행되며 다양한 리뷰 방식을 제공하고 있음. 심의의 투명성 확보, 교육활용, 타 프로젝트 참고를 위해 대중에게 참관을 허용하고 있음
 - 일본 경관관리의 가장 큰 특징은 지자체의 자율적인 경관관리가 가능하도록 조례에 위임하는 내용과 범위가 넓고 계획과 조례가 일체화되어 운용되는 것임. 즉, 경관계획과 조례의 수립 후 경관관리가 가능한 방식을 지향하고 있음. 또한 경관협의회 구성 등 다양한 주체와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사전협의를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음
- 셋째, 충남 경관행정기반, 도·시·군의 경관심의 및 자문대상, 경관관련 위원회 운영 현황, 경관심의 참여 관찰, 실무자 인터뷰 등을 통해 심의의 운영현황과 문제점을 도출하였음
 - 2015년 충남 도 및 시·군에서 개최된 49회의 경관관련 위원회와 157건의 심의대상사업을 분석하여 심의 사업의 유형과 심의결과를 제시한 점은 향후 후속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성이 매우 높음
 - 충남 경관심의 운영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중앙정부-도-시·군으로 이어지는 행정체계 및 법제의 구조적 한계, 지자체 행정 시스템, 심의 운영방식의 변화에서 생기는 과도기적 현상, 실무자·심의위원 등 참여 주체의 관계, 참여 주체의 인식 수준 등 복합적인 요인들이 관련되어 있음
- 넷째, 문제점 개선을 위해 충청남도 경관심의 운영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였음. 우선 시·군의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경관계획과 조례를 수립하여야 하며 이에 기반한 관리체계 구축이 시급함. 이를 통해 자율적인 심의 체계 및 공동심의 운영체계의 활성화 및 정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마지막으로, 심의체계 확립을 위한 일환으로 경관심의 참고기준과 표준적인 경관심의 프로세스를 제시하였음
 - 심의 참고기준은 시·군에서 경관계획 수립을 통해 구체적인 기준을 확보하기까지 한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경관심의기준을 제시하는 것임
 - 장기적으로는 지자체 자체적으로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경관계획 내에서 심의기준을 수립하여야 함
 - 심의 기준 도출을 위해 충남 경관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분석하였고, 심의대상 사업과 관련된 중앙정부 지침

74종을 분석하였음. 경관심의 체크리스트상의 검토항목과 관련된 지침과 기준을 정리하여 제시하였음
 - 그 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경관심의 기준의 객관성 부족 문제를 부분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판단 됨
 - 경관심의운영지침 분석과 개선방향, 선진사례 분석 등을 통해 경관심의 절차와 업무를 구체적으로 설명, 규정하여 심의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지침을 제공하였음

- 본 연구의 목적은 충남 경관심의 운영체계 개선을 통한 경관관리의 실행력 강화임. 이를 위해 도 및 시·군의 단계별 대책도 제시하였음
- 도·시·군 경관관리의 역할 분담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며 경관심의·경관사업·경관협정 등이 활성화되어야 실행력이 확보될 것으로 판단됨
- 추가적으로 공공사업에 대한 경관 담당부서의 지원 및 조정 역할이 강화되고 공공디자인센터의 지원기능 등이 강화된다면 상시적인 경관개선행정 체계가 작동될 것으로 판단됨
- 제시된 대책들은 도 및 시·군 차원에서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이 필요함

■ 참고문헌

〈 연구 및 홈페이지 〉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한국도시설계학회 (2008), 살고 싶은 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경관·건축디자인 설정 방안 연구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한국도시설계학회, 한국경관학회 (2011), 도시경관의 통합적 개선 추진 방안 연구, 국토해양부
- 경기개발연구원(2010), 경기도 통합디자인 정책방향 설정을 위한 해외정책동향 연구
- 국토교통부 (2011), 쾌적한 야간경관 형성을 위한 경관조명가이드라인 연구
- 국토교통부 (2013), 도시경관 개선을 위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 국토교통부 (2015), 제1차 경관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 국토교통부 간선도로과 (2012), 도로경관설계 안내서
-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2014), 개정 경관법령 주요내용, 2014 경관 담당자 워크샵 자료
-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2014), 보행자 중심의 가로경관 가이드라인
- 국토해양부 도로정책관 (2009), 자전거도로 시설기준 및 관리지침
- 국토해양부 도로정책관 (2011), 경관도로 정비사업 업무편람
- 국토해양부 도시정책관 (2013), 조경설계기준
- 국토해양부 수자원정책관 (2009), 하천설계기준·해설
- 국토해양부 하천계획과 (2009), 자연친화적 하천관리에 관한 통합지침
- 국토해양부 (2010), 미래지향적인 친수공간 형성을 위한 수변경관 가이드라인
- 김봉경, 오세경, 임재문 (2009), 일본의 경관법 시행에 따른 경관행정에 관한 연구, 한국도시설계학회지 10권 1호, pp. 5-20
- 김혜정(2013), 경관심의제도의 주요내용, 2013년 개정 경관법 특징과 향후 과제세미나 자료집
- 농림수산식품부 (2008), 농어촌 경관계획 수립 및 경관관리 업무편람
- 농림수산식품부 (2009), 농어촌 경관계획 수립 요령
- 변혜선 (2010), 경관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 충북개발연구원
- 산림청 (2009), 산림경관 관리기본계획
- 산림청 도시숲경관과 (2011), 산림경관 계획관리 업무편람
- 서울연구원 (2011), 서울시 경관계획에 따른 경관관리 운영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 서울연구원 (2014), 개정 경관법에 따른 서울시 경관정책 개선방향 연구

- 서울특별시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도시디자인과 편 (2012), 경관설계지침 업무매뉴얼 : 기본 및 시가지 경관계획 경관설계지침 업무매뉴얼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 (2014), 서울특별시 경관심의 운영 설명자료
- 인천경제자유구역청(2014), 인천경제자유구역 경관행정 · 서비스
- 전라남도 경관디자인과(2015), 아해! 경관과 디자인이 우리곁에 있구나, 전라남도 경관 · 공공디자인 정보지 2015년 여름호
- 충청남도 (2013), 2020 충청남도 경관기본계획
- 한국도시설계학회, 한국경관학회 (2012), 경관심의제도 운영 및 경관계획 내실화 방안 연구
- 행정안전부 (2008), 간판디자인 표준 가이드라인 및 매뉴얼 개발
- CABE (2005), Making design policy work
- Design Council (2013), Design Review Principles and Practice
- 岩田 暁, 野澤 康 (2013), 景観法に基づく景観協議会の実態と可能性に関する研究, 日本建築學會學術發表資料集
- 新宿区 都市計画部 景観と地区計画課 (2015), 新宿区 景観事前協議 · 行為の届出手引書
- 千代田区環境まちづくり部 景観 · 都市計画課 (2015), 景観事前協議の手引き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 <http://www.ifez.go.kr>
- 전라남도 경관디자인과 자료실 홈페이지
<http://www.jeonnam.go.kr/T769319/boardList.do?menuId=jeonnam0910030300>
- 세종시 홈페이지, http://www.sejong.go.kr/kor/sub04_09_02.do
- 일본 국토교통성 홈페이지, http://www.mlit.go.jp/toshi/townscape/toshi_townscape_tk_000016.html

〈 지방자치단체 조례 〉

- 강원도 (2014), 강원도 경관조례
- 경기도 (2015), 경기도 경관조례
- 경상남도 (2014), 경상남도 경관조례
- 경상북도(2009), 경상북도 경관조례
- 광주광역시 (2015), 광주광역시 경관조례
- 논산시 (2014), 논산시 경관조례
- 당진시 (2015), 당진시 경관조례
- 대구광역시 (2015), 대구광역시 경관조례
- 대전광역시 (2015), 대전광역시 경관조례

- 태안군 (2012), 태안군 경관조례
- 보령시 (2015), 보령시 경관조례
- 부여군 (2015), 부여군 경관조례
- 부산광역시 (2014), 부산광역시 경관조례
- 서울특별시 (2015), 서울특별시 경관조례
- 서산시 (2015), 서산시 경관조례
- 서천군 (2015), 서천군 경관조례
- 세종특별자치시(2014), 세종특별자치시 경관조례
- 아산시 (2015), 아산시 경관조례
- 예산군 (2015), 예산군 경관조례
- 울산광역시 (2014), 울산광역시 경관조례
- 인천광역시 (2015), 인천광역시 경관조례
- 전라남도 (2015), 전라남도 경관조례
- 전라북도 (2015), 전라북도 경관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2010), 제주특별자치도 경관조례
- 천안시 (2014), 천안시 경관조례
- 충청남도 (2015), 충청남도 경관조례
- 충청북도 (2014), 충청북도 경관조례
- 홍성군 (2015), 홍성군 경관조례

〈 경관심의대상 사업과 관련된 중앙부처령, 훈령, 예규, 고시, 공고 〉

- 가로수 조성 및 관리규정 고시 (산림청고시 제2013-87호)
- 개발사업 등에 대한 자연경관 심의지침 (환경부 예규 제389호)
-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국토교통부훈령 제569호)
- 건축관련 통합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522호)
- 건축물 녹화 설계기준 (국토해양부)
- 건축물의 범죄예방설계 가이드라인 (국토해양부기타 제호)
-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553호)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596호)

-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4-345호)
-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2015-333호)
- 경관심의 운영 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99호)
- 고령자 및 장애인을 위한 주택 안전기준 (국토해양부공고 제2011-491호)
- 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 (국토해양부공고 제2012-1318호)
-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864호)
-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지침 (국토교통부훈령 제560호)
- 공원시설의 설치 권고기준에 관한 규정 (환경부훈령 제870호)
- 기업도시 계획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512호, 2014.9.3)
- 농어촌도로의 구조 ·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행정자치부령 제43호)
- 도시개발업무지침 (국토교통부훈령 제535호)
- 도시공원 · 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 (국토교통부훈령 제504호)
- 도시 · 군계획시설의 결정 ·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240호)
-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지침 (국토교통부훈령 제569호)
-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지침 (국토교통부훈령 제569호)
-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 수립지침 (국토교통부훈령 제2013-224호)
- 도시철도의 건설과 지원에 관한 기준 (국토교통부예규 제27호)
-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지침 (국토교통부예규 제28호)
-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편의시설 설계 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764호)
-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국토해양부공고 제2009-211호)
- 도로교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고시 2013-72호)
- 도로명 안내표지 제작 설치 지침 (국토교통부예규 제84호)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국토교통부예규 제69호)
-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59호)
- 도로의 구조 ·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223호)
- 도로의 유지 · 보수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41호)
-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국토교통부예규 제112호)
- 도로표지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11호)
- 도로표지 제작 설치 및 관리지침 (국토교통부예규 제87호)

- 등산로 주변 공공디자인 개발 매뉴얼 (산림청 매뉴얼)
- 문화재 주변 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지침 (문화재청예규 제151호)
- 물류단지 개발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99호)
-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15-198호)
- 보도설치 및 관리 지침 (국토해양부 지침)
- 빗공해 방지를 위한 가로등 설치 · 관리 권고기준 (환경부고시 제2014-211호)
- 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 (국토교통부공고 제2015-1073호)
-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650호)
- 유비쿼터스 도시계획 수립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388호)
-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265호)
-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군계획수립 지침 (국토교통부훈령 제569호)
- 조경관리규정 (문화재청훈령 제347호)
- 조경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87호)
-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국토교통부훈령 제569호)
- 지속가능한 신도시 계획기준 (건설교통부지침)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고시 4792호)
- 지방하천정비사업 세부집행지침 (국토해양부 지침 2012.1.1 제정)
- 철도건설공사 전문시방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758호)
- 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127호)
- 철도설계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757호)
-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607호)
- 총괄계획가 업무 지침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551호)
- 하천에서 나무심기 및 관리에 관한 기준(안) (건설교통부 하천환경팀-1056)
- 항만재개발 및 마리나항만 경관 가이드라인 (해양수산부예규 제38호)
- 항만친수시설 조성 및 관리지침 (해양수산부예규 제16호)
- 해안경관 관리 가이드라인 (국토해양부훈령 제495호)
- 혁신도시 계획기준 (국토교통부훈령 제275호)
- 환경친화적 철도건설 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161호)
-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 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627호)

부록 1

자문회의 의견

자문위원	주요 내용
안진근	– 연구의 시행은 법, 령 개정을 볼 때 시의 적절함
	– 담당자, 사업자 등에게 심의과정(절차)을 명확하게 공지하여 함
	– 심의 범위를 정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중요
	– 천안, 아산 등 몇 개 시, 군을 제외하고는 심의 자체가 없음
	– 심의가 활성화 될 수 있게 시, 군의 조례 정비가 시급
	– 심의 업무 매뉴얼은 담당공무원들이 활용하기 쉽게 요약본, A4로 정리되어야 함
	– 업무 매뉴얼이 공무원 교육에 활용되어야 함
	– 심의 대상, 심의 시점을 명확하게 규정
	– 사전심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효과가 있음
	– 심의 시 심의위원들이 체크리스트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침 객관화 필요
이상민	– 건축심의, 도시계획심의와의 중복심의 배제
	– 경관심의에 대한 인식 확대 필요
	– 도 차원에서 경관전문위원 (상임기획단) 구성 운영 필요
	– 경관심의를 본격적으로 운영되면서 지자체마다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도차원의 가이드 필요
이정호	– 2장 제도분석부분에서 현행 경관법 내용 정리와 연구자가 분석, 제시한 부분이 잘 드러나지 않음. 현행법은 이러한데 분석해서 이런 점을 보완했다는 것이 명확히 드러나야 함
	– 광역지자체 경관심의 운영사례 분석틀이 제시가 되고 그 틀에 맞추어 사례 분석 필요. 현황의 나열, 설명 정도로 보임. 분석틀-분석내용-개선대책 제시의 연계 필요
	– 전체 충남도에서 경관심의 운영 지자체 수, 심의건수, 내용특성, 전문가 구성 등 전체적인 현황파악과 분석 보완 필요
이장범	– 전반적인 경관행정과 관련된 내용도 필요함
	– 도 조례에서 심의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는 시, 군 자체적으로 심의대상을 규정하도록 유도한 것이나 시, 군 심의대상 선정을 위한 도 차원의 심의 대상 표준안 검토 필요
	– 현재 경관심의의 가장 문제점은 경관심의 시기로 판단되는데 설계가 다 된 상황이나 심지어는 사업승인이 난 후 신청 되는 경우가 있음
이장범	– 심의시기를 초기단계에 신청하게 하여 심의의 유연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규모가 큰 경우에는 심의를 2회에 걸쳐 진행하는 것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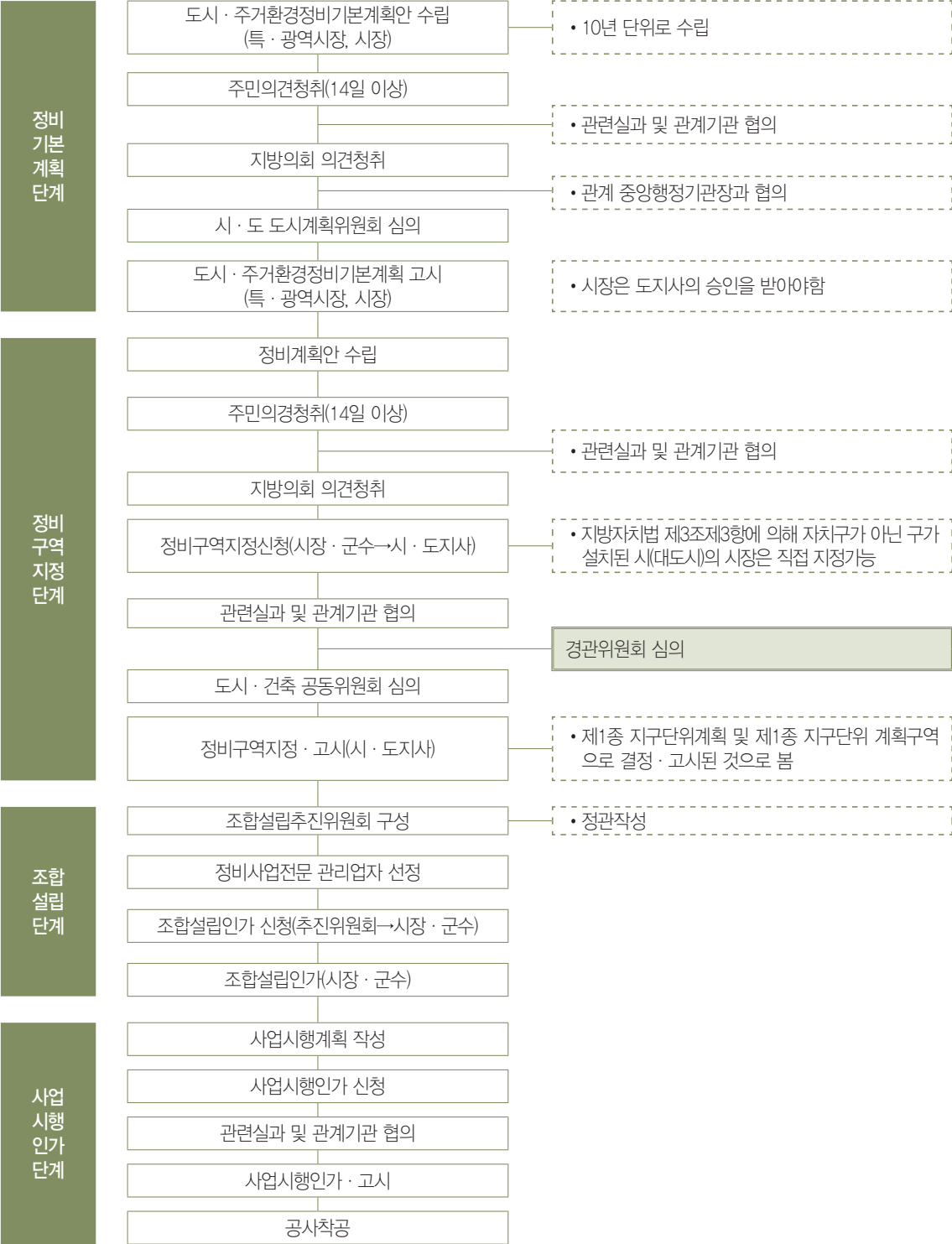
자문위원	주요 내용
이장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관심의는 건축심의와 연계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음(역할 배분) - 경관심의 시 건축적인 세부내용까지 볼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음 - 경관심의에서 다루는 내용만 심의하여야 함에도 건축계획적인 측면이 너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언급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음 - 규모에 따라 심의 내용과 심의 절차를 조정 - 1~2회로 구분하거나 사전검토를 1차 심의로 대체 - 경관심의 내용 중 일부 항목은 건축심의내용으로 이관하여 진행하는 것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력풀제로 운영하되 2~3개의 그룹으로 구분하여 가능하면 위원들의 참여가 대등하도록 균형감 있는 운영이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특성을 반영한 경관심의대상 규정 중요 - 현재의 법, 시행령은 지자체 특성이 반영될 수 없는 구조임 (도시개발사업등은 지자체 권한이 없음) - 대전의 경우 구 단위 심의사업은 아주 작은 사업들임. 경관심의라기보다는 디자인 심의 성격의 큼 - 경관심의와 디자인심의(시설물)를 구분하는 것 필요 - 도 차원에서 심의 대상에 대한 고민이 필요 - 최종적으로 시, 군 담당자들이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등 대규모 사업의 경우 심의 단계 결정이 어려움 - 적절한 시기에 심의가 진행되어야 효과가 있음 - 건축설계가 마무리되고 나서 심의가 들어가면 의미가 없음 - 도시계획심의를 통해 결정되어야 하는 것들 (용적률 등)과 경관심의에서 다뤄져야 하는 것들의 구별이 중요 - 경관심의에서는 전체적인 경관의 형성, 이미지 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함 - 경관심의와 도시계획심의 역할 분담 중요 - 개발사업 담당자들은 경관심을 방해요소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음
이형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관심의가 사업을 지연시키면 안 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크리스트 활용 전에 지자체가 수립한 기존의 경관관련계획과 심의도서의 내용 관계를 사전에 검토하는 것 필요 - 일본의 경우 지자체 계획과 도서의 관계를 사전에 전문위원들이 검토함 - 이를 통해 주관성 배제한 심의를 진행 - 전문위원이 심의 안건을 미리 정리하고 심의를 진행 - 도 단위 전문위원 제도 도입 검토 필요 (경관상임기획단) - 사전협의 / 사전심의 도입 필요, 사전협의나 사전심의는 특정경관계획(야간경관계획 등)에서 활용하면 효율적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의 의제처리 대상 규정을 합리적으로 해야 함 - 국제설계공모 대상 사업이 경관심을 받는 경우도 있음 - 심의도서작성방법을 명확하게 정리해줘야 하고 샘플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임 - 소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 - 시, 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우면 도 차원에서 지원 - 소위원회는 시설물, 야간경관계획 등 특정경관계획 중심으로 운영

자문위원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심의, 도시계획심의의 공동심의 활성화 필요 - 경관심의와 공동심의 대상인 사업들 관련 법규에서 공동심의를 어렵게 하고 있는 조항이 있음 - 개별법간의 공동심의 운영에 대한 조항 통일 필요
이형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관심의 시 현장감이 중요 - 항공사진 등을 활용하여 주변 현황을 설명하도록 하는 것 중요 - 또한 서면심의 (고양시 경관사이버자문단)도 도입 검토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관위원회의 질적 수준 제고 필요 - 심의위원회에 대한 교육 도입 검토 필요 - 유니버설 디자인 심의의 경우 심의위원 교육이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경관심의운영 기본방향 설정 필요 - 경관심의 개선 대책의 단계별 개선방안 제시 전, 충남의 상황을 고려한 경관심의 목적 및 기본방향이 제시되어야 함
차주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실적인 경관관리 행정시스템 제시 필요 - 단기대책으로 제시된 경관관리 행정시스템은 단기적으로 조직을 확대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공동심의 개선 또는 도차원에서 경관심의 대행 등 대안 제시가 필요함 - 경관심의가 없는 지자체의 경우,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 - 경관심의를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조직이나 관련 지침 마련 등 여건이 어려운 지자체에 대해 단기적으로 의무화를 하는 것 보다는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점진적인 유도가 바람직할 수도 있을 것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관심의 체크리스트와 관련하여 국가지침을 구체화하고 충남의 여건에 맞추어 심화하고 구체화하는 것은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됨 - 경관심의 체크리스트 작성 시, 경관심의 운영관련 내용과 경관심의 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에 대한 내용을 구분하여 작성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함 - 공무원, 경관심의위원, 설계자 등 주체별로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함께 제시되면 보다 높은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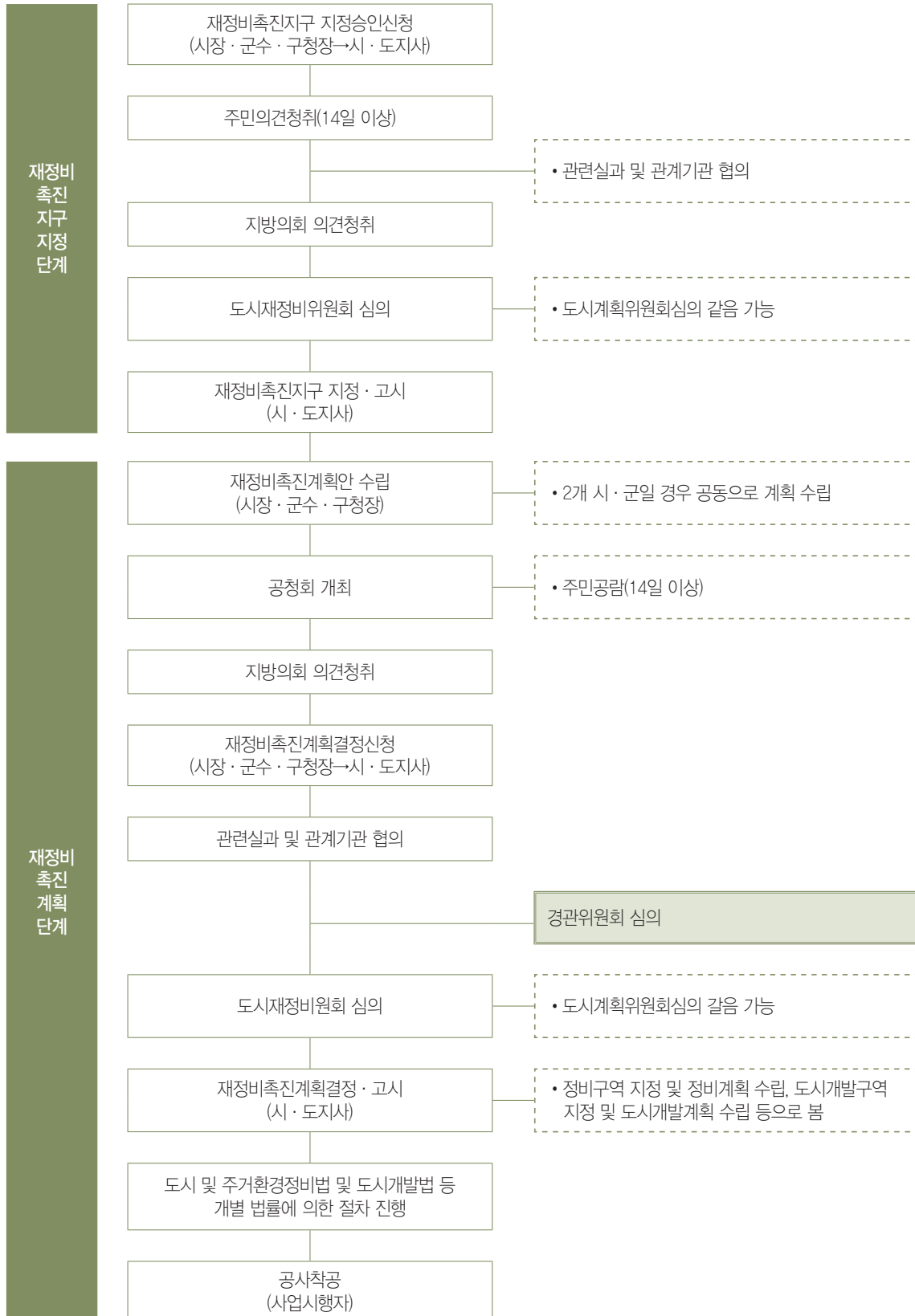
부록 2

지자체 심의 개발사업 경관심의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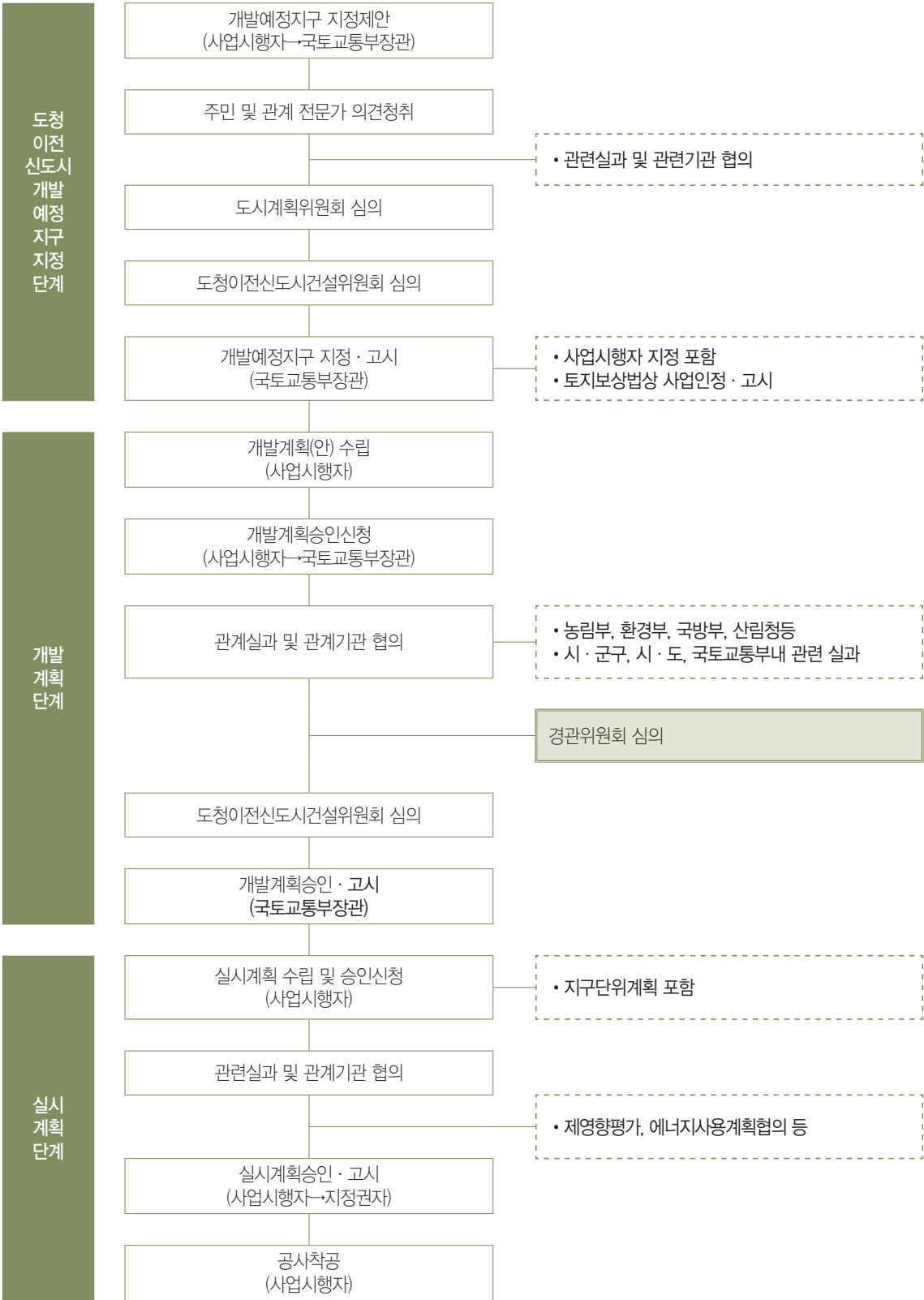
정비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촉진사업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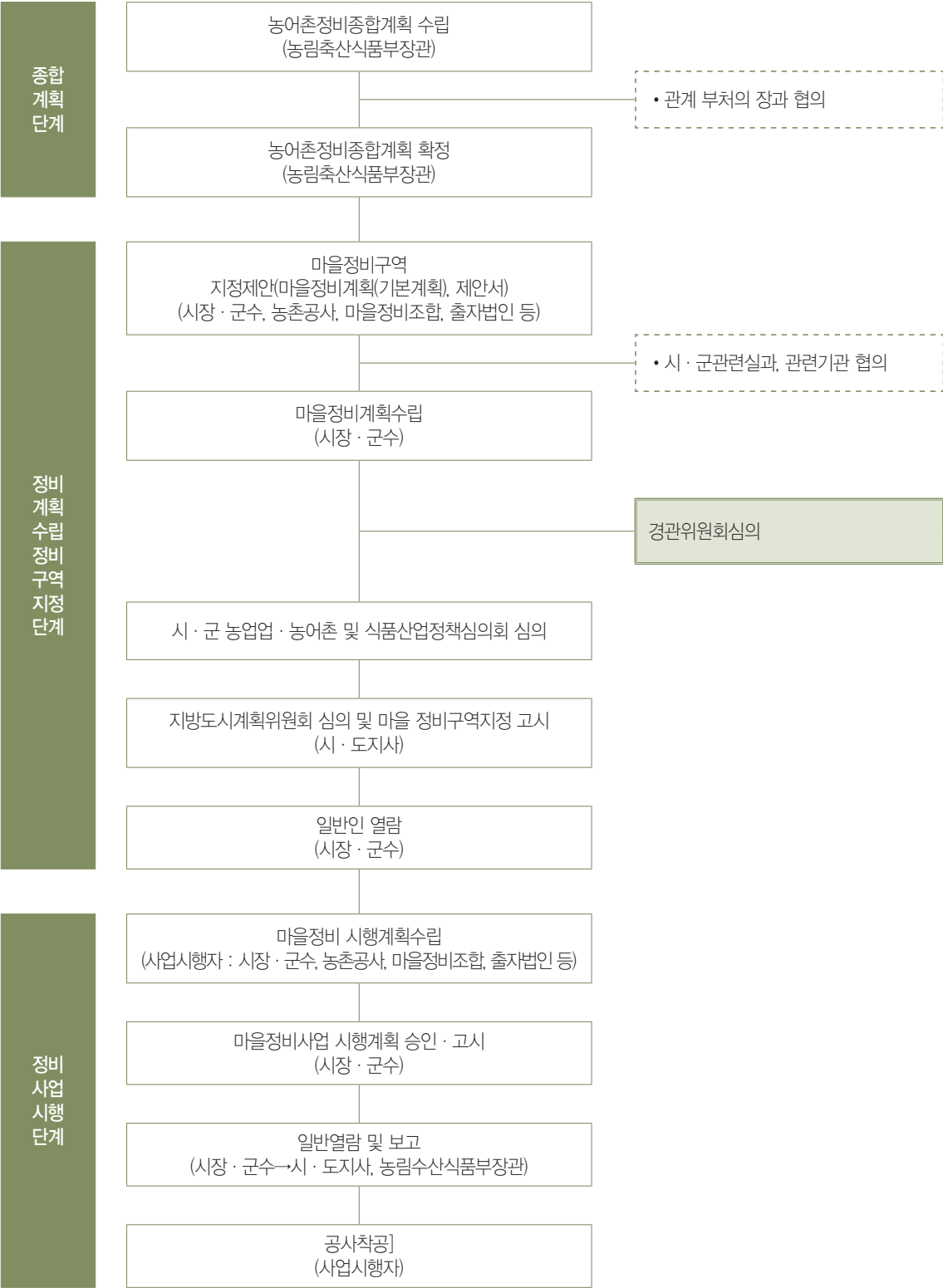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자원에 관한 특별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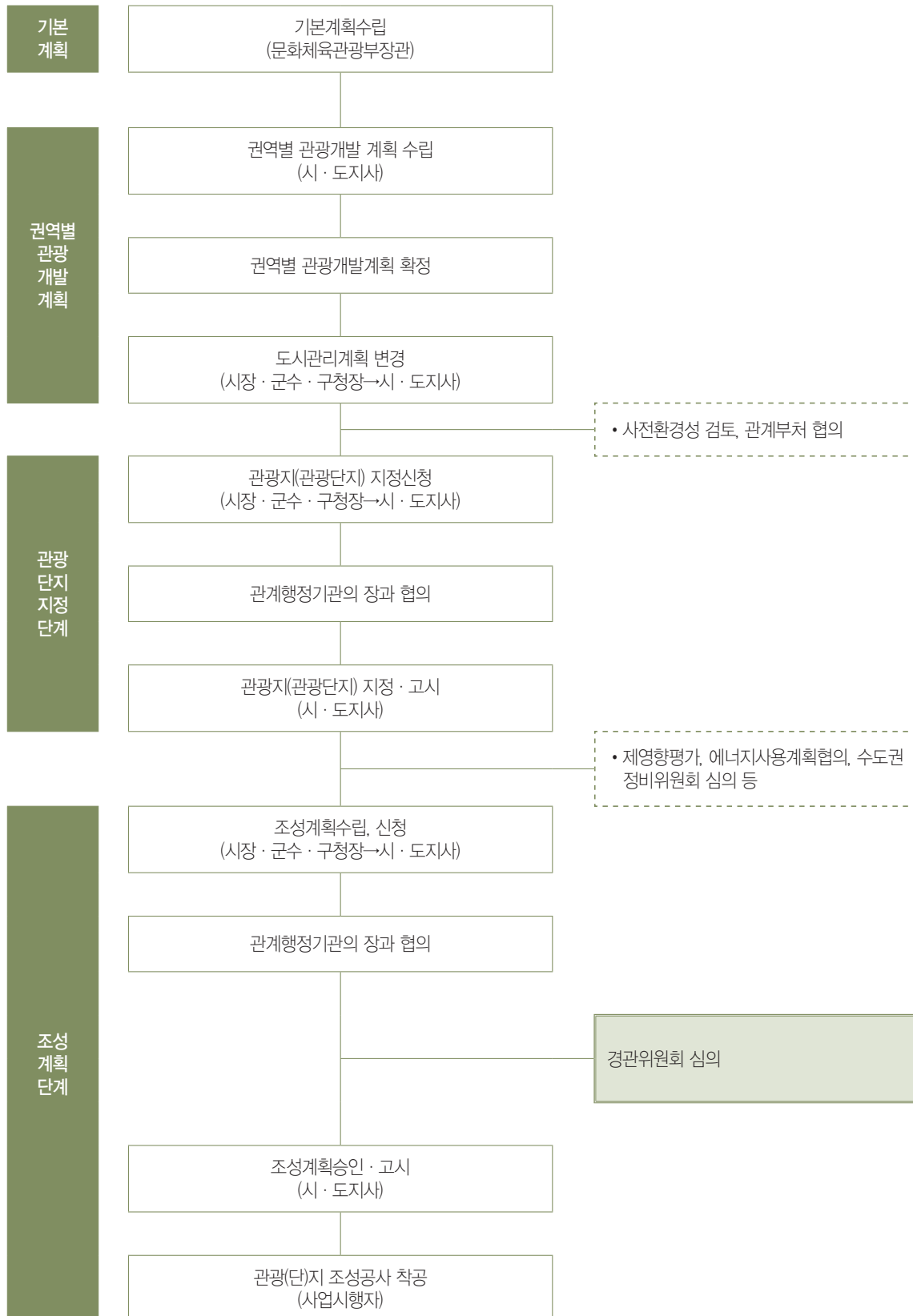
단지조성사업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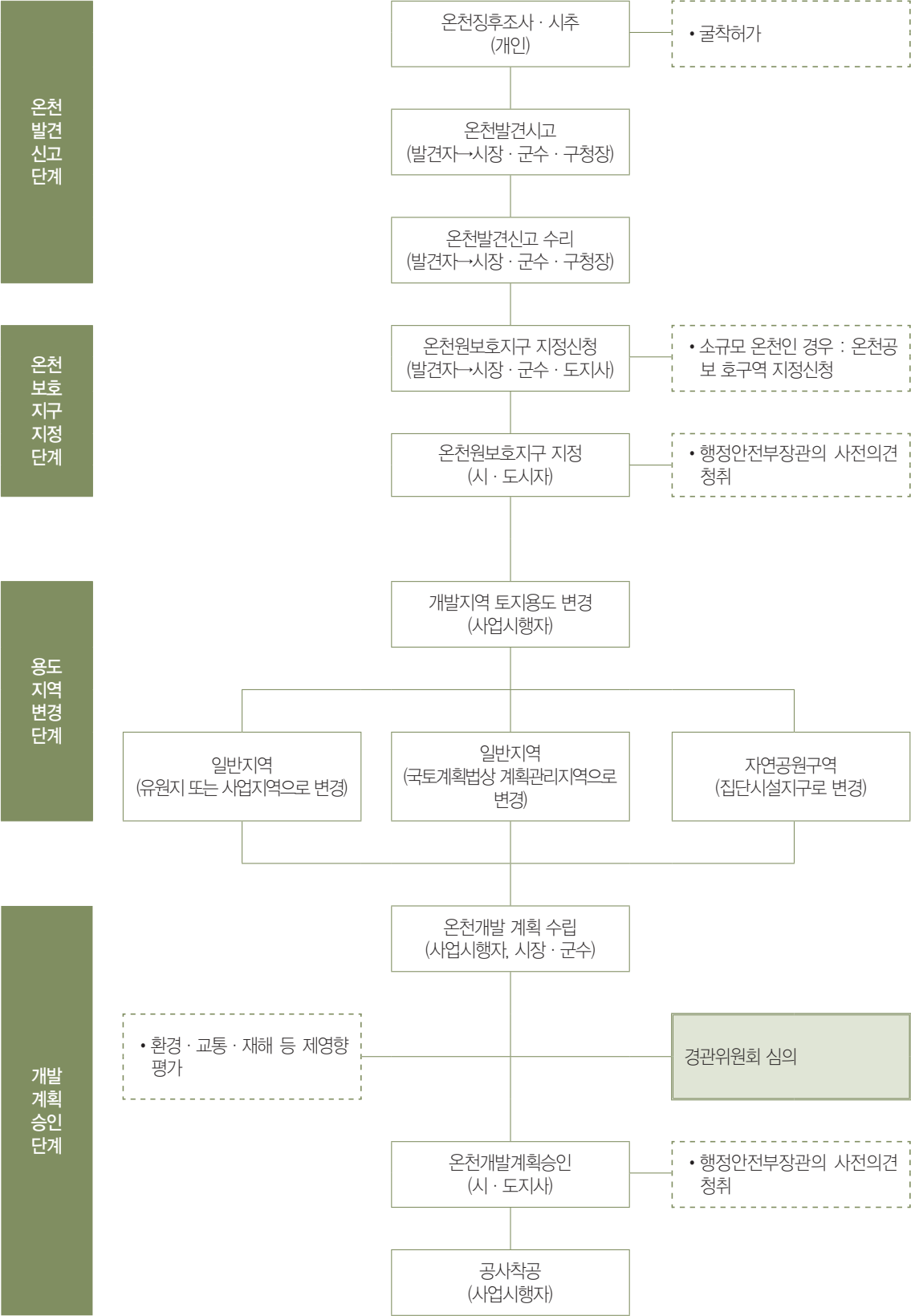
생활환경정비사업 <농어촌정비법>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사업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관광진흥법>



온천개발사업 <온천법>



부록 3

충남 경관심의 참고지침의 주요 내용

• 충남 경관심의 참고지침

유형	지침
충남 경관계획	충청남도 경관기본계획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충청남도 건축물 색채 디자인 가이드라인
도로	도로경관설계 안내서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 지침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도로표지 제작 설치 및 관리지침
하천	자연친화적 하천관리에 관한 통합지침
철도	환경친화적 철도건설 지침
도시계획 및 개발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농촌·해안·항만	농어촌 경관계획 수립 요령
	해안경관 관리 가이드라인
	항만친수시설 조성 및 관리지침
	항만재개발 및 마리나항만 경관 가이드라인
건축물 및 가로경관	보행자 중심의 가로경관 가이드라인
	가로수 조성 및 관리규정 고시
	보도설치 및 관리 지침
	빛공해 방지를 위한 가로등 설치·관리 권고기준
산림·공원·녹지·조경	산림경관 계획관리 업무편람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
	조경설계기준
	조경기준

• 충청남도 경관기본계획

소관부처	- 경관법에 근거 - 충청남도 건축도시과 (2013)		
목적	- 충청남도 경관자원의 보전, 관리 방안 확립 - 경관행정의 근거 마련 - 경관의 형성과 개선에 대한 세부계획 및 지침 수립		
주요 내용	구성		목차
	1장	과업의 개요	1.과업의 배경 및 목적 / 2.과업의 범위 및 내용 / 3.과업의 위상
	2장	조사 및 분석	1.조사 및 분석의 개요 / 2.도시 일반현황 / 3.경관 관련법규 및 조례 / 4.충청남도 경관관련 계획 및 사업 / 5.시·군별 경관자원 조사 및 분석 / 6. 경관의식조사 / 7.경관사례분석
	3장	경관기본구상	1.경관기본구상의 전략 / 2.경관 미래상 도출 / 3.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 4.경관 단위(골격) 설정 / 5.경관권역 기본구상 / 6.경관축 기본구상 / 7.경관거점 기본구상 / 8.경관기본구상도
	4장	경관기본계획	1.경관계획의 기본방향 / 2.경관종합계획 / 3.경관권역 기본계획 / 4.경관축 기본계획 / 5.경관거점 기본계획 / 6.시·군별 세부계획 /
	5장	부분별경관계획	1.경관중점관리구역계획 / 2.경관중점관리구역 유형별 세부 관리계획 / 3.요소별 특정경관계획
	6장	경관설계지침	1.경관설계지침의 개요 / 2.경관구조별 설계지침 / 3.구성요소별 설계지침
	7장	실행계획	1.실행계획의 개요 / 2.경관시범사업 / 3.경관계획 및 경관설계지침 적용방안 / 4.지구단위 계획에 의한 관리방안 / 5.경관협정 및 운영방안 / 6.경관지구 및 관련지구의 지정과 관리 기준 / 7.경관실행조직 및 행정체계 구축

•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소관부처	- 충청남도 [시행 2015.10.30.] - [충청남도조례 제4048호, 2015.10.30., 일부개정]		
목적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주요 내용	구성		
	1조	목적	9조 옥상간판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2조	간판의 총수량	10조 지주 이용 간판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3조	일반적 표시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10조2 입간판 표시방법
	4조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11조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5조	가로형 간판의 표시방법	
	6조	세로형 간판의 표시방법	
	7조	돌출간판의 표시방법	
	8조	공연간판의 표시방법	

• 충청남도 건축물 색채 디자인 가이드라인

소관부처 - 충청남도 건축도시과 (2014)

목적

- 충청남도 광역차원 색채 가이드라인 제시
- 충남 5개광역의 권역 대표색 추출
- 용도, 도시지역·비도시지역, 권역별로 건축물 색채 가이드라인 제시

주요 내용	구성		목차
	1장	가이드라인 개요	1.배경 및 목적 / 2.방법 및 내용 / 3.가이드라인 프로세스
	2장	충청남도 건축물 색채 디자인 가이드라인	1.건축물 색채 기본방향 / 2.권역별 대표색채 / 3.건축물 용도별 색채 가이드라인 / 4.건축물 소재색 가이드라인 / 5.건축물 색채 적용 예시
	3장	가이드라인 적용 및 운용방안	1.색채 가이드라인 활용매뉴얼 / 2.색채 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 / 3. 충청남도 건축물 컬러칩

• 도로경관설계 안내서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간선도로과 [2012. 6]

목적

도로에서의 경관설계 및 시설물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기술

적용범위

- 도로법 8조에 규정하고 있는 도로에 적용
- 도로경관설계 및 시설물디자인에 관한 기본개념 정립과 원칙적인 내용을 제시

주요 내용	구성		절
	1장	총칙	1.목적 / 2.적용범위 / 3.안내서의 구성 / 4.용어 정의
	2장	도로경관의 기본개념	1.도로경관의 종류 및 특징 / 2.도로경관의 유형 / 3.도로경관디자인
	3장	도로경관설계	1.개요 / 2.노선계획 / 3.도로본체 / 4.구조물 / 5.도로시설물 / 6.휴게소
	4장	도로시설물 디자인	1.개요 / 2.디자인의 전제조건 / 3.도로시설물디자인 기법
	5장	도로경관디자인 평가	1.경관디자인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평가 / 2.경관디자인 평가지표를 활용한 평가 / 3.경관디자인(안)의 선정

•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간선도로과 [시행 2015.9.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627호, 2015.9.1, 일부개정]														
목적	현장 적용이 가능한 도로노선 선정방안과 항목 도로설계기법 제시														
적용범위	도로법 제 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에 적용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 시·군도, 구도)														
주요 내용															
	<table><tr><th colspan="2">구성</th><th>절</th></tr><tr><td>1장</td><td>총칙</td><td>1.목적 / 2.적용범위 / 3.지침의 구성 / 4.용어의 정의</td></tr><tr><td>2장</td><td>환경친화적인 도로노선 선정</td><td>1.추진절차 / 2.항목별 검토사항</td></tr><tr><td>3장</td><td>항목별 도로설계기법</td><td>1.지형·지질 / 2.동·식물상 / 3.수리·수문 / 4.토지이용 / 5.대기질 / 6.수질 7.토양 / 8.폐기물 / 9.소음·진동 / 10.위락·경관</td></tr></table>			구성		절	1장	총칙	1.목적 / 2.적용범위 / 3.지침의 구성 / 4.용어의 정의	2장	환경친화적인 도로노선 선정	1.추진절차 / 2.항목별 검토사항	3장	항목별 도로설계기법	1.지형·지질 / 2.동·식물상 / 3.수리·수문 / 4.토지이용 / 5.대기질 / 6.수질 7.토양 / 8.폐기물 / 9.소음·진동 / 10.위락·경관
구성		절													
1장	총칙	1.목적 / 2.적용범위 / 3.지침의 구성 / 4.용어의 정의													
2장	환경친화적인 도로노선 선정	1.추진절차 / 2.항목별 검토사항													
3장	항목별 도로설계기법	1.지형·지질 / 2.동·식물상 / 3.수리·수문 / 4.토지이용 / 5.대기질 / 6.수질 7.토양 / 8.폐기물 / 9.소음·진동 / 10.위락·경관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첨단도로환경과 [시행 2014.2.14]
[국토교통부예규 제69호, 2014.2.14, 일부개정]

목적

시선유도시설 및 시인성 증진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지침 규정

적용범위

– 도로법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에 적용

– 도로법과 도로교통법 등에 규정된 시선유도시설 및 시인성 증진 안전시설에 관한 설치 및 관리기준 기술

주요 내용

편	절
1편	시선유도시설
2편	조명시설
3편	차량방호 안전시설
4편	기타안전시설

1.총칙 / 2.시선유도표지 / 3.갈매기표지 / 4.표지병 / 5.시인성 증진 안전시설

1.총칙 / 2.기능 및 조명 요건 / 3.설치장소 / 4.연속조명 / 5.국부조명 / 6.터널조명 / 7.유지관리

1.총칙 / 2.방호울타리 / 3.충격흡수시설 / 4.단부처리 및 전이구간
5.트럭탈부착형 충격흡수시설(TMA)

1.미끄럼방지포장 / 2.과속방지턱 / 3.도로반사경 / 4.장애인 안전시설
5.낙석방지시설 / 6.도로전광표시 / 7.악천후구간, 터널 및 장대교량 설치 시설
8.긴급제동시설 / 9.노면요철포장 / 10.무단횡단 금지시설

• 도로표지 제작 설치 및 관리지침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도로운영과 [시행 2014.10.11] [국토교통부예규 제87호, 2014.10.11, 일부개정]		
목적	도로표지규칙 제16조에 따라 도로표지를 제작, 설치 및 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		
적용범위	- 도로법 제 8조에 따른 도로에 규칙에 따라 제작, 설치 및 관리하는 도로표지 - 사도 등 그 밖의 도로의 경우에도 일관된 도로정보체계를 안내하기 위하여 준용		
주요 내용	장		조
	1장	총칙	1.목적 / 2.정의 / 3.적용범위
	2장	도로표지의 설계 등	4.도로표지 기본계획 / 5.도로표지의 설계 / 6.안내지명 선정의 기본원칙 7.안내지명의 선정방법 / 8.도로표지의 글자표기
	3장	도로표지의 재료 및 제작 등	9.표지판의 재료 및 제작 / 10.지주의 재료 및 제작 / 11.기초의 재료 및 제작 12.반사지의 재료 및 제작 / 13.시험 및 감독
	4장	도로표지의 설치 등	14.도로표지의 기능별 분류 / 15.도로표지의 설치장소 / 16.도로표지 설치시 유의사항 17.도로표지의 설치형식 / 18.교차로의 도로표지 설치 / 19.관광지표지의 설치 등 20.조명장치 / 21.도로표지의 유지관리 / 22.각종 대장의 작성 및 관리 등 / 23.자료제출 등 24.도로관리청별 세부지침 / 25.재검토기한

• 자연친화적 하천관리에 관한 통합지침

소관부처	국토해양부 하천계획과 [2009. 12]	
목적	－ 하천법 43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자연친화적 하천관리를 위해 시행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하기 위한 통합지침을 제시	
적용범위	－ 자연친화적 하천관리를 목적으로 시행하는 모든 하천사업에 적용	
주요 내용		

• 환경친화적 철도건설 지침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 [시행 2013.4.18]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161호, 2013.4.18, 일부개정]		
목적	- 환경친화적인 철도건설을 위하여 철도설계자, 관련 행정기관 등이 계획·설계·시공 시 활용할 수 있고 현장 적용이 가능한 철도노선 선정방안과 항목별 적용방안 및 공사 중 환경관리 방안을 제시		
적용범위	- 철도건설법 및 도시철도법에서 정하고 있는 철도건설사업에 적용		
주요 내용	장		절
	1장	총칙	1.목적 / 2.적용범위 / 3.지침의 구성 / 4.용어의 정의
	2장	환경친화적인 철도노선 선정	1.추진체계 / 2.철도노선 선정 시 고려사항 / 3.항목별 검토사항
	3장	환경친화적 철도건설	1.일반사항 / 2.대기환경 / 3.수환경 / 4.토지환경 / 5.자연생태환경 / 6.생활환경
	4장	공사 중 환경관리	1.환경관리 점검항목 / 2.환경관리 주요내용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시행 2015.10.20.] - [국토교통부령 제240호, 2015.10.20., 일부개정]	
목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의 기준과 동법시행령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세분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	
주요 내용	장	장
	1장 총칙	1.목적 / 2.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범위 / 3.도시·군계획시설의 중복결정 / 4.입체적 도시·군계획시설결정 / 4조의2 도시·군계획시설을 통한 도시활성화 / 5.도시·군계획시설의 규모 / 6.건축물인 도시·군계획시설의 구조 및 설비 / 6조의2.부대시설 및 편의시설의 설치 / 7.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 8.환경·문화·경관의 보호 / 8조의2.도시안전 및 건강 / 8조의3.자연상태의 물순환 회복
	2장 교통시설	1.도로 / 2.철도 / 3.항만 / 4.공항 / 5.주차장 / 6.자동차정류장 / 7.궤도 / 8.삭제 / 9.운하 / 10.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 11.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3장 공간시설	1.광장 / 2.공원 / 3.녹지 / 4.유원지 / 5.공공공지
	4장 유통 및 공급시설	1.유통업무설비 / 수도공급설비 / 3.전기공급설비 / 4.가스공급설비 / 5.열공급설비 / 6.방송·통신시설 / 7.공동구 / 8.시장 / 9.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5장 공공·문화체육시설	1.학교 / 2.운동장 / 3.공공청사 / 4.문화시설 / 5.체육시설 / 6.도서관 / 7.연구시설 / 8.사회복지시설 / 9.공공직업훈련시설 / 10.청소년수련시설
	6장 방재시설	1.하천 / 2.유수지 / 3.저수지 / 4.방화설비 / 5.방풍설비 / 6.방수설비 / 7.사방설비 / 8.방조설비
	7장 보건위생시설	1.화장시설 / 2.공동묘지 / 3.납골시설 / 4.장례식장 / 5.도축장 / 6.종합의료시설
	8장 환경기초시설	1.하수도 / 2.폐기물처리시설 / 3.수질오염방지시설 / 4.폐차장

• 농어촌경관계획 수립요령

소관부처	- 농림수산식품부 지역개발과 [2009. 12]
목적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농어촌정비법 제5조, 경관법 8조 및 경관계획수립지침 5장(특정경관계획)에 따른 농어촌 경관계획의 수립, 시행 요령을 규정
적용범위	- 농어촌경관계획 수립 대상지역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농어촌과 준농어촌”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

장			목차
1장	농어촌경관계획 수립요령		1.총칙 / 2.농어촌경관계획 수립요령 / 3.농어촌경관계획의 실행 / 4.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계획
2장	농어촌 경관 관리 · 활용 메뉴얼	1.총칙	1.목적 / 2.주요내용
		2.농어업경관	1.경작지 경관 / 2.농어업생산시설경관
		3.자연경관	1.산림경관 / 2.자연생태경관 / 3.하천경관
		4.생활경관	1.주거경관 / 2.가로경관 / 3.건축경관 / 4.외부공간경관 / 5.기타시설물경관 / 6.색채경관

• 해안경관 관리 가이드라인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동서남해안권발전기획단 [시행 2011.5.6] - [국토해양부훈령 제495호, 2011.5.6, 제정]
목적	- 해안권에서의 개발사업이 주변의 해안경관과 어우러져 친환경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해안경관의 보전 및 조성에 기여함
적용범위	- 해안경관 관리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7조에 의한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에 적용 - 해안권에서 시행되는 각종 개발행위 등을 위한 계획·설계·시공·유지관리·심의·자문 등과 경관법에 따라 해안권이 포함된 지역에 대한 경관계획을 수립할 때에 적용

장			목차
1장	총칙		1.목적 / 2.적용범위 / 3.정의 / 4.해안경관 관리범위 / 5.구성 6.다른 규정과의 관계
2장	가이드라인 적용방법		1.일반사항 / 2.적용절차 / 3.적용대상
3장	해안경관 관리 기본방향 및 원칙		1.기본방향 / 2.기본원칙
4장	해안선으로부터 거리별 가이드라인		1.일반사항 / 2.해안선 보호구역 가이드라인 / 3.해안 중점관리구역 가이드라인
5장	해안권별 가이드라인		1.일반사항 / 2.동해안권 가이드라인 / 3.서해안권 가이드라인 / 4.남해안권 가이드라인
6장	경관유형에 따른 등급별 가이드라인		1.일반사항 / 2.경관평가 / 3.시가지경관 가이드라인 / 4.산업경관 가이드라인 / 5.농어촌경관 가이드라인 / 6.관광휴양경관 가이드라인 / 7.역사문화경관 가이드라인 / 8.자연경관 가이드라인 / 9.생태경관 가이드라인

• 항만친수시설 조성 및 관리 지침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항만지역발전과 [시행 2013.5.24] - [해양수산부예규 제16호, 2013.5.24, 일부개정]	
목적	- 「항만법」제2조제5호라목의 항만친수시설의 개념을 정립하고, 항만친수시설의 조성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	
적용범위	- “항만친수시설”이란 「항만법」제2조제5호라목의 시설을 말하며, “항만친수시설 사업”이란 「항만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또는 기타 관련법령에 의해 항만구역 내에서 시행되는 시설사업을 의미	
주요 내용	장	목차
	1편	총칙
	2편	항만친수시설 조성 및 관리계획의 수립
	3편	친수공간 유형별 조성 지침
	4편	사업의 시행 및 유지·관리
		1.지침의 목적 / 2.정의 / 3.항만개발시 친수공간 시설확보 및 조성 / 4.항만친수시설 조성 및 관리계획의 범위 / 5.다른 법률과의 관계 / 6.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1.기초조사 / 2.친수공간조성계획의 기본구상 / 3.항만친수시설 조성 및 관리계획의 수립 1.친수공간 유형별 지침의 적용 및 수준 / 2.친수공간 유형별 조성지침 1.사업의 시행 / 2.지방자치단체의 참여 / 3.이해관계의 조정 / 4.유지 및 관리 / 5.행정사항

• 항만재개발 및 마리나항만 경관 가이드라인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항만지역발전과 [시행 2014.10.7] - [해양수산부예규 제38호, 2014.10.7, 일부개정]	
목적	-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투자자 등(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이 항만재개발 및 마리나항만에 대한 사업계획 또는 실시계획을 수립할 때 경관 형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한 항만재개발 및 마리나항만 구역의 경관을 조성하는 데 기여	
적용범위	- 「항만법」 제51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항만재개발 대상항만,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제2호의 마리나항만 또는 그 시설에 적용 - 「경관법」 제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하는 경관계획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가이드라인에 부합하여야 함 (제4조 (다른법률과의 관계))	
주요 내용	장	목차
	1장	총칙
	2장	항만재개발사업구역 및 마리나항만 경관의 기본방향
	3장	항만재개발 및 마리나항만 경관 조성
	4장	경관의 유지 및 관리
	5장	행정사항
		1. 목적 / 2.정의 / 3.적용대상 / 4.다른 법률과의 관계 5.기본방향 6.경관자원의 조사 / 7.계획수립 및 시공 / 8.디자인 원칙 / 9.주요 요소별 디자인 10.경관의 유지 및 관리 11.유효기간

• 보행자중심의 가로경관 가이드라인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2014. 7. 31]
목적	– 보행자의 시각에서 보여지는 가로경관을 대상으로 하며, 보행자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 통합적인 도시경관을 창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시
적용범위	– 중앙행정기관에서 가로경관 조성을 포함하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사업을 시행할 때 적용할 수 있으며, 관련 지침과 중첩하여 적용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에서 각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계획지침을 수립하고자 할 때 참고

구성 및 주요 내용	장		목차
	가로경관 가이드라인	1장	총칙
		2장	가이드라인 적용방법
		3장	기본방향 및 기본원칙
		4장	가로경관 가이드라인
	가로경관 가이드라인 매뉴얼	1장	총칙
		2장	가이드라인의 적용방법
		3장	기본방향 및 기본원칙
		4장	가로경관 가이드라인

•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첨단도로환경과 [시행 2011.7.26.] – [국토해양부지침, 2011.7.26., 일부개정]
목적	– 보행자의 통행 안전 및 편리성 확보를 위한 보도 등 보행자 통행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일반적 기술 기준 규정
적용 범위	–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 16조에 따라 설치되는 보도 등 보행자 통행시설에 관한 설치 및 관리에 적용

구성 및 주요 내용	장		목차
	1장	총칙	1.목적 / 2.적용 범위 / 3.용어 정의 / 4.관련기준
	2장	보도	1.기능 / 2.종류 / 3.설치계획 / 4.설치장소 / 5.형식선정 / 6.횡단구성 / 7.구조 / 8.도로·교통 안전시설 / 9.시공 / 10.유지관리
	3장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1.설치장소 / 2.횡단구성 / 3.구조
	4장	횡단시설	1.횡단보도 / 2.자전거 횡단도 / 3.입체횡단보도
	5장	특수구간 보도설치	1.학교, 복지시설 등 / 2.교차로 / 3.버스정류장 등 / 4.교통평온화 기법
	6장	보도 정비 방안	1.유효 보도 폭 확보 / 2.보도 경사, 단차 등의 정비 / 3.노상시설 정비

• 가로수 조성 및 관리규정

소관부처

- 산림청 도시숲경관과 [시행 2014.1.1]
- [산림청고시 제2013-87호, 2013.12.31, 일부개정]

목적

- 산림기본법 제18조의 규정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주요 내용

장		목차
1장	총칙	1.목적 / 2.정의 / 3.가로수 관리청
2장	가로수 조성	4.식재위치 / 5.식재기준 / 6.식재시기 / 7.식재 제한지역
3장	가로수 관리	8.바꿔심기와 메워심기 / 9.가지치기 / 10.병해충 방제 / 11.지형과 토양보전 / 12.식재 제한 지역의 기존 가로수 / 13.가로수 관리시설물 / 14.점검 / 15.관리대장 / 16.주민참여 등

• 빗공해 방지를 위한 가로등 설치 · 관리 권고기준

소관부처

- 환경부 생활환경과 [시행 2014.11.28]
- [환경부고시 제2014-211호, 2014.11.28, 제정]

목적

- 가로등의 효율적 설치 및 관리에 의하여 야간 도로 이용자 및 보행자의 통행 안전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비추 고자 하는 조명영역 밖으로 누출되는 빛에 의해 발생하는 에너지 비효율과 시각적 불편함을 방지할 수 있는 참고기준으로 활용

주요 내용

- 1조. 목적
- 2조. 적용범위
- 3조. 기본원칙
- 4조. 용어의 정의
- 5조. 설치 기준
- 6조. 유지 관리
- 7조. 재검토기한

• 산림경관 계획 · 관리 업무편람

소관부처 - 산림청 도시숲경관과 (2011. 8)

목적 - 산림기본법 및 경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경관을 고려한 산림의 보전 · 이용 · 관리 방안을 마련
- 지방자치단체에서 경관계획 수립 시 산림부분의 경관을 고려하도록 방향 제시

적용범위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

구성 및 주요 내용	장		목차
	1장	산림경관 계획 수립요령	1.총칙 / 2.산림경관계획 수립요령
	2장	산림경관의 기본개요	1.기본개요 / 2.산림경관의 기초
	3장	산림경관계획	1.산림경관 계획의 개요 / 2.산림경관 계획 단계별 가이드라인
	4장	산림경관 유형별 경관계획	1.산림경관 유형별 구분 / 2.관광 · 휴양 산림경관 / 3.도시 산림경관 / 4.농 · 산촌 산 림경관/ 5.산악 · 수변 산림경관 / 6.도로 산림경관
	5장	산림경관사업 가이드라인	1.산림경관 사업의 기본원칙 / 2.산림경관 유형별 산림경관 디자인 키워드 / 3.수종 별 · 임분특성별 · 기본사업종별 가이드라인 / 4.기능별 가이드라인

• 도시공원 · 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시행 2015.3.23]
- [국토교통부훈령 제504호, 2015.3.23, 일부개정]

목적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도시공원과 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을 정함
으로써 도시공원 · 녹지의 세분, 설치 · 관리 등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

구성 및 주요 내용	장		목차
	1장	총칙	1.목적 / 2.법적근거
	2장	도시공원 · 녹지의 유형	1.도시공원의 유형 / 2.녹지의 유형
	3장	도시공원의 설치 · 관리	1.도시공원의 일반적 설치기준 / 2.도시공원 조성계획의 수립기준 / 3.도시공원 시설의 안전기준 / 4.범죄예방을 위한 도시공원의 계획 · 조성 · 유지관리 기준
	4장	도시공원의 유형별 세부기준	1.생활권 공원 / 2.주제공원
	5장	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1.완충녹지 및 경관녹지 / 2.연결녹지
	6장	행정사항	

• 조경설계기준(국토해양부 승인)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2013. 2.]
목적	- 건설기술관리법 34조(설계 및 시공기준)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 또는 이에 준하는 공사의 조경설계를 수행하기 위하여 형태, 규격, 품질, 성능 등의 설계요소에 대하여 표준적이고도 기본적인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
적용범위	- 독립적으로 수행되는 조경공사와 다른 공사와 복합적으로 수행되는 조경공사 및 조경관련 조사분석에 모두 적용 - 이 기준에 서술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 기준에서 서술한 기술적 기준의 범위 안에서 다른 설계기준을 적용

구성 및 주요 내용	장		목차
	1장	총칙	1.목적 / 2.적용범위 / 3.용어정의 / 4.관련법제 및 기준
	2장	재료	일반사항 / 토양재 / 식물재료 / 목재 / 금속재 / 석재 / 콘크리트재 / 점토소성제품 / 합성수지재 / 기타
	3장	설계 일반	일반사항 / 조사분석평가 / 기본설계 /
	4장	부지 조성	일반사항 / 재료 / 설계일반 / 지형보전 / 표토보전 / 지형변경 / 토지이용 / 유지관리
	5장	동선	일반사항 / 설계일반 / 도로 / 도로의 횡단구성 / 도로의 평면교차 / 도시부 도로의 배수계획 / 주차장 / 보행로 / 경사로 / 계단 / 자전거 도로 / 유지관리
	6장	조경 포장	일반사항 / 재료 / 설계일반 / 보도포장 / 자전거도로 포장 / 차도 및 주차장 포장 / 유지관리
	7장	일반식재기반	일반사항 / 재료 / 설계일반 / 흙쌓기 식재지 / 땅깍기면 식재지 / 유지관리
	8장	인공 지반 식재 기반	일반사항 / 재료 / 설계일반 / 식재기반 / 위험지역에 대한 조치 / 식물 성장에 따른 변화 / 유지관리
	9장	특수 지반 식재 기반	임해매립지 위의 식재기반 / 쓰레기 매립지 위의 식재기반 / 유지관리
	10장	빗물 침투 및 배수 시설	일반사항 / 빗물침투 / 지표면 배수 / 심토층 배수 / 레인가든 / 유지관리
	11장	수경 시설	일반사항 / 재료 / 설계일반 / 폭포 및 벽천 / 실개울 / (연)못 / 분수 / 유지관리 /
	12장	급관수시설	일반사항 / 재료 / 설계일반
	13장	휴게 시설	일반사항 / 재료 / 설계일반 / 그늘시렁(파골라) / 그늘막(헬터) / 원두막 / 앉음벽 / 야외탁자 / 평상 / 정자 / 유지관리
	14장	놀이 시설	일반사항 / 재료 / 설계일반 / 단위놀이시설 / 복합놀이시설 / 주제형 놀이시설 / 유지관리
	15장	운동 시설	일반사항 / 재료 / 설계일반 / 육상경기장 / 축구장 / 테니스장 / 배구장 / 농구장 / 야구장 / 핸드볼장 / 배드민턴장 / 게이트볼장 / 롤러스케이트장 / 씨름장 / 체력단련장 / 수영장 / 풋살장 / 족구장 / 유지관리
	16장	관리 시설	일반사항 / 재료 / 설계일반 / 관리사무소 / 공중화장실 / 전망대 / 상점 / 쓰레기통 / 단주(볼라드) / 울타리 / 자전거 보관시설 / 쓰레기 옥외보관용기 / 안전난간 / 공중전화대 / 음수대 / 플랜터(식수대) / 출입문 / 수목보호덮개 / 시계탑 / 관찰시설 / 유지관리
	17장	안내 시설	일반사항 / 재료 / 설계일반 / 설계요소 / 주택단지의 안내표지시설 / 공원의 안내표지시설 / 기타 지역의 안내표지시설 / 유지관리
	18장	환경 조형 시설	일반사항 / 재료 / 설계일반 / 미술장식품 / 문주 등 기능성 조형시설 / 시비 등 기념비 / 조형벽등 조형성 구조물 / 환경조경물의 일반적인 요구성능 / 성능평가항목 / 성능평가의 방법
	19장	경관 조명 시설	일반사항 / 재료 / 설계일반 / 보행등 / 정원등 / 수목등 / 잔디등 / 공원등 / 수중등 / 투광등 / 벽부등,부착등,문주등 / 네온조명 / 튜브조명 / 광섬유조명 / 경관조명시설의 일반적인 요구성능 / 성능평가의 방법

• 조경설계기준(국토해양부 승인)_계속

주요 내용	장		목차
	20장	조경 구조물	일반사항 / 재료 / 설계일반 / 얇은 기초의 설계 / 옹벽 / 장식벽 / 출입문 및 담장 / 야외공연장 / 보도교 / 소형 건축구조물 / 식생벽(벽면녹화) / 일반적인 요구성능 / 성능평가항목 / 성능 평가방법
	21장	조경석 및 인조암	일반사항 / 재료 / 설계일반 / 조경석 놓기 / 디딤돌(징검돌) 놓기 / 자연석 쌓기 / 호박돌 쌓기 / 계단돌 쌓기(자연석 층계) / 노단 쌓기 / 돌틈식재 / 인조암 / 일반적인 요구성능 / 성능평가항목
	22장	수목 식재	일반사항 / 재료 / 설계일반 / 식재밀도 / 수목식재 보조 공종 / 이식설계
	23장	잔디·초화류 식재	일반사항 / 재료 / 설계일반 / 잔디 / 초화류
	24장	식생 유지 관리	일반사항 / 재료 / 전정설계 / 시비설계 / 관수설계 / 제초 / 병충해 방제 / 생육환경 개선 / 잔디의 일반관리작업
	25장	비탈면 녹화	일반사항 / 도로 비탈면 시험시공 / 재료 / 설계일반 / 초본류 식재 / 수목류 식재 / 종자뿌여 붙이기 / 식생기반재 뿌여붙이기 / 기타 공법 / 성능중심 설계 / 유지관리
	26장	하천 조경	일반사항 / 재료 / 하천환경조사 / 하천조경계획 / 하천조경 설계 / 하천조경 배식 설계 / 서식환경 설계 / 유지관리
	27장	인공 습지	일반사항 / 재료 / 생태못 / 곤충류 서식처 습지 / 조류 서식처 습지 / 양서파충류 서식처 습지 / 소택형 습지 및 호수형 습지 / 대체습지 / 수변식생대 / 인공호수(댐 및 저수지) / 표준습지의 선정 / 성능 중심설계
	28장	폐도 복원	일반사항 / 재료 / 설계일반 / 생태복원 공사
	29장	생태숲	일반사항 / 조성지 선정 및 구성 / 서식환경 조성 / 식생군락 설계 / 학습 및 관찰시설
	30장	생태통로	일반사항 / 설계일반 / 선형 생태통로 / 육교형 생태통로 / 터널형 생태통로 / 유지관리 / 성능적용 설계
	31장	환경 친화적 단지 조성	일반사항 / 재료 / 설계일반 / 생태적 토지이용계획 / 생태적 토지동선계획 / 환경친화적 공원녹지계획 / 생태순환계획 / 생물서식처 조성계획 / 청정환경 조성계획 / 어메니티 계획 / 성능적용 설계
	32장	입체 녹화 및 도시 농업	일반사항 / 재료 / 설계일반 / 벽면녹화 설계 일반사항 / 옥상녹화 및 인공지반 녹화 / 도시농업
	33장	기타 훼손지 복원	일반사항 / 관련법제 및 기준 / 재료 / 설계일반 / 유지관리

• 조경기준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시행 2015.11.5]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87호, 2015.11.5, 일부개정]

목적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제2항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주요 내용

장	목차
1장 총칙	1.목적 / 2.적용범위 / 3.정의
2장 대지안의 식재기준	4.조경면적의 산정 / 5.조경면적의 배치 / 6.그늘식재 / 7.식재수량 및 규격 / 8.식재수종
3장 조경시설의 설치	9.협오시설 등의 차폐 / 10.휴게공간의 바닥포장 / 11.보행포장
4장 옥상조경 및 인공지반 조경	12.옥상조경 면적의 산정 / 13.옥상 및 인공지반의 식재 / 14.구조적인 안전 / 15.식재토심 / 16.관수 및 배수 / 17.방수 및 방근 / 18.유지관리 / 19.옥상조경의 지원 / 20.재검토기한

부록 4

2015년 충남 경관심의 개최현황 및 심의결과

지자체	회의	심의대상		자문 및 심의 유형						심의결과			
				경관 자문	경관심의				디자인 심의	원안 의결	조건부 의결	재심의	부결
					위원회 심의	사회 기반 시설	개발 사업	건축물					
충청 남도	1회	001	택지개발사업				●			●			
	1회	002	산업단지사업				●					●	
	2회	003	산업단지사업				●			●			
	3회	004	산업단지사업				●			●			
	4회	005	공동주택				●			●			
	5회	006	공동주택				●			●			
		007	공동주택				●			●			
		008	공동주택				●			●			
		009	공동주택				●			●			
천안시	1회	010	도시개발사업				●				●		
	2회	011	도시개발사업				●					●	
	3회	012	도시개발사업				●				●		
	4회	013	도시환경정비사업				●					●	
	5회	014	도시환경정비사업				●				●		
	6회	015	공공공간 및 시설물						●		●		
		016	공공공간 및 시설물						●		●		
		017	가이드라인	●									
	7회	018	일반산업단지				●			●			
	8회	019	공공건축물					●				●	
	9회	020	공공건축물					●				●	
		021	주택건설사업				●			●			
		022	개발사업 변경				●				●		
	10회	023	공공건축물					●			●		
	11회	024	공공시설물						●			●	
	12회	025	공영주차장						●		●		
		026	게이트볼장						●		●		
		027	거리조성사업						●		●		
	13회	028	공공시설물						●	●			
		029	공공시설물						●		●		
	14회	030	공동주택					●			●		
아산시	1회	031	업무시설					●			●		
		032	공동주택				●				●		
		033	공동주택				●				●		
		034	숙박시설					●			●		
		035	연립주택					●			●		

지자체	회의	심의대상		자문 및 심의 유형						심의결과			
				경관 자문	경관심의				디자인 심의	원안 의결	조건부 의결	재심의	부결
					위원회 심의	사회 기반 시설	개발 사업	건축물					
아산시	2회	036	가이드라인 개정	●									
	3회	037	공동주택					●			●		
	4회	038	근린생활시설					●				●	
		039	업무시설					●			●		
	5회	040	도시개발사업				●				●		
		041	도시개발사업				●				●		
		042	근린생활시설					●			●		
	6회	043	업무시설					●				●	
		044	근린생활시설					●			●		
	7회	045	공동주택				●					●	
		046	공동주택					●			●		
		047	업무시설					●			●		
		048	업무시설					●		●			
	8회	049	업무시설					●			●		
		050	경관조례 개정	●									
	9회	051	근린생활시설					●			●		
		052	공동주택					●			●		
		053	근린생활시설					●			●		
	10회	054	주상복합					●				●	
		055	공동주택					●			●		
	11회	056	경관조례 개정	●									
		057	숙박시설					●				●	
		058	숙박시설					●			●		
		059	업무시설					●			●		
논산시	1회	060	경관계획		●						●		
	2회	061	공공건축물					●			●		
		062	공공건축물					●			●		
		063	근생 및 단독주택					●				●	
	3회	064	근생 및 단독주택					●			●		
당진시	4회	065	공공건축물					●			●		
	1회	066	공장					●		●			
		067	다가구주택					●			●		
		068	관광휴게시설					●		●			
		069	공장					●		●			
		070	다가구주택					●		●			
		071	다가구주택					●		●			
		072	근린생활시설					●		●			

지자체	회의	심의대상		자문 및 심의 유형						심의결과			
				경관 자문	경관심의				디자인 심의	원안 의결	조건부 의결	재심의	부결
					위원회 심의	사회 기반 시설	개발 사업	건축물					
당진시	2회	073	복지회관					●			●		
		074	노유자시설					●			●		
		075	다가구주택					●		●			
		076	다가구주택					●			●		
		077	다가구주택					●			●		
		078	공장					●		●			
		079	다가구주택					●			●		
		080	연립주택					●		●			
		081	보건진료소					●		●			
		082	창고					●		●			
		083	경관조례 개정	●						●			
	3회	084	농기계임대사업장					●		●			
		085	다가구주택					●		●			
		086	다가구주택					●		●			
		087	근린생활시설					●			●		
		088	근린생활시설					●		●			
		089	공장					●			●		
		090	기숙사					●		●			
	4회	091	숙박시설					●		●			
		092	다가구주택					●		●			
		093	다가구주택					●		●			
		094	근린생활시설					●		●			
		095	창고시설					●		●			
		096	다가구주택					●			●		
		097	공장					●		●			
	5회	098	공장					●		●			
		099	다가구주택					●		●			
		100	조형분수대					●		●			
	6회	102	공장					●		●			
		102	창고					●		●			
		103	근린생활시설					●			●		
		104	다가구주택					●			●		
		105	다가구주택					●		●			
		106	다가구주택					●			●		

지자체	회의	심의대상		자문 및 심의 유형						심의결과			
				경관 자문	경관심의			디자인 심의	원안 의결	조건부 의결	재심의	부결	
					위원회 심의	사회 기반 시설	개발 사업						건축물
당진시	7회	107	하나로마트					●		●			
		108	다가구주택					●		●			
		109	상업시설					●			●		
		110	다가구주택					●			●		
		111	다가구주택					●		●			
		112	다가구주택					●		●			
		113	다가구주택					●			●		
		114	옥외광고물						●		●		
		115	다가구주택					●			●		
		116	다가구주택					●			●		
	8회	117	관광휴양시설					●			●		
		118	가축분뇨시설					●			●		
		119	상업시설					●		●			
	9회	120	다가구주택					●			●		
		121	다가구주택					●			●		
		122	다가구주택					●			●		
		123	다가구주택					●			●		
		124	다가구주택					●			●		
		125	다가구주택					●			●		
		126	산업지원센터					●		●			
		127	공동주택					●			●		
		128	업무시설					●				●	
		129	유통센터					●		●			
		130	공장					●		●			
	10회	131	공동주택				●				●		
	11회	132	교육시설					●		●			
133		시장					●				●		
134		다가구주택					●		●				
135		하수처리시설					●		●				
136		근린생활시설					●			●			
137		다가구주택					●			●			
138		다가구주택					●			●			
139		다가구주택					●			●			
140		다가구주택					●		●				
141		다가구주택					●			●			
142		근린생활시설					●		●				

지자체	회의	심의대상		자문 및 심의 유형						심의결과			
				경관 자문	경관심의				디자인 심의	원안 의결	조건부 의결	재심의	부결
					위원회 심의	사회 기반 시설	개발 사업	건축물					
당진시	12회	143	다가구주택					●		●			
		144	다가구주택					●			●		
		145	다가구주택					●			●		
		146	근린생활시설					●		●			
		147	근린생활시설					●		●			
		148	주상복합	●						●			
	13회	149	다가구주택					●			●		
		150	공동주택					●			●		
		151	다가구주택					●		●			
		152	자원순환시설					●		●			
		153	창고시설					●		●			
		154	다가구주택					●		●			
		155	다가구주택					●		●			
		156	다가구주택					●		●			
		157	다가구주택					●		●			
		158	다가구주택					●				●	
	14회	159	근린생활시설					●			●		
		160	근린생활시설					●			●		
		161	근린생활시설					●			●		
		162	근린생활시설					●		●			
		163	숙박시설					●		●			
		164	다가구주택					●		●			
		165	근린생활시설					●				●	
		166	근린생활시설					●		●			
	15회	167	근린생활시설					●			●		
		168	다가구주택					●			●		
		169	근린생활시설					●		●			
		170	근린생활시설					●			●		
		171	공장					●		●			
		172	근린생활시설					●			●		
합 계	49회	172		6	1	—	23	133	9	71	81	16	

충남공공디자인센터 연구성과

2016년

-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사업 사후진단지표 개발 및 활용방안
 - 충청남도 경관심의 개선 및 운영방안
 - 충청남도 홍보매체 디자인 가이드라인
-

2015년

-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통합기본계획
-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미래발전계획
- 충청남도 건축물 색채 디자인 가이드라인
- 충청남도 범죄예방 디자인 가이드라인
- 충청남도 공사장 가림시설 디자인 가이드라인
- 충청남도 경관 · 공공디자인 실태조사

발행기관 및 연구진

충청남도 건설교통국 건축도시과

박재현 건설교통국 국장
박경구 건축도시과 과장
황진찬 공공디자인팀 팀장
엄병용 공공디자인팀 주무관
이정호 공공디자인팀 주무관
이은정 공공디자인팀 주무관
박정규 공공디자인팀 주무관

연구책임

방재성 책임연구원

연구진

권영현 선임연구위원
오병찬 책임연구원
박혜은 전임연구원
김철명 연구원

연구자문위원 (가나다 순)

안진근 교수 (백석대학교 디자인영상학부)
이상민 박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연구위원)
이장범 교수 (선문대학교 건축학과)
이정호 주무관 (충청남도 건축도시과)
이형복 박사 (대전발전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차주영 박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연구위원)

경관심의운영 자문위원 (가나다 순)

권덕수 팀장 (당진시 건축과 도시디자인팀)
김학진 팀장 (천안시 도시재생과 도시디자인팀)
문태훈 팀장 (논산시 도시주택과 디자인총괄팀)
이희정 팀장 (아산시 건축과 경관디자인팀)
강원록 주무관 (논산시 도시주택과 디자인총괄팀)
소영 주무관 (아산시 건축과 경관디자인팀)
이소정 주무관 (당진시 건축과 도시디자인팀)
정하명 주무관 (아산시 건축과 경관디자인팀)
최지훈 주무관 (천안시 도시재생과 도시디자인팀)

2015 충남공공디자인센터

인쇄·발행 2015년 12월
발행처 충청남도
연구기관 충남연구원 공공디자인센터
인쇄처 삼성애드피아

· 본 보고서의 판권소유는 충청남도와 충남연구원에 있음
· 본 보고서의 내용은 저자의 서면동의가 없이는 복제나 전제가 불가능함